

용역보고서 2023-41

발 간 등 록 번 호
54-6280000-000635-01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2024~2028) 수립 연구용역

장인수

이지혜·이선희·김희성·박종서·이소영·유재언·김종훈



## ■ 연구진

연구책임자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희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유재언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종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b>요 약</b> .....	<b>1</b>
<b>제1장 서론</b> .....	<b>41</b>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4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51
제3절 연구결과의 기여도 및 기대효과 .....	59
제4절 과업 추진 체계 .....	60
<b>제2장 지역 정책 수요와 잠재력 특성 분석</b> .....	<b>61</b>
제1절 정책 수요 .....	63
제2절 정책 자원과 지역 잠재력 .....	93
제3절 인천광역시 인구 이동 심층 분석과 함의 .....	112
<b>제3장 국내외 주요 사례 분석</b> .....	<b>121</b>
제1절 해외 주요 사례 고찰과 함의 .....	123
제2절 중앙정부 관련 정책 개관 .....	142
<b>제4장 기존 인천광역시 관련 계획 및 사업 검토, 현안 도출</b> .....	<b>171</b>
제1절 검토 필요성 및 내용 .....	173
제2절 저출산 분야 .....	176
제3절 고령사회 분야 .....	191
제4절 인구구조(지역, 기타) 분야 .....	207
제5절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분야 .....	216
<b>제5장 전문가 심층 설문조사</b> .....	<b>221</b>
제1절 전문가 심층 설문조사 개요 .....	223
제2절 전문가 심층 설문조사 결과 .....	225

---

<b>제6장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추진체계와 중점 추진전략</b>	<b>291</b>
제1절 배경	293
제2절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추진체계	295
제3절 추진전략별 중점 세부과제	302
제4절 분야별,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352
제5절 인천광역시 관할 자치구/군 인구정책 주요 방향	356
<b>제7장 환류 체계와 자원 조달 방안</b>	<b>359</b>
제1절 평가 및 환류 방안	361
제2절 자원 규모 및 조달방안	367
<b>참고문헌</b>	<b>375</b>
<b>부록</b>	<b>381</b>
[부록 1] 분야별 전문가 심층설문조사지	381
[부록 2] 인천광역시 자치구군 읍면동별 생활인구 규모	409



#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요약 표 1〉 분석대상: 2018~2023년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8
〈요약 표 2〉 조사 설계 .....	18
〈요약 표 3〉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수립 관련 SWOT 분석 결과 .....	22
〈요약 표 4〉 12개 추진전략별 핵심과제(전략별 1~2개) 목록 .....	26
〈요약 표 5〉 추진과제 우선순위 및 범주별 분류 .....	27
〈요약 표 6〉 세부 추진과제의 정책 분야별 분류 .....	28
〈요약 표 7〉 세부 추진과제의 생애주기별 분류 .....	29
〈요약 표 8〉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추진 관련 중앙정부 및 관할 지자체와의 협력 여부에 따른 중점 세부사업 구분 .....	30
〈요약 표 9〉 인천광역시 관할 지역 내 지역격차 해소, 상생, 맞춤형 방안 범주별 중점 세부사업 구분 .....	31
〈요약 표 10〉 인천광역시 관할 자치구/군별 인구정책 주요 방향 .....	32
〈요약 표 11〉 종합성과지표 및 12개 추진전략별 성과지표 .....	34
〈요약 표 12〉 12개 추진전략별 성과지표별 최신 지렛값과 2028년 성과목표 .....	35
〈요약 표 13〉 각 실, 국별 인구정책 관련 사업 수 .....	36
〈요약 표 14〉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연도별(2024~2027년) 재원 규모 .....	36
〈요약 표 15〉 12개 추진전략 및 연도별(2024~2028년) 사업량 및 사업비(소요 예산) 규모 .....	38
〈표 1-1〉 제1차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2018~2022년) 세부과제 .....	45
〈표 1-2〉 인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과제별 추진계획 .....	48
〈표 2-1〉 인천광역시 및 관할 지역별 인구규모 변화 .....	67
〈표 2-2〉 인천광역시 및 관할 지역별 주요 인구 특성 .....	71
〈표 2-3〉 인천광역시 내 관할 지역 인구의 자연적, 사회적 증감 특성(2000~2021년) .....	75
〈표 2-4〉 인천광역시 내 관할 지역 인구의 자연적, 사회적 증감 기여도(2000~2021년) .....	76
〈표 2-5〉 인천광역시 내 관할 지역 조혼인율의 추세(2000~2021년) .....	81
〈표 2-6〉 인천광역시 및 관할 지역 연령대별(청년, 고령층) 1인 가구 비율 .....	83
〈표 2-7〉 인천광역시 및 관할 지역 평균 상주인구, 생활인구 규모 .....	90
〈표 2-8〉 2019~2022년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지표(주관지표) .....	94
〈표 2-9〉 2019~2022년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지표(핵심지표: 인구, 경제 부문) .....	95
〈표 2-10〉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주거 부문 1) .....	96
〈표 2-11〉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주거 부문 2) .....	97
〈표 2-12〉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교통 부문 1) .....	98
〈표 2-13〉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교통 부문 2) .....	98



〈표 2-14〉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산업·일자리 부문 1) .....	99
〈표 2-15〉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산업·일자리 부문 2) .....	100
〈표 2-16〉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교육 부문 1) .....	101
〈표 2-17〉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교육 부문 2) .....	102
〈표 2-18〉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문화·여가 부문 1) .....	103
〈표 2-19〉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문화·여가 부문 2) .....	104
〈표 2-20〉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안전 부문 1) .....	105
〈표 2-21〉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안전 부문 2) .....	105
〈표 2-22〉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환경 부문 1) .....	106
〈표 2-23〉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환경 부문 2) .....	107
〈표 2-24〉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보건·복지 부문 1) .....	108
〈표 2-25〉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보건·복지 부문 2) .....	108
〈표 2-26〉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보건·복지 부문 3) .....	109
〈표 2-27〉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교육시설의 평균접근시간(2019년 기준) .....	110
〈표 2-28〉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판매시설의 평균접근시간(2019년 기준) .....	110
〈표 2-29〉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광역교통시설의 평균접근시간(2019년 기준) .....	111
〈표 2-30〉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의료시설의 평균접근시간(2019년 기준) .....	111
〈표 2-31〉 타 시도로부터 인천광역시로의 유입인구 규모 분포 .....	113
〈표 2-32〉 인천광역시 관할 자치구/군별 유입인구 비중 .....	115
〈표 2-33〉 인천광역시 관할 자치구/군별 교육수준별 유입인구 비중 .....	116
〈표 2-34〉 인천광역시 관할 자치구/군별 직종별 유입인구 비중 .....	117
〈표 2-35〉 인천광역시 관할 자치구/군별 젊은층 연령대별(19세, 20대, 30대) 유입인구 비중 .....	118
〈표 3-1〉 영국 리버풀의 지역 재생장 영향 요인 .....	138
〈표 3-2〉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부문별 핵심과제 .....	142
〈표 3-3〉 15대 국정과제 및 76개 실천과제 개요 .....	145
〈표 3-4〉 균형발전 지역공약- 17개 시도 7대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 -: 인천광역시 .....	146
〈표 3-5〉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내 “지역 및 균형발전 관련” 세부과제 및 세부사업 .....	148
〈표 3-6〉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저출산 분야 영역별 과제 수 .....	150
〈표 3-7〉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고령사회 분야 영역별 과제 수 .....	150
〈표 3-8〉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저출산 분야 영역별 예산 .....	153



〈표 3-9〉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고령사회 분야 영역별 예산 .....	153
〈표 3-10〉 각 관측변수의 처치 시점 이후 처치효과 추정 결과 .....	155
〈표 3-11〉 고령사회 정책 목표 및 주요 추진 과제 .....	166
〈표 4-1〉 분석대상: 2018~2023년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175
〈표 4-2〉 인천광역시, 중앙정부 저출산 영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비교: 비전, 목표, 분야, 과제, 사업 .....	176
〈표 4-3〉 인천광역시, 중앙정부 고령사회 영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비교: 비전, 목표, 분야, 과제, 사업 .....	191
〈표 4-4〉 인천광역시, 중앙정부 계획 간 비교와 본 연구에서의 고려사항 논의 .....	198
〈표 4-5〉 인천광역시, 중앙정부 인구구조 영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비교: 비전, 목표, 분야, 과제, 사업 .....	207
〈표 4-6〉 2018~2022년 인천광역시 및 소재 군·구의 합계출산율 .....	212
〈표 4-7〉 인천광역시 소재 군·구의 고령사회정책 자원 공급 5개 유형 .....	212
〈표 4-8〉 인천시 인구정책 관련 부서 및 업무 .....	217
〈표 5-1〉 조사 설계 .....	223
〈표 5-2〉 조사 내용 .....	225
〈표 5-3〉 인천 지역 저출산 및 인구 측면 정책 영역별 중요도 .....	226
〈표 5-4〉 인천 지역 저출산 및 인구 측면 영역간 상대적 우선순위 (종합) .....	230
〈표 5-5〉 인천 지역 저출산 및 인구 측면 정책 영역별 효과성 .....	231
〈표 5-6〉 인천 지역 저출산 및 인구 측면 정책 영역별 효율성 .....	232
〈표 5-7〉 인천 지역 저출산 및 인구 측면 정책 영역별 시급성 .....	233
〈표 5-8〉 출산지원금 중앙정부 부담 필요 주장에 대한 의견 .....	234
〈표 5-9〉 외국인 정책 확대 필요성 .....	238
〈표 5-10〉 적절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	243
〈표 5-11〉 인천 내 지역 간 인구편중현상 개입 필요성 .....	246
〈표 5-12〉 인천 내 지역 간 인구편중현상에 대해 인천이 대응해야 할 정책 분야 .....	247
〈표 5-13〉 청년 유입 증가를 위한 우선 추진 정책 .....	252
〈표 5-14〉 생활인구 활용 정책 중 실효성 높은 정책 .....	255
〈표 5-15〉 세부 정책 현안 과제 중요도 .....	259
〈표 5-16〉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측면 정책 영역별 중요도 .....	263
〈표 5-17〉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측면 정책 영역간 상대적 우선순위 (종합) .....	265



〈표 5-18〉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측면 정책 영역별 시급성 .....	266
〈표 5-19〉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정책 영역 및 과제간 정합성: 정책 영역 평균 .....	268
〈표 5-20〉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정책 영역 및 과제간 포괄성: 정책 영역 평균 추가 .....	272
〈표 5-21〉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확대해야 할 정책 영역 .....	273
〈표 5-22〉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관련 향후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정책과제_1순위 .....	278
〈표 5-23〉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관련 향후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정책과제_2순위 .....	278
〈표 5-24〉 향후 고령사회 대응 정책 분야의 우선순위 (종합) .....	279
〈표 5-25〉 인천광역시 군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추진 과제 우선순위 (종합) .....	283
〈표 5-26〉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현안 과제 중요도 .....	286
〈표 6-1〉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수립 관련 SWOT 분석 결과 .....	298
〈표 6-2〉 추진과제 우선순위 및 범주별 분류 .....	351
〈표 6-3〉 세부 추진과제의 정책 분야별 분류 .....	352
〈표 6-4〉 세부 추진과제의 생애주기별 분류 .....	353
〈표 6-5〉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추진 관련 중앙정부 및 관할 지자체와의 협력 여부에 따른 중점 세부사업 구분 .....	354
〈표 6-6〉 인천광역시 관할 지역 내 지역격차 해소, 상생, 맞춤형 방안 범주별 중점 세부사업 구분 .....	355
〈표 6-7〉 인천광역시 관할 자치구/군별 인구정책 주요 방향 .....	356
〈표 7-1〉 종합성과지표 및 12개 추진전략별 성과지표 .....	365
〈표 7-2〉 12개 추진전략별 성과지표별 최신 지렛값과 2028년 성과목표 .....	366
〈표 7-3〉 각 실, 국별 인구정책 관련 사업 수 .....	368
〈표 7-4〉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연도별(2024-2027년) 자원 규모 .....	368
〈표 7-5〉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연도(2024-2027년) 및 자원 조달별 비율 .....	369
〈표 7-6〉 인구정책 관련 계속 사업의 연도(2024-2027년) 및 자원 조달별 비율 .....	369
〈표 7-7〉 12개 추진전략 및 연도별(2024-2028년) 사업량 및 사업비(소요 예산) 규모 .....	373
〈부표 1〉 인천광역시 자치구군 읍면동별 생활인구 특성 요약 .....	409



[요약 그림 1] 과업 단계별 추진 체계 및 전략 .....	3
[요약 그림 2]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추진체계 .....	21
[그림 1-1] 과업 단계별 추진 체계 및 전략 .....	60
[그림 2-1] 인천광역시 관할 지역(8자치구, 2군)의 인구 규모 및 공간적 분포 .....	64
[그림 2-2]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인구집중지수 변화(2010, 2020년) .....	65
[그림 2-3] 인천광역시의 인구 규모 변화 추이(2000-2022년) .....	66
[그림 2-4] 인천광역시 및 관할 지역의 5세 단위 연령대별 인구 규모 변화(2000-2022년) .....	68
[그림 2-5] 인천광역시 연령계층별 인구 규모의 전망치(2024-2037년) .....	72
[그림 2-6] 인천광역시 인구의 5세 단위 연령대별 순이동(2000-2021년) .....	77
[그림 2-7] 인천광역시 내 관할 지역별 인구의 5세 단위 연령대별 순이동(1995-2021년) .....	78
[그림 2-8] 인천광역시 내 관할 지역별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2000-2021년) .....	79
[그림 2-9] 인천광역시 내 관할 지역별 모의 연령별 출산율 분포(2021년 기준) .....	82
[그림 2-10] 인천광역시 생활인구 규모와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 간 연관성 도식 .....	84
[그림 2-11] 인천광역시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 상위 15개 지역(읍면동) .....	85
[그림 2-12] 인천광역시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 하위 15개 지역(읍면동) .....	85
[그림 2-13] 인천광역시 및 관할 지역 평균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 .....	86
[그림 2-14] 인천광역시 생활인구 규모,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의 해당 구군별 상/하위 30개 읍면동 개수의 분포 .....	87
[그림 2-15] 인천광역시 생활인구 규모와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 간 연관성 도식 .....	88
[그림 2-16] 인천광역시 생활인구 규모 상위 15개 지역(읍면동) .....	88
[그림 2-17] 인천광역시 생활인구 규모 하위 15개 지역(읍면동) .....	89
[그림 2-18] 인천광역시 읍면동 단위 생활인구, 상주인구,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의 분포 .....	91
[그림 3-1] 영국 리버풀 지역의 연령대별 인구 규모 추세(1981-2010년) .....	138
[그림 3-2] 영국 리버풀과 노스웨스트잉글랜드 내 다른 지역 평균 비교(2001-2019년) .....	139
[그림 3-3] 국가균형발전 관련 현 정부의 국정목표/비전과 약속 .....	144
[그림 3-4] 2022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인천광역시 시행계획 과제 수 .....	149
[그림 3-5] 2022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인천광역시 시행계획 예산 .....	151
[그림 3-6] 2022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인천광역시 저출산 분야 예산 비중 .....	152
[그림 3-7] 관측변수별 처리효과 추세 .....	154
[그림 3-8] 인천 동구의 연도별 출산지원금 수혜 인원, 예산 변화(2016-2019년) .....	156
[그림 3-9]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	165

[그림 3-10]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2009-2021년) 및 외국국적동포 주요 국가별 거소신고 현황(2021년) .....	167
[그림 4-1]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수(2009-2022년) .....	185
[그림 4-2]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가능 영유아 수(2009-2022년) .....	187
[그림 4-3]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현원, 이용률(2009-2022년) .....	188
[그림 4-4] 인천광역시 지차구군별 국공립어린이집 현원, 이용률(2009-2022년) .....	189
[그림 4-5] 인천광역시 지차구군별 영유아 100명 당 국공립어린이집 수(2009-2022년) .....	190
[그림 5-1] 인천 지역 저출산 및 인구 측면 정책 영역별 중요도 .....	226
[그림 5-2] 인천 지역 저출산 및 인구 측면 영역간 상대적 우선순위 (종합) .....	230
[그림 5-3] 인천 지역 저출산 및 인구 측면 정책 영역별 효과성 .....	231
[그림 5-4] 인천 지역 저출산 및 인구 측면 정책 영역별 효율성 .....	232
[그림 5-5] 인천 지역 저출산 및 인구 측면 정책 영역별 시급성 .....	233
[그림 5-6] 출산지원금 중앙정부 부담 필요 주장에 대한 의견 .....	234
[그림 5-7] 외국인 정책 확대 필요성 .....	237
[그림 5-8] 적절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	243
[그림 5-9] 인천 내 지역 간 인구편중현상 개입 필요성 .....	246
[그림 5-10] 인천 내 지역 간 인구편중현상에 대해 인천이 우선 대응해야 할 정책 분야 .....	247
[그림 5-11] 청년 유입 증가를 위한 우선 추진 정책 .....	251
[그림 5-12] 생활인구 활용 정책 중 실효성 높은 정책 .....	255
[그림 5-13] 세부 정책 현안 과제 중요도 .....	259
[그림 5-14]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측면 정책 영역별 중요도 .....	263
[그림 5-15]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측면 정책 영역간 상대적 우선순위 (종합) .....	265
[그림 5-16]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측면 정책 영역별 시급성 .....	266
[그림 5-17]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정책 영역 및 과제간 정합성: 정책 영역 평균 .....	267
[그림 5-18]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정책 영역 및 과제간 포괄성: 정책 영역 평균 추가 .....	271
[그림 5-19]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관련 확대해야 할 정책 영역 .....	273
[그림 5-20]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관련 향후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정책과제_1순위 .....	277
[그림 5-21]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관련 향후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정책과제_2순위 .....	278
[그림 5-22] 향후 고령사회 대응 정책 분야의 우선순위 (종합) .....	279
[그림 5-23] 인천광역시 군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추진 과제 우선순위 (종합) .....	283
[그림 5-24]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현안 과제 중요도 .....	286
[그림 6-1]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추진체계 .....	297



## 요약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급격한 인구변동에 따른 인천광역시 인구 동태와 인구 정책 간 유기성 제고 필요

○ 최근 인천광역시의 인구변동은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음.

-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향후 10년 간 연평균 6만 명 내외로 감소하여 2030년 5,12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2070년에 3,766만 명(1979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미 2019년부터 자연감소가 시작되었으며 2017년부터 생산연령인구는 이미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이후 유소년·고령자 부양비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의 인구 변동은 이전 전망보다 더욱 급격하게 전개되고 있음.

- 2020년 대비 2050년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약 14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인천광역시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자연감소가 나타나고 있음(자연감소율 0.01%).

- 인천광역시의 2020년 기준 총부양비는 3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34)에 비하여 두 번째로 낮지만, 2050년에는 92로 세종(72), 서울(83), 경기(86), 대전(90), 광주(91)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인천광역시의 급격한 총부양비 전망은 노년부양비의 증가 전망(2020년 18.2→ 2050년 75.3)에 크게 기인하고 있음.

- 즉, 인천광역시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일부 다른 광역시에 비하여 빠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또한, 관할 자치구 및 군 지역 간 인구 고령화, 인구 규모 변화 등 여러 인구 동태 간 양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보다 심화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의 급격한 인구 변동 전망에 따른 인구 정책의 종합적 추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측면에서 예상되고 있는 인구 변동(인구 규모, 인구 구조 변화)은 인천광역시가 향후 추진하여야 할 인구 정책 방향의 가늠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정책 수요와 정책 추진 여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단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인구 동태가 시사하고 있는 정책 수요를 보다 심층적으로 진단하여 이에 부합하는 인구 정책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즉, 인천광역시 인구 동태와 인구 정책 간 유기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다분함.

□ 인천광역시의 인구 변동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됨.

- 저출산 분야와 관련하여, 출생아수 감소 및 지역 인구 감소가 보육 및 교육, 노동, 국방, 아동건강, 모성건강 등 다양한 사회정책 분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시급함.
- 고령사회 분야와 관련하여, 고령인구의 소득 전망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정책, 중장년층 경제활동 특성과 고용정책, 고령인구 증가와 보건의료 정책, 장기요양보험 제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건축 및 도시환경, 고령친화산업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제 마련이 시급함.
- 또한 인천광역시라는 지역적 관점에서도 각 관할 구군의 인구유출(입) 추세는 사회 전체 또는 지역별로 경제, 산업, 노동시장, 교육제도와 사회복지 분야 등의 각종 거시적 사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함.

□ 급격한 인구 동태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미래 비전, 다양한 시각의 균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새로운 접근이 요구됨.

-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제1차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2018년~2022년)” 및 “더 나은 고령사회 도시를 여는 인천(2019-2023) - 인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보완하는 방향으로의 새로운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함.



- 계층, 젠더, 세대,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적 양상을 고려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비전 수립이 필요함.
- 사회의 경제적, 산업적, 노동시장, 문화구조, 교육과 복지 등 제반 변동을 고려한 비전 및 정책목표와 추진과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인천광역시의 인구 변동을 포함한 제 분야 사회 변동은 이보다 더 급변하고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더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대응 프레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지역 간 인구유출, 유입을 포함하여 인구 규모 및 인구 구조 변화의 지역적 분포의 특징을 함께 고려한 포괄적 인구 대응정책 고찰이 필요함.
- 포괄적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문제와 장기적 관점에서 시스템적 대응 과제를 균형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요약 그림 1] 과업 단계별 추진 체계 및 전략



자료: 저자 작성함.

## 2. 주요 연구 내용

### 가. 주요 인구변동 특성

- 인천광역시의 인구 규모의 관할 지역별 분포 특성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 중 하나는 10개 관할 자치구군 간 인구 규모 편차가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이는 장인수 외(2022)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인천광역시의 인구집중지수가 6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특히 내륙지역과 섬 지역 간, 내륙 지역 중에서도 구도심과 신도시 간 인구 규모의 큰 편차가 이러한 인구 편중 현상을 직접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관할 지역 인구 규모의 종단적 변화는 전체적인 인구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 간 인구 규모 증감 변화 양상이 상이하며, 이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인구 변화의 양극화 심화 개연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무엇보다도 이는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이 지역별 인구 변동 특성을 보다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지역별 차등적 정책 방향이 불가피함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인천광역시의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관측기간 초반 청년층의 사회적 감소에 따른 이후 기간에서의 출생아 수 감소 및 남아 있는 이들의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가 유발하는 자연적 감소, 즉, 사회적 감소와 자연적 감소의 인과적 관계가 크게 관측되지 않음. 즉, 청년층 중심의 사회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덜 심화되었고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기 때문에 자연적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 다만, 이러한 특성은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유출된다는 점(청년층의 사회적 감소가 지속된다는 점)과 인구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보다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구 감소 지역에서 관측되는 인구 감소의 패턴인 사회적 감소에 의한 자연적 감소가 나타날 개연성이 적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음. 이러한 인구변동의 인과적 매커니즘을 고려할 때, 인천광역시의 중장기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기본적 방향은 청년층의 (서울 및

경기로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 인구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에 주목하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자치구/군 내의 관할 읍면동 간에도 상주인구, 생활인구,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규모의 편차가 나타나는 특성은 향후 생활인구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의 생활인구 특성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이 선결되어야 함과 동시에, 읍면동 단위에서의 전략이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생활인구를 기본적으로 인구 정책에 활용할 필요성이 높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인 동구, 강화군, 옹진군은 생활인구 평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동시에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생활인구 규모를 제고하여 지역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

## 나. 정책 자원과 지역 잠재력

○ 2019년, 2020년 2개년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비슷한 결과로 확인됨. 종합적인 개인 삶의 만족도, 지역생활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고,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거, 교통, 산업·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안전, 보건·복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가 아니며 표본에 대한 집계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모든 지표에서 전국 평균에 비하여 낮은 상황은 기본적으로 향후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이 인천광역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다양한 사회정책 분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견지하여야 할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주거, 교통, 산업·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안전, 환경, 보건·복지 부문의 총 8개 분야 균형발전지표로 살펴본 인천광역시의 지역 잠재력 측정 결과는 지역 간 편중 현상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성을 복합적으로 시사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로의 인구 유입 특성은 인천광역시 내 구군별 인구 유입 특성이 상이하며, 이는 각 관할 자치구/군별 인구정책의 주요 전략이 각기 다르게 추진될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또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인 강화군, 옹진군, 동구의 경우 생활(관계)인구 정책 추진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역별 잠재적 수요 특성을 진단,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 또한, 인천광역시의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 잠재력, 지역 정책 수요를 직,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초자료로 의미가 있으며, 특히 지역별로 상이한 인구 유입 특성뿐 아니라 지리지형적 차이점과 사회경제적 특성, 그간 추진된 정책 방향 검토와 개선 방향 도출에 주목할 필요가 다분함.

#### 다. 국내외 주요 사례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독일의 공고화된 분권화 구축 체계는 인천광역시의 경우 관할 지역별 정책 수요와 유기성을 보다 제고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제도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소득대체율 제고, 비가시적인 불이익 등과 같이 문화적 측면의 개선이 필요함. 소득대체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가 자체적으로 소득을 추가적으로 보전하는 제도 연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독일의 아동 수당에 대한 수혜 아동 연령의 폭이 넓은 것은, 우리나라의 아동 수당을 포함한 현금성 지원이 영유아 중심에 대체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측면을 개선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인천광역시의 관련 정책 역시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기, 청년기에 대한 지원을 고루 분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다분함.
- 미국의 비컨힐마을 공동체는 인구 고령화 대응 측면에서 마을 중심의 50세 이상 고령층 인구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공동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인천광역시의 인구감소 지역 관련 정책 방향은 지역 인구, 특히 젊은층의 유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정책 대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일자리의 질적 제고와 대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지역 환류 체계 관련 인센티브 등의 질적,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책 방향의 세분화 역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측면으로, 향후 지역 정책 추진 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즉, 관할 지역 유형별 정책 지원을 차별화하여, 보다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방향과 관련한 지방시대 기조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내 지역 관련 사업,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사업은 향후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연계, 협력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라. 기존 인천광역시 관련 계획 및 사업 검토, 현안 도출 결과

- 그간 인천광역시가 수립, 추진한 저출산, 고령사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현안 및 쟁점을 도출함.

〈요약 표 1〉 분석대상: 2018~2023년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구분	명칭	연도
저출산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2018~2022년)	2018~2022년
	연도별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1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고령사회	인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	2019~2023년
	제1차 인천고령사회대응 중장기 계획(2019~2023) 시행계획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도별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2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천광역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2018~2023)	2018~2023년
	연도별 치매관리 시행계획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구구조 (지역, 기타)	제5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2026년
	-제5기(23~26)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2023년
	인천광역시 발전계획(2018~2022)	2018~2022년

## (1) 저출산 분야

- 주요대상: 인천에서 그동안 수립 및 시행된 기본계획, 시행계획에서의 추진과제, 사업 주요 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와 그들의 자녀임. 자녀는 연령이 어릴수록 지원하는 사업이 많고, 초등학생, 청소년으로 성장할수록 지원이 대폭 감소함. 청년층, 예비부부, 예비부모까지 대상을 확장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제시하면서도 실제 추진된 정책과제와 사업에서는 많지 않음.
- 추진과제 범위: 임신, 출산, 양육을 강조하는데 그중에서도 양육에 관한 추진과제와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함. 추진과제의 범위도 일자리, 주거 등으로 확장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그동안은 인천시가 저출산 영역에서 이에 관해 지원한 사업이 적었음.
- 중앙정부 추진 기조와 정합성(2023년 기준): 2022~2023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1년까지와는 조금 다른 저출산 정책 방향성을 가짐. 예를 들어, 부모급여를 제외한 현금성 급여는 지양하고, 부모급여도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며,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등 시설보육에 편중되지 않고 가정 내 부모에 의한 양육도 중요시 함.
  - 기존에는 돌봄시설(운영, 비용), 돌봄 인력 인건비 지원 예산 비중이 높았음. 또한,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등으로 명칭 다양)에 대해서는 효과성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지자체 간 경쟁적으로 확대되어 옴.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수요자(지역주민)가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지원방식 다변화 필요
- 인천시 특징에 대한 진단: 다른 지역(전국 평균, 인접한 서울, 경기 수도권, 다른 광역지자체)과 비교해서 인천시의 저출산 현상, 지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먼저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나아가 인천시 내 군, 구 또는 생활권별 특징이나 차이에 대한 파악을 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모색되어야 함.

- 인구정책(출산, 사망, 이동, 세부 지역 인구, 생활(유동)인구 등)을 중심에 두고 이와 관련된 생애과정별 대상(청년, 신혼부부, 임신-출산-양육기)으로 초점을 맞춰야 관련성이 높은 추진과제 선별 가능
- 다자녀우대: 2018년 수립된 저출산 대응 중장기 계획에서는 2명 이상을 다자녀 가정으로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유자녀 또는 아동 전체로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
- 출산, 입양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지역화폐, 현물, 바우처, 주택 및 금융상품과 연계해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상생효과 유도
- 시설 돌봄과 더불어 가정에서 부모 역할(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등) 지원
- 초등학교 이후 (방과후)돌봄에 대한 지원(예: 늘봄학교)
-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에서 민간 기업(중소), 자영업, 특수고용종사자 등으로 제도 이용 대상을 확대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합계출산율(출생아수), 고령화율뿐만 아니라 군, 구별 도시화율에 따른 맞춤형 접근
  - 연수구 송도, 서구 청라와 강화군, 옹진군 간 다른 접근
  - 예를 들어, 신도시에는 어린이집 부족으로 신규 공급 필요, 젊은 인구가 유출되는 구도심, 군 지역에는 분만시설 부족과 어린이집 폐원 대응하면서 밀접해서 생활SOC 공급
- 인구가동(전입이 많은 신도심-전출이 많은 구도심) 간 다른 욕구와 이슈
  - 서울로 출퇴근하는 생활인구의 교통 지원, 베드타운 성격을 지닌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 다문화가정(결혼이주, 이주노동자, 외국인)에 대한 지원(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 (2) 고령사회 분야

○ 인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 중앙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2023년 인천광역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간 정합성

- 중앙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2023년 인천광역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은 서로 연동되어 정합성이 높는데 비해 자체적으로 수립, 추진하는 인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은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에 해당하는 분야와 정책과제를 포함하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큼.
- 인천시의 독자적인 고령사회 중장기 계획이고 노인을 중심으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청년, 여성, 노인, 평생교육 등까지 영역을 확장하지 않아도 됨.
- 하지만, 노인뿐만 아니라 고령화를 경험하는 모든 세대의 사회구성원으로 대상을 포괄하고 고령화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향하는 인구정책이라는 관점에서는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와 관련된 영역, 정책과제가 대폭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비록 인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2023년 인천광역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에는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영역의 세부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재구조화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추진과제를 제안할 수 있겠음.

○ 인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에서의 영역과 추진과제 보다 범위 확장

- 영역을 노후소득보장 강화,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행복을 더하는 사회 활동 참여 증진, 통합돌봄의 강화, 생애마무리, 고령친화사회환경 기반 조성의 6개로 구분했는데, 이는 2023년 시행계획에 비해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의 정책과제(영역)가 더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함.

- 하지만, 노후소득보장 지원 제도의 범위를 좁게 설정함. 소득에서 자산(주택)을 소득으로 전환하는 주택연금, 농지연금 관련 내용이 부재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중고령자 일자리, 기업에 대한 지원도 누락되어 있음. 2023년 이후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에서도 노후소득보장 지원 제도의 범위를 지금까지와 같이 유지할 것인지 확장할 것인지 고려해야 함.
- 또한, 문화, 여가도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 한정하는 경향을 보임. 사회참여의 범위(노인복지관,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주민센터)도 협소하게 규정하고, 문화, 여가와 혼재되어 있음.
- 노인주거복지시설도 협소하게 규정되었는데, 최근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국토교통부, LH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러한 다기능 주택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생애마무리 추진과제는 웰다잉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 외에 전 생애과정에서의 죽음준비, 2022년 제정된 고독사예방법에 근거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단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장례 및 장사, 유족에 대한 상담도 추가될 수 있음.

○ 2023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의 체계화

- 목표(모든 세대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고령사회), 정책추진방향(노후 소득 보장 및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강화, 행복을 더하는 여가문화 보급 및 사회 활동 참여 활성화, 노인맞춤형 공공 돌봄 체계 및 인권보호 강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 사회환경 조성)은 적절해 보임. 또한, 인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에는 없는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대영역도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됨.
- 하지만, 목표, 정책추진방향에서 모든 세대, 노후 준비를 강조한 것과 달리 역점시책은 거의 노인 대상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함.
- 고령사회 정책을 1)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2)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3)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 5)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의 5개 영역으로 다시 나눴는데 1) 영역은 세부과제 8개, 2) 영역은 세부과제 13개, 3) 영역은 세부과제 17개, 4)

영역은 세부과제 6개, 5) 영역은 세부과제 1개로 세부과제 수도 차이가 너무 큼.

- 범주와 하위 세부사업 분류가 체계적이지 않으므로 재범주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군, 구, 신도시 대 구도심, 생활인구, 인구이동(전출입, 통근)과 같은 인구구조에 대한 관점 및 영역이 부재하여 이를 추가할 수 있겠음.
- 인권보장, 학대피해, 보호에 대한 영역과 추진과제도 찾아보기 어려워 신규로 추진해볼 수 있음.
-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은 영역에 비해 추진과제 수가 너무 적어서 추진과제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다른 영역과 통합해볼 수 있음.
-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과제와 세부사업도 많은데, 2023년 중앙정부 기초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축소로 전환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도 가능함.
-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은 장사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웰다잉, 고독사 예방으로 다양화될 필요가 있음. 2023년 시행계획에서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이 아닌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에서 웰다잉 교육,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를 추진하고 있음.

- 너무 많은 세부과제(사업)가 나열되어 있어 통합, 재구조화해서 축소할 필요가 있음. 특히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대영역에 분류가 맞지 않거나 관련성이 낮은 세부사업이 다수 들어가 있는 상황임.

○ 인천광역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인천광역시, 2019)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고령사회 대응 정책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음.

- 종합재가센터 확충('24~'26 목표로 설정), 베리어프리 건물 확충, 주거복지센터 운영, 노복/중복 확충, 공공보건인프라 확충(시립노인요양시설('23 준공), 공공심야약국), 인천형 새 일자리사업, 전문시니어 양성교육(60+)

○ 2018년에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중장기 계획이 수립될 때보다 최근 들어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확대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분야가 앞으로의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에서도 현안으로 다뤄져야 함.

- 민간,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 간병(보험)서비스
- 노인복지법에서 협소하게 규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보다 폭넓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고령자주택 공급, 지원
- (대중교통, 교통사고, 병원 동행 등), 지역사회 환경, 빈집 처분
- 세대통합 및 공존(상생)
- 청장년, 중장년 대상 노후(생활)준비 추진과제 강화
- 문화, 여가는 노인복지법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까지 연계하여 확대
- 자산관리(상속, 증여),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 디지털 소외와 격차 완화
- 장애인노인 또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 인권보장, 학대피해, 보호에 대한 영역 및 추진과제
-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사후 장사시설에 더해 웰다잉, 고독사, 호스피스, 연명의료 등으로 확대
- 사회서비스(원) 고도화, 고령친화산업, 복지기술 등 활용

### (3) 인구구조(지역, 기타) 분야

-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에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특화된 영역 및 추진과제는 구성되지 않음.
- 중앙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연동되어 매년 수립 및 추진되는 2023년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2023년)에서 인천시 및 소재 군·구에서 시행하는 세부사업을 취합하여 정리해 놓았지만, 방향성, 추진과제는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인천시, 소재 군·구별 인구구조, 인구이동, 생활인프라 수급을 위한 방향성은 인천광역시 발전계획(2018~2022)에서 다루어졌음. 인천광역시 발전계획(2018~

2022) 중에서 지역 청년 인재 양성과 사회진출 활성화, 생활밀착형 지역 맞춤형 보건복지체계 구축, 인구감소지역의 여건 개선을 통한 거주강소화 추진전략이 인구정책과 관련됨.

- 지역 청년 인재 양성과 사회진출 활성화: 지역대학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1개 세부과제), 지역맞춤형 우수 지역인재 양성(7개 세부과제), 지역교육 혁신 역량 강화(6개 세부과제), 지역인재 취업 및 사회진출 준비 지원(11개 세부과제)
- 생활밀착형 지역 맞춤형 보건복지체계 구축: 취약지역 중심의 지원 강화(6개 세부과제), 지역중심 보건복지체계 구축(20개 세부과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역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5개 세부과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역교통체계 개편(5개 세부과제)
- 인구감소지역의 여건 개선을 통한 거주강소화: 인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1개 세부과제), 접경지역·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통합 지원(1개 세부과제), 마을공동체 기반의 지역활력 촉진(3개 세부과제)

○ 저출산·고령화의 수준이나 지원 제도, 서비스, 인프라 수요·공급에 있어서 군 구별 차이가 크고, 행정구역과 일치하지는 않아도 생활관계인구가 활동하는 생활권이 정책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인구 유출보다 유입을 늘리기 위한 지자체간 경쟁도 이루어지고 있음.

- 2021년 인천광역시의 합계출산율은 0.778명인데 소재 군·구별 합계출산율은 강화군 1.166명, 옹진군 1.050명, 연수구 0.902명, 서구 0.893명, 중구 0.822명, 남동구 0.723명, 동구 0.688명, 계양구 0.685명, 부평구 0.667명으로 차이가 큼.

○ 하지만, 인천시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이와 같은 군, 구별 차이, 생활인구, 인구이동, 원도심과 구도심의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추진전략, 추진과제, 사업에 잘 나타나지 않음.

○ 군·구 기초지자체별로 특화 사업을 하더라도 인천시에서 인구, 생활인프라의 군·구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행정구역 개편, 군·구 간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게 하는 조정 등의 역할을 해주어야 함.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천광역시 발전계획(2018~2022)에서 추진하는 전략, 과제, 세부과제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인구와 관련되어 있음. 다시 말해, 인천광역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인구정책과 긴밀하게 연동되어야 하는 상황임. 따라서,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에서도 발전계획의 방향성, 추진전략,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를 반영하고, 협력적인 추진체계도 강화해야 할 것임.

#### (4)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분야

- 추진체계의 분절성과 중복성은 마땅히 추진해야 할 영역, 과제, 사업이 누락되더라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사각지대 문제 발생
- 산발적으로 분산된 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여 기본계획, 시행계획 간 연계, 통합의 근거 마련 필요
- 인천시청 내 총괄 및 주무부서: 인구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 모니터링, 평가, 환류하려면 인천도청 내 어느 조직에서 어떻게 총괄 및 주무부서 역할 분담을 할지 논의, 결정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기초지자체와의 관계: 광역지자체인 인천도청 내 부서들 외에도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군·구, 읍·면·동·리의 기초지자체와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 보고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되어야 함.
- 민·관 거버넌스: 민간기관과의 사업 추진, 전문가의 자문, 언론 홍보,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 방안도 반영될 필요가 있음.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비해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기반, 군, 구역량강화, 거버넌스, 인프라 확충, 관리체계(입법, 운영 점검 및 평가)의 전략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따라서 긴밀하게 구성,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체계를 인구정책에도 활용할 것인지,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추진체계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추진체계는 현재와 같이 별도로 두고 공통된 사업만 연계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함.

## 마. 전문가 심층 설문조사와 합의

- 본 전문가 심층 설문조사는 인천광역시의 인구 변화 특성을 분석하고 기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관련 사업 및 정책을 평가하여 인구정책 관련 주요 분야별 의제를 발굴하고 핵심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 인천광역시의 저출산 및 인구 변동, 고령사회, 그간 인천광역시 추진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관련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크게 저출산 및 인구 분야와 고령사회 분야로 구분하여 수행되었으며, 각 분야별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저출산 및 인구 분야는 공통 조사 항목으로 인천광역시 추진 정책 분야별 중요도, 영역별 우선순위, 효과성/효율성/시급성 평가를 수행함. 또한, 인천광역시의 주요 현안 관련하여 출산지원금의 중앙정부 부담 필요, 각 주체별 적정 부담 비율, 외국인(다문화) 정책 확대 필요성, 적절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인천광역시 내 인구편중현상에 대한 정책 개입 필요성, 청년의 순유입 증가를 위한 우선 추진 필요 정책, 중앙정부의 생활인구 활용 정책 중 인천광역시에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세부 정책 현안 과제 중요도, 기타 추가 의견 조사를 수행함.
  - 고령사회 분야는 인천광역시 추진 정책 분야별 중요도, 영역별 우선순위, 시급성, 과제 간 정합성, 과제 간 포괄성, 확대 필요 정책 영역 평가, 향후 정책과제 우선순위, 지역특성 고려 사업분야 우선순위, 세부 정책 현안 과제 중요도, 기타 추가 의견 조사를 수행함.
  - 또한, 각 분야별 향후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참고 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각의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응답 이유를 추가적으로 수렴함.

〈요약 표 2〉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저출산 및 인구 분야, 고령사회 분야 세부 분야별 전문가	
	저출산 및 인구	고령사회
	일자리	소득보장
	주거	
	임신출산 지원, 임신출산건강, 난임	사회참여
	자녀돌봄 및 양육	고령자 돌봄
	일-가정 양립	
	이민자(외국인)	고령친화
	(사)교육	고령사회환경
	청년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대상자	총 46인(저출산 및 인구 분야 24인, 고령사회 분야 22인) 인천광역시 내 전문가 각 분야별 8/4인	
조사 기관	에스티아이	
조사 기간	2023년 6월 27일 ~ 7월 26일	

○ 본 연구의 전문가 심층 설문조사 결과는 세부 정책 분야별 인천광역시 내/외 전문가를 함께 조사하여, 향후 정책 방향 도출을 위한 내/외적 시각을 최대한 균형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각 범주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연구보고서를 참조 바람.

**바.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추진체계와 중점 추진전략**

**(1) 비전, 인식, 목표의 의미와 추진전략 구성**

- 향후 5년 간(2024-2028년)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비전, 인식, 목표 구성은 급변하는 인구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관점을 최우선적으로 견지한 데 기인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 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는 전국가적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1) 관할 지역 간 인구 규모, 인구 구조 양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 2) 높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지정학적 위치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외국인, 이민자 유입 규모가 큰 특성을 고려함.
- 인천광역시는 무엇보다도 지역 간 양극화 해소 및 (이민자-내국인) 사회 통합



을 목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이해 하에 하기 **비전**을 제시함.

- 비전에서의 다양성은 내국인과 외국인/세대 간 다양성/ (관할 구군) 지역 간 다양성 등 인천광역시 내 존재하고 있는 여러 다양성을 복합적으로 의미함.
- 특히 이 중 지역 간 다양성 및 이에 따른 격차를 해결하여야 할 현안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발전의 동력으로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전제하고 긍정적인 다양성의 힘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 이를 위한 기본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음.

1.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 독일의 인구정책 표제 “모든 연령이 행복하게...”를 벤치마킹함. 인천광역시 내 어디서나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출산 및 고령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강화함.
2.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인천광역시 내 현재 그리고 향후 경험할 인구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작점은 무엇보다도 인천광역시의 인구 변동이 정책 수요이자, 정책 추진 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며, 이를 위해서는 두 요인 간 유기성을 최대한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전략 수립이 요구됨.
3. **(모두를 고려하고 배려하는 정책)** 인천광역시 내 관할 지역 간 인구 변동 및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완화하여 지속적인 상생기반을 구축함. 더불어 사는 공존 사회 구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내 지리적, 사회문화적 인접 지역 간 협력 체계를 추구하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다분함.

○ 또한, **인식**은 비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 수립된 목표를 설정하는 기본 방향으로, 비전과 목표 간 가교(bridge) 역할을 수행

○ 아울러 **추진전략**은 상기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요 전략을 의미하는 바, 1. 일자리, 2. 주거, 3. 일-생활 균형, 4. 자녀 양육, 5. 임신/출산, 6. 청년 지원, 7. 교육, 8. 노후 생활, 9. 노후 건강, 10. 외국인(다문화) 지원, 11. 인구구조 변화 대응, 12. 인구 고령화 대응의 총 12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음. 인구변동 및 저출산 대응 전략은 1-7, 고령사회 대응 전략은 8-9이며, 10-12는 기반 강화 범주로 각각 구분됨.

## (2)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추진체계

### □ 비전

- "다양성을 상생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인천"

### □ 이해

- "협력과 공존의 지역사회 표본, 인천광역시"

### □ 목표

1.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
2.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3. 모두를 고려하고 배려하는 정책

### □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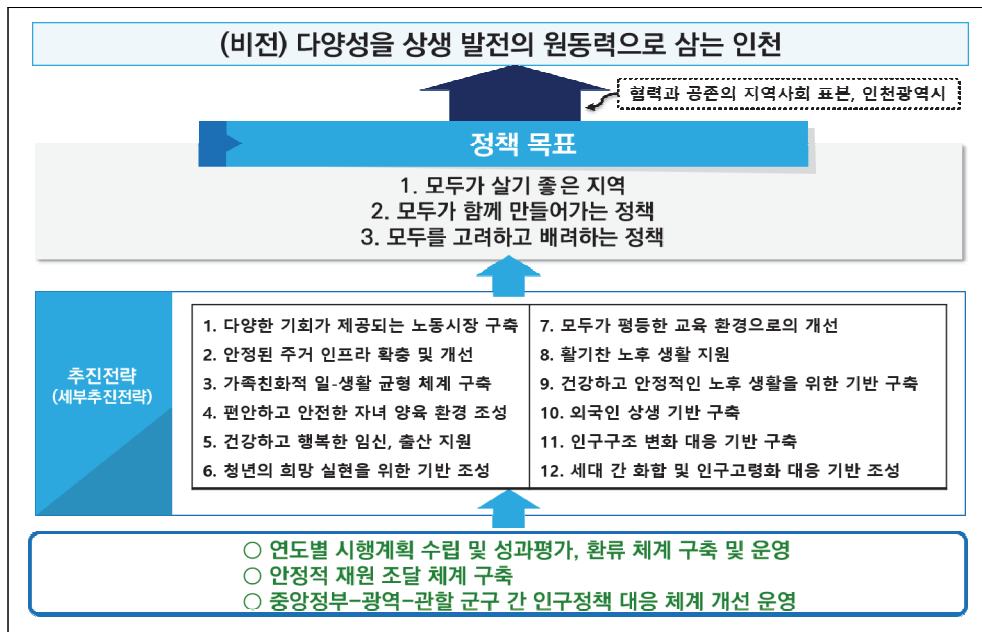
1.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는 노동시장 구축
2. 안정된 주거 인프라 확충 및 개선
3. 가족친화적 일-생활 균형 체계 구축
4. 편안하고 안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
5.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 지원
6. 청년의 희망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7. 모두가 평등한 교육 환경으로의 개선
8.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
9.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기반 구축

10. 외국인 상생 기반 구축
11. 인구구조 대응 기반 구축(거버넌스 및 관련 현안)
12. 세대 간 화합 및 인구고령화 대응 기반 조성

#### □ 거버넌스 체계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환류 체계 구축 및 운영
- 안정적 자원 조달 체계 구축
- 중앙정부-광역-관할 구군 간 인구정책 대응 체계 개선 운영

[요약 그림 2]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추진체계



#### □ 중점 세부과제 구성 기본 방향

-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정책의 실질적 추진 가능성 최우선적으로 고려<sup>1)</sup>

1) 무분별하고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 최대한 지양, 실현 가능성 우선 고려

- 정책의 추진 여건(지역 잠재력) 및 수요와의 유기성 제고
- 기존 추진 정책 검토에 따른 개선 방향 반영(특히 정책 사각지대 해소)
- 집중에 따른 소수 수혜자보다는 다수 수혜자가 두루 누리는(수혜자 확대) 정책
- 정책의 수요 측면 고려 및 행동 변화 유발 수준의 정책 확대 방향
-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인천형 모델 구축
- 타 시도의 우수 사례 부분적 벤치마킹

□ 추진전략별 중점 세부과제 도출 과정

- 첫째, 인천에서 기 추진된 저출산, 인구 변동, 고령사회 대응 직, 간접적 관련 유관계획 검토 사항을 기반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와의 정합성 등을 제고하여 유지, 강화, 신설되어야 할 정책 영역 등에 대한 논의 수행
-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수립 관련 SWOT 분석을 수행하여, 인구변동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강/약점과 기회/위협 요인을 정리하여 참고

〈요약 표 3〉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수립 관련 SWOT 분석 결과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수도권 입지 및 신도시 적시 개발 등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인구 증가 지역</li><li>• 높은 외국인 인력 활용 가능성 및 관련 적극적 시정 방향에 따른 실효성 있는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가능</li><li>•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가격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원도심 개발 등의 관련 맞춤형 정책 지속 추진</li><li>•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입에 따른 재정자립도 증가: 자체적인 정책 추진 기반 강화(2023년 기준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인구정책 대응 후발: 종합적인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 경험 적음</li><li>• 지리지형적 특성에 따른 인구 규모 및 인구 구조 변화의 관할 지역 간 격차(양극화) 심화</li><li>• 균형발전지표 주관지표 전국 평균 하회, 높지 않은 주민 정책 체감도</li><li>• 중소기업 입지에 따른 상대적으로(서울과 비교하여) 낮은 일자리의 질(임금 수준, 근로환경 등): 젊은층의 주된 유출 요인으로 지적</li></ul>
기회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양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생활인구 증대 가능성</li><li>• 국제관광도시 선정 및 국제공항 입지 등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li><li>•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향후 높은 발전 가능성 기대</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상대적으로 급격한 수준의 인구 초고령화 심화 전망에 따른 복지 수요 및 재정지출 증대</li><li>• 상대적으로 높은 지대와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에 따른 기업 입지 가능성 저하</li></ul>

자료: 저자 작성함.

- 셋째, 첫 번째 및 두 번째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인구변동, 고령사회 정책 전문가 총 46인(저출산 및 인구 분야 24인, 고령사회 분야 22인), 인천광역시 내 전문가 각 분야별 8/4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sup>2)</sup>
  - 인천광역시의 인구변동 대응 측면에서 정책 영역별 중요도, 시급성, 조정(확대 또는 신설)되어야 할 정책과제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앞선 세 범주의 논의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를 도출하되,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된다는 점을 염두하여 세부과제를 선정
  - 단적으로, 고령사회 분야 소득보장 지원 정책의 경우, 전문가 조사결과에서 는 정책의 중요성 및 시급성에 있어 높았으나, 제도의 설계 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차원의 접근이 선행되고 보완적으로 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요 과제로 포함시키지 못함.

#### □ 추진전략별 중점 세부과제

: 5개년 지속 추진 및 세부사업 내 세부사업 계획 수립(시행계획 등)

##### 1.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는 노동시장 구축

- 지역인재 채용 인센티브 제공
-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 청년 신규 입직자(뿌리, 반도체 분야) 장려금 확대

##### 2. 안정된 주거 인프라 확충 및 개선

- 청년 주거취약계층 지원
-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상향 지원
- 전입 근로자 및 타지 유입 대학생 주거 지원
- 청년 및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연계 지원

2) 본 보고서 5장 참고

3. 가족친화적 일-생활 균형 체계 구축

-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확대(개인 및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에서 민간 기업(중소), 자영업, 특수고용종사자 등으로 육아휴직 제도 이용 대상 확대

4. 편안하고 안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

- 다자녀우대정책 확충: 유자녀 또는 아동 전체로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
- 출산, 입양 지원금의 지역화폐, 현물, 바우처, 주택 및 금융상품과의 연계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상생효과 유도
- 초등학교 이후 (방과후)돌봄에 대한 지원(예: 늘봄학교 연계 추가 지원(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충 등))
- 공공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지원 확대

5.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 지원

- 난임, 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
- 생애초기건강관리 자체사업 추진 및 확대

6. 청년의 희망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 청년 직업훈련 지원 확대 및 인천 취업 연계 강화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인천형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확대 프로그램 운영

7. 모두가 평등한 교육 환경으로의 개선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방송 연계 인프라 구축
- 2자녀 이상 가구 온라인 교육 참여 바우처 지원 사업

8.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내실화
- 신노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연계
- 문화여가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대
- 노후준비 지원 강화
- 취약 신중년 자녀 지원 사업

9.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기반 구축

-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 취약 고령자 건강 지원 강화
-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지원

10. 외국인 상생 기반 구축

- 외국인 자녀 지원
- 한국국적 미취득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유학생의 정착 지원

11.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반 구축

-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생활인구 유입 제고
- 도서 지역 내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 서울, 경기도 출퇴근하는 생활인구의 교통 지원, 베드타운 성격을 지닌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 구축
- 세컨하우스 관련 지원
-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모색

## 12. 세대 간 화합 및 인구고령화 대응 기반 조성

- 유희시설 활용한 세대 통합 및 화합 인프라 확대
-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지속 개선
- 취약 고령인구 정주여건 개선 사업 확대

〈요약 표 4〉 12개 추진전략별 핵심과제(전략별 1~2개) 목록

추진전략	핵심과제
1.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는 노동시장 구축	○ 지역인재 채용 인센티브 제공
2. 안정된 주거 인프라 확충 및 개선	○ 청년 주거취약계층 지원 ○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상환 지원
3. 가족친화적 일-생활 균형 체계 구축	○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확대(개인 및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4. 편안하고 안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	○ 공공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지원 확대
5.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 지원	○ 난임, 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 ○ 생애초기건강관리 자체사업 추진 및 확대
6. 청년의 희망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 청년 직업훈련 지원 확대 및 인천 취업 연계 강화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7. 모두가 평등한 교육 환경으로의 개선	○ 2자녀 이상 가구 온라인 교육 참여 바우처 지원 사업
8.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내실화 ○ 신노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연계
9.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기반 구축	○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 취약 고령자 건강 지원 강화
10. 외국인 상생 기반 구축	○ 외국인 자녀 지원 ○ 한국국적 미취득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11. 인구구조 대응 기반 구축 (거버넌스 및 관련 현안)	○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생활인구 유입 제고 ○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모색
12. 세대 간 화합 및 인구고령화 대응 기반 조성	○ 유희시설 활용한 세대 통합 및 화합 인프라 확대 ○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지속 개선



〈요약 표 5〉 추진과제 우선순위 및 범주별 분류

구분	세부추진과제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이후 (방과후)돌봄에 대한 지원(예: 늘봄학교 연계 추가 지원(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충 등)</li> <li>○ 난임, 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li> <li>○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방송 연계 인프라 구축</li> <li>○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보건 의료 인프라 확충</li> <li>○ 취약 고령자 건강 지원 강화</li> <li>○ 외국인 자녀 지원</li> <li>○ 한국국적 미취득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li> <li>○ 유학생의 정착 지원</li> <li>○ 세컨하우스 관련 지원</li> <li>○ 유희시설 활용한 세대 통합 및 화합 인프라 확대</li> <li>○ 취약 신중년 자녀 지원 사업</li> <li>○ 2자녀 이상 가구 온라인 교육 참여 바우처 지원 사업</li> </ul>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인재 채용 인센티브 제공</li> <li>○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li> <li>○ 청년 신규 입직자(뿌리, 반도체 분야) 장려금 확대</li> <li>○ 전입 근로자 및 타지 유입 대학생 주거 지원</li> <li>○ 청년 및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연계 지원</li> <li>○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확대(개인 및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li> <li>○ 출산, 입양 지원금의 지역화폐, 현물, 바우처, 주택 및 금융상품과의 연계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상생효과 유도</li> <li>○ 생애초기건강관리 자체사업 추진 및 확대</li> <li>○ 청년 직업훈련 지원 확대 및 인턴 취업 연계 강화</li> <li>○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지원</li> <li>○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생활인구 유입 제고</li> <li>○ 서울,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생활인구의 교통 지원, 베드타운 성격을 지닌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 구축</li> <li>○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모색</li> </ul>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주거취약계층 지원</li> <li>○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상향 지원</li> <li>○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에서 민간 기업(중소), 자영업, 특수고용종사자 등으로 육아휴직 제도 이용 대상 확대</li> <li>○ 공공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지원 확대</li> <li>○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li> <li>○ 인천형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확대 프로그램 운영</li> <li>○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내실화</li> <li>○ 신노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연계</li> <li>○ 문화여가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대</li> <li>○ 노후준비 지원 강화</li> <li>○ 도서 지역 내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li> <li>○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지속 개선</li> <li>○ 취약 고령인구 정주여건 개선 사업 확대</li> </ul>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녀우대정책 확충: 유자녀 또는 아동 전체로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li> <li>○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li> </ul>

〈요약 표 6〉 세부 추진과제의 정책 분야별 분류

영역	구분	세부추진과제
인구 변동/ 저출산	일자리	○ 지역인재 채용 인센티브 제공 ○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 청년 신규 입직자(뿌리, 반도체 분야) 장려금 확대
	주거	○ 청년 주거취약계층 지원 ○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상향 지원 ○ 전입 근로자 및 타지 유입 대학생 주거 지원 ○ 청년 및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연계 지원
	일-생활 균형	○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확대(개인 및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에서 민간 기업(중소), 자영업, 특수고용종사자 등으로 육아휴직 제도 이용 대상 확대
	자녀 양육	○ 다자녀우대정책 확충: 유자녀 또는 아동 전체로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 ○ 출산, 입양 지원금의 지역화폐, 현물, 바우처, 주택 및 금융상품과의 연계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상생효과 유도 ○ 초등학교 이후 (방과후)돌봄에 대한 지원(예: 늘봄학교 연계 추가 지원(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충 등) ○ 공공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지원 확대
	임신/출산 지원	○ 난임, 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 ○ 생애초기건강관리 자체사업 추진 및 확대
	청년 지원	○ 청년 직업훈련 지원 확대 및 인천 취업 연계 강화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인천형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확대 프로그램 운영
	교육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방송 연계 인프라 구축 ○ 2자녀 이상 가구 온라인 교육 참여 바우처 지원 사업
고령사회 대응	노후 생활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내실화 ○ 신노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연계 ○ 문화여가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대 ○ 노후준비 지원 강화 ○ 취약 신중년 자녀 지원 사업
	노후 건강	○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 취약 고령자 건강 지원 강화 ○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지원
기반 강화	외국인 (다문화)	○ 외국인 자녀 지원 ○ 한국국적 미취득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유학생의 정착 지원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생활인구 유입 제고 ○ 도서 지역 내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 서울, 경기도 출퇴근하는 생활인구의 교통 지원, 베드타운 성격을 지닌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 구축 ○ 세컨하우스 관련 지원 ○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모색
	인구 고령화 대응	○ 유희시설 활용한 세대 통합 및 화합 인프라 확대 ○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지속 개선 ○ 취약 고령인구 정주여건 개선 사업 확대

〈요약 표 7〉 세부 추진과제의 생애주기별 분류

구분	세부추진과제
영, 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녀우대정책 확충: 유자녀 또는 아동 전체로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li> <li>○ 출산, 입양 지원금의 지역화폐, 현물, 바우처, 주택 및 금융상품과의 연계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상생효과 유도</li> <li>○ 초등학교 이후 (방과후)돌봄에 대한 지원(예: 늘봄학교 연계 추가 지원(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충 등))</li> <li>○ 공공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지원 확대</li> </ul>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방송 연계 인프라 구축</li> <li>○ 2자녀 이상 가구 온라인 교육 참여 바우처 지원 사업</li> </ul>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인재 채용 인센티브 제공</li> <li>○ 청년 신규 입직자(부리, 반도체 분야) 장려금 확대</li> <li>○ 청년 주거취약계층 지원</li> <li>○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상향 지원</li> <li>○ 전입 근로자 및 타지 유입 대학생 주거 지원</li> <li>○ 청년 및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연계 지원</li> <li>○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에서 민간 기업(중소), 자영업, 특수고용종사자 등으로 육아휴직 제도 이용 대상 확대</li> <li>○ 난임, 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li> <li>○ 생애초기건강관리 자체사업 추진 및 확대</li> <li>○ 청년 직업훈련 지원 확대 및 인천 취업 연계 강화</li> <li>○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li> <li>○ 인천형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확대 프로그램 운영</li> </ul>
중장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노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연계</li> <li>○ 취약 신중년 자녀 지원 사업</li> </ul>
노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내실화</li> <li>○ 문화여가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대</li> <li>○ 노후준비 지원 강화</li> <li>○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li> <li>○ 취약 고령자 건강 지원 강화</li> <li>○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지원</li> <li>○ 유희시설 활용한 세대 통합 및 화합 인프라 확대</li> <li>○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지속 개선</li> <li>○ 취약 고령인구 정주여건 개선 사업 확대</li> </ul>

〈요약 표 8〉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추진 관련 중앙정부 및 관할 지자체와의 협력 여부에 따른 중점 세부 사업 구분

범주 구분	중점 세부사업
중앙정부와의 협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및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연계 지원</li> <li>○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에서 민간 기업(중소), 자영업, 특수 고용종사자 등으로 육아휴직 제도 이용 대상 확대</li> <li>○ 다자녀우대정책 확충: 유자녀 또는 아동 전체로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li> <li>○ 초등학교 이후 (방과후)돌봄에 대한 지원(예: 늘봄학교 연계 추가 지원(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충 등))</li> <li>○ 공공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지원 확대</li> <li>○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내실화</li> <li>○ 외국인 자녀 지원</li> <li>○ 한국국적 미취득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li> <li>○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li> <li>○ 유학생의 정착 지원</li> <li>○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모색</li> </ul>
인천광역시 자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인재 채용 인센티브 제공</li> <li>○ 청년 신규 입직자(부리, 반도체 분야) 장려금 확대</li> <li>○ 청년 주거취약계층 지원</li> <li>○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상향 지원</li> <li>○ 전입 근로자 및 타지 유입 대학생 주거 지원</li> <li>○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확대(개인 및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li> <li>○ 출산, 입양 지원금의 지역화폐, 현물, 바우처, 주택 및 금융상품과의 연계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상생효과 유도</li> <li>○ 난임, 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li> <li>○ 청년 직업훈련 지원 확대 및 인천 취업 연계 강화</li> <li>○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li> <li>○ 인천형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확대 프로그램 운영</li> <li>○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방송 연계 인프라 구축</li> <li>○ 2자녀 이상 가구 온라인 교육 참여 바우처 지원 사업</li> <li>○ 신노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연계</li> <li>○ 문화여가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대</li> <li>○ 노후준비 지원 강화</li> <li>○ 취약 신중년 자녀 지원 사업</li> <li>○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li> </ul>
인천광역시-관할 구군 협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li> <li>○ 생애초기건강관리 자체사업 추진 및 확대</li> <li>○ 취약 고령자 건강 지원 강화</li> <li>○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지원</li> <li>○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생활인구 유입 제고</li> <li>○ 도서 지역 내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li> <li>○ 서울, 경기도 출퇴근하는 생활인구의 교통 지원, 베드타운 성격을 지닌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 구축</li> <li>○ 세컨하우스 관련 지원</li> <li>○ 유희시설 활용한 세대 통합 및 화합 인프라 확대</li> <li>○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지속 개선</li> <li>○ 취약 고령인구 정주여건 개선 사업 확대</li> </ul>

〈요약 표 9〉 인천광역시 관할 지역 내 지역격차 해소, 상생, 맞춤형 방안 범주별 중점 세부사업 구분

범주 구분	중점 세부사업
지역 간 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li> <li>○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보건 의료 인프라 확충</li> <li>○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생활인구 유입 제고</li> <li>○ 도서 지역 내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li> </ul>
지역 간 상생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이후 (방과후)돌봄에 대한 지원(예: 늘봄학교 연계 추가 지원(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충 등))</li> <li>○ 공공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지원 확대</li> <li>○ 서울, 경기도 출퇴근하는 생활인구의 교통 지원, 베드타운 성격을 지닌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 구축</li> <li>○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지속 개선</li> <li>○ 취약 고령인구 정주여건 개선 사업 확대</li> <li>○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모색</li> </ul>
지역 맞춤형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li> <li>○ 인천형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확대 프로그램 운영</li> <li>○ 외국인 자녀 지원</li> <li>○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li> <li>○ 유학생의 정착 지원</li> <li>○ 도서 지역 내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li> <li>○ 서울, 경기도 출퇴근하는 생활인구의 교통 지원, 베드타운 성격을 지닌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 구축</li> <li>○ 세컨하우스 관련 지원</li> </ul>

### (3) 인천광역시 관할 자치구/군 인구정책 주요 방향

#### □ 관할 자치구/군 인구정책 기본 방향

○ 추가적으로 인천광역시 관할 자치구/군별 인구정책 주요 방향에 대해서 제시함.

- 이는 본 연구의 2장에서 살펴본 인천광역시 자치구/군별 주요 정책 수요(인구 변동 특성), 잠재력 특성 및 최근 현안 및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
- 또한, 출생아 수(출산율) 감소에 대응하는 측면에서의 친출산 환경 조성, 인구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의 친고령사회 환경 조성, 다양한 사회 정책 분야에 대한 대응 기반 강화는 인천광역시 모든 자치구/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하기 표에서는 각 자치구/군별 차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방향을 제시함.

○ 관할 자치구/군별 인구정책 주요 방향은 자치구/군의 정책 수요 및 정책 추진 여건 진단과 더불어 중앙정부와의 소통 관련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인천광역시의 역할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

〈요약 표 10〉 인천광역시 관할 자치구/군별 인구정책 주요 방향

자치구/군	주요 방향
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중구는 원도심 중구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 비율은 1:2.5 정도이며, 인구증가는 영종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되고 있음.</li> <li>• 영종 국제도시의 인구의 사회적 증가(순유입)에 따른 정주 인프라 확대 정책 수요(주거, 일자리 등) 반영, 생활인구 규모의 지속적 유지와 이를 활용한 지역 활력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서비스 및 인프라 확대 등에 주목할 필요</li> </ul>
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도심 동구 지역은 중구와 같이 고령인구, 재개발이 되는 지역 및 재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인천광역시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원도심 중구+동구=제물포구], [영종 국제도시=영종구]로 합구/분리를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원도심 동구는 원도심 활력 제고를 위한 과제 추진(관심지역 지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적극 활용 모색 포함)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인구비율(상주인구 대비)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 특색 인프라 구축 및 브랜드 개발 등에 주목하는 것을 고려</li> </ul>
미추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규모 감소(순유출 증가)에 대응하는 정주 여건 개선</li> <li>• 주거(전세) 인프라 비위 단속 관련 법, 제도 개선</li> <li>• 원도심+공장지대가 혼재한 지역이고, 재개발이 많이 되지 않은 지역이어서 저렴한 집값, 빌라, 다세대주택 등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들이 유입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최근 전세사기 대상 지역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지역임을 고려한다면, 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 인구의 유입을 보장할 수 있는 안심주거/안심주택 정책을 통해 인구유입을 가속화시키는 데 주목할 필요가 다분</li> </ul>
연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의 관할 동 간 격차 해소</li> <li>• 인구의 사회적 증가(순유입)에 따른 정주 인프라 확대 정책 수요(주거, 일자리 등) 반영</li> <li>• 원도심 연수구와 송도국제도시로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지역이고, 송도국제도시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젊은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원도심 연수구는 계획도시적인 성격도 있지만,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도 등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원도심 연수구를 중심으로 인구유입이 가능한 시나리오, 직장-주거 거리 단축 등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li> </ul>
남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 인구 유입 지역이지만, 최근 순유출 특성에 대한 대응</li> <li>• 공단 노후화 개선을 포함한 일자리 양적 확충과 일자리 미스매치 개선, 외국인(다문화) 노동력 활용 관련 제도 개선</li> <li>• 남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인구집단이 유입되는 지역이지만, 원칙적으로 산업경기에 따라 인구변동이 있으며, 또한 남동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근로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산업정책과 주거정책을 인구정책과 연결시키는 데 주목할 필요</li> </ul>
부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5년간 관측된 인구의 사회적 감소에 대응하는 정주 여건 개선</li> <li>• 서울 및 경기 인접 지역 생활인구 유입 관련 정책 추진</li> <li>• 대우자동차/GM의 쇠락에 따라 60만명 이상이었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지만, 과거부터 문화/여성/아동/가족에 대한 배려가 지속되는 자치구임을 고려한다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지속 강화하고 지역 강점으로 부각시킬 필요</li> </ul>
계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규모 감소(순유출 증가)에 대응하는 정주 여건 개선</li> <li>• 서울 인접 지역 생활인구 유입 관련 정책 추진</li> <li>• 인천 8개 자치구 중 서울출퇴근 인구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고, 사회정책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역의 특성을 띠고 있으며, 전형적인 서울출퇴근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소규모 신도시 건설이 가장 긴요하게 고려될 필요</li> </ul>
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의 사회적 증가(순유입)에 따른 정주 인프라 확대, 정주 여건 정책 수요(주거, 일자리 등) 반영(광역시 관할 자치구 중 인구 규모 1위 및 지속적인 인구 유입)</li> <li>• 환경 측면 인프라 개선</li> </ul>
강화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인구의 사회적 증가 및 생활인구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요 반영</li> <li>•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적극 활용</li> <li>• 인천에서의 유입은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고, 인구소멸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가운데, 수도권, 또는 서울/고양 지역에서 카페사업 등 문화관광사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장년 창업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li> </ul>

자치구/군	주요 방향
웅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인구 관련 특색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정주 여건 지속 개선</li> <li>•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적극 활용</li> <li>• 섬지역 특성상 인구유입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고, 인구유출을 늦추는 것이 필요한데, 인구유출을 늦추는 정책의 개발 자체가 어려움, 영흥도 같은 경우 화력발전소, 백령도 같은 곳은 해병대 주둔 등이 인구 유출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인구유입 매리트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섬은 육지와 다리 연결, 거리가 먼 백령도 등 접경지역은 쾌속선 운항 등으로 이동자유 자체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데 주목할 필요</li> </ul>

## 사. 환류 체계와 자원 조달 방안

### (1) 평가 및 환류 방안

- 향후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성과평가 체계의 주요 방향 중 하나로 인구 위기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점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장인수 외, 2020). 이들 지역은 현재 자체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중앙-광역에 의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도모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사후 평가 체계가 구축되고, 지역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음(장인수 외, 2020).
- 지역 인구 동태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심도 있게 관측하기 위하여 통계청 집계자료가 두루 활용되고 있는 바, 이들 지표가 지역의 다각적인 변화를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역시 중요함. 지역의 변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지표 활용과 지속적인 관측에 대한 논의 역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 집계수준의 분석과 함께 가용할 수 있는 미시자료를 활용한 분석은 직접적인 정책의 수혜 대상인 개인 차원의 행태를 보다 정교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
-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관련 다양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제시되고 있음.
- 다만, 인천광역시의 잠재력 및 정책 수요, 정책 추진 여건을 복합적으로 진단하는 동시에 여건 변화 파악과 같은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지표로서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보완할 필요가 다분함.

○ 각 추진전략별 성과지표와 종합 성과지표(인구변동 측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요약 표 11〉 종합성과지표 및 12개 추진전략별 성과지표

종합성과지표		자료
관할 지역 인구 규모의 변이계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민등록인구현황)
인구의 사회적 증감(순이동 규모)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추진전략	성과지표	자료
1.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는 노동시장 구축	실업률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통계청 고용동향
2. 안정된 주거 인프라 확충 및 개선	임대주택 공급(건설, 매입, 임차형)	인천도시공사
3. 가족친화적 일-생활 균형 체계 구축	성별 육아휴직자 수 (초회수급자 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4. 편안하고 안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	국공립어린이집 수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5.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 지원	인구 10만 명 당 난임시술 진료 수혜자 수 변화(최근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 청년의 희망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청년고용률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
7. 모두가 평등한 교육 환경으로의 개선	초중고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	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8.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실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통계
9.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기반 구축	공공노인병원 병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기관현황
10. 외국인 상생 기반 구축	전문(E1-7, 10), 비전문취업(E9, H2) 근로자 수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통계
11. 인구구조 대응 기반 구축(거버넌스 및 관련 현안)	인천 10개 자치구군 균형발전지표 핵심지표 변이계수 평균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지표
12. 세대 간 화합 및 인구고령화 대응 기반 조성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보건복지부 노인시설현황



〈요약 표 12〉 12개 추진전략별 성과지표별 최신 지렛값과 2028년 성과목표

종합성과지표		최신 지렛값	성과목표 (2028년)
관할 지역 인구 규모의 변이계수		0.700	0.695
인구의 사회적 증감(순이동 규모)		28,101명	40,000명
추진전략	성과지표	최신 지렛값	성과목표 (2028년)
1.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는 노동시장 구축	실업률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3.9% (2022.12월)	2.0%
2. 안정된 주거 인프라 확충 및 개선	임대주택 공급(건설, 매입, 임차형)	3,123호 (2021년)	5,000호
3. 가족친화적 일-생활 균형 체계 구축	성별 육아휴직자 수 (초회수급자 수)	남성: 1,015명 여성: 2,970명	남성: 2,500명 여성: 4,500명
4. 편안하고 안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	국공립어린이집 수	291개 (2022년)	350개
5.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 지원	인구 10만 명 당 난임시술 진료 수혜자 수 변화(최근 5년간)	52.5명	60명
6. 청년의 희망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청년고용률	50.5% (2023년 2분기)	60.0%
7. 모두가 평등한 교육 환경으로의 개선	초중고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	57.0만원 (2022년)	50.0만원
8.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실적	47,449건 (2021.12)	55,000건
9.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기반 구축	공공노인병원 병상수	276개 (2021년)	300개
10. 외국인 상생 기반 구축	전문(E1-7, 10), 비전문취업(E9, H2) 근로자 수	19,831명 (2021년)	21,000명
11. 인구구조 대응 기반 구축 (거버넌스 및 관련 현안)	인천 10개 자치구군 균형발전지표 핵심지표 변이계수 평균	0.92 (2021년 발표시점)	0.75
12. 세대 간 화합 및 인구고령화 대응 기반 조성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2.20개소 (2022년)	5.0개소

주: 인천 10개 자치구군 균형발전지표 핵심지표 변이계수 평균은 핵심지표인 연평균 인구증감율과 재정자립도의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을 산출평균한 값임.

## (2) 자원 규모 및 조달방안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정책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실, 국의 관련 사업의 2024-2027년 자원별 규모를 정리함.
- 먼저, 관련 실, 국은 총 14개 실, 국이며, 구체적으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안전본부, 교통국,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해양항공국, 도시계

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도시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경제자유구역청임.

○ 이들 각 실, 국별 관련 사업 개수는 다음과 같음.

〈요약 표 13〉 각 실, 국별 인구정책 관련 사업 수

(단위: 개)

실, 국	사업 수
기획조정실	49
청년정책담당관	12
시민안전본부	15
교통국	66
경제산업본부	38
미래산업국	50
해양항공국	55
도시계획국	35
도시균형국	83
글로벌도시국	29
문화체육관광국	36
보건복지국	45
여성가족국	50
경제자유구역청	40
합계	603

○ 각 실, 국별 관련 사업의 4개년(2024-2027년) 재원 규모는 다음과 같음.

- 해당 재원 규모는 지방중기재정계획 상 예산 규모를 의미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해당 기간 내 사업 종료 등 계속 사업 여부에 따른 예산 미반영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요약 표 14〉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연도별(2024-2027년) 재원 규모

(단위: 조 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소계
재원 규모	11.68	10.93	6.91	6.23	41.43

- 최성은(2011)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재원조달 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부분 중 하나는 현재의 지방재정중기계획에 제시된 사항 중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임.
  -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같은 의존재원의 감소 및 지방세, 세외수입의 감소에 따른 예산 규모의 재구조화를 지속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민간투자 제고를 위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음. 민간투자는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민간 부문의 수익성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해 중장기적인 민간투자 확보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공공 부문 일자리 이외에도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함께 창출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통해 민간 부문의 수익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의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추가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제도 운영을 도모하여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최성은(2011)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성과주의 예산 강화, 사후적 재정사업평가와 예산과정과의 연계를 통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 예산사용의 성격에 있어서도 경상경비 및 인건비 등의 낭비를 절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세원 확충을 통한 지방세입 증대에 따른 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 재정수요 관련 추가 재원 조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최원구 외(2020)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단적으로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관련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공항 관련 도로교통 개선, 공항 인근 지역 주민 지원 및 환경개선에 대한 재정 수요와 관련하여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와 같은 개별소비세의 지방세화, 컨테이너에 대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세입 확충을 통한 재원 조달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의 경우 정책사업의 우선순위와 매칭비율의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우선순위 사업에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정책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단적으로 지방비 매칭 비율이 크게 높고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점검, 검토하는 동시에 부서 간 논의 및 조정 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한 12개 추진전략별 중점 추진과제의 연도별(2024-2028년) 사업량 및 사업비(소요 예산 규모)를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음.

〈요약 표 15〉 12개 추진전략 및 연도별(2024~2028년) 사업량 및 사업비(소요 예산) 규모

(단위: 랑(명, 개소 등), 백만 원)

구분	추진전략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1.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는 노동시장 구축	110	22	22	22	22	22
	2. 안정된 주거 인프라 확충 및 개선	8,000	1,600	1,600	1,600	1,600	1,600
	3. 가족친화적 일-생활 균형 체계 구축	350	70	70	70	70	70
	4. 편안하고 안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	100,050	20,010	20,010	20,010	20,010	20,010
	5.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 지원	-	-	-	-	-	-
	6. 청년의 희망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1,030,500	204,500	205,000	206,500	207,000	207,500
	7. 모두가 평등한 교육 환경으로의 개선	25,450	5,090	5,090	5,090	5,090	5,090
	8.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	365,123	66,123	69,500	73,000	76,500	80,000
	9.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기반 구축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 외국인 상생 기반 구축	18,505	3,501	3,601	3,701	3,801	3,901
	11. 인구구조 대응 기반 구축 (거버넌스 및 관련 현안)	525	105	105	105	105	105
	12. 세대 간 화합 및 인구고령화 대응 기반 조성	435	79	79	89	89	99
	합계	1,599,048	311,100	315,077	320,187	324,287	328,397
사업비	1.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는 노동시장 구축	29,000	5,200	5,500	5,800	6,100	6,400
	2. 안정된 주거 인프라 확충 및 개선	34,000	6,800	6,800	6,800	6,800	6,800
	3. 가족친화적 일-생활 균형 체계 구축	35,000	7,000	7,000	7,000	7,000	7,000

구분	추진전략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4. 편안하고 안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	180,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5.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 지원	2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6. 청년의 희망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237,500	41,500	43,000	49,500	51,000	52,500
	7. 모두가 평등한 교육 환경으로의 개선	54,650	11,650	10,750	10,750	10,750	10,750
	8.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	1,333,388	233,752	239,597	346,068	252,628	261,343
	9.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기반 구축	2,500	500	500	500	500	500
	10. 외국인 상생 기반 구축	12,150	2,500	2,250	2,350	2,450	2,600
	11. 인구구조 대응 기반 구축 (거버넌스 및 관련 현안)	63,500	14,300	12,300	12,300	12,300	12,300
	12. 세대 간 화합 및 인구고령화 대응 기반 조성	45,900	8,380	8,380	9,380	9,380	10,380
	합계	2,052,588	372,582	377,077	491,448	399,908	411,573

주: 각 추진전략별 사업량 및 예산 규모는 “미정”이 포함되지 않은 규모임.

**키워드** :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인구변동, 저출산, 고령사회





#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결과의 기여도 및 기대효과

제4절 과업 추진 체계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급격한 인구변동에 따른 인천광역시 인구 동태와 인구 정책 간 유기성 제고 필요

○ 최근 인천광역시의 인구변동은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음.

-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향후 10년 간 연평균 6만 명 내외로 감소하여 2030년 5,12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2070년에 3,766만 명(1979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미 2019년부터 자연감소가 시작되었으며 2017년부터 생산연령인구는 이미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이후 유소년·고령자 부양비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의 인구 변동은 이전 전망보다 더욱 급격하게 전개되고 있음.

- 2020년 대비 2050년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약 14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인천광역시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자연감소가 나타나고 있음(자연감소율 0.01%).

- 인천광역시의 2020년 기준 총부양비는 3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34)에 비하여 두 번째로 낮지만, 2050년에는 92로 세종(72), 서울(83), 경기(86), 대전(90), 광주(91)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인천광역시의 급격한 총부양비 전망은 노년부양비의 증가 전망(2020년 18.2→ 2050년 75.3)에 크게 기인하고 있음.

- 즉, 인천광역시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일부 다른 광역시에 비하여 빠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또한, 관할 자치구 및 군 지역 간 인구 고령화, 인구 규모 변화 등 여러 인구 동태 간 양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보다 심화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의 급격한 인구 변동 전망에 따른 인구 정책의 종합적 추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측면에서 예상되고 있는 인구 변동(인구 규모, 인구 구조 변화)은 인천광역시가 향후 추진하여야 할 인구 정책 방향의 가늠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정책 수요와 정책 추진 여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단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인구 동태가 시사하고 있는 정책 수요를 보다 심층적으로 진단하여 이에 부합하는 인구 정책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즉, 인천광역시 인구 동태와 인구 정책 간 유기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다분함.

□ 인천광역시의 인구 변동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됨.

○ 저출산 분야와 관련하여, 출생아수 감소 및 지역 인구 감소가 보육 및 교육, 노동, 국방, 아동건강, 모성건강 등 다양한 사회정책 분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시급함.

○ 고령사회 분야와 관련하여, 고령인구의 소득 전망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정책, 중장년층 경제활동 특성과 고용정책, 고령인구 증가와 보건의료 정책, 장기요양보험 제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건축 및 도시환경, 고령친화산업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제 마련이 시급함.

○ 또한 인천광역시라는 지역적 관점에서도 각 관할 구군의 인구유출(입) 추세는 사회전체 또는 지역별로 경제, 산업, 노동시장, 교육제도와 사회복지 분야 등의 각종 거시적 사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함.

## 2. 연구의 필요성

□ 인천광역시의 인구정책 측면 대응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여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인천광역시는 2017년 4월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1차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2018년~2022년)”을 수립하여 공표함.

- 저출산에 대한 사회·경제분야 종합적인 대응체계 미흡,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마련과 실천의지 부족, 인구 늘리기 및 유지정책 추진 미흡에 대한 반성 인식에 따라 5대 분야 13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표 1-1〉 제1차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2018-2022년) 세부과제

정책분야	정책과제	세부과제
1.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 강화 (17개)	1-1. 청년고용 활성화	1. 일자리 박람회 개최 2.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3. 지역사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4. 전역 장병 등 예비구직자 취업 특강 5.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창출 강화 6. 전문여성 육성 및 지원 7.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청년상상플랫폼) 운영 8. 청년고용촉진 인턴사업 9. 창업재기펀드 조성 사업 10. 지피지기 창업성공 추진 11. 맞춤형 취업 코칭제 프로그램 12. 인천청년사랑 프로젝트 13. 인천 창업허브 조성 14. 일하는 여성 권익향상 지원 15. 근로자 무료 합동결혼식 16. 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1-2.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1.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
2.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46개)	2-1. 임신·출산 사회책임 시스템 구축	1. I-Mom 건강관리 지원 2. Non-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3.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4.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지원 5.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7.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8.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9.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1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46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4~2028) 수립 연구용역

정책분야	정책과제	세부과제
3. 맞춤형 돌봄확대·교육 개혁 (36개)		1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2.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13.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14. I-Mom 출산축하 지원 15.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난임부부)지원 16. 지역사회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
	2-2.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1.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제공 2.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4.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6. 한국어 교육 운영 지원 7.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8.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9.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0.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11. 공동생활가정(매입입대주택) 주거 지원
	2-3.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	1.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2. 아동발달 지원제와 지원 3. 아동보호시설 기능 보강 사업 4.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5. 입양 가정위탁 심리치료 지원 사업 6.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7.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8.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9. 아동친화도시조성 지원 1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 11. 인천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12.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13. 학교성교육 내실화 14.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15. 청소년 자립기반시설 운영 16. 청소년쉼터 운영 17.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18. 취약계층 아동 스마트 키즈폰 보급 지원 19. 우리 마을 아동 지킴이 사업
	3-1. 맞춤형 보육	1. 가정양육사업 지원 2. 보수교육 지원 3. 보조교사 지원 4. 보육정보 사업 5. 대체교사 지원 6. 보육교직원 인권교육 7.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8.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9.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 컨설팅 사업 10.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운영 11.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확대 12.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분야	정책과제	세부과제
		13. 가정양육수당 지원 14. 보육교직원 인건비 15.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6. 교재교구비 지원 17. 만3-5세 누리과정 운영 18. 다자녀 가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19.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 2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3-2. 돌봄지원 체계 강화	1.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2. 아이돌봄 지원사업 3. 다함께 돌봄사업 4. 육아코디네이터 지원 5. 저소득 아동, 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 운영 6.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8.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9. 청소년 국제교류 운영 10. 아동수당 지원 11. 다자녀 가정 유아교육비 지원 12.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3-3. 교육개혁 추진	1.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 2.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자유학기제 활성화 3.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지원 4.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4.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10개)	4-1. 일·가정 양립 실천분위기 확산	1. 가족사랑의 날 운영 2. 다양한 근무형태의 활성화 3. 임신여성공무원 당직근무 유예제 4. 미래지향적 복지제도 운영 5.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6. 다자녀 공무원 근무지 배려 7.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4-2. 남성·중소기업·비정 규직 등 일·가정 양립 실천여건 강화	1.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2.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확충
	4-3.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성화	1.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
5. 저출산 대응기반 강화 (11개)	5-1. 임신·출산·양육지원 인프라 구축	1. 표준모자수첩 제작 보급 2. 임신부 배려석 핑크라이트 설치 3. 출산장려기금 운영 4.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5. 장난감 무료 대여점 운영 6. 유모차 소독기 설치 지원
	5-2. 친결혼·출산 사회분위기 조성	1. 영유아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 2. 지역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지원 3. 출산·가족애 페스티벌 개최 4. 임업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개선 사업 추진 5. 선남선녀 인연 만들기

자료: 인천광역시(2018),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위한(2018-2022년) 제1차 저출산대응 중장기 기본계획.

○ 또한, 2018년 “더 나은 고령사회 도시를 여는 인천(2019-2023) - 인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함.

- 인천광역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층 편입에 따른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및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인식에 따라 6개 정책 과제, 16개 단위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음.

〈표 1-2〉 인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과제별 추진계획

정책과제	단위과제	세부과제
1. 노후소득보장 강화	노후 소득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 준비를 위한 재무설계 교육 활성화</li> <li>• 시니어 직업훈련 교육의 다양화 추진</li> </ul>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활동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일자리 신규 발굴 및 수행기관 확충</li> <li>• 공익형 노인일자리 급여 수준 증진</li> <li>• 지역사회 일자리 사업을 위한 인력풀 구축 및 연계 강화</li> <li>• 취약계층의 안전한 소득활동 지원 보장 강화</li> </ul>
	스마트 Job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년과 청년세대가 함께하는 세대 통합형 창업 지원</li> <li>• 어르신이 행복한 노인일자리 개발 체계 강화</li> </ul>
2.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고령사회 서비스 제공 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중심의 원스톱 통합 정보 플랫폼 기반 구축</li> <li>• 고령사회 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 확산</li> </ul>
	노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연령 및 분야별 생애설계 교육 확산</li> <li>• 노년기 교육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li> </ul>
3.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고용 기회 및 현장에서의 참여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기반 노인적합일자리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li> </ul>
	고령자 문화·복지 서비스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 효드림복지카드 도입</li> </ul>
	소외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균형적인 권역별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의 다변화</li> <li>• 액티브 경로당 활성화 추진</li> <li>• 지역사회 개방형 경로당 모형 조성</li> </ul>
4. 통합돌봄의 강화	치매예방 및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밀착형 치매지원 기관 확대</li> <li>•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li> </ul>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 인프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요양시설의 확대 및 기능 보강</li> <li>• 노인맞춤돌봄 사회안전망 강화</li> <li>•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네트워크 활동 강화</li> </ul>
	건강 및 공공 의료지원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요양노인을 위한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대</li> </ul>
	고령자 권익증진 및 인권 보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활동 확산</li> </ul>
5. 생애 마무리	지역사회 장사문화 조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사시설 수급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li> <li>•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li> <li>• 봉안당 건립 및 안치단 설치 추진</li> </ul>
	편안한 삶의 마지막을 위한 문화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준비 교육 확산</li> </ul>

정책과제	단위과제	세부과제
6. 고령친화 사회환경 기반 조성	안전과 편리성이 보장되는 교통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나 승하차가 쉬운 저상버스 도입 확대</li> <li>•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추진</li> <li>• 노인 교통안전교육 실시</li> <li>• 고령운전자 스티커(실버마크) 부착 확산</li> <li>•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인센티브개발</li> </ul>
	고령사회 정책 역량 강화 및 추진 기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추진</li> <li>• 노인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li> <li>• 노인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및 의견수렴 촉진</li> </ul>

자료: 인천광역시(2018), 더 나은 고령사회 도시를 여는 인천(2019-2023) - 인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 한편,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정책 수요 및 정책 추진 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요 인구변동의 특성과 이에 따른 현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인구 규모는 지속적으로 소폭 증가(2020년 일정 기간 미미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인구 동태는 기존의 저출산 대응 중심의 논의를 보다 확장하여 인천광역시의 인구 규모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주여건 조성, 저출산·고령화정책 및 인구 감소·순유출 완화·순유입 제고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음.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교육·주택·교통·문화복지 관련 지원 종합 정책 체계 구축이 시급함.
- 또한,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2021.10.18.)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에서 경기도의 일부 지역(가평, 연천(인구감소지역), 동두천, 포천(관심지역))과 함께 강화, 옹진 및 동구가 각각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으로 지정됨. 이러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간 인구동태 및 사회경제적 여건 격차 심화(양극화 심화) 문제도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음.

○ 종합적으로, 기본계획 목표 및 방향 설정의 적합성, 정책과제 내용의 적정성, 재원 투입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재검토가 필요

○ “제1차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2018년~2022년)”, “더 나

은 고령사회 도시를 여는 인천(2019-2023) - 인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인구 현상의 주요 쟁점을 포괄하는 데 한계를 노정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수립하여야 할 2024-2028년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범위와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또는 인구정책에 대한 관점에서, 저출산 분야 이외의 다양한 사회정책적 분야에 대한 접근이 다소 미흡하였음.
- 인구의 양적-질적 접근 측면에서 인구의 양적 조절 노력에 비해 인구자질의 제고를 위한 관점과 정책적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음.
- 인구의 규모-구조-분포 측면에서 분포의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
- 인구구조 변동에 대응한 사회 시스템 개선 영역은 부분적으로 과제가 포함되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 분석과 대응방안은 미흡하였음.

□ 급격한 인구 동태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미래 비전, 다양한 시각의 균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새로운 접근이 요구됨.

○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제1차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2018년~2022년)” 및 “더 나은 고령사회 도시를 여는 인천(2019-2023) - 인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보완하는 방향으로의 새로운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함.

- 계층, 젠더, 세대,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적 양상을 고려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비전 수립이 필요함.
- 사회의 경제적, 산업적, 노동시장, 문화구조, 교육과 복지 등 제반 변동을 고려한 비전 및 정책목표와 추진과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인천광역시의 인구 변동을 포함한 제 분야 사회 변동은 이보다 더 급변하고 다 변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더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대응 프레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지역 간 인구유출, 유입을 포함하여 인구 규모 및 인구 구조 변화의 지역적 분포의 특징을 함께 고려한 포괄적 인구 대응정책 고찰이 필요함.



- 포괄적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문제와 장기적 관점에서 시스템적 대응 과제를 균형 있게 마련할 필요 있음.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 연구의 내용

#### 가. 인구 현황 및 인구구조 진단 및 분석

□ 인천광역시 정주민구, 생활인구 관련 현황 분석

○ 인구학에서의 인구 규모 개념을 준용한 핵심적인 인구 동태의 차별성 있는 파악

- 사실 인구 규모(de facto population count), 법정 인구 규모(de jure population count)로 구분할 수 있음.

- 사실 인구는, 인구 조사(집계) 시점에서의 해당 영역(국가,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할 때, 해당 시점의 지리적 위치에 포함된 모든 인구 규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사 시점 당시 거주자임에도 일시적인 부재자를 제외하는 반면, 거주자가 아닌 일시적 방문자를 포함함으로써 그 당시의 지리적 경계 내에 존재하였던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임.
- 반면, 법정 인구는 관심 지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사 시점 당시 일시적 부재자라고 할지라도 거주자를 포함하고, 일시적 방문자를 제외함.

- 지금까지의 지역 인구 규모는 대체적으로 법정 인구(de jure population count)를 중심으로 집계되어 온 경향이 있음.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주민등록신고에 의하여 집계되며, 다음의 세 범주로 구성됨.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재외국민 제외), 거주불명자: 거주사실이 불분명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재외국민(외국

의 영주권을 취득한(영주목적으로 외국거주 포함)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 포함된 개념임.

- 통계청의 주민등록연앙인구: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연말기준 주민등록인구를 기초로 연앙(年央)개념으로 재작성하여 제공되는 자료(예: 2014년 주민등록 연앙인구 = 2014.1.1일과 2014.12.31일 주민등록인구의 산술 평균), 평균인구의 개념으로 출산, 사망, 이동 등 각종 인구동태를 산출시 분모인구로 활용됨.

○ 생활인구의 개념을 활용한 인천광역시 생활인구의 특성 고찰

- 주민등록인구(행정안전부)+외국인+통근·통학·관광·업무·휴양·정기적 교류 등 목적 체류 인구를 의미함.
- 상기 생활인구 개념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요인은 유동인구(통근·통학), 단기 및 중장기 체류자(관광·업무·휴양·정기적 교류)임.

○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목표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인구 동태 진단과 시사점 도출

- 정주인구의 변화를 중심으로 생활인구 파악을 통해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성 있는 정책 대안 발굴

□ 국내·외 인구정책 사례 분석

○ (국내) 중앙정부 기존 인천광역시 인구 정책사례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국외) 유럽, 미국 등 인구 정책에 비교적 적극적인 국가의 제도 및 사례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 도출

- 독일의 저출산 대응 사례 분석
- 미국의 고령화 대응 관련 빌리지 모델과 비컨힐 마을 사례 분석
- 영국 리버풀 인구 감소 대응 전략 분석

○ 지역의 활력(revitalization)을 증진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최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접근방법은 거주 기반정책(place-based policy)임.

- 거주 기반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들 수 있음.
- 사람 기반 정책(person-based policy)에 비해 거주 기반 정책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최근 많이 보고되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람 기반 정책의 단점을 이론적으로 살펴볼 것임.
-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주 기반 정책의 장단점을 이론적으로 살펴볼 것임.
-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실증적으로 입증된 여러 거주 기반 정책의 연구사례들을 살펴보고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수립 관련 활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임.

## 나. 인구정책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설정

### □ 인구정책 기본 목표 설정

○ “제1차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2018년~2022년)”의 성과와 한계 분석

- 중장기적 인구정책의 관점에서의 “제1차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2018년~2022년)”의 성과와 한계 분석
- “제1차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2018년~2022년)”의 관점, 문제인식 방법, 기본계획 체계구성 등에 관한 평가
- “제1차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2018년~2022년)” 예산 구조, 재정 투입의 적정성 등에 관한 정성적 평가

○ 상기 평가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추진체계 내 기본적 목표 설정

### □ 인구정책 추진방향 설정

○ 인천광역시 인구구조 분석 및 사회경제적 변화 특성 분석 결과 고찰

- 인천광역시 중·장기 인구 변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기존연구를 활용하여 인구 변동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파악

- 향후 인구변동 요인 변화에 따른 사회 제반 영역에 대한 전망과 파급효과 분석

○ 향후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목표, 추진전략 등 모색

-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비전, 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모색
-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분야, 영역 등을 구분하여 전체 추진체계 구상

## 다.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제시

### ① 정책 발굴 및 추진과제 제시

□ 정부 인구정책 연계과제 발굴

○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에서 그간 추진하였던 다양한 정책 방향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정책 수요와 정책 추진 여건을 고려한 연계과제 발굴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의 부문별 핵심전략 중 인구정책 종합계획 관련 정책 및 사업 검토
- 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방향 및 기조 검토(국정목표/비전과 약속 검토)
- 현 정부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2022.4.27.) 내 비전 체계, 15대 국정과제, 균형발전 지역공약- 17개 시도 7대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 -(2022.4.27.) 내 인천광역시 정책과제 검토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내 인천광역시 추진 내용 종합적 검토
- 인구정책TF(관계부처합동, 2019년부터 추진)의 지역인구위기 대응 정책 추진 방향 및 추진과제 검토
-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특별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주요 과제, 고향올래 사업 검토

#### □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

- 인천광역시 각 관할 구군별 현재 추진 중인 인구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 각 구군 지역의 정책 추진 여건과 인구 구조 변화 특성을 바탕으로 기본 및 중점 시책 전략 과제의 우선순위 도출

#### □ 분야별 생애주기별 정책 발굴

- 인천광역시 저출산 관련 분야(임신, 출산 지원/돌봄, 양육 등), 고령사회 분야(노인, 건강 등)를 포함하여, 두 분야와 모두 관련된 사회정책 분야인 일자리, 교육, 주택, 교통, 문화, 복지 등 제 사회정책 분야 검토
- 아동,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정책 수요를 고려한 분야별 추진 사업 발굴

#### □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사업 발굴

-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서 중점적으로 활용 가능한 사업을 앞서 발굴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향성 제시

### ② 추진과제에 따른 이행전략 제시

#### □ 분야별 핵심과제 선정

- “정책 발굴 및 추진과제” 및 “인천광역시 인구 동태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저출산, 고령사회 분야 주요 사회정책 범주별 핵심과제 제시
  - 영역별 주요 정책과제 제시 및 단/중/장기적 이행전략 제시

#### □ 평가 및 환류 방안 마련

-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인천광역시의 인구 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주민구와 생활인구의 적극적 의견 수렴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 방향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필요

-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인구 변화 대응 시책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이후 사후적 환류 체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
  - 종합적으로, 인천광역시 인구 정책에 대한 객관적 사후 평가를 위한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 체계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임.

## 라. 추진체계 정립 및 자원 규모와 조달방안

### □ 협업체계 구축

- 분야별 정책 발굴 및 추진과제 도출, 핵심 우선순위 과제 선정, 평가 및 환류 체계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 및 발주처 담당 부서 간 지속적인 논의 체계 구축

### □ 자원 규모 및 조달방안

- 분야별 정책 발굴 및 추진과제 도출, 핵심 우선순위 과제 추진 관련 정부 공모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활용 방안 도출
- 인천광역시 재정 여건(재정분석보고서 내 주요 지표) 검토를 통한 자원 조달 개선 방향 모색 등

## 2. 연구의 방법

### 가. 인구 현황 및 인구구조 진단 및 분석

#### □ 인천광역시 정주민구, 생활인구 관련 현황 분석

- (자료 분석)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2%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포함하여, 생활인구 주요 항목별 현황의 시계열, 횡단면 분석 및 관련 시사점 도출
- (문헌 고찰)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 추진 환경, 정책 수요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2차 자료 분석과 해석

□ 국내·외 인구정책 사례 분석

- (문헌 고찰) 중앙정부 및 국외 인구 정책사례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 사례 및 관련 자료 검토
- (전문가 자문)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의 인구 정책사례 세부사업별 특성 분석을 위한 관련 전문가 자문 추진

## 나. 인구정책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설정

□ 인구정책 기본 목표 설정

- (문헌연구) “제1차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2018년~2022년)”의 성과와 한계 분석을 포함한 다각적 분석
- (전문가 자문) “제1차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2018년~2022년)”의 평가와 향후 인구정책 종합계획 기본적 목표 수립 관련 전문가 자문 추진

□ 인구정책 추진방향 설정

- (자료분석) 인천광역시 인구구조 분석 및 사회경제적 변화 특성 분석 결과의 심층적 해석
- (전문가 자문) 인구 변동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파악과 사회 제반 영역에 대한 전망과 파급효과 관련 일자리, 교육, 주택, 교통, 문화, 복지 등 주요 사회정책 분야 관련 전문가 자문 추진
- (전문가 조사)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수요와 정책 추진 여건 진단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추진

## 다.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제시

### ① 정책 발굴 및 추진과제 제시

- 정부 인구정책 연계과제, 지역 맞춤형 정책, 분야별·생애주기별 정책,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 사업 발굴

- (문헌연구)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시책(사업)을 포함하여, 중앙정부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별성 있는 정책 발굴
- (전문가 자문) 정책 발굴 결과에 대한 일자리, 교육, 주택, 교통, 문화, 복지 등 주요 사회정책 분야 관련 전문가 자문 추진

## ② 추진과제에 따른 이행전략 제시

- 분야별 핵심과제 선정, 평가 및 환류 방안 마련
  - (전문가 자문) 주요 사회정책 범주별 핵심과제 및 단/중/장기적 이행전략 관련 자문 추진
  - (발주처 관련 부서 협의) 주요 사회정책 범주별 핵심과제 및 단/중/장기적 이행전략 관련 지속적인 보고와 의견 수렴

## 라. 추진체계 정립 및 자원 규모와 조달방안

- 협업체계 구축, 자원 규모 및 조달방안
  - (문헌연구)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인구 변화 대응 시책 사업 추진 체계(사후평가 체계 포함) 검토와 시사점 도출 등
  - (전문가 자문)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 체계 구축 및 자원 조달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 전문가 간담회 추진



### 제3절 연구결과의 기여도 및 기대효과

#### 1. 기여도

-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4-2028)의 내실 있는 수립에 기여

#### 2.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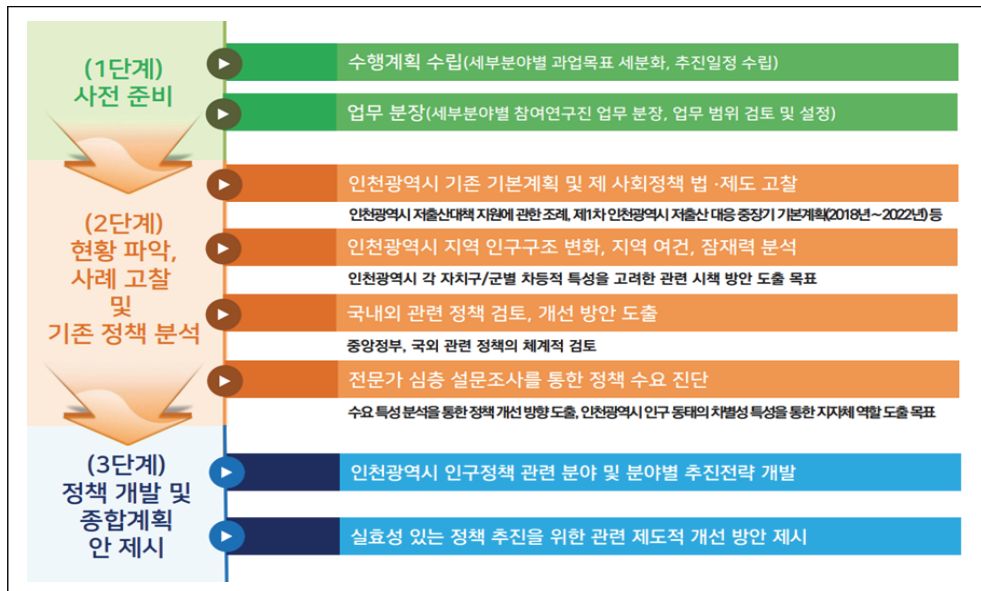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 인구 동태에 따른 맞춤형 종합 인구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인구 고령화 및 관할 지역 간 사회경제적 양극화 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개발 및 정책 활용 방안 제시
  - 인구변동 요인의 내, 외생적 요인과 상호 관계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 결과 도출 및 시의성 있는 정책 발굴 제시
  - 보다 실효성 있는 통계기반 국정운영(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을 뒷받침하는 통계 개발 및 생산 필요성 제시
- 종합적 측면에서의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개발 및 추진 전략 제시에 따른 활용성 증대
  - 대상 및 정책 분야별 인구 동태 대응 정책 방안 제시
  - 인천광역시 구군의 자원 및 정책 추진 여건, 정책 수요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인구 정책 방안 제시
  - 정교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증거 기반 정책 제시
- 인천광역시의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및 보완 방안 제시
  - 인구감소지역 지정, 인구의 자연적, 사회적 감소, 청년층 유출, 인구 초고령화 등 인천광역시의 인구사회경제적 변화를 시의성 있게 고려하는 법, 제도 개선 방안 제시
  - 인천광역시(광역시자체 단위) 및 구군(기초지자체 단위)에서의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안 제시

## 제4절 과업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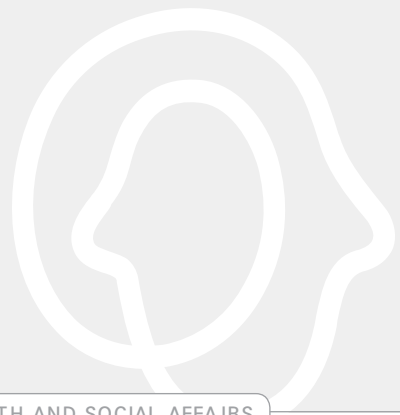
### ○ 3단계 과업 추진 구성

- (1단계) 사전 준비
  - 수행계획 수립 및 연구진 업무 분장
- (2단계) 현황 파악, 사례 고찰 및 기존 정책 분석
  - 인천광역시 기존 기본계획 및 제 사회정책 법·제도 고찰
  - 인천광역시 지역 인구구조 변화, 지역 여건, 잠재력 분석
  - 국내외 관련 정책 검토, 개선 방안 도출
  - 관련 전문가 심층 설문조사를 통한 정책 수요 진단
- (3단계) 정책 개발 및 종합계획 안 제시
  -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관련 분야 및 부문별 개발
  -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관련 법·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그림 1-1] 과업 단계별 추진 체계 및 전략



자료: 저자 작성함.



## 제2장

### 지역 정책 수요와 잠재력 특성 분석

제1절 정책 수요

제2절 정책 자원과 지역 잠재력

제3절 인천광역시 인구 이동 심층 분석과 함의



## 제2장 지역 정책 수요와 잠재력 특성 분석

- 본 장에서는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인천광역시의 주요 인구 동태를 파악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의 인구 관련 정책 환경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함.
  - 이는 인천광역시의 인구 동태가 인구정책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정책 수요이자 정책 추진 여건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을 고려한 것임.
- 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뿐 아니라 관할 8자치구 2군의 10개 지역을 관측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2000-2021년까지의 관측기간을 설정하여 인천광역시의 인구 구조 변화 양상을 종단적으로 분석함.
- 또한, 기본적인 인구 변동 특성의 체계적 고찰뿐 아니라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에 대한 생활인구 개념에 부합하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기 위하여, 인구의 사회적 이동(증감) 및 통신사 유동인구 자료를 활용한 생활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인천광역시의 인구 변동 특성에 대하여 다차원적 분석을 시도함.

### 제1절 정책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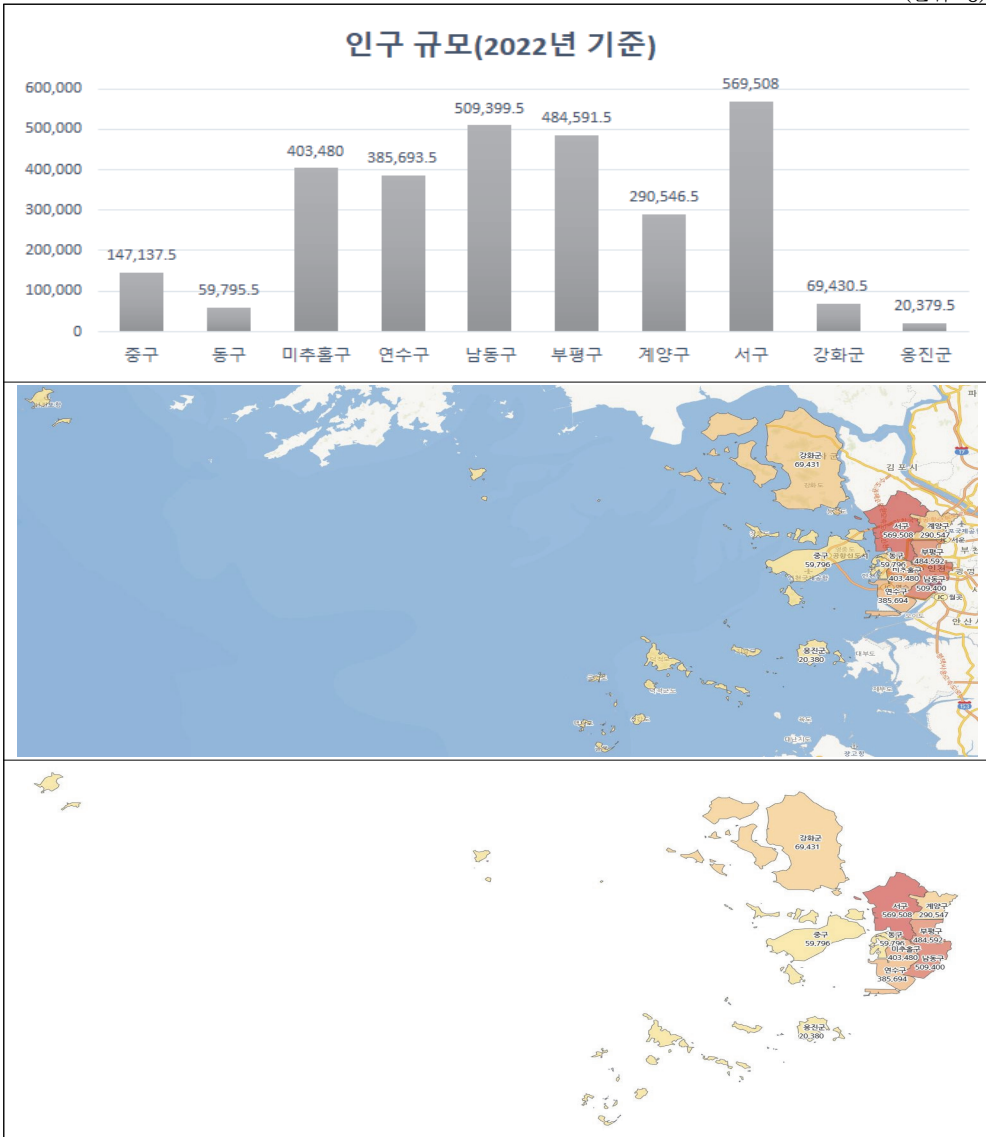
#### 1. 인천광역시 인구 규모 특성(2022년 기준)

- 인천광역시의 인구(주민등록연앙인구) 규모는 2022년 기준 2,939,962명이며, 이는 17개 광역시도 중 경기, 서울, 부산 다음으로 많은 수치임. 다만, 서울과 부산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인천광역시의 인구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의 관할 자치구/군의 2022년 인구 규모는 서구,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계양구, 중구, 강화군, 동구, 옹진군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이들 관할 지역 간 인구 규모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섬 지역인 강화군, 옹진군, 중구 및 섬 지역과 가까운 원도심 지역인 동구 지역(대체

적인 서쪽 지역)과 그 이외의 내륙 지역(대체적인 동쪽 지역) 간 뚜렷한 양극화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 즉, 서쪽 지역보다 동쪽 지역의 인구 규모가 크게 높은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

[그림 2-1] 인천광역시 관할 지역(8자치구, 2군)의 인구 규모 및 공간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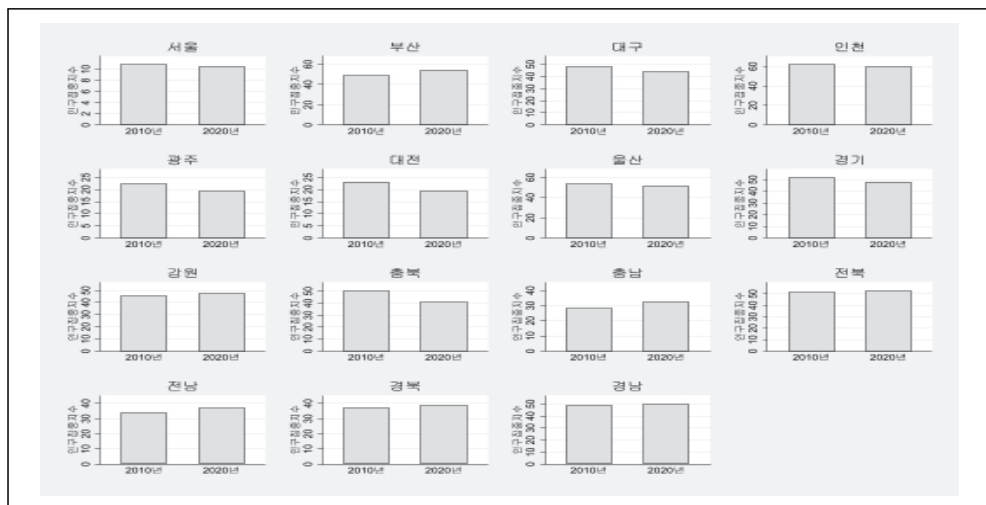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통계청(2023a).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3.7.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추가적으로, 인천광역시의 인구 규모의 관할 지역별 분포 특성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 중 하나는 10개 관할 자치구 간 인구 규모 편차가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이는 장인수 외(2022)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인천광역시의 인구집중지수가 6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특히 내륙지역과 섬 지역 간, 내륙 지역 중에서도 구도심과 신도시 간 인구 규모의 큰 편차가 이러한 인구 편중 현상을 직접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그림 2-2]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인구집중지수 변화(2010,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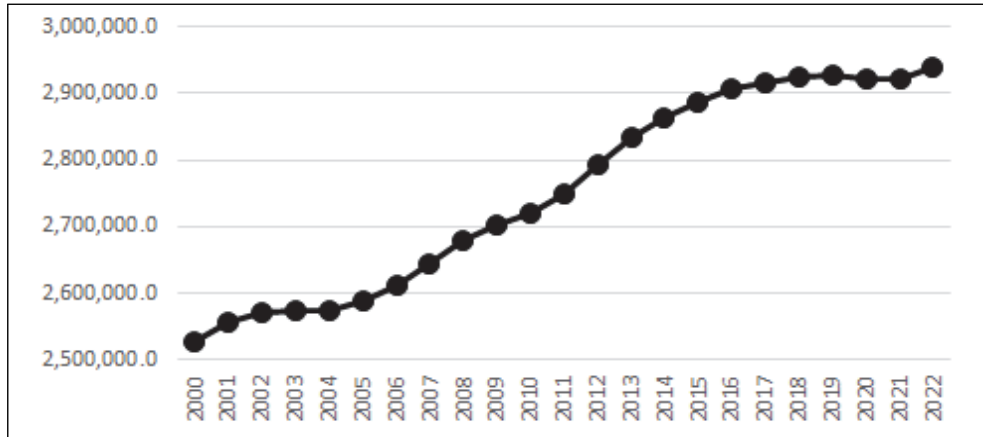
주: 특정 공간 내 구역의 인구와 면적의 누적 비율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에서의 인구 집중 특성을 살펴보는 것임. 이는 0-100의 값의 범위를 띠고 있는데, 0은 지역 간 인구 규모가 완전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 경우를, 100은 특정 공간 내 인구가 특정 지역에만 온전히 분포하고 있는, 소위 완전 불균등한 특성을 각각 의미함.  
 자료: 장인수, 정찬우. (2022).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 인천광역시의 인구 변화 분석

- 인천광역시의 인구 규모 변화와 관련하여, 관측기간 첫해인 2000년에 비하여 마지막 연도 2022년에 약 412,53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 인구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측기간 초반(2002-2003년) 및 관측기간 후반(2020-2021년)의 미미한 감소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또한, 관측기간 내 인구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기간은 2000년대 중반과 2010년대 초중반임.

[그림 2-3] 인천광역시의 인구 규모 변화 추이(2000~2022년)

(단위: 명)



자료: 통계청(2023a).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3.7.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관측기간 내 인구 규모 변화를 구군별로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관할 10개 자치구/군 지역 중 4개 지역인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는 인구 규모가 감소하였고, 다른 6개 지역은 증가하였음.

- 주목할 만한 사항은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동구와 다르게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화군, 옹진군은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관측기간 인구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옹진군의 경우 인구 변화율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임.

○ 구체적으로 지역별 증감폭을 살펴보면, 인구가 증가한 6개 관할 지역은 중구(75,193명 증가, 104.51%), 서구(229,232명 증가, 67.37%), 연수구(123,933명 증가, 47.35%) 등으로 확인되었고, 인구가 감소한 지역 중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동구(18,115명 감소, -23.25%), 계양구(44,110명 감소, -13.18%), 부평구(52,838명 감소, -9.83%)로 나타났음.

○ 인천광역시 관할 지역 인구 규모의 종단적 변화는 전체적인 인구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 간 인구 규모 증감 변화 양상이 상이하며, 이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인구 변화의 양극화 심화 개연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무엇보다도 이는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이 지역별 인구 변동 특성을 보다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지역별 차등적 정책 방향이 불가피함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표 2-1〉 인천광역시 및 관할 지역별 인구규모 변화

(단위: 명, %)

지역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2022	변화분	변화율
인천광역시	2,527,428	2,589,656	2,719,076	2,886,542	2,922,121	2,921,875	2,939,962	412,535	16.32
중구	71,945	91,147	90,546	111,664	135,667	140,192	147,138	75,193	104.51
동구	77,911	79,686	77,796	72,042	62,324	61,143	59,796	-18,115	-23.25
미추홀구	419,252	425,646	418,864	401,049	401,346	401,435	403,480	-15,772	-3.76
연수구	261,761	260,828	274,059	312,576	374,306	386,114	385,694	123,933	47.35
남동구	402,654	381,777	466,023	518,956	524,803	518,175	509,400	106,746	26.51
부평구	537,430	562,246	562,296	550,576	497,593	486,169	484,592	-52,838	-9.83
계양구	334,657	336,269	344,297	333,974	297,386	293,888	290,547	-44,110	-13.18
서구	340,276	371,593	399,924	498,108	539,670	545,468	569,508	229,232	67.37
강화군	67,512	65,252	66,844	66,935	68,662	69,012	69,431	1,919	2.84
옹진군	14,032	15,215	18,430	20,665	20,367	20,280	20,380	6,348	4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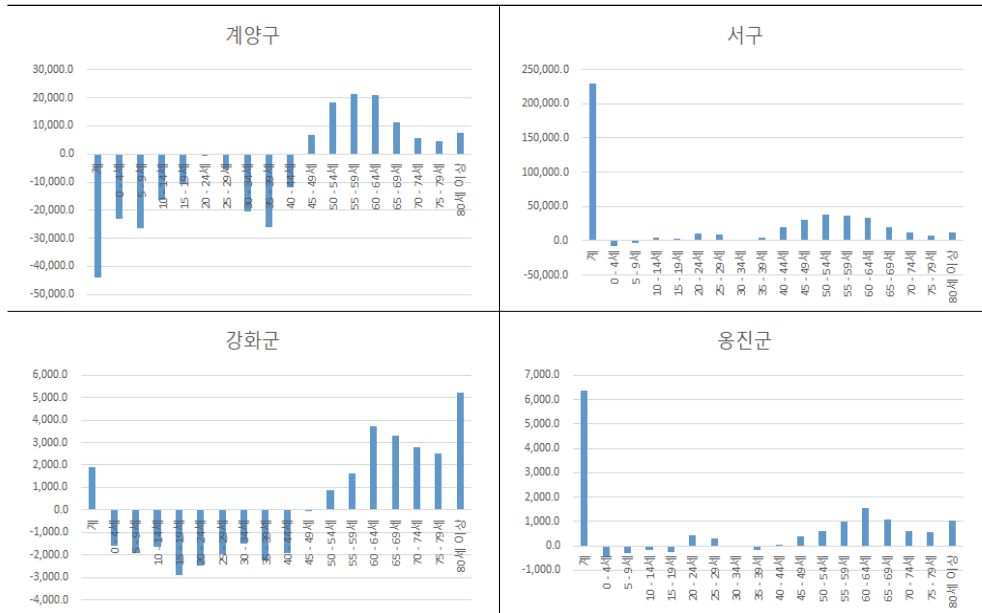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3a).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3.7.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인천광역시의 최근 23년 간(2000-2022년 간) 인구 규모 변화를 5세 단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40대 미만 인구 규모가 크게 감소한 반면, 40대 이상 인구 규모가 보다 크게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인구 규모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감소한 연령대 중 가장 큰 인구 감소폭을 보인 연령대는 0-4세, 5-9세, 30-34세, 35-39세이며, 반면, 60-64세, 50-54세, 55-59세, 65-69세 등 50, 60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이러한 50-60대의 증가는 장래인구추계 결과에서 보다 자세하게 언급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인구 규모 증감 여부와 무관하게 중구를 제외한 모든 관할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관측되고 있으며(지역 간 약간의 편차는 존재), 신중년으로 대표되는 고령사회 대응 정책 관련 새로운 정책 수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고령사회 대응 정책 방향을 직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분함.

[그림 2-4] 인천광역시 및 관할 지역의 5세 단위 연령대별 인구 규모 변화(2000~2022년)

(단위: 명)





자료: 통계청(2023a).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3.7.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이 관할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당위적 근거는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0년 기준 인천광역시의 기본적 인구 통계의 특징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세대 수는 약 126만 7천 세대이며, 관할 지역 중에서는 남동구(225,394세대), 서구(223,229세대), 부평구(211,305세대)가 상대적으로 세대 수가 많은 반면, 웅진군(11,993세대), 동구(28,777세대), 강화군(33,915세대)은 상대적으로 세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세대 수의 이러한 경향은 등록인구 규모 및 등록 외국인 규모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인구 구조 특성을 설명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인 고령인구비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모두 세대 수와 등록인구(등록외국인 포함)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과 일치하는 경향이 나타남.
- 반면, 이들 지역의 경우 인구밀도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였는데, 섬 지역인 강화군과 웅진군은 면적에 비하여 인구 규모가 상당히 작아서 인구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구의 경우 면적이 매우 작아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특징이 섬 지역이라는 지리지형적 특성에 크게 기인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다양한 정책 수요 대비 인프라 공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이후 지정된 18개 관심지역 중 인천광역시 내에서 각각 인구감소지역 2개(강화군, 옹진군), 관심지역 1개 지역(동구)이 지정되었음. 이는 이들 지역의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표 2-2〉 인천광역시 및 관할 지역별 주요 인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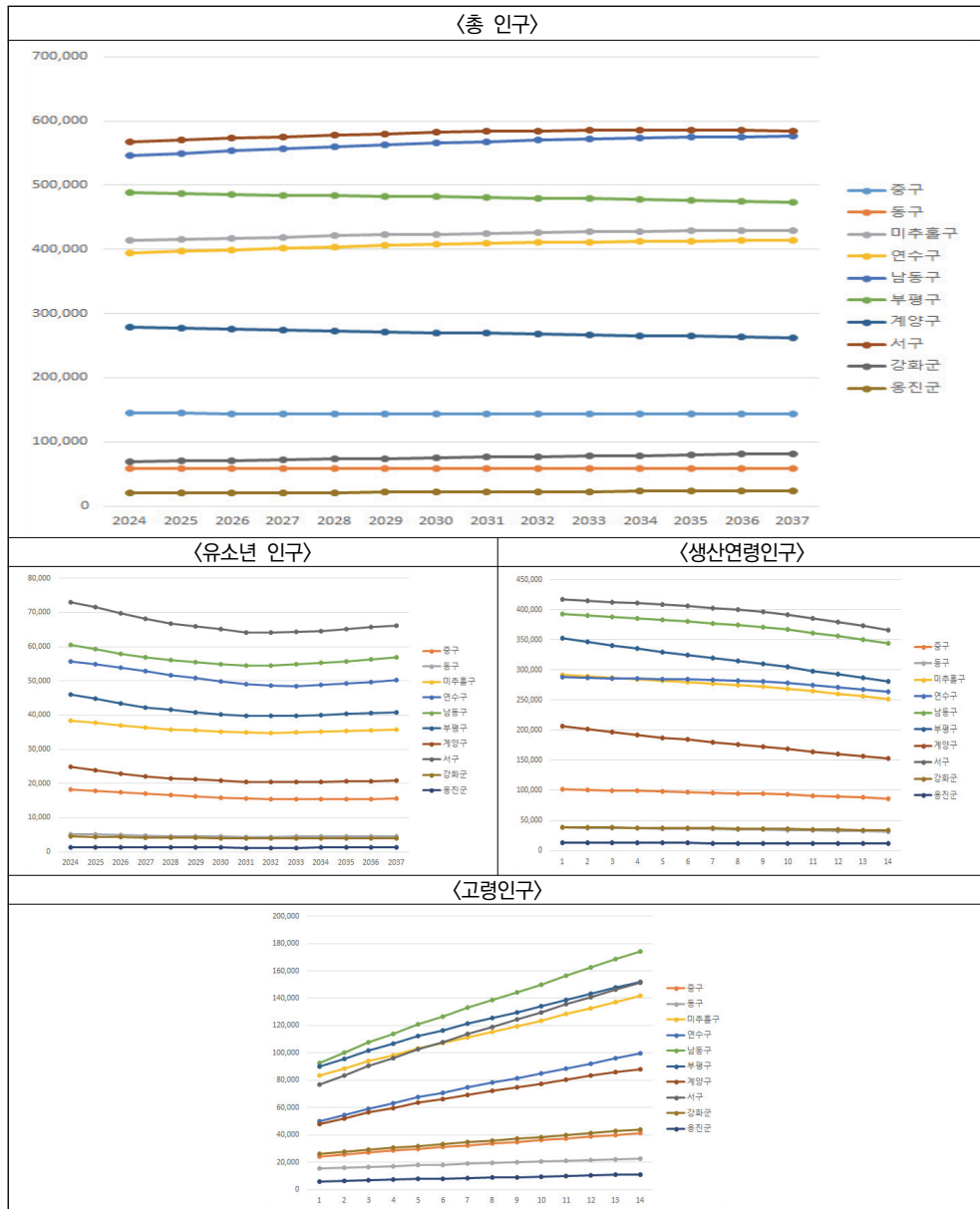
(단위: 세대, 명, %, 세, 명/㎢, ㎢)

구분	세대수	등록인구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평균 연령	인구 밀도	면적
	소계	전체				한국인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합계	1,267,956	3,010,476	1,512,095	1,498,381	2,942,828	1,473,943	1,468,885	67,648	38,152	29,496	411,483	13.7	42.3	2,826	1,065.23
중구	68,379	143,656	74,469	69,187	139,729	72,485	67,244	3,927	1,984	1,943	20,531	14.3	41.7	1,023	140.36
동구	28,777	63,397	32,041	31,356	62,542	31,575	30,967	855	466	389	14,453	22.8	47.3	8,805	7.20
미추홀구	188,277	413,246	208,126	205,120	404,343	203,638	200,705	8,903	4,488	4,415	69,074	16.7	44.0	16,636	24.84
연수구	152,266	399,869	199,187	200,682	387,450	192,570	194,880	12,419	6,617	5,802	38,190	9.6	39.3	7,116	56.19
남동구	225,394	536,938	268,446	268,492	525,354	260,923	264,431	11,584	7,523	4,061	71,468	13.3	42.0	9,346	57.45
부평구	211,305	508,881	251,826	257,055	494,962	244,713	250,249	13,919	7,113	6,806	73,424	14.4	43.3	15,903	32.00
계양구	124,421	299,904	149,338	150,566	296,750	147,976	148,774	3,154	1,362	1,792	37,947	12.7	43.0	6,581	45.57
서구	223,229	553,890	281,666	272,224	542,040	273,778	268,262	11,850	7,888	3,962	58,087	10.5	40.2	4,723	117.27
강화군	33,915	70,025	35,193	34,832	69,203	34,644	34,559	822	549	273	22,824	32.6	52.8	170	411.42
옹진군	11,993	20,670	11,803	8,867	20,455	11,641	8,814	215	162	53	5,485	26.5	49.9	120	172.93

자료: 인천광역시(2022a). 행정구역[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04&tblId=DT\\_20402\\_A000004&conn\\_path=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04&tblId=DT_20402_A000004&conn_path=3)에서 2023. 7. 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그림 2-5] 인천광역시 연령계층별 인구 규모의 전망치(2024~2037년)

(단위: 명)



자료: 인천광역시청(2022). 시군 장래인구 추계, 2017년 기준 인천광역시 시군장래인구추계[데이터파일], [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datastat/page.do?mnu\\_uid=7883&dept\\_code=&dept\\_name=&BD\\_CODE=sigun\\_stat&bdName=&cmd=2&Start=0&B\\_NUM=70241901&B\\_STEP=70241900&B\\_LEVEL=0&key=0&word=&p1=0&p2=0&V\\_NUM=3&tbbcode1=sigun\\_stat](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datastat/page.do?mnu_uid=7883&dept_code=&dept_name=&BD_CODE=sigun_stat&bdName=&cmd=2&Start=0&B_NUM=70241901&B_STEP=70241900&B_LEVEL=0&key=0&word=&p1=0&p2=0&V_NUM=3&tbbcode1=sigun_stat)에서 2023.7.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3. 인천광역시 인구의 자연적, 사회적 증감 특성

○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인천광역시 인구 규모 변화에 대해 자연적 증감(출생아 수-사망자 수), 사회적 증감(전입자 수-전출자 수)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함.

- 보다 구체적으로, 2000-2021년 관측기간 내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394,445명 증가하였으며, 자연적으로는 257,850명, 사회적으로는 136,59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즉,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과거 약 20여 년 간 자연적 증가 및 사회적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인구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인구 규모 증가에 사회적 증가보다는 자연적 증가가 보다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자치구군 단위로 살펴보면, 자연적/사회적 증감의 양상이 인천광역시의 전체 양상과 사뭇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관측기간 내 인구 규모가 감소한 네 개 지역(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은 모두 자연적으로는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감소가 자연적 증가를 압도하여 결과적으로 인구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인구 규모가 증가한 다른 6개 관할 지역도 대체적으로 사회적 증가가 인구 규모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인구 규모 변화에 대한 자연적/사회적 증감으로의 분해 결과를 기간별(1기간: 2000-2010년, 2기간: 2011-2021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인구 규모가 감소한 지역 중 동구와 미추홀구는 자연적 증감 폭을 사회적 감소 폭이 크게 압도하여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관측된 반면, 부평구와 계양구는 관측기간 초반에는 자연적 증가가 사회적 감소를 압도하여 인구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기간에서는 사회적 감소가 자연적 증가를 압도하여 인구 규모가 감소하였고, 2기간의 인구 규모 감소 폭이 1기간의 인구 규모 증가 폭보다 커서 결과적으로 인구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의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관측기간 초반 청년층의 사회적 감소에 따른 이후 기간에서의 출생아 수 감소 및 남아 있는 이들의 고령화에 따

른 사망자 수 증가가 유발하는 자연적 감소, 즉, 사회적 감소와 자연적 감소의 인과적 관계가 크게 관측되지 않음. 즉, 청년층 중심의 사회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덜 심화되었고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기 때문에 자연적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 다만, 이러한 특성은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유출된다는 점(청년층의 사회적 감소가 지속된다는 점)과 인구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보다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구 감소 지역에서 관측되는 인구 감소의 패턴인 사회적 감소에 의한 자연적 감소가 나타날 개연성이 적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음. 이러한 인구변동의 인과적 매커니즘을 고려할 때, 인천광역시의 중장기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기본적 방향은 청년층의 (서울 및 경기로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 인구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에 주목하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표 2-3) 인천광역시 내 관할 지역 인구의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증감 특성(2000~2021년)

(단위: 명)

구분	인구규모변화	자연적증감	사회적증감	1기간 인구규모변화	1기간 자연적증감	1기간 사회적증감	2기간 인구규모변화	2기간 자연적증감	2기간 사회적증감
총구	68,247	6,190	62,057	18,601	3,840	14,761	49,646	2,350	47,296
동구	-16,768	1,566	-18,334	-115	1,709	-1,824	-16,653	-143	-16,510
미추홀구	-17,817	27,823	-45,640	-388	21,891	-22,279	-17,429	5,932	-23,361
연수구	124,353	30,184	94,169	12,298	16,070	-3,772	112,055	14,114	97,941
남동구	115,521	49,737	65,784	63,369	30,735	32,634	52,152	19,002	33,150
부평구	-51,262	56,251	-107,513	24,866	40,607	-15,741	-76,128	15,644	-91,772
계양구	-40,769	39,117	-79,886	9,640	28,757	-19,117	-50,409	10,360	-60,769
서구	205,192	55,839	149,353	59,648	29,091	30,557	145,544	26,748	118,796
강화군	1,500	-8,020	9,520	-668	-2,782	2,114	2,168	-5,238	7,406
옹진군	6,248	-837	7,085	4,398	-131	4,529	1,850	-706	2,556
인천광역시	394,445	257,850	136,595	191,649	169,787	21,862	202,796	88,063	114,733

자료: 통계청(2023a).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1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12)  
 에서 2023.7.5. 인출한 자료: 통계청(2023b). 출생아수(시도/시/군/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1A01&conn\\_path=1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1A01&conn_path=12)에서 2023.7.5. 인출한 자료: 통계청(2023c). 시군구/사망원인(50항목)/성/ 사망자수, 사망률, 연령표준화 사망률(1998~)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3&conn\\_path=1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3&conn_path=13)에서 2023.7.5.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2-4〉 인천광역시 내 관할 지역 인구의 자연적, 사회적 증감 기여도(2000~2021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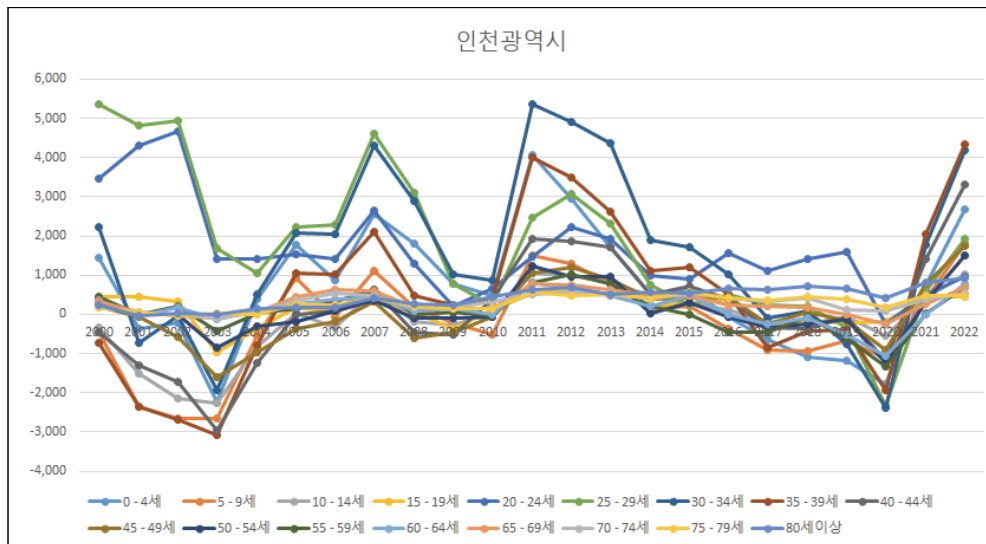
구분	전체기간(2000~2021년)			1기간(2000~2010년)			2기간(2011~2021년)		
	인구변화	자연적증감 기여도	사회적증감 기여도	인구변화	1기간 자연적증감 기여도	1기간 사회적증감 기여도	인구변화	2기간 자연적증감 기여도	2기간 사회적증감 기여도
인천 중구	증가	9.07	90.93	증가	20.64	79.36	증가	4.73	95.27
인천 동구	감소	-9.34	109.34	감소	-1,486.09	1,586.09	감소	0.86	99.14
미추홀구	감소	-156.16	256.16	감소	-5,642.01	5,742.01	감소	-34.04	134.04
연수구	증가	24.27	75.73	증가	130.67	-30.67	증가	12.60	87.40
남동구	증가	43.05	56.95	증가	48.50	51.50	증가	36.44	63.56
부평구	감소	-109.73	209.73	증가	163.30	-63.30	감소	-20.55	120.55
계양구	감소	-95.95	195.95	증가	298.31	-198.31	감소	-20.55	120.55
인천 서구	증가	27.21	72.79	증가	48.77	51.23	증가	18.38	81.62
강화군	증가	-534.67	634.67	감소	416.47	-316.47	증가	-241.61	341.61
옹진군	증가	-13.40	113.40	증가	-2.98	102.98	증가	-38.16	138.16
인천광역시	증가	65.37	34.63	증가	88.59	11.41	증가	43.42	56.58

자료: 통계청(2023a). 시군구/시/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테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1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12)  
에서 2023.7.5. 인출한 자료; 통계청(2023b). 출생아수(시도/시/군/구)테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1A01&conn\\_path=1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1A01&conn_path=12)에서 2023.7.5. 인출한 자료; 통계청(2023c). 시군구/사망원인(50항목)/성/ 사망자수, 사망률, 연령표준화 사망률(1998~)테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3&conn\\_path=1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3&conn_path=13)에서 2023.7.5.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인천광역시 인구의 사회적 증감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관측하기 위해, 1995년부터 2021년의 인천광역시의 순이동 인구의 종단적(통시적) 특성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봄.
  - 관측기간 전체적으로 20-24세, 25-29세 연령대의 순유입이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 이들 연령층의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음.
  - 반면, 2020년 이후 30대 이상 연령층에서 큰 순유입 특성이 나타남.
- 앞서 언급한 인구 규모가 증가한 관할 지역은 청년층 순유출의 크기가 작으며, 관측기간 내 청년층 순유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하고는 특정 연령층의 순유입, 순유출 양상이 명확한 특성의 정도는 다소 낮음. 즉, 일정한 순이동 특성이 다소 모호함.
- 무엇보다도 해당 청년층의 순유입이 많은 지역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림 2-6] 인천광역시 인구의 5세 단위 연령대별 순이동(2000-2021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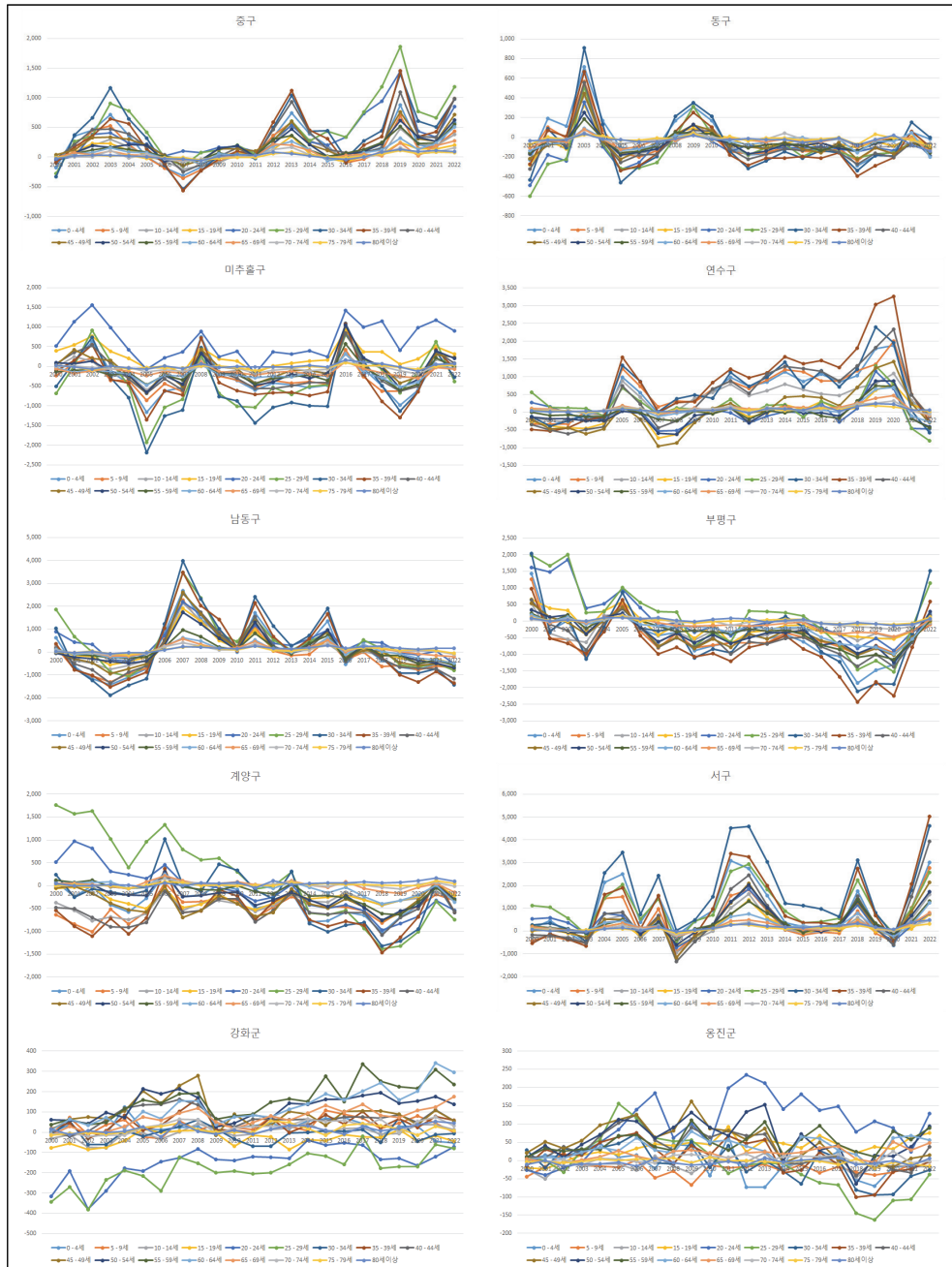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3d). 시군구/성/연령(5세)별 이동자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에서 2023.7.5.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78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4~2028) 수립 연구용역

[그림 2-7] 인천광역시 내 관할 지역별 인구의 5세 단위 연령대별 순이동(1995~2021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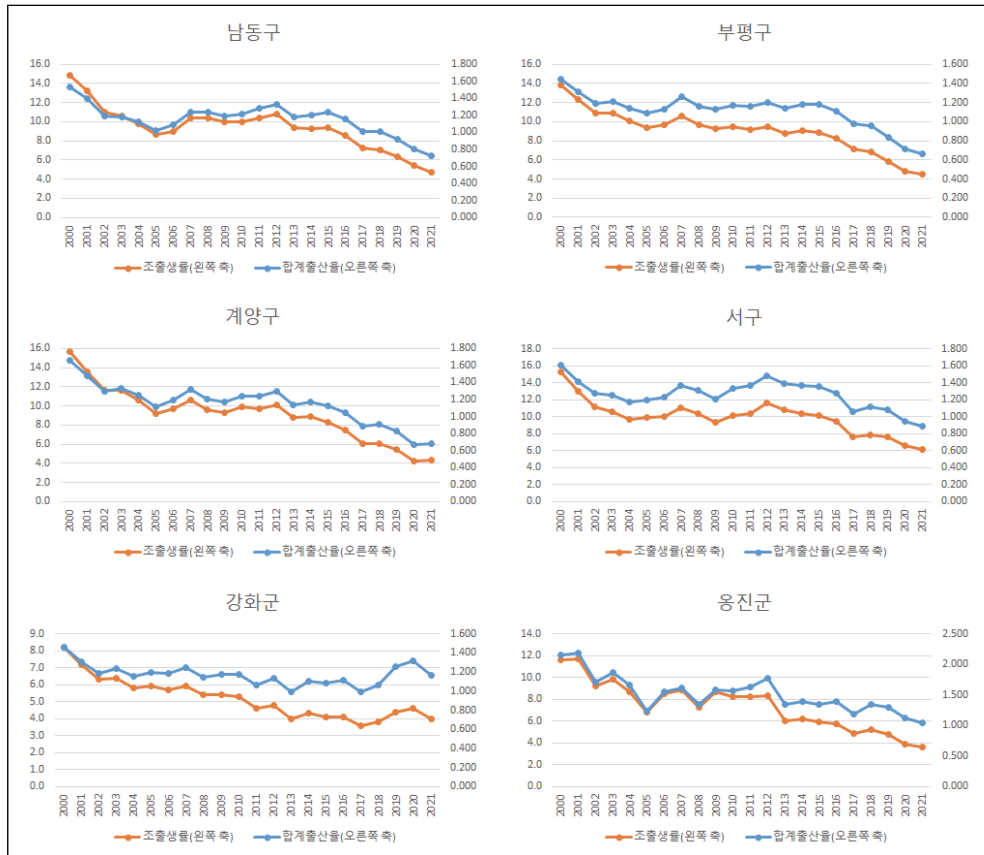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3d). 시군구/성/연령(5세)별 이동자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에서 2023.7.5.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추가적으로 인천광역시 및 관할 지역의 혼인, 출생 관련 지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러한 감소 경향은 최근 보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먼저,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 두 지표 간 일부 기간에서의 상이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두 지표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자연적 증가 특성이 완화될 개연성이 존재함. 이는 자연적 감소 개연성과 가장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출생아 수 감소 가능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그림 2-8] 인천광역시 내 관할 지역별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2000-2021년)

(단위: 인구 1천명 당 명, 15~49세 여성인구 1명 당 명)





자료: 통계청(2023e). 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ath=I2)에서 2023.7.5. 인출한 자료; 통계청(2023f). 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에서 2023.7.5.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추가적으로 살펴본 조혼인율의 종단적 특성(2000-2021년) 역시 관측기간 초반 등락에도 불구하고,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특성이 정책 대응 강화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표 2-5〉 인천광역시 내 관할 지역 조혼인율의 추세(2000~2021년)

(단위: 인구 1천명 당 혼인 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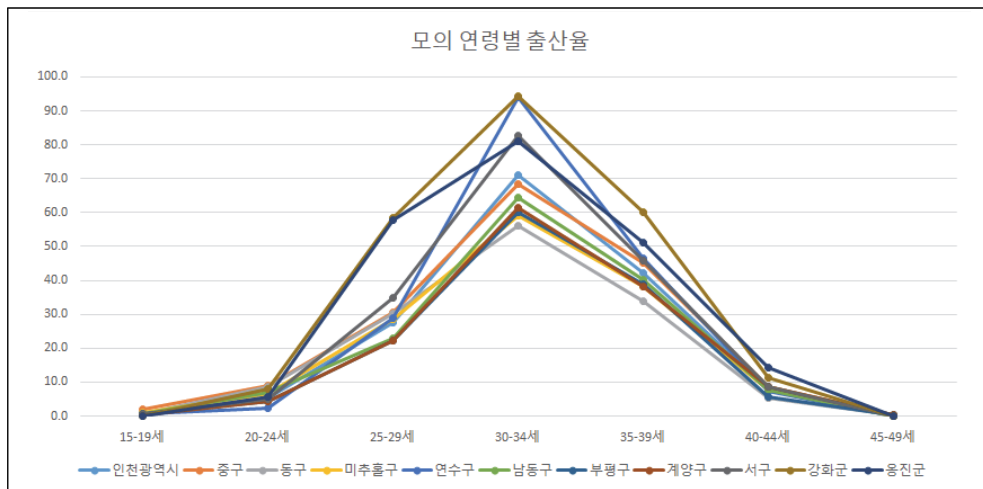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변화분	최근 5년간 변화분
인천 광역시	7.1	6.7	6.6	6.1	6.2	6.4	6.6	6.9	6.8	6.2	6.4	6.6	6.5	6.4	6.0	5.9	5.5	5.2	5.1	4.6	4.0	3.7	-3.4	-1.5
중구	7.2	7.6	7.3	7.1	7.9	8.6	8.1	8.6	7.9	7.5	7.3	7.7	7.1	7.6	6.7	6.3	6.0	6.1	6.0	6.0	4.9	5.0	-2.2	-1.1
동구	6.7	5.9	6.3	7.3	6.8	6.1	6.3	6.7	6.1	7.0	6.7	7.2	6.3	6.1	5.5	5.1	5.4	4.5	4.6	3.7	2.8	3.2	-3.5	-1.3
미추홀구	7.3	6.9	6.9	7.2	6.7	6.7	7.1	7.5	7.4	6.5	7.0	7.1	6.6	6.7	6.4	6.1	6.0	5.9	5.3	4.6	4.3	4.0	-3.3	-1.9
연수구	6.4	6.1	5.8	5.3	5.4	5.4	5.6	5.3	5.6	5.2	5.5	5.6	5.8	5.4	5.6	5.2	5.1	4.7	4.6	5.0	4.1	3.8	-2.6	-0.9
남동구	7.7	7.3	6.9	6.1	6.2	6.4	6.9	7.6	7.8	6.6	6.6	6.7	6.5	6.2	6.1	6.3	5.8	5.3	5.0	4.4	4.0	3.5	-4.2	-1.8
부평구	7.3	6.8	6.8	6.4	6.9	7.1	7.3	7.2	6.7	6.2	6.3	6.5	6.5	6.5	6.3	6.2	5.6	5.3	5.0	4.3	3.8	3.6	-3.7	-1.7
계양구	7.3	6.6	6.5	6.0	5.0	5.3	6.0	6.3	6.5	6.0	6.4	6.6	6.6	6.4	5.8	5.8	5.1	4.9	4.7	4.1	3.4	3.4	-3.9	-1.5
서구	6.7	6.3	6.4	5.1	5.8	6.4	6.2	6.6	6.3	5.8	6.4	6.6	7.0	6.7	6.1	6.0	5.7	5.2	5.6	5.0	4.1	3.8	-2.9	-1.4
강화군	4.2	4.8	4.4	4.2	4.5	4.7	4.3	4.7	4.3	4.4	4.5	4.0	3.7	3.6	3.2	4.0	3.3	3.4	3.0	3.2	2.8	2.8	-1.4	-0.6
옹진군	5.8	5.1	5.3	3.7	5.0	4.9	5.9	5.9	6.9	5.3	6.5	7.0	6.2	6.8	6.6	6.3	5.3	5.6	5.8	5.2	4.2	4.5	-1.3	-1.1

자료: 통계청(2023e). 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_n\\_path=1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_n_path=12)에서 2023.7.5.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인천광역시 관할 지역별 2021년 모의 연령별 출산율의 경우 대체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30-34세 연령층의 출산율이 크게 높은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연령층을 정책 수혜 대상으로 고려하기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 지역별로 이러한 차이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별 차등적인 맞춤형 정책 방향 설정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25-29세 연령층보다는 35-39세 연령층의 출산율이 보다 높음을 고려할 때, 만혼과 출산 연령 증가 추세에 따른 고 연령층 출산과 맞물린 현안, 가령 출산 건강 및 난임 등에 대한 선제적, 적극적 정책 방향도 요구된다고 할 것임.

[그림 2-9] 인천광역시 내 관할 지역별 모의 연령별 출산율 분포(2021년 기준)

(단위: 해당 연령대 여성인구 1,000명 당 명)



자료: 통계청(2023g). 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에서 2023.7.5.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추가적으로, 인구 구조 변화 및 인구의 사회적, 자연적 증감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근 주목할 만한 인구 변화 특성 중 하나는 연령대별 1인 가구 비율의 특성임.
- 1인 가구는 인구 변화의 복합적 양상의 결과이자 취약계층으로서 정책 수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으며, 특히 인천광역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정책 현안으로서의 시의성과 중요성이 높은 특징을 함께 띠고 있음.



- 인천광역시 및 관할 지역의 청년 및 고령층 1인 가구 비율의 주요 결과 중 하나는 대체적으로, 인구 구조 변화와 무관하게 여성 고령층 1인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의 잠재적 정책 수요임을 시사하고 있음.

〈표 2-6〉 인천광역시 및 관할 지역 연령대별(청년, 고령층) 1인 가구 비율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청년 (20-34세)	고령층 (65세 이상)	청년 (20-34세)	고령층 (65세 이상)
중구	67.60	23.25	69.55	63.26
동구	49.58	19.25	48.48	65.42
미추홀구	62.52	18.23	61.72	62.01
연수구	55.77	14.44	61.86	63.43
남동구	54.35	18.40	58.37	63.83
부평구	49.69	17.91	53.94	63.47
계양구	46.64	17.70	49.80	64.04
서구	47.94	16.02	51.71	61.11
강화군	48.61	17.39	52.12	67.03
옹진군	70.29	25.44	71.19	68.06
인천광역시	54.76	17.81	57.73	63.32

주: 1인 가구 비율은 해당 가구주의 연령별 일반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2023h). 성 및 연령별 1인가구 - 시군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L1502&conn\\_path=1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L1502&conn_path=12)에서 2023.7.5.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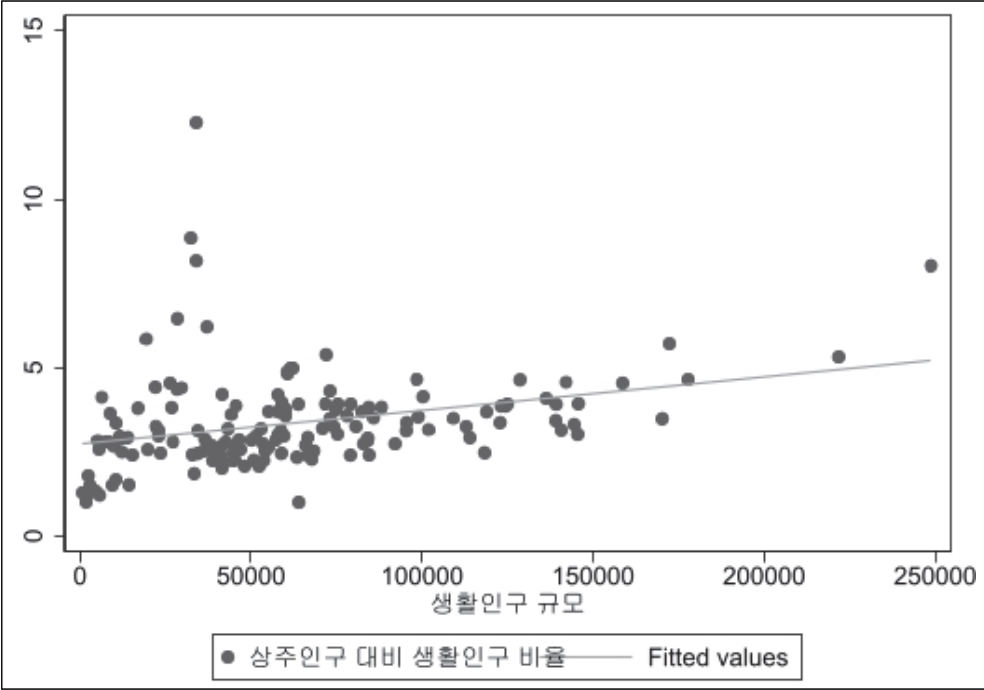
#### 4. 생활인구 분포 특성

- 통신사 유동인구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인천광역시의 생활인구 분포 특성을 진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및 지역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인구 활용 방향에 대한 구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는 현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인구 자료가 부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있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인구 활용 정책 방향이 향후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중 주요 방향임을 고려한 데 크게 기인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154개 읍면동 단위에서 생활인구 규모와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 간 연관성은 대체적으로 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생활인구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도 큼을 의미하며, 반대의 경우도 대체적으로 성립함을 의미함.

[그림 2-10] 인천광역시 생활인구 규모와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 간 연관성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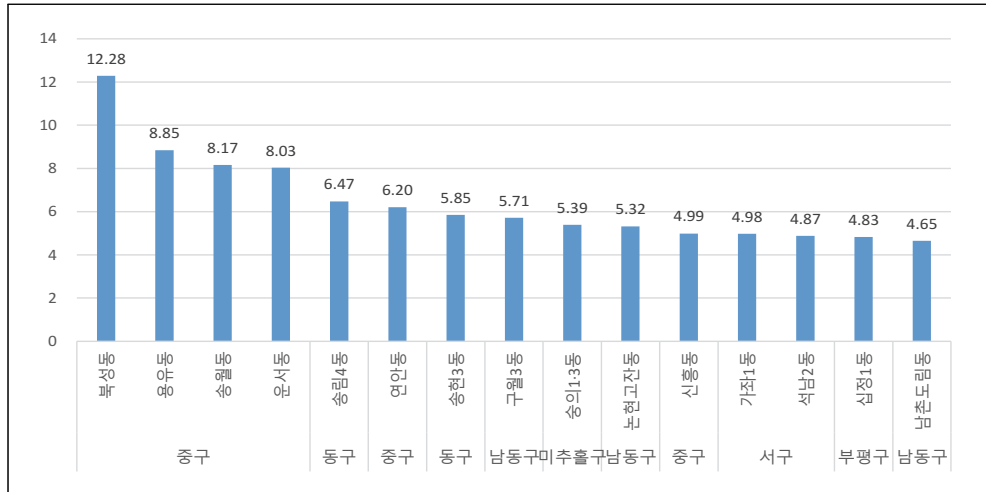
(단위: 명, 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읍면동 단위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의 상/하위 15개 지역을 도출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상위 지역은 상주인구 및 생활인구 규모가 큰 지역이, 하위 지역은 반대의 특성을 띠는 지역이 도출되는 경향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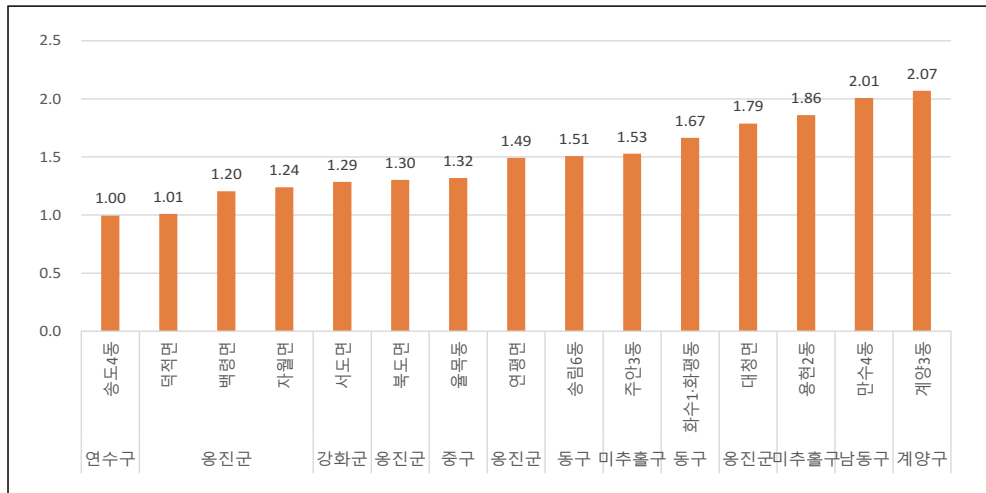
[그림 2-11] 인천광역시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 상위 15개 지역(읍면동)



주: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생활인구/상주인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그림 2-12] 인천광역시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 하위 15개 지역(읍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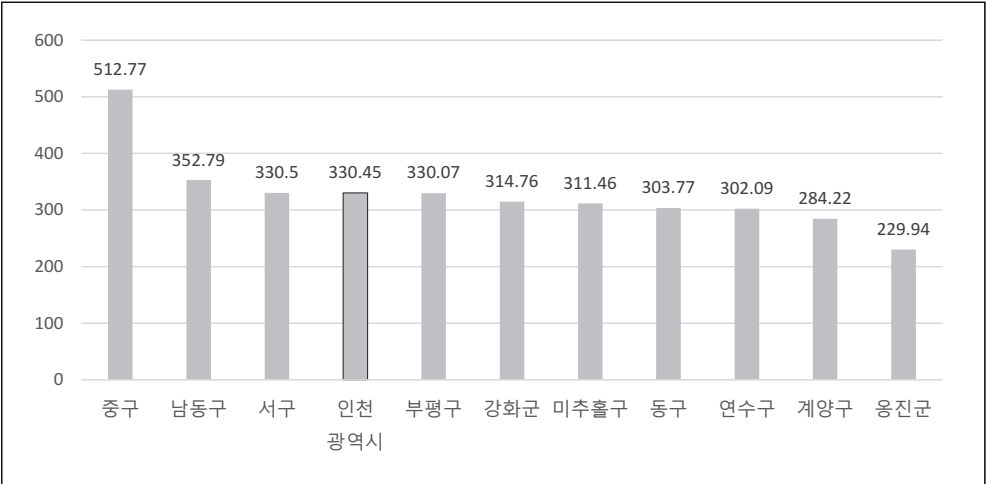
주: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생활인구/상주인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인천광역시의 10개 자치구/군 중 생활인구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중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운서동(생활인구 규모 약 24.9만 명), 영종국제도시가 위치한 영종1동(약 14.4만 명)의 생활인구 규모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3] 인천광역시 및 관할 지역 평균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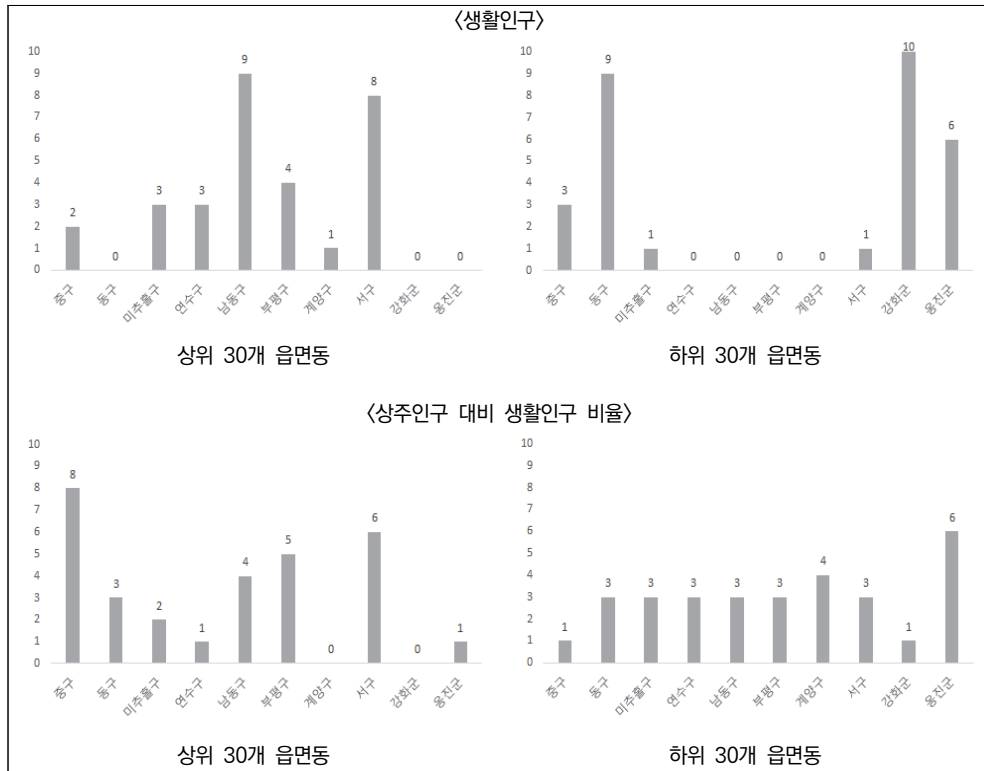


주: 자치구/군 지역별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생활인구를 주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천광역시 내 관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인 강화군, 옹진군, 동구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생활인구 규모가 크지 않고,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규모 비율 역시 낮은 것으로 추측되는 바,
-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인천광역시 생활인구 규모,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의 해당 구군별 상/하위 30개 읍면동 개수의 분포를 통해서 간명하게 예상할 수 있음.

[그림 2-14] 인천광역시 생활인구 규모,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의 해당 구군별 상/하위 30개 읍면동 개수의 분포

(단위: 개)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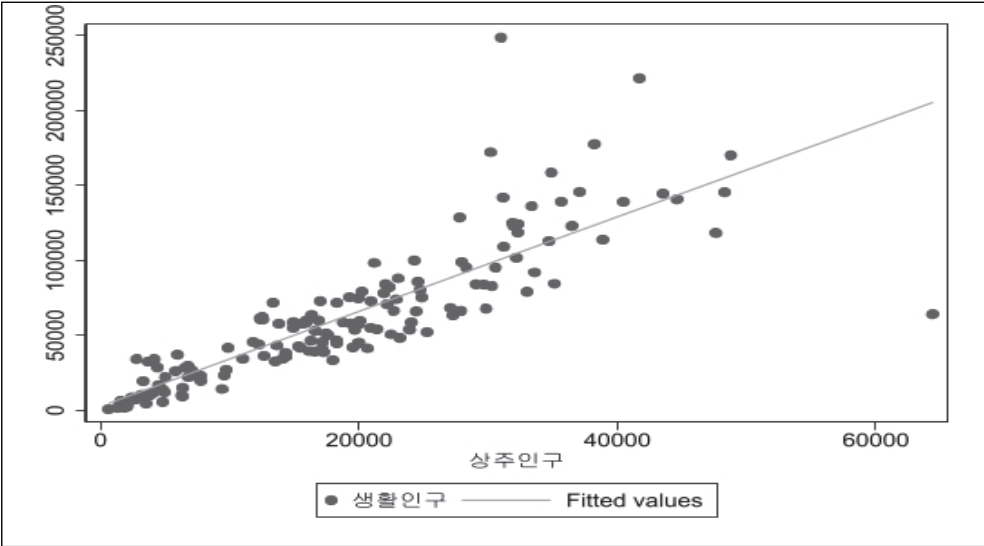
○ 자치구/군 내의 관할 읍면동 간에도 상주인구, 생활인구,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규모의 편차가 나타남(부록 2 참조).

- 이러한 특성은 향후 생활인구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의 생활인구 특성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이 선결되어야 함과 동시에, 읍면동 단위에서의 전략이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읍면동 단위 생활인구 규모는 지역 내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상주인구 규모에 비례하고 있음.

[그림 2-15] 인천광역시 생활인구 규모와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 간 연관성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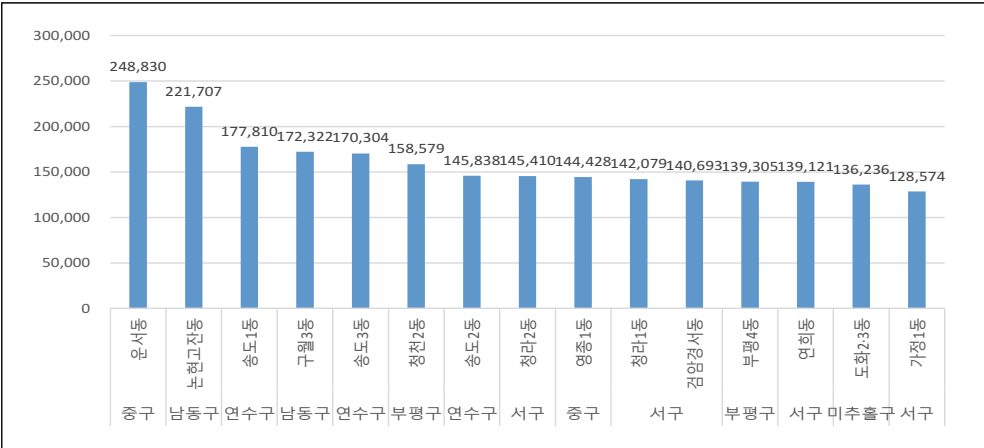
(단위: 명)



-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인천광역시 읍면동 단위 생활인구 규모 상위 15개 지역은 대체적으로 상주인구 규모가 큰 자치구에 포함되어 있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반대로 하위 15개 지역은 상주인구 규모가 작은 군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그림 2-16] 인천광역시 생활인구 규모 상위 15개 지역(읍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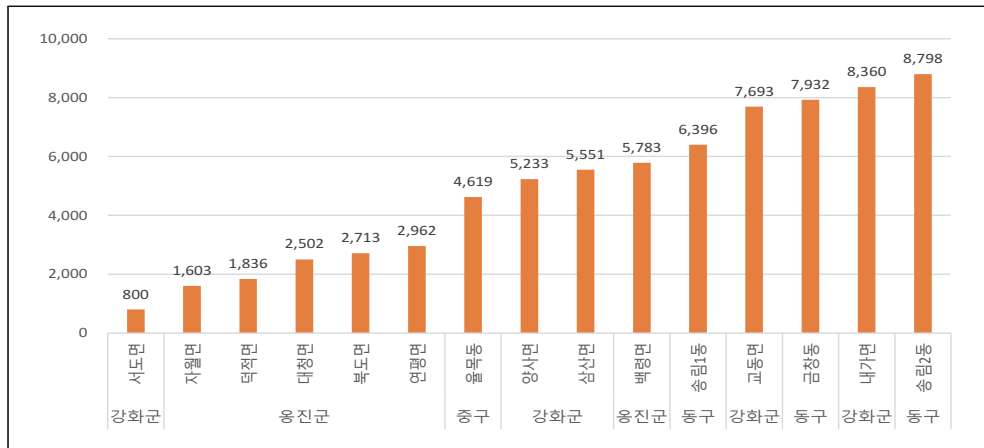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그림 2-17] 인천광역시 생활인구 규모 하위 15개 지역(읍면동)

(단위: 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생활인구를 기본적으로 인구 정책에 활용할 필요성이 높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인 동구, 강화군, 용진군은 생활인구 평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동시에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생활인구 규모를 제고하여 지역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인천광역시의 섬 지역인 강화군, 용진군은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이 내륙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특성이 나타나는 바, 이는 지리지형적 한계점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
- 이에 섬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은 이러한 지리지형적 한계점을 보완하는 인프라의 개선이 선결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5개의 고향올래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섬 지역이 특히 중점사업으로 활용할 만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대체적으로 5개의 고향올래 세부사업은 지자체의 추진 노력과 정책 추진 여건이 뒷받침된다면 섬 지역의 생활인구를 활용한 지역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단적으로, 두 지역 살아보기, 워케이션, 로컬유희 등은 기 추진 중인 사업들을 적절하게 수정, 보완하여 공모사업에 지원하고 정책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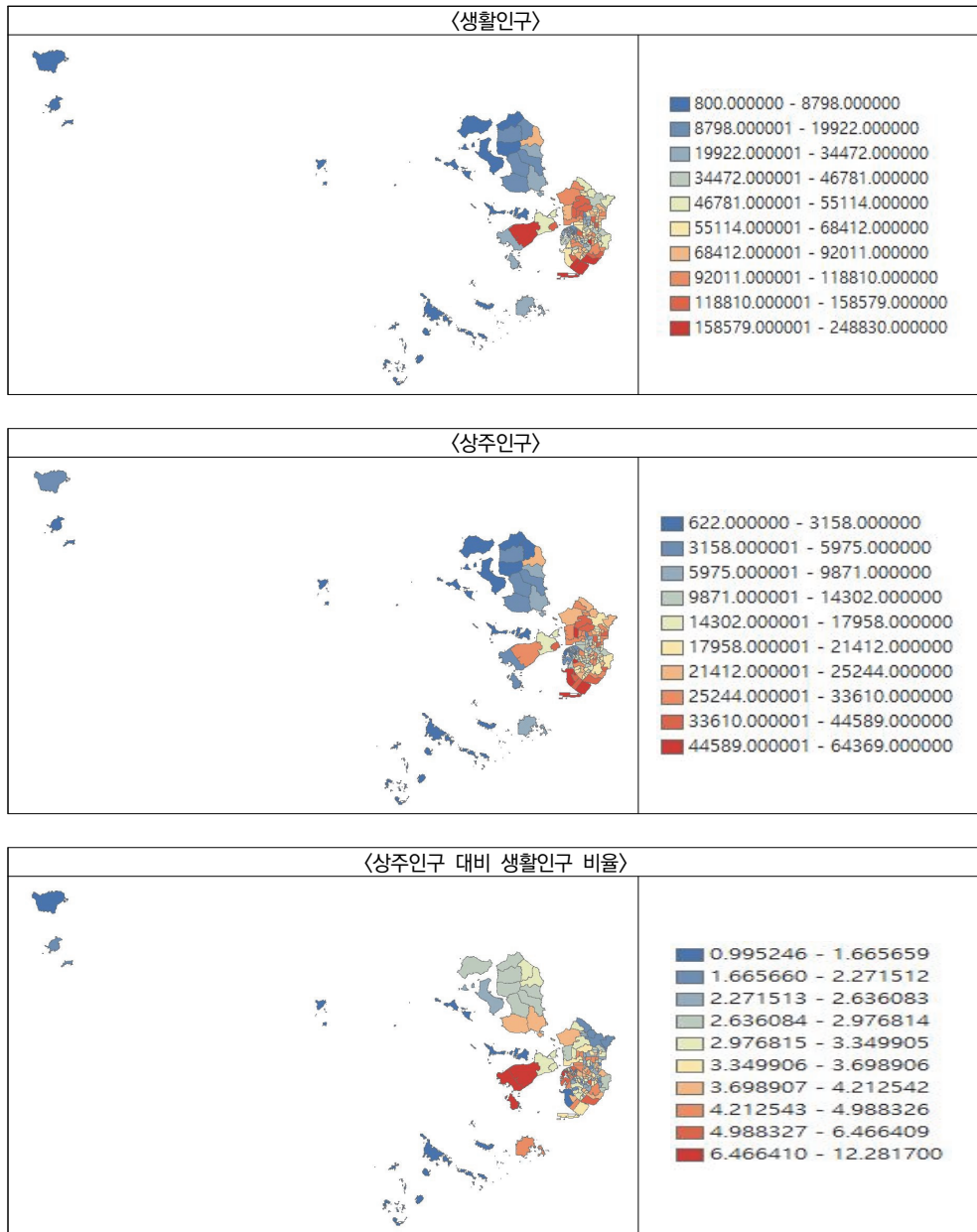
〈표 2-7〉 인천광역시 및 관할 지역 평균 상주인구, 생활인구 규모

(단위: 명, %)				
구분	관할 읍면동 수	생활인구(A)	상주인구(B)	(A/B)×100
중구	12개 동	59,066	11,519	512.77
동구	11개 동	15,963	5,255	303.77
미추홀구	21개 동	59,161	18,995	311.46
연수구	14개 동	83,581	27,668	302.09
남동구	20개 동	90,507	25,655	352.79
부평구	22개 동	71,100	21,541	330.07
계양구	12개 동	68,392	24,063	284.22
서구	22개 동	79,463	24,043	330.50
강화군	1읍 12면	16,399	5,210	314.76
옹진군	7면	6,535	2,842	229.94
인천광역시	154개 읍면동 (134개 동, 1읍, 19면)	61,682	18,666	330.45

주: 1) 생활인구 및 상주인구의 평균 규모는 각 관할 지역별 읍면동의 해당 범주 인구의 평균 수치임.  
2) 상주인구는 250미터 격자 단위의 토지 피복도를 활용하여 인구 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읍면동 단위의 주민등록인구 규모와 다소 상이하지만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그림 2-18] 인천광역시 읍면동 단위 생활인구, 상주인구,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의 분포



주: 비율이 높을수록 붉은색에, 낮을수록 파란색에 가까운 특성을 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5. 소결

- 이상의 인천광역시 지역의 인구 동태는 인천광역시 및 관할 지역의 인구 정책 수요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구체적으로 자연적 감소가 관측되는 지역은 출생아 수 감소, 사망자 수 증가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고 종단적으로 살펴본 결과, 향후 이러한 양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사회적 감소가 관측되는 지역 역시 특정 연령대(청년층)의 유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에 청년층 유출 방지 및 유입 장려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
- 이에 본 절에서 출생아 수 감소, 고령화로 인한 고령인구 증가, 생산가능인구(청년인구) 유출 등 해당 지역사회 전 분야에 걸쳐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구 정책에 대한 수요 특성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 방향을 도출함.
- 추가적으로, 통신사 유동인구를 활용한 인천광역시 읍면동(155개) 단위 생활인구를 집계하여 살펴봄으로써, 특히 생활인구를 활용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의 생활인구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 관련 시사점을 도출함.

## 제2절 정책 자원과 지역 잠재력

### 1. 균형발전지표로 살펴본 인천광역시

- 본 절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정책 자원을 살펴보고자 함.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구축한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여 논의하고자 함
- 균형발전지표는 지역의 전반적인 분야를 다루어 지역 환경과 발전 정도를 객관적, 주관적으로 진단 및 측정하는 지표임. 주거, 교통, 산업·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안전, 환경, 보건·복지 부문의 총 8개 분야 지표가 있어 지역의 다양한 분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에 적합한 지표로 판단됨.
- 먼저 균형발전지표 중 주관지표를 먼저 살펴보면 설문응답자 수가 623명(2020년)이기에 해석에 한계가 있으나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이기에 살펴보고자 함.
- 2019년, 2020년 2개년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비슷한 결과로 확인됨. 종합적인 개인 삶의 만족도, 지역생활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고,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거, 교통, 산업·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안전, 보건·복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가 아니며 표본에 대한 집계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모든 지표에서 전국 평균에 비하여 낮은 상황은 기본적으로 향후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이 인천광역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다양한 사회정책 분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견지하여야 할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표 2-8〉 2019~2022년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지표(주관지표)

(단위: 점)

부문	지표명	2019년 (10점 만점)		2020년 (5점 만점)	
		인천 광역시	전국	인천 광역시	전국
종합	현재행복도	6.33	6.51	3.57	3.61
	지역생활만족도	6.61	6.85	3.48	3.54
주거	주거상태에 만족	6.88	7.16	3.85	3.81
	기초 생활 여건에 만족	6.69	6.92	3.98	3.88
교통	대중교통 및 주차장 이용 편리	6.17	6.24	3.70 3.17	3.64 3.27
산업·일자리	일자리를 쉽게 구할 있음	4.25	4.27	2.99	2.92
	노력한 만큼 소득 창출	4.67	4.93	2.96	2.94
교육	초중고생에게 좋은 학교교육 여건	5.73	5.92	3.61	3.55
	어른들에게도 교육 기회 충분	5.28	5.75	3.52	3.45
	보육 시설 충분	5.53	5.79	3.56	3.52
문화·여가	문화/체육활동 시설 접근이 편리	5.71	5.77	3.34 3.53	3.41 3.46
	문화/체육활동 시설/프로그램 수준에 만족	5.28	5.48	3.22 3.31	3.26 3.28
안전	자연재해 및 재난 등에 대한 예방과 대비책 충분	5.41	5.77	3.59	3.66
	밤거리 안전	6.16	6.50	3.49	3.52
	사회 안전 체계 충분	6.63	6.70	3.66	3.83
환경	소음, 악취,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서비스 등 만족	6.05	6.58	3.61	3.59
	자연환경에 만족	6.49	7.09	3.55	3.54
	미세먼지로 인한 생활 피해가 적음	4.61	5.42	2.92	3.05
보건·복지	병/의원/약국 이용이 쉬움	6.84	6.63	3.63	3.73
	노약자,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가 충분	5.41	6.00	3.38	3.48
시민참여·공동체	도움을 청할 이웃이 있음	6.32	6.67	3.51	3.64
	마을 문제해결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	5.29	5.77	3.33	3.33

자료: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균형발전지표, 주관지표-지자체[데이터파일], <https://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에서 2023.5.2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경제 부문의 균형발전지표(핵심지표)는 재정자립도로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지역의 예산 총당의 자립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임. 전국 재정자립도는 2019-2022년 최근 4개년 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광역시도 전국 평균에 비하여 높았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기준 10개 자치구/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32.93(표준편차 11.28)으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지역은 중구(최댓값 53.0), 낮은 지역은 강화군(최솟값 20.9)으로 인천광역시 내 관할 지역 간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9〉 2019-2022년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지표(핵심지표: 인구, 경제 부문)

(단위: %, %포인트)

구분	인구 (연평균 인구증감률)					경제 (재정자립도)				
	2019	2020	2021	2022	3개년 평균	2019	2020	2021	2022	4개년 평균
전국	1.0	1.0	0.8	-	0.933	55.0	55.1	53.8	51.9	53.95
인천광역시	2.8	2.8	2.2	-	1.95	67.5	66.7	65.1	62.3	65.40
중구	0.5	0.5	1.1	-	0.525	53.0	53.7	53.3	51.92	52.98
동구	-2.4	-2.4	-2.5	-	-1.825	30.2	31.3	34.7	30.35	31.64
미추홀구	1.2	1.2	0.4	-	0.7	23.6	23.9	22.8	19.78	22.52
연수구	7.6	7.6	7.5	-	5.675	47.1	48.6	48.5	44.35	47.14
남동구	5.8	5.8	3.8	-	3.85	36.6	36.3	35.2	31.79	34.97
부평구	3.1	3.1	1.8	-	2	24.9	26.1	26.1	24.38	25.37
계양구	5.6	5.6	3.7	-	3.725	28.1	29.9	29.4	26.95	28.59
서구	6.8	6.8	5.6	-	4.8	44.9	45.1	42.3	38.86	42.79
강화군	-1.3	-1.3	-0.8	-	-0.85	20.0	20.8	21.4	21.4	20.90
옹진군	-1.0	-1.0	-0.3	-	-0.575	24.1	22.8	21.3	21.58	22.45

주: 인구증감율 3개년 평균(최근 3년); 재정자립도 4개년 평균(최근 4년: 2019-2022(결산기준))

자료: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균형발전지표, 핵심·객관지표-전국[데이터파일]. <https://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에서 2023.5.2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가. 주거 부문

○ 주거 부문에서 2022년 기준 노후주택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보다 인천광역시 내 10개 관할 자치구/군 중 절반인 5개 지역(동구, 강화군, 미추홀구, 계양구, 옹진군)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 비율도 노후주택비율과 유사하게 옹진군, 강화군, 중구, 미추홀구의 경우 전국 평균인 8.4%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0〉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주거 부문 1)

(단위: %)

객관 지표	부문	주거 부문 1							
	지표명	노후주택비율				빈집비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전국	16.9	17.5	18.2	19.4	7.4	8.1	8.4	8.2
	인천광역시	12.8	13.5	15.4	18.8	5.9	6.5	6.5	6.4
	중구	19.3	18.9	16.5	17.7	11.2	11.2	12.5	9.2
	동구	31.8	31.9	30.7	36.4	6.4	7.9	7.7	7.94
	미추홀구	21.2	21.6	23.5	26.6	7.1	7.9	7.6	8.48
	연수구	1.6	1.4	1.4	1.7	3.7	6.3	5.4	5.33
	남동구	9.4	11.0	14.1	18.1	5.3	5.5	6.6	5.97
	부평구	12.8	14.3	18.3	-	5.4	5.5	5.1	5.15
	계양구	12.7	14.7	18.4	24.6	4.3	4.8	4.7	5.07
	서구	7.9	8.6	9.9	13.5	5.6	5.7	5.3	4.94
	강화군	31.8	31.2	30.7	31.1	13.8	14.0	14.9	14.53
	옹진군	25.8	23.7	22.5	22.8	12.9	13.2	14.9	17.1

주: 노후주택비율(%)=(30년 이상 된 주택 수/전체 주택 수)×100; 빈집비율(%)=전체 주택 중 빈집의 비율  
 자료: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균형발전지표, 핵심·객관지표-전국[데이터파일]. <https://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에서 2023.5.2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표 2-11〉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주거 부문 2)

(단위: %)

객관 지표	부문	주거 부문 2											
	지표명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최소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전국	96.7	97.0	97.3	97.5	92.9	92.9	94.3	94.5	5.9	5.3	4.6	-
	인천광역시	98.8	98.8	99	99.1	97.5	97.0	97.1	97.2	6.8	4.8	4.9	-
	중구	99.5	99.5	99.5	-	90.7	86.7	88.4	88.7				
	동구	100.0	100.0	100	-	98.4	100.0	98.3	99.7				
	미추홀구	100.0	100.0	100	-	100.0	100.0	100	-				
	연수구	100.0	100.0	100	-	99.9	99.5	99.6	99.6				
	남동구	100.0	99.9	100	-	99.2	99.2	99.2	99.2				
	부평구	100.0	100.0	100	-	100.0	100.0	100	-				
	계양구	100.0	100.0	100	-	99.2	99.5	99.3	99.3				
	서구	99.9	99.9	100	-	98.7	98.5	99.1	99.1				
	강화군	70.7	71.5	78.4	-	48.4	30.9	34.3	36.6				
	옹진군	29.1	29.9	38.6	-	45.0	44.5	45.1	55.7				

주: 상수도보급률(%)=(급수인구÷총인구)×100; 하수도보급률(%)=(하수처리구역내인구÷(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인구))×100; 전체 가구 중 면적, 시설, 침실기준에 하나라도 미달이 있는 가구의 비율

자료: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균형발전지표, 핵심·객관지표-전국[데이터파일]. <https://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에서 2023.5.2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나. 교통 부문

- 교통 부문에서 도로포장률은 섬 지역 중에서 강화군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고속도로 IC 접근성은 인천광역시의 지리 지형적 특성에 따라 관할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반면, 고속·고속화철도 접근성의 경우 고속도로 IC 접근성에 비하여 관할 지역 간 격차가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남. 섬 지역 중에서도 강화군, 옹진군의 경우 이러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들 지역의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접근성 제고를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표 2-12〉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교통 부문 1)

(단위: %, km)

객관 지표	부문	교통 부문 1							
	지표명	도로포장률				고속도로 IC 접근성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전국	93.2	93.5	94.1	94.8	13.8	12.5	12.7	16.8
	인천광역시	97.4	98.1	98.1	98	16.5	20.1	19.4	17.3
	중구	100.0	100.0	100	-	5.4	5.9	5.9	5.83
	동구	100.0	100.0	100	-	4.1	4.0	6	3.25
	미추홀구	100.0	100.0	100	-	2.0	2.1	2.3	3.39
	연수구	100.0	100.0	100	-	2.5	3.6	3.8	4.29
	남동구	100.0	100.0	100	-	2.9	3.5	3.5	3.99
	부평구	100.0	100.0	100	-	2.2	2.8	2.9	3.13
	계양구	100.0	100.0	100	-	3.2	4.2	4.2	5.06
	서구	100.0	100.0	100	-	3.8	4.5	4.4	4.72
	강화군	77.0	82.7	82.9	82.9	30.9	35.2	34.6	30.5
	옹진군	84.0	98.8	98.8	98.8	34.7	56.0	59.2	45.27

주: 도로포장률(%)=(포장도로÷전체개통도)×100;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IC까지 도로 이동거리  
 자료: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균형발전지표, 핵심·객관지표-전국[데이터파일]. <https://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에서 2023.5.2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표 2-13〉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교통 부문 2)

(단위: km, %)

객관 지표	부문	교통 부문 2							
	지표명	고속·고속화 철도 접근성				주차장 서비스권역(0.75Km) 내 인구비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전국	38.6	31.9	31.8	34.0	44.8	52.3	53	57.7
	인천광역시	35.1	41.8	41	37	41.6	71.1	71	73.1
	중구	39.5	44.6	43.7	41.25	26.5	89.0	88.65	83.17
	동구	27.1	29.1	29.1	30.06	99.6	99.8	99.83	99.78
	미추홀구	24.1	26.3	26.3	25.32	83.7	86.7	91.25	92.76
	연수구	23.7	28.0	28.4	25.67	18.8	45.2	42.47	43.63
	남동구	19.0	20.8	20.8	20.43	6.3	75.1	74.02	78.55
	부평구	18.7	22.2	22.2	19.74	62.1	82.7	82.83	85.91
	계양구	14.5	17.0	17	15.92	16.7	80.0	81.8	88.46
	서구	21.5	24.3	24.4	23.59	53.8	57.2	55.93	56.83
	강화군	47.0	56.5	56.2	49	16.3	22.2	20.92	20.94
	옹진군	53.7	58.7	59.3	54.93	4.2	20.6	20.14	14.52

주: 가장 가까운 고속·고속화철도까지 도로 이동거리; 주차장으로부터 서비스 권역 이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수/총 주민등록인구수×100  
 자료: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균형발전지표, 핵심·객관지표-전국[데이터파일]. <https://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에서 2023.5.2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다. 산업·일자리 부문

○ 산업·일자리 부문에서 사업체수 증감률은 전국 평균보다 인천광역시가 최근 3년간(2019-2021년) 모두 높게 나타났음. 특히 연수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의 경우 사업체 수 증감률이 전국 및 인천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화군과 옹진군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이는 최근 이들 지역의 순유입 인구 증가에 대한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표 2-14〉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산업·일자리 부문 1)

(단위: %)

객관지표	부문	산업·일자리 부문 1											
	지표명	사업체수 증감률				종사자수 증감률				지식기반산업 집적도 3개년 평균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전국	1.8	1.9	1.7	-	2.8	2.3	2.2	-	1.00	1.00	1.00	-
	인천광역시	2.3	2.8	2.4	-	3.6	3.2	2.8	-	0.97	0.96	1.00	-
	중구	4.2	3.7	2.5	-	6.7	3.9	5.8	-	1.54	1.50	1.48	-
	동구	0.2	-0.3	0.1	-	1.6	1.2	1.3	-	0.67	0.64	0.67	-
	미추홀구	1.0	1.3	0.5	-	2.3	1.2	1.8	-	0.86	0.86	0.84	-
	연수구	6.3	4.7	3.4	-	9.8	7.5	5.8	-	1.18	1.18	1.18	-
	남동구	3.8	3.7	2.0	-	3.9	2.8	1.1	-	1.00	0.98	0.97	-
	부평구	0.4	0.8	0.2	-	0.9	0.1	-1.3	-	0.69	0.70	0.73	-
	계양구	1.9	1.0	1.7	-	3.9	1.8	1.4	-	0.72	0.71	0.69	-
	서구	3.1	5.6	6.5	-	4.4	6.0	5.9	-	1.07	1.09	1.10	-
	강화군	1.2	2.4	4.4	-	2.0	4.7	7.0	-	0.35	0.35	0.36	-
	옹진군	2.5	2.8	4.8	-	5.3	1.0	6.9	-	0.22	0.18	0.20	-

주: 연평균증감률((해당년/기준년)<sup>(1/기간)-1</sup>)×100; 연평균증감률((해당년/기준년)<sup>(1/기간)-1</sup>)×100; 지식기반산업 집적도(LQ) = (지역의 지식기반산업 종사자수/지역의 전산업종사자수)/(전국의 지식기반산업 종사자수/전국의 전산업 종사자수)

자료: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균형발전지표, 핵심·객관지표-전국[데이터파일]. <https://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에서 2023.5.2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다만, 상용근로자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인천광역시가 최근 3년간(2019- 2021년) 약간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사업체수, 종사자 수 증감률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강화군, 옹진군의 경우 상대

적으로 상용근로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이들 지역의 일자리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2-15〉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산업·일자리 부문 2)

(단위: %, 건, 천원/연구개발인력1명)

객관지표	부문	산업·일자리 부문 2											
	지표명	상용근로자 비중				특허건수				연구개발인력당 연구개발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전국	64.4	64.6	64.6	-	163,407	162,561	171,603	180,477	242,209	235,724	237,909	252,859
	인천광역시	65.6	66.0	65.2	-	5,989	6,236	6,439	6,728	235,608	217,394	201,202	233,398
	중구	76.7	78.4	78.5	-								
	동구	66.8	64.5	64.4	-								
	미추홀구	56.8	56.7	56.1	-								
	연수구	66.2	68.9	69.1	-								
	남동구	69.1	67.1	66.6	-								
	부평구	59.7	60.3	59.6	-								
	계양구	57.3	59.3	57.9	-								
	서구	70.1	71.9	69.3	-								
	강화군	53.8	56.8	57.3	-								
	옹진군	49.0	46.5	49.8	-								

주: 총 근로자대비 상용근로자 비중: 특허 출원 기준; 연구개발인력당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인력 ÷ 1,000  
 자료: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균형발전지표, 핵심·객관지표-전국[데이터파일]. <https://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에서 2023.5.2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라. 교육 부문

- 교육 부문 균형발전지표를 살펴보면 유아(0-5세) 천명당 보육시설 수는 2022년 기준 전국 평균 17.1개보다 인천광역시의 평균 시설 수 16개로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간 편차가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령인구(6-17세) 천 명당 초·중·고등학교 학교 수는 2022년 기준 전국 평균 2.1개보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더 적은 것(1.6개)으로 확인됨. 관할 지역 중에서는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등은 인천광역시 평균 수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6〉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교육 부문 1)

(단위: 개소/천명)

객관 지표	부문	교육 부문 1							
	지표명	유아(0-5세) 천명당 보육시설수				학령인구(6-17세) 천명당 학교수(초·중·고)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전국	16.2	16.4	16.7	17.1	2.0	2.1	2.1	2.1
	인천광역시	15.2	15.4	15.9	16.0	1.5	1.6	1.6	1.6
	중구	16.4	15.6	17.0	16.9	2.5	2.4	2.4	2.46
	동구	20.6	21.7	23.1	24.2	2.2	2.3	2.4	2.49
	미추홀구	13.1	13.7	14.4	14.7	1.3	1.6	1.4	1.36
	연수구	13.7	14.1	14.1	14.3	1.3	1.0	1.2	1.27
	남동구	14.1	14.7	15.4	15.7	1.2	1.3	1.3	1.34
	부평구	16.6	16.8	18.2	18.2	1.5	1.6	1.7	1.76
	계양구	19.6	19.7	19.3	19.4	1.6	1.7	1.8	1.86
	서구	14.9	14.8	15.4	15.3	1.2	1.2	1.3	1.27
	강화군	10.4	9.1	7.9	7.7	7.1	7.0	7.1	7.22
	옹진군	17.6	24.2	25.7	26.6	11.8	12.2	13	13.21

주: 보육시설수/(총 주민등록인구 중 유아인구(0-5세)수÷1,000); 초·중고 학교수/총 주민등록인구 중 학령인구(6-17세)수÷1,000

자료: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균형발전지표, 핵심·객관지표-전국[데이터파일]. <https://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에서 2023.5.2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반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서비스 권역 내 영유아 인구 비율, 초등학교 서비스 권역 내 학령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전체의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서비스권역 내 영유아인구 비율(89.3%)은 전국 평균(74.5%)보다 높지만, 단위 인구 당 보육시설 및 학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강화군과 옹진군의 경우 서비스권역 내 해당 영유아, 학령인구 비율이 크게 낮았음(각각 17.69%, 26.34%). 이러한 경향은 초등학교 서비스권역 내 학령인구 비율의 경우보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표 2-17〉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교육 부문 2)

(단위: %)

객관 지표	부문	교육 부문 2							
	지표명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서비스권역 내 영유아인구 비율				초등학교 서비스권역 내 학령인구 비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전국		89.5	70.5	71.8	74.5	58.4	43.6	42.8	45.7
인천광역시		94.7	88.7	90.2	89.3	64.9	61.4	58.5	62.3
중구		88.1	87.7	89.5	82.97	45.8	33.8	34.84	40.59
동구		99.7	99.6	98.25	93.58	80.6	64.8	61.56	49.46
미추홀구		93.1	95.7	95.33	94.72	51.5	61.2	61.86	59.03
연수구		96.8	83.9	85.72	85.6	73.8	55.6	40.96	59.65
남동구		94.5	90.4	92.83	93.43	63.7	66.8	64.82	63.92
부평구		98.9	96.4	95.02	97.69	71.7	85.2	86.22	81.69
계양구		97.9	89.6	92.39	85.37	77.7	63.9	65.04	71.81
서구		96.4	86.0	89.37	88.7	63.2	52.7	51.9	58.1
강화군		26.4	14.4	22.48	17.69	24.3	27.7	21.1	21.03
옹진군		19.7	11.2	23.53	26.34	18.9	9.0	4.46	17.53

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서비스권역 이내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영유아(7세 이하)인구수×100/총 주민등록인구 중 영유아인구수; 초등학교 서비스권역 이내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초등학령(8-13세)인구수×100/총 주민등록인구 중 초등학령인구수

자료: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균형발전지표, 핵심·객관지표-전국[데이터파일]. <https://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에서 2023.5.2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마. 문화·여가 부문

- 문화·여가 부문을 살펴보면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2022년 기준 전국 평균 6.0개에 비해 인천광역시 전체 4.1개로 적은 것으로 확인됨. 반면, 인천광역시 내에서도 자치구로 분류되는 남동구(1.9개), 부평구(2.6개), 서구(2.4개) 등 인천광역시 전체 시설 수에 비해 낮은 지역이 나타나 인구 규모 및 밀도를 고려한 추가적인 공급 여건 진단 및 추진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함.

〈표 2-18〉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문화·여가 부문 1)

객관 지표	부문	문화여가 부문 1											
	지표명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인구천명당 객석수				인구 십만명당 예술활동건수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전국	5.3	5.5	5.8	6.0	10.8	10.6	10.6	10.7	71.9	77.0	85.2	29.8
	인천광역시	3.4	3.5	3.9	4.1	5.3	5.8	5.7	5.6	53.9	51.7	58.5	15.9
	중구	14.4	13.1	13.3	12.9								
	동구	5.8	6.0	7.8	-								
	미추홀구	3.6	3.6	4.4	4.5								
	연수구	3.3	4.3	4.4	4.9								
	남동구	1.9	1.9	1.9	1.9								
	부평구	2.2	2.3	2.5	2.6								
	계양구	2.2	2.2	2.3	-								
	서구	2.3	2.2	2.4	2.4								
	강화군	16.0	16.0	15.9	15.9								
	옹진군	9.3	9.5	19.4	19.6								

주: (문화기반시설수÷총 주민등록인구수)×100,000; (객석수÷총 주민등록인구수)×1,000; (예술활동건수÷주민등록인구수)×100,000

자료: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균형발전지표, 핵심·객관지표-전국[데이터파일]. <https://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에서 2023.5.2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이외에도 공연문화시설,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서비스 권역내 인구비율은 인천광역시 비율이 전국 비율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 간 편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문화·여가시설 인프라 공급이 공간적으로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표 2-19〉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문화·여가 부문 2)

(단위: %)

객관 지표	부문	문화여가 부문 2											
	지표명	공연문화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도서관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공공체육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전국	95.6	87.3	87.4	88.5	14.6	43.9	45.8	48.3	14.1	18.7	17.8	20.4
	인천광역시	98.1	98.0	98.2	98.3	16.8	61.2	63.8	67	12.5	23.7	23.7	25.9
	중구	81.2	82.1	82	84.1	19.3	37.6	45.4	43.8	6.8	17.5	16.86	17.1
	동구	100.0	100.0	100	-	15.7	78.4	71.6	94.59	22.5	88.0	91.22	99.3
	미추홀구	100.0	99.6	99.6	99.61	17.7	46.6	55.3	52.66	5.0	13.2	12.95	16.1
	연수구	100.0	99.5	99.2	99.47	16.8	50.9	50.1	59.64	9.4	5.1	2.59	5.97
	남동구	100.0	100.0	100	-	6.6	70.0	74.4	80.36	17.4	72.8	75.54	72.63
	부평구	100.0	100.0	100	-	22.5	72.5	70.4	67.82	15.8	18.7	13.32	17.52
	계양구	100.0	99.3	100	98.66	21.8	73.4	73.2	81.03	5.8	9.7	19.28	17.83
	서구	100.0	100.0	99.9	-	19.2	64.7	69.3	72.27	17.1	4.6	4.51	10.54
	강화군	80.0	81.2	82.6	80.38	6.8	17.1	17.5	16.91	5.4	10.5	5.57	11.9
	옹진군	2.9	14.2	6.9	12.38	0.0	7.5	5.2	4.66	15.0	17.5	11.52	10.79

주: 공연문화시설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 수×100/총 주민등록인구수; 도서관으로  
부터 서비스권역 이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 수×100/총 주민등록인구수; 공공체육시설로부터 서비  
스권역 이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수×100/총 주민등록인구수  
자료: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균형발전지표, 핵심·객관지표-전국[데이터파일]. <https://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에서 2023.5.2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바. 안전 부문

- 안전 부문을 살펴보면, 119안전센터 1개당 담당주민수는 전국 평균보다 많은 반면, 소방서, 경찰서 접근성은 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러한 접근성은 인천광역시 내 섬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0〉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안전 부문 1)

객관 지표	부문	안전 부문 1							
	지표명	119 안전센터 1개당 담당주민수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주민수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전국	50,464	48,594	47,769	-	3,671	3,391	3,116	2,982
	인천광역시	60,299	56,866	54,497	-	4,182	3,955	3,606	3,541
	중구	20,417	22,523	23,288	-				
	동구	22,078	21,476	20,847	-				
	미추홀구	69,424	68,144	67,391	-				
	연수구	86,590	91,638	77,490	-				
	남동구	76,737	59,189	58,373	-				
	부평구	87,440	85,263	82,494	-				
	계양구	78,170	75,868	74,188	-				
	서구	67,325	60,506	60,227	-				
	강화군	22,965	23,059	17,301	-				
	옹진군	10,518	10,283	10,228	-				

주: 주민등록인구수 ÷ 119안전센터수; 주민등록인구수 ÷ 구조구급대원 수

자료: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균형발전지표, 핵심·객관지표-전국[데이터파일]. <https://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에서 2023.5.2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표 2-21〉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안전 부문 2)

(단위: km)

객관 지표	부문	안전 부문 2							
	지표명	소방서 접근성				경찰서 접근성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전국	8.6	6.7	6.5	8.5	5.5	4.5	4.4	5.6
	인천광역시	4.8	5.5	5.3	4.3	3.3	3.5	3.3	3.2
	중구	3.1	4.2	3.9	3.76	3.1	4.1	3.96	3.74
	동구	1.0	1.1	1.1	1.06	1.2	1.4	1.43	1.35
	미추홀구	1.6	1.7	1.7	1.64	1.4	1.4	1.43	1.36
	연수구	1.8	2.5	2.9	3.12	1.8	2.5	2.94	2.7
	남동구	2.0	2.3	2	1.94	1.8	1.9	1.85	1.71
	부평구	1.5	1.6	1.6	1.54	1.2	1.3	1.31	1.25
	계양구	2.2	2.6	2.6	2.45	2.2	2.8	2.76	2.6
	서구	2.5	2.9	2.6	2.33	2.7	3.1	2.91	2.68
	강화군	8.2	8.8	8.5	7.76	4.2	4.0	3.86	3.84
	옹진군	4.4	5.1	5	12.49	4.1	4.9	5.56	5.06

주: 가장 가까운 소방서까지 도로 이동거리; 가장 가까운 경찰서까지 도로 이동거리

자료: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균형발전지표, 핵심·객관지표-전국[데이터파일]. <https://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에서 2023.5.2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사. 환경 부문

- 환경 부문을 살펴보면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 면적을 제외하고, 녹지율, 단위 면적 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 평균보다 인천광역시 전체의 수치가 나쁜 것으로 나타남.
- 생활권공원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은 2022년 기준 전국 평균(50.1%)보다는 인천광역시 전체 수치(74.9%)가 높았지만, 특히 섬 지역의 해당 수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2〉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환경 부문 1)

(단위: m<sup>2</sup>/천명, %)

객관 지표	부문	환경 부문 1							
	지표명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 면적				녹지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전국	16,152	16,129	15,674	11,793	71.5	71.0	71.1	71.04
	인천광역시	13,466	13,921	14,706	14,379	49.7	49.6	55.6	55.51
	중구	833	765	682	644.13	77.6	77.6	77.6	77.62
	동구	788	891	813	716.46	11.9	10.9	10.9	10.94
	미추홀구	1,340	988	2,454	2,499.29	17.8	17.7	17.8	17.78
	연수구	1,491	3,618	3,419	3,234.46	19.1	19.1	41.8	41.83
	남동구	3,463	3,238	11,979	13,778.7	42.1	41.4	41.4	41.45
	부평구	1,209	3,795	4,960	1,632.96	32.9	32.8	32.8	32.83
	계양구	2,558	3,288	2,842	1,681.3	74.9	74.9	74.9	73.55
	서구	6,658	6,381	6,962	6,994.14	55.3	55.2	55	55.04
	강화군	673	1,256	420	445.34	84.2	84.1	84.1	84.12
	옹진군	0	0	0	0	0.0	0.0	0	0

주: (도시공원 조성면적÷주민등록인구)×1,000 (m<sup>2</sup>/인); (녹지면적/도시지역면적)×100

자료: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균형발전지표, 핵심·객관지표-전국[데이터파일]. <https://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에서 2023.5.2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표 2-23〉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환경 부문 2)

(단위: 톤/㎢·년, %)

객관 지표	부문	환경 부문 2							
	지표명	1km <sup>2</sup> 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생활권공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전국	46,567	45,648	43,809	-	65.3	48.3	48.8	50.1
	인천광역시	175,147	210,637	192,481	-	70.8	74.4	62.5	74.9
	중구	260,757	296,702	316,949	-	53.5	55.4	61	60.88
	동구	849,788	1,001,147	1,086,586	-	93.2	88.2	96.2	87.89
	미추홀구	530,158	548,359	541,703	-	63.1	87.3	76.7	71.19
	연수구	164,954	174,602	175,178	-	88.5	82.0	71.1	72.47
	남동구	368,767	466,710	379,326	-	84.2	87.2	86.6	87.67
	부평구	512,946	510,043	505,706	-	62.9	68.5	11.6	78.66
	계양구	271,245	688,275	292,803	-	83.0	79.7	70.8	79.08
	서구	381,578	431,910	446,889	-	65.1	64.6	69.4	73.26
	강화군	18,985	19,838	18,588	-	4.3	-	-	5.36
	옹진군	110,039	109,469	105,065	-	0.0	0.0	0	0

주: 대기오염물질배출량(kg)÷시군구 면적(1km<sup>2</sup>); 생활권공원으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수×100/행정구역 내 총 거주인구수

자료: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균형발전지표, 핵심·객관지표-전국[데이터파일]. <https://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에서 2023.5.2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아. 보건·복지 부문

- 보건·복지 부문을 살펴보면 먼저 65세이상 1인가구 비율은 전국 평균 7.7% 보다 인천광역시 전체가 6.5%로 낮은 것으로 확인됨. 반면 관할지역 중 동구(11.88%), 강화군(14.17%), 옹진군(13.13%) 지역은 전국 평균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의 인구 구조를 보다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앞서 살펴본 연령대별 1인가구의 특성은 이들 지역의 고령 1인 가구 비율이 주된 정책 수요 요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직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음.
- 사회복지예산비중,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 내 노인인구 비율,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병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의 경우에도 특히 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구 위기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정책 수요를 고려한 시설 인프라 확충 방안을 심도 있게 탐색,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이를 위해 중앙정부 공모사업 및 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적극적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다분함.

〈표 2-24〉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보건·복지 부문 1)

(단위: %)

객관 지표	부문	보건·복지 부문 1											
	지표명	65세이상 1인가구 비율				사회복지예산비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전국	6.8	7.0	7.3	7.7	32.7	34.0	35.7	40.9	3.1	3.4	3.5	3.9
	인천광역시	5.3	5.6	6	6.5	38.0	42.4	43.8	47.4	3.4	3.7	4	4.7
	중구	6.5	6.5	6.4	6.71	32.3	36.5	37.2	43.2				
	동구	9.9	10.4	11.1	11.88	33.9	32.5	31.9	48.7				
	미추홀구	6.1	6.7	6.9	7.48	60.6	63.1	65.9	71.5				
	연수구	3.7	3.8	4	4.18	47.1	46.9	52.7	57.7				
	남동구	5.0	5.3	5.9	6.61	54.7	57.4	60.7	65.8				
	부평구	5.6	6.0	6.5	7.1	61.1	60.7	63.2	64.8				
	계양구	4.7	5.1	5.7	6.29	52.8	54.8	56	60.5				
	서구	3.7	3.8	4.1	4.54	51.1	51.1	50.8	57.6				
	강화군	13.3	13.8	13.9	14.17	21.9	22.1	21.7	25.8				
	옹진군	10.0	10.9	11.8	13.13	14.5	17.1	18.9	17.5				

주: (65세이상 1인가구 수÷전체 일반가구 수)×100; ((사회복지분야 예산액+보건분야 예산액)÷전체 예산액)×10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민등록인구수)×100

자료: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균형발전지표, 핵심·객관지표-전국[데이터파일]. <https://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에서 2023.5.2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표 2-25〉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보건·복지 부문 2)

(단위: 개소/십만명, %)

객관 지표	부문	보건·복지 부문 2							
	지표명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 내 노인인구 비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전국	14.2	14.4	14.6	15.2	82.2	68.3	68.8	70.4
	인천광역시	16.8	16.5	17.3	20.3	94.4	95.1	95.9	96.1
	중구	16.5	18.6	18.8	20.7	59.0	55.4	53.9	52.05
	동구	18.3	18.7	19.6	18.6	100.0	100.0	100.0	-
	미추홀구	16.3	16.2	16.3	16.9	100.0	100.0	100.0	-
	연수구	12.2	10.7	11.3	28.4	100.0	99.8	99.5	99.67
	남동구	15.1	14.5	15.6	18.6	100.0	100.0	100.0	-
	부평구	15.5	15.4	16.6	16.2	100.0	100.0	100.0	-
	계양구	16.4	16.7	18.2	19.8	100.0	99.4	100.0	98.92
	서구	16.1	15.3	15.8	16.2	99.9	100.0	100.0	-
	강화군	67.6	68.4	72.6	73.7	49.0	68.1	70.1	73.02
	옹진군	32.8	27.8	28.5	29.2	0.0	0.0	0	0

주: (총 사회복지시설수÷주민등록인구)×100,000;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 이내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노인(60세이상)인구수×100/행정구역 내 총 거주 노인인구수

자료: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균형발전지표, 핵심·객관지표-전국[데이터파일]. <https://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에서 2023.5.2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표 2-26〉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 보건·복지 부문 3)

(단위: 병상수/천명, %)

객관 지표	부문	보건·복지 부문 3											
	지표명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병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전국		13.6	13.6	13.6	13.8	89.9	72.2	73.3	75.1	19.8	12.7	12.7	12.6
인천광역시		11.3	11.5	11.6	11.9	95.8	95.2	95.3	95.2	22.0	19.6	21.6	16.9
중구		17.9	17.0	15.9	15.8	41.8	36.5	34.5	33.5	11.9	6.1	10.3	6.95
동구		11.5	12.4	12.4	13.2	100.0	100.0	100	-	-	-	-	-
미추홀구		13.0	14.3	14.9	15.8	100.0	99.6	99.6	99.61	20.0	28.6	32	21.61
연수구		5.2	5.0	5.2	4.9	100.0	99.5	99.2	99.47	10.6	7.8	8.7	5.02
남동구		12.8	13.1	13.9	14.3	100.0	100.0	100	-	27.8	25.9	30.9	23.6
부평구		10.6	10.4	9.9	9.8	100.0	100.0	100	-	27.0	25.0	25.4	27.2
계양구		13.4	13.7	13	13.8	100.0	98.9	99.6	98.66	40.1	25.9	29.4	16.92
서구		10.4	10.2	10.6	11.7	100.0	99.2	99.2	99.17	17.9	14.2	14.7	12.89
강화군		13.3	16.1	14.1	12.7	55.2	56.9	58.4	58.04	2.2	4.4	2.4	2.24
옹진군		3.1	3.6	3.6	3.6	0.0	22.8	42.9	44.35	0.0	2.7	5.2	4.67

주: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수÷주민등록인구)×1,000; 응급의료시설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수×100/행정구역 내 총 거주인구수; 병원 시설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수×100/행정구역 내 총 거주인구수

자료: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균형발전지표, 핵심·객관지표-전국[데이터파일]. <https://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에서 2023. 5.2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2. 교통접근성지표로 살펴본 인천광역시

- 교통접근성 지표로 인천광역시의 교육시설 및 판매시설, 광역교통시설과 의료시설의 접근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섬 지역의 교통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섬 지역 중에서도 특히 옹진군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짐.
  - 섬 지역을 제외하고는 중구 지역의 교통접근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7〉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교육시설의 평균접근시간(2019년 기준)

(단위: 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승용차	대중교통/도보	승용차	대중교통/도보	승용차	대중교통/도보
인천광역시	2.66	5.55	3.95	8.89	4.65	10.69
중구	2.79	6.92	4.99	12.76	6.29	14.64
동구	2.65	6.22	3.46	9.03	4.23	11.02
미추홀구	2.92	5.69	4.42	9.75	4.77	10.77
연수구	2.49	5.20	3.24	7.73	3.99	9.70
남동구	2.42	4.85	3.07	6.86	4.25	9.70
부평구	2.38	4.48	3.28	7.07	3.81	8.58
계양구	2.44	4.77	3.32	7.34	3.83	9.22
서구	2.55	5.35	3.82	8.79	4.70	10.84
강화군	6.04	23.18	8.31	31.69	7.61	25.23
옹진군	21.68	33.52	84.15	100.26	71.62	92.52

주: 1) 해당 수치는 6-20시까지의 시간의 일 평균 수치임.

2) 한국교통연구원(2021b)에 따르면, 평균접근시간은 가장 인접한 서비스시설까지 도달하기 위한 평균 소요시간(최대 120분)을 의미하며, 해당 구역(집계구)의 인구로 표준화한 특성을 띠고 있음.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21a). 교통접근성지표-2019년 교통접근성지표[데이터파일]. <https://www.ktdb.go.kr/www/selectTransportTreeView.do?key=32>에서 2023.5.2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표 2-28〉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판매시설의 평균접근시간(2019년 기준)

(단위: 분)

구분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승용차	대중교통/도보	승용차	대중교통/도보
인천광역시	10.80	18.00	11.86	18.87
중구	9.48	23.94	22.45	38.35
동구	5.95	16.18	3.05	7.48
미추홀구	6.00	13.37	4.45	9.59
연수구	4.90	12.36	7.42	17.53
남동구	6.94	13.57	5.84	12.60
부평구	4.41	10.17	6.70	13.42
계양구	5.35	12.68	5.76	12.01
서구	6.68	14.11	11.13	19.61
강화군	51.11	97.47	23.14	51.71
옹진군	>120.00	>120.00	>120.00	>120.00

주: 1) 해당 수치는 6-20시까지의 시간의 일 평균 수치임.

2) 한국교통연구원(2021b)에 따르면, 평균접근시간은 가장 인접한 서비스시설까지 도달하기 위한 평균 소요시간(최대 120분)을 의미하며, 해당 구역(집계구)의 인구로 표준화한 특성을 띠고 있음.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21a). 교통접근성지표-2019년 교통접근성지표[데이터파일]. <https://www.ktdb.go.kr/www/selectTransportTreeView.do?key=32>에서 2023.5.2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표 2-29〉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광역교통시설의 평균접근시간(2019년 기준)

(단위: 분)

구분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	
	승용차	대중교통/도보	승용차	대중교통/도보	승용차	대중교통/도보
인천광역시	44.93	57.33	21.68	31.20	45.76	58.47
중구	48.61	70.17	16.85	34.38	29.30	45.52
동구	49.23	53.01	25.62	35.39	46.34	55.97
미추홀구	44.37	51.13	14.02	22.66	45.49	60.86
연수구	39.20	55.38	16.50	26.45	40.02	45.80
남동구	37.07	51.46	12.54	20.87	50.21	63.31
부평구	41.73	43.62	13.31	22.20	40.94	57.58
계양구	34.57	48.89	18.69	28.81	31.99	45.46
서구	38.91	58.35	29.29	41.73	36.39	47.32
강화군	83.66	>120.00	24.79	54.41	82.58	>120.00
옹진군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주: 1) 해당 수치는 6-20시까지의 시간의 일 평균 수치임.

2) 한국교통연구원(2021b)에 따르면, 평균접근시간은 가장 인접한 서비스시설까지 도달하기 위한 평균 소요시간(최대 120분)을 의미하며, 해당 구역(집계구)의 인구로 표준화한 특성을 띠고 있음.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21a). 교통접근성지표-2019년 교통접근성지표[데이터파일]. <https://www.ktdb.go.kr/www/selectTransportTreeView.do?key=32>에서 2023.5.2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표 2-30〉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의료시설의 평균접근시간(2019년 기준)

(단위: 분)

구분	병·의원		공공의료시설		종합병원	
	승용차	대중교통/도보	승용차	대중교통/도보	승용차	대중교통/도보
인천광역시	3.39	6.28	8.01	17.39	12.56	20.14
중구	3.25	10.27	8.78	20.17	23.62	37.79
동구	1.61	3.58	4.56	10.91	4.06	12.17
미추홀구	1.85	3.90	6.45	13.63	6.82	13.53
연수구	2.57	5.70	6.80	16.18	8.71	16.99
남동구	1.92	3.96	8.94	19.13	9.77	18.15
부평구	1.70	3.38	7.37	14.55	6.38	13.30
계양구	1.66	3.52	5.82	14.43	7.04	14.40
서구	2.07	4.67	11.40	21.69	7.21	15.80
강화군	18.26	45.55	6.36	28.90	25.66	58.93
옹진군	>120.00	>120.00	7.23	37.46	>120.00	>120.00

주: 1) 해당 수치는 6-20시까지의 시간의 일 평균 수치임.

2) 한국교통연구원(2021b)에 따르면, 평균접근시간은 가장 인접한 서비스시설까지 도달하기 위한 평균 소요시간(최대 120분)을 의미하며, 해당 구역(집계구)의 인구로 표준화한 특성을 띠고 있음.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21a). 교통접근성지표-2019년 교통접근성지표[데이터파일]. <https://www.ktdb.go.kr/www/selectTransportTreeView.do?key=32>에서 2023.5.2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제3절 인천광역시 인구 이동 심층 분석과 함의

#### 1. 서론

- 본 절에서는 인천광역시로의 유입인구 특성을 인천광역시 및 관할 자치구/군별로 살펴봄으로써, (관할 자치구군별) 인구 유입 정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때의 유입은 다른 시도로부터 인천광역시로의 거주지 전입을 의미하며, 예컨대 전입을 하였지만 같은 시군구 내 다른 집으로의 전입이나 다른 시군구로부터의 전입은 제외됨.
  - 또한 유입의 경우, 표본의 5년 전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가 상이하며, 현재 거주지가 인천광역시인 반면, 5년 전 거주지가 인천광역시가 아닌 경우만을 포함함.
- 이를 위하여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2% 자료(총 표본 수 926,967개)를 활용하여 타시도로부터 인천광역시로 유입되는 이들의 출발지별 비중, 인천광역시 관할 자치구/군별 유입인구 비중, 관할 자치구/군별 교육수준별/직종/젊은층 연령대별(19, 20대, 30대) 유입인구 비중을 살펴봄.

#### 2. 주요 분석결과

##### 가. 타 시도로부터 인천광역시로 유입되는 이들의 출발지별 비중

- 먼저 타시도로부터 인천광역시로의 유입인구에 대하여 출발지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이 유입자 10명 중 약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로부터의 유입 비중 약 39.45%, 서울특별시로부터의 유입 비중 약 30.36%). 이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인천광역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이들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에 적지 않게 기인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음. 또한, 2000년대의 사회적 증가 규모에 비하여 2010년대의 사회적

증가 규모가 더 큰 것 역시 이들 지역으로부터의 유입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음.

-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살펴보면, 충청남도(4.9%), 강원도(3.22%), 충청북도(2.94%) 순으로 상대적으로 근거리 지역으로부터의 유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만, 부산광역시 지역으로부터의 유입 비중도 다른 지역, 소위 영호남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2.32%).

〈표 2-31〉 타 시도로부터 인천광역시로의 유입인구 규모 분포

(단위: 명, %)

구분	유입인구 규모	비중
서울특별시	1,857	30.36
부산광역시	142	2.32
대구광역시	71	1.16
광주광역시	99	1.62
대전광역시	121	1.98
울산광역시	75	1.23
세종특별자치시	33	0.54
경기도	2,413	39.45
강원도	197	3.22
충청북도	180	2.94
충청남도	300	4.9
전라북도	187	3.06
전라남도	119	1.95
경상북도	140	2.29
경상남도	126	2.06
제주특별자치도	57	0.93
전체	6,117	100.0

주: 유입인구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문 표본조사 2% 내 5년전 거주지가 인천광역시 아닌 동시에, 현재 거주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2021).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문 표본조사 2%.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23.6.2.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나. 인천광역시 관할 자치구/군별 유입인구 비중

- 타시도로부터 인천광역시로 유입되는 인구를 관할 자치구/군별로 살펴본 결과, 부평구(18.47%), 서구(15.15%), 연수구(14.01%)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직접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논거는 수도권으로부터의 지리적 인접성을 포함하여, 정주 여건의 질적 측면이 고려된 결과라는 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이해됨.
- 반면, 강화군(4.17%), 동구(2.48%), 옹진군(2.40%)은 다른 자치구군에 비하여 유입인구 비중이 크게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정주 여건을 포함하여 지리지형적 한계 등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인천광역시 관할 자치구/군별 유입인구 비중은 유입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인구정책이 차등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유입인구의 특성은 해당 지역의 정책 수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임.
  - 보다 구체적으로, 유입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보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더 나아가 상주인구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 유입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해당 각 지역의 상주인구의 삶의 질 개선과 정책 수요를 유기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생활인구의 잠재적 수요 파악과 맞춤형 전략 추진을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2-32〉 인천광역시 관할 자치구/군별 유입인구 비중

(단위: 명, %)

구분	유입인구 규모	비율
중구	629	10.28
동구	152	2.48
미추홀구	688	11.25
연수구	857	14.01
남동구	790	12.91
부평구	1,130	18.47
계양구	542	8.86
서구	927	15.15
강화군	255	4.17
옹진군	147	2.4
전체	6,117	100.0

주: 유입인구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문 표본조사 2% 내 5년전 거주지가 인천광역시 아닌 동시에, 현재 거주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2021).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문 표본조사 2%.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23.6.2.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다. 관할 자치구/군별 교육수준별 유입인구 비중

- 인천광역시 관할 자치구/군별 유입인구를 교육수준(중학교 이하/고등학교 졸업/2, 4년제 대학 졸업/대학원 이상 졸업)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자치구/군별로 약간의 편차가 존재함.
- 구체적으로, 연수구, 중구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2, 4년제 대학 이상 유입인구 비중이 높은 반면, 강화군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 유입인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들의 유입 비중이 높은 근거는 이들 지역에 고등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됨.

〈표 2-33〉 인천광역시 관할 자치구/군별 교육수준별 유입인구 비중

(단위: %, 명)

구분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2,4년제 대학	대학원 이상	합계	유입인구 규모
중구	14.94	21.14	58.19	5.72	100.0	629
동구	19.74	27.63	43.42	9.21	100.0	152
미추홀구	15.84	35.03	45.78	3.34	100.0	688
연수구	17.62	17.97	54.73	9.68	100.0	857
남동구	15.7	31.01	48.61	4.68	100.0	790
부평구	16.64	33.98	45.58	3.81	100.0	1,130
계양구	16.61	31.18	47.6	4.61	100.0	542
서구	16.5	28.69	48.87	5.93	100.0	927
강화군	25.1	37.65	32.16	5.1	100.0	255
옹진군	21.77	26.53	46.26	5.44	100.0	147
전체	16.92	28.92	48.65	5.51	100.0	(6,117)

주: 유입인구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문 표본조사 2% 내 5년전 거주지가 인천광역시 아닌 동시에, 현재 거주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2021).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문 표본조사 2%.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23.6.2.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라. 관할 자치구/군별 직종별 유입인구 비중

- 인천광역시 관할 자치구/군별 직업이 있는 이들의 직종별 유입 비중은 해당 지역의 잠재력과 정책 수요를 직,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러한 특성은 대개 세부 직종 범주 및 지역별 분포 특징이 인천광역시 전체 분포의 특성과 유사한 가운데, 유독 크거나 작은 범주에서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단적으로, 사무 종사자의 비중은 옹진군에서만 크게 작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인천광역시 21.61%, 옹진군 5.26%),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동구에서 상대적으로 낮고(인천광역시 12.69%, 동구 7.6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옹진군에서 가장 낮은 반면, 기타의 경우 가장 높은 특성을 띠고 있는 것 등이 그러한 예임.
- 보다 직관적으로는 강화군의 경우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유입 비중이 높은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강화군의 산업 구조가 1차 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생활인구를 유인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등의 제도적 활성화 기반(잠재력)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보다 큼을 직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음.

〈표 2-34〉 인천광역시 관할 자치구/군별 직종별 유입인구 비중

(단위: %, 명)

구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 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기기 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 무 종사자	기타	합계	유입 인구 규모
중구	0	14.39	24.13	22.51	8.82	0.23	8.58	8.82	12.06	0.46	100.0	431
동구	1.09	23.91	22.83	7.61	9.78	1.09	13.04	13.04	7.61	0	100.0	92
미추홀구	0.49	19.75	21.23	13.58	12.84	0.25	11.85	10.86	9.14	0	100.0	405
연수구	0.81	31.16	27.29	8.35	10.79	0	6.72	9.16	5.3	0.41	100.0	491
남동구	0.4	26.85	21.84	10.62	12.83	0.4	5.81	11.82	7.62	1.8	100.0	499
부평구	0.43	20.89	19.45	12.39	12.39	0	13.4	11.53	8.36	1.15	100.0	694
계양구	0.31	23.31	20.25	12.58	11.96	0.31	11.35	11.35	8.28	0.31	100.0	326
서구	1.28	24.68	22.12	10.79	9.32	0	10.79	13.71	6.58	0.73	100.0	547
강화군	0.93	23.15	14.81	11.11	12.96	8.33	9.26	8.33	9.26	1.85	100.0	108
옹진군	0	26.32	5.26	17.89	7.37	2.11	8.42	10.53	1.05	21.05	100.0	95
전체	0.57	23.24	21.61	12.69	11.2	0.46	9.92	11.09	7.92	1.3	100.0	(3,688)

주: 유입인구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문 표본조사 2% 내 5년전 거주지가 인천광역시 아닌 동시에, 현재 거주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2021).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문 표본조사 2%.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23.6.2.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마. 관할 자치구/군별 젊은층 연령대별(19세, 20대, 30대) 유입인구 비중

- 인천광역시 관할 자치구/군별 19-39세 연령대의 유입인구 비중(전체 유입인구 대비)의 경우 강화군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 간 비중은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상대적으로 중구(55.33%), 미추홀구(53.49%), 남동구(52.15%), 부평구(49.82%) 순으로 높은 반면, 서구(43.69%), 연수구(44.81%), 계양구(45.02%)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경향은 젊은층의 유입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이들의 지속적인 유입을 도모하는 동시에, 유입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결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보다 주목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한편, (강화군을 제외하고) 젊은층의 유입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전체 유입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젊은층에 치우치지 않고 상대적으로 고른 연령층별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즉,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어느 한 연령층에 보다 주목하기 보다는 세대를 아우르는 전세대적 삶의 질 제고에 주목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관할 자치구/군별 19-39세 연령대 유입인구 비중을 세 범주(19세, 20대, 30대)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지역 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은 가운데) 강화군은 전체 유입인구 규모가 가장 작은 반면 19세의 유입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30대 유입인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경향은 각 지역별로 그간 추진하였던 정책의 실효성 및 정책 수요와 맞물린 향후 개선 방향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2-35〉 인천광역시 관할 자치구/군별 젊은층 연령대별(19세, 20대, 30대) 유입인구 비중

(단위: %, 명)

구분	19세	20대	30대	합계	해당 연령대 유입인구 규모	전체 유입인구 대비 비중
중구	0.57	48.85	50.57	100.0	348	55.33
동구	0	43.42	56.58	100.0	76	50.00
미추홀구	1.36	54.62	44.02	100.0	368	53.49
연수구	1.82	38.54	59.64	100.0	384	44.81
남동구	0.24	48.06	51.7	100.0	412	52.15
부평구	1.24	43.16	55.6	100.0	563	49.82
계양구	0.82	43.85	55.33	100.0	244	45.02
서구	0.99	39.01	60	100.0	405	43.69
강화군	5.26	49.12	45.61	100.0	57	22.35
옹진군	0	44.62	55.38	100.0	65	44.22
전체	1.06	45	53.94	100.0	(2,922)	4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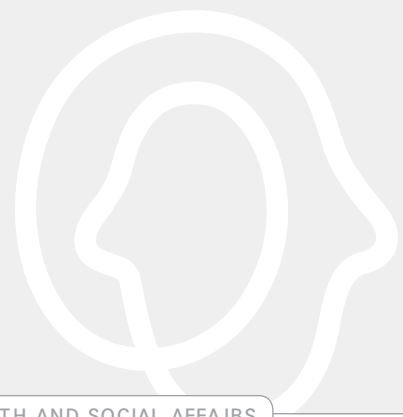
주: 유입인구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문 표본조사 2% 내 5년전 거주지가 인천광역시 아닌 동시에, 현재 거주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2021).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문 표본조사 2%.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23.6.2.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 3. 정책적 함의

- 지금까지 살펴본 인천광역시로의 인구 유입 특성은 인접지역 간 무분별한 인구 경쟁을 위한 정책 추진보다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보다 견지하고, 협력할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음. 각 지역별 유입인구의 특성은 그간 추진되었던 각 자치구/군별 정책의 실효성을 진단하는 동시에 향후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띠고 있음.
- 지금까지 살펴본 분석결과는 인천광역시 내 구군별 인구 유입 특성이 상이하 며, 이는 각 관할 자치구/군별 인구정책의 주요 전략이 각기 다르게 추진될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또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인 강화군, 옹진군, 동구의 경우 생활(관계)인구 정책 추진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역별 잠재적 수요 특성을 진단,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 지금까지의 인구 유입 특성은 인천광역시의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 잠재력, 지역 정책 수요를 직,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으며, 특히 지역별로 상이한 인구 유입 특성뿐 아니라 지리지형 적 차이점과 사회경제적 특성, 그간 추진된 정책 방향 검토와 개선 방향 도출에 주목할 필요가 다분함.





## 제3장

### 국내외 주요 사례 분석

제1절 해외 주요 사례 고찰과 함의

제2절 중앙정부 관련 정책 개관





## 제3장 국내외 주요 사례 분석

### 제1절 해외 주요 사례 고찰과 함의

#### 1. 저출산 대응 관련<sup>3)</sup>

- 먼저,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중점 전략(사업) 개발을 위하여 저출산 대응 관련 해외 주요 사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일정 기간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독일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함.

#### 가. 소개

- 독일의 가족정책은 최근 10여 년 간 전환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수십 년 동안 독일 정부는 결혼과 가족생활에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을 투자했지만 일-생활의 균형 측면에서의 실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Gauthier, 1996). 독일의 가족 정책의 주된 기조 중 하나는 맞벌이 부모를 지원하고 일-가정 갈등을 완화, 해소하는 것임.

#### 나. 보육 제공

- 1996년부터 독일에서는 3세부터 취학 전 영유아에 법적으로 유치원에 다닐 자격이 주어졌으며, 2013년에는 1세부터 보육권이 확대됨.
- 공립 보육은 비영리 제공자, 주로 개신교 또는 가톨릭 교회 조직과 지방 자치

3) <https://splash-db.eu/policydescription/family-policies-germany-2014/>의 주요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한 내용임을 밝힘.

단체에 의해 제공되는 경향이 농후함(Evers, Riedel, 2002). 유치원, 탁아소 등 공적 지원을 받는 보육 기관 외에도 가족 보육 인프라가 지속 확충됨. 이러한 확충의 배경에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 있음.

- 2006년부터 맞벌이 부모에 대하여 소득세에서 연간 최대 4,000유로까지 보육비 공제가 이루어짐.
- 부모 급여의 수준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일부 주에서는 입학 전 1년간의 보육 서비스가 무료이며, 라인란트-팔츠에서는 2세 이상의 영유아에 대하여 전액 무료임.
- 3~5세 영유아의 9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보육 시설에 다니지만, 대개는 시간제 보육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서비스를 수혜 받고 있음.
- 독일은 분권화된 체계가 매우 공고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의 가용성과 특성에 지역적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 연방의회는 보육에 관한 법적 지침을 제정하지만, 조직, 비용, 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로 주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이 지역별로 상당히 다양함. 이러한 특성은 인천광역시의 경우 관할 지역별 정책 수요와 유기성을 보다 제고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다. 육아휴직(모성보호 포함)

- 동독과 서독 모두 1970년대에 도입된 최초의 육아휴직 형태는 출산휴가를 연장하는 것임. 1986년에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육아 휴직 제도가 도입됨. 이후 스웨덴 모델과 유사한 새로운 육아 휴직 제도가 2007년에 도입됨(Ostner, 2010).
- 자녀가 14개월이 될 때까지 소득 대체 소득이 지급되며, 2개월은 "사용하지 않으면 상실" 기준으로 부모 중 한 사람에게 할당되는데 이러한 조건은 아버지들이 휴가를 내고 육아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 기인하고 있

음. 제도 도입 이후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08년 21%에서 2012년 29%로 꾸준히 증가함.

- 육아휴직 소득대체비율과 관련하여, 맞벌이 부부는 출생 전 12개월 동안 평균 월 소득의 67%를 보전받는 것으로 나타남(Erlar, 2010). 월 소득대체금액의 상한선은 1,800유로이며, 월 소득이 1,000유로 미만인 경우 부모는 이전 소득의 67%에서 100% 사이의 단계적으로 조정된 소득대체금액을 수혜함.
- 독일에서는 모성 보호가 1878년부터 이어져 음. 출산 휴가와 출산 휴가 혜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여 오늘날 고용된 여성은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간의 휴가 제도로 정착됨. 조산 또는 다태 출산의 경우 출산 휴가는 의무적으로 4주 연장되며(BMFSFJ, 2013), 모성보호 기간이 시작되기 전 13주(또는 3개월) 동안 벌어들인 평균 순소득을 기준으로 100% 소득 대체 금액을 수혜함.
- 육아휴직 제도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소득대체 비율 제고, 비가시적인 불이익 등과 같이 문화적 측면의 개선이 필요함. 소득대체 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자체적으로 소득을 추가적으로 보전하는 제도 연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라. 가족수당

- 1920년에 도입된 독일 최초의 통합 소득세 시스템에는 이미 가족의 자녀 수에 따라 세금 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음(Oberhauser, 1980). 직접적인 아동 수당 지급은 1930년대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1945년에 폐지되었음. 다자녀 가정에 대한 월별 아동 수당은 1950년 동독에서(Schulz, 1998), 서독에서는 1954년에 다시 도입되었음.
- 현재 독일은 자녀가 없는 사람에서 가족으로, 고소득 가족에서 저소득 가족으로 자원을 재분배하는 자녀 수당과 세금 수당의 혼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Leitner et al., 2008).

- 중요한 지점은 아동수당이 사실상 보편적이며, 자녀당 매월 일시불로 지급되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임(2014년: 첫째와 둘째 자녀 184유로, 셋째 자녀 190유로, 넷째 자녀와 추가 자녀 한 명당 215유로).
- 보다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우리나라의 아동수당과 다르게 수혜 아동 연령이 보다 높다는 것임. 일반적으로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25세가 될 때까지 지급됨. 다만, 18세 이후부터는 자녀의 소득에 따라 소득 조사를 통해 혜택이 적용됨. 연간 소득이 약 63,000유로를 초과하는 부모(또는 연간 소득이 33,500유로를 초과하는 독신)는 추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추가적으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특별한 제도도 추진 중에 있음. 이들에게는 자녀당 1,308유로의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짐. 자녀 양육비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거주 부모는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최대 6년 동안 선불금을 청구할 수 있음. 2014년 지급액은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월 133유로, 6~11세 아동의 경우 월 180유로임.
- 독일의 아동 수당에 대한 수혜 아동 연령의 폭이 넓은 것은,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을 포함한 현금성 지원이 영유아 중심에 대체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측면을 개선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인천광역시의 관련 정책 역시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기, 청년기에 대한 지원을 고루 분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다분함.

## 2. 인구 고령화 대응 관련<sup>4)</sup>

- 다음으로, 인구 고령화 대응 관련하여 미국의 빌리지 마을과 비컨힐 마을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이는 신중년 세대의 노후 준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급격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천광역시의 인구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 조성 사업으로 시사하

4) 해당 부분은 주보혜 외. (2023). 베이비부머 생애전환지원 과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간예정)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힘.

는 바가 적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개하고자 함. 아울러 이는 인천광역시의 향후 5년 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신중년 대응 사업 개발에도 적극 고려하고자 함.

#### □ 빌리지모델(Village Model)

##### ○ 빌리지 모델의 특성

- 일반적으로 회원들이 직접 설립, 스스로 운영함. 주민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 유형과 자원 봉사 방법을 결정함.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Aging in place) 지원을 목표로 이동 지원, 가사 지원, 지역 사회 서비스 연계 등 제공
- 일반적으로 연간 회비를 청구하고 그 대가로 사회 참여 활동, 상호 자원 봉사 기회, 교통 지원 및 지역 사회의 기존 서비스 소개를 조직하여 지역 사회 구성원을 지원함.
- 성공적, 건강한 노화를 지향함. 지역 내 노령 인구에게 연대와 협력, 공동체 인식 제고를 통한 고립감 감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이들로 하여금 독립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대표적인 비컨힐 빌리지는 미국 최초의 50세 이상 인구를 위한 공동체이며 폴뿌리단체에서 시작되어 2002년 공식 설립된 이후 현재 미국 및 전 세계 350개 마을공동체로 확산되어 운영되고 있음.
- VtVN(Village to Village Network)
- 비컨힐 마을이 주축이 되어 설립함. 미국 전역과 전 세계의 마을들이 협력하고 실천 경험을 공유하는 연례 모임 지원, 지역 연합을 통한 협력.
-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 전 세계 흩어져있는 마을공동체 소속 회원과 직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음. 2023년에는 10월 중 온라인, 대면 컨퍼런스를 모두 개최할 예정임. 컨퍼런스에서 다루는 주제로는 “가상 프로그램의 파워 알기: 마을공동체 회원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기획” 등이 있으며 그 외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재정 자원 확보 등 다양한 내용이 논의될 예정임.

## □ 비컨힐마을(Beacon Hill Village)<sup>5)</sup>

### □ 비컨힐마을의 비전 및 목적

- 비컨힐 마을공동체는 2002년에 설립된 마을공동체로 회원 기반 비영리 기관으로 미국 매사추세츠 주 내 보스턴 도시 12개 지역에 걸쳐 운영되고 있음. 50세 이상 고령층 인구에게 필요한 다양한 자원과 정보 연계를 통해 이들의 성공적, 건강한 노화(successful and healthy ageing)를 지원하는 것이 공동체의 목적임. 비컨힐의 마을공동체(communitiy) 개념은 ‘함께 할 때 강하다’ (together we are stronger)라는 믿음을 토대로 하며 회원 간 네트워크를 통해 이들의 활동적인 삶, 건강 증진 및 고립 감소를 지향하고 있음.
- 비컨힐 마을공동체의 미션은 보스턴 중심부 내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 인구에게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가와 교육적 활동을 지원하며 마을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온전히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비컨힐 마을공동체의 목적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됨. 첫째, ‘우리’(50세 이상 회원)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와 권한을 제공하며 둘째, 우리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며 셋째, 마음의 평안을 제공하고 넷째, 목적과 약속이 있는 삶을 지원하며 다섯째, 노년기로의 성공적 이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임.
- 또한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 마을공동체가 가지는 운영 원칙이 있음. 이는 크게 7개 요소로 구성됨.
  - 첫째, 포괄성(inclusiveness)의 원칙: 다양한 문화권, 종교, 성정체성, 오리엔테이션과 능력의 회원을 모두 환영함.
  - 둘째, 긍휼(compassion)의 원칙은 서로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것을 가리킴.
  - 셋째, 협동(collaboration)의 원칙은 함께 일함에 있어 회원 중심의 원칙을 고

5) 본 내용은 비컨힐 마을공동체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여 작성한 내용임.  
<https://www.beaconhillvillage.org/>

수함을 의미. 즉, 조직 및 직원 중심이 아닌 마을공동체 소속의 회원들이 중심이 됨을 의미함.

- 넷째, 공동체(community)의 원칙: 마을공동체 내외 공고한 관계
- 다섯째, 개성(individuality)의 원칙: 각 회원의 독특함을 존중하며 이를 환영함.
- 여섯째, 혁신(innovation)의 원칙: 회원들의 변화하는 욕구와 선호에 적응함.
- 일곱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원칙: 재정규율과 책임의 원칙 하에 조직 운영

#### □ 마을공동체 조직

- 비컨힐 마을공동체 조직은 (1)이사회, (2)직원, (3)자원봉사자 및 회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사회 구성원 모두 마을공동체 회원이며 모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 기준 현재 이사회 회장은 바바라 버크맨(Barbara Berkman)으로 보스턴 대학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로 재직, 은퇴한 이력이 있음. 이사회는 총 15명, 상근직원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자원봉사자와 회원들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재능기부 및 활동을 하고 있음. 예로 테크톨로지 지원 활동은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테블릿 및 소셜미디어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회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활동임. 우애방문(friendly visit)활동 역시 자원봉사활동 중 하나인데 이는 재가방문 형태의 자원봉사로 회원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회원이 장기 여행 혹은 집을 비울 기간 내 반려동물/식물 돌봄 등의 활동을 포함함. 이 외 사무실 보조, 아웃리치 활동, 회원 모집, 행사 기획 및 지원, 이웃 내 모임 기획, 사진 및 글 재능기부 등 역시 다양한 영역에서의 회원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

#### □ 회원 대상 서비스

- 비컨힐 마을공동체는 소속된 회원들에게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및 자원 연계 등을 제공하고 있음. 특히 회원들에게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이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노년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회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의 범위는 크게 6개 영역으로 구분됨. 이는 다음과 같음.

- 건강한 삶 (Live healthy): 운동, 웰니스 프로그램, 행복한 삶과 죽음(living and ending well), MGH(매사추세츠 병원) 임원 등록인 총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내 헬스장, 요가 및 태극권, 걷기 운동 프로그램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비컨힐과 인근지역 내 비컨힐 마을공동체에서 직영하는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함. 웰니스 프로그램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강연 및 침요법, 마사지 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행복한 삶과 죽음 프로그램은 주로 공공도서관에서 진행되며 행복한 노년기, 건강한 노후 등에 대한 여러 강연과 교육을 포함함. 비컨힐 마을공동체 회원들에게는 또한 MGH 임원 등록 자격이 주어지며 회원가 월 300달러(비회원가 월 1,200달러) 납입 시 해외여행 및 국내 여행 시 응급의료 및 24시간 의료 지원 등 가능
- 연결하고 만나고 (Connect and engage): 비컨힐 마을공동체 소속 회원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이웃과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관계 유지가 가능함. 연결하고 만나는 비컨힐 마을공동체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데 이는 social event와 친목(affinity) 모임으로 구분됨. 소셜 이벤트는 비컨힐 마을공동체 모임 혹은 회원들 스스로 구성한 공식·비공식 모임으로 이는 매달 비컨힐 마을공동체 웹사이트에 스케줄이 공지됨.
- 독립적인 생활 유지(Stay independent): 서비스 위원회와 비컨힐 마을공동체 직원들은 각 회원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최대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전화를 통해 정보 및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일부 서비스는 무료로, 일부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음. 제공되는 서비스 예시로는 병원에 머무르거나 질환으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회원에게 모니터링 전화 서비스와 이메일, 장보기 지원 서비스(운전기사 제공 혹은 배달 지원), 생활 전반에 걸친 가정 관리 서비스(사례관리, 건강지원서비스, 간호서비스, 가사도우미, 법률/재정 자문 서비스, 회계서비스, 관리비



등 고지서 납부, 집 및 생활환경 유지 및 수리 서비스, 전문의료 서비스(치과 등 필요 영역), 사회복지 서비스) 등이 있음. 또한 교통지원서비스 등 역시 제공되는 데 회원 가입 시 1년에 3번 지급되는 Doctor Prescribed Ride (DPR)이 있음. 이는 1년에 3번까지 무료로 병원-가정을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며 반드시 의사 처방/요청이 있어야 함. 또한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역 내 택시 이용이 가능함. 개인 기사 혹은 차량 요구 시 시간당 금액을 지불할 시 이에 대한 예약 지원이 가능함.

- 지식 확장(Expand your knowledge): 학습은 모든 연령대 사람들에게 유익하며 특히 노년기의 인지 능력과 기억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신념 하에 비컨힐 마을공동체는 회원들에게 다양한 교육 목적을 가진 강의, 토크, 저자와의 만남, 토론회 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매달 회원의 지식 확장을 위한 여러 행사가 기획되어 웹사이트에 공지되고 있음. 최근 진행된 행사로는 David Muson 의사가 진행한 ‘노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 역학과 건강 이슈’ 강연이 있음.
- 문화체험(Experience culture): 보스턴은 음악, 연극, 미술의 주요 도시로 비컨힐 마을공동체는 소속 회원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동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역시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음. 매월 웹사이트를 통해 기획된 활동을 공지하고 있음. 일부 행사는 무료로 운영되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운영되며 참여 희망 회원에게 필요할 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음.
- 세계 탐험(Explore the world): 마을공동체는 보스턴 지역 내외 다양한 투어 및 여행 활동을 기획하여 회원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일부 투어는 무료로 진행되며 일부는 할인가에 진행됨. 전화, 이메일 등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비회원 가족 및 지인 역시 참여할 수 있으나 비회원 가로 비용 지불 필요. 주로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투어가 기획·운영되었음.

### 3. 인구감소지역 정책 추진 사례와 함의

#### 가. 지역 인구 감소 대응 관련 사례 고찰

- 지역 인구 감소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20년 전국가적 인구(총 인구)의 데드크로스(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경우), 소위 자연 감소가 시작되었지만 지역 인구의 감소는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매우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남.
- 국외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한 사례는 대체적으로 유럽을 대상으로 보고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Galjaard, Van Wissen, & Van Dam, 2012; Dax, & Fischer, 2018; Ferry, & Vironen, 2011).
- 관련 사례로, Galjaard, Van Wissen & Van Dam(2012)은 스코틀랜드 북동부, 프랑스의 노르파스칼레(Nord-Pas-de-Calais) 및 독일의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지역에서의 인구 감소 대응 정책 방향에 대하여 언급함과 동시에, 지역 성장을 위한 내부적 기반의 차이가 이들 지역의 성장의 차이를 유발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음.
- 특히, 이들은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지역 인구 정책의 성공 가능성은 정책의 추진 주체가 국가인 경우 크게 높아짐을 시사하고 있는 바, 경험적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국가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는 경우 지역 경제성장으로 이어졌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임.
-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 인구 감소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추진 정책의 실효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또 다른 관련사례로, Ferry & Vironen(2011)은 인구 감소를 포함한 지역 인구 구조 변화 등 다양한 지역 인구 변화 측면에 대응한 정책 방향으로서, 지역 인구 구조 변화 흐름에 부합하는 지역 노동시장의 재편, 지역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향후 관련 정책이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지역이 경험하고 있는 인구 고령화/초고령화 심화와 같은 인구 구조 변화 측면을 더욱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한편, 인구 감소 지역에서 관측된 인구 증가 양상은 향후 우리나라 지역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지역 인구 동태의 다양성과 더불어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적 시의성 인식과 맞물려 관련 연구가 다양하게 제시된 바 있으며, 최근 관련 사례가 크게 양적으로 축적되는 경향을 보임(Čamprag, 2018; Haase, 2018; Couch, & Fowles, 2019; Kurek, Wójtowicz, & Gałka, 2020; Haase, Bontje, Couch, Marcinczak, Rink, Rumpel, & Wolff, 2021; Chen, Silva, & Reis, 2021).
- 보다 구체적인 사례로, Haase(2019)가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도시 수축 이후 인구의 재성장은 유럽 전역에서의 도시 개발과 관련된 현저한 경로로 이해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Ferry & Vironen(2011)에서 제시하고 있는 2008년 기준 유럽의 지역 인구 변화 양상과 관련하여, 동유럽의 지역 인구 감소가 여전히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서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약 20년 이내에 인구 감소에서 인구 성장 국면을 경험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음.
- 재성장(regional regrowth)과 관련된 해외의 관련 사례들은, 산업 기반 침식으로 인하여 지역 인구 규모가 감소한 소위 축소 도시(shrink city)가 다시 성장하는 단계로 회복하는 양상에 주목하는 경향을 띠고 있음(Haase & Rink, 2016; Haase, Bontje, Couch, Marcinczak, Rink, Rumpel, & Wolff, 2021).
- 즉, 모든 축소 도시가 지역 재성장을 경험하지 않는 양상에 대하여, 과연 재성장을 경험하는 축소 도시에서는 어떠한 요인이 관측되고 있는지, 지역 재성장을 견인한 차별적 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제시하고 있음.
- 추가적으로, 지역 인구 감소 대응 정책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하고자 함.
- 먼저, 프랑스 노르파드칼레(Nord-Pas-de-Calais) 지역은 1990년대 초까지 석탄, 철강 기반 산업이 발달된 지역이었으나, 2000년대 초중반 이후 산업 쇠퇴로 고학력 청년층 유출로 인구 감소, 자연적 감소보다는 사회적 감소(인구의 유입, 유출)에 의하여 인구가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남.

- 이후, 경제적 취약을 극복하기 위한 낙후 지역에서의 지역 경제 개선 정책(교통 네트워크를 포함한 도시 혁신 및 구조 조정, 주거 질 및 지역 인프라 개선)으로 인구 유입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 인구 증가를 직접적인 정책 목표로 내세우지 않았지만, 도시 개발 정책으로 인하여,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지역 인구가 증가하는 결과가 관측됨.
- 프랑스 노르파드칼레(Nord-Pas-de-Calais)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의하여 지역 인구 증가를 유발한 지역 정책 사례로 이해되고 있음.
- 다만, 세부 지역 간 인구 규모와 인구 구조 특성의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간 인구 격차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Galjaard, Van Wissen, & Van Dam, 2012 수정 인용).
- 또한, 독일의 Johanngeorgenstadt의 경우 국영기업의 쇠퇴로 인하여, 산업 및 관광 기반이 사라져 결과적으로 젊은 층 인구의 사회적 감소가 크게 일어남.
- 일본의 Ōya 지역의 경우, 전통적으로 농림업과 같은 1차 산업 중심 지역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맞물려 청년층의 유출이 크게 증가함.
- 상기 사례 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사회경제적 격차 등에 의하여 쇠퇴하는 경향이 나타남. 이들 사례 지역은 공통적으로 지자체의 자립적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중심 기능이 약화되었고, 지역 특수적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중앙정부의 성장 지향적 경제 체계 개발 중심의 정책(케인즈주의 접근 방식)이 지역 회복과 지역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Wirth, P., Elis, V., Müller, B., & Yamamoto, K., 2016 수정 인용).
- 한편, 인구 감소 이후 증가로 표현되는 소위 인구 재성장과 관련된 또 다른 연구로 Haase(2015)는 인구 재성장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양상을 보여준 독일의 라이프치히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오랜 기간 인구가 지속 감소하였다가, 이후 2010년대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 관측된 라이프치히를 대상으로 어떠한 정책적 개입이 있었는

지 논의하고 있는 바,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서 나타난 인구 공동화로 인한 유기, 공실 등 발생된 빈집의 효율적 활용을 비롯한 다각적인 도시 재생 사업이 바로 그것임.

- 이 연구는 지역 인구 감소 국면에서의 효과적인 도시 재생 사업은 지역 인구를 유인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의미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또한, 무분별한 도시 재생 사업보다는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의 환경과의 조화, 효과적인 토지 사용 및 다른 정책 영역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한 정책 수단의 실효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의 지역 인구 감소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또 다른 관련 사례로, Haase, Bontje, Couch, Marcinczak, Rink, Rumpel & Wolff(2021)는 지역 인구 감소를 공통적으로 경험한 라이프치히와 리버풀, 그리고 오스트라바와 우츠 사례에 대하여 각각 전자의 두 도시가 지역 인구 증가 전환을 경험한 반면, 후자의 두 도시는 여전히 지역 인구 감소를 양상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요인이 전자의 두 도시의 인구 증가를 견인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음.
- 즉, 지역 인구 감소에서 인구 증가를 견인한 차별적 요인의 탐색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이들 사례에서 제시되고 있는 라이프치히와 리버풀의 지역 인구 재성장의 차별적 요인 중 하나는 지역 재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 성장 지원 기반 시설 관련 안정적인 재원 조달임.
- 이들에 따르면, 이들 두 지역에서의 지역 성장 지원 재원은 중앙정부를 비롯한 EU로부터 일관성 있게 조달된 바, 이러한 중앙정부 및 정치경제통합체로부터의 안정적인 투자 재원 조달은 지역의 재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인프라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민간 투자를 유인, 촉진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음.
- 중앙정부 및 EU로부터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 측면에서의 라이프치히와 리버풀 두 지역의 지역 재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은, 공공기관 이전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산·학·연 간 연계협력 기반의 혁신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혁신도시 정책과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할 것임.

-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혁신도시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혁신거점을 구성하기 위한 도시 인프라 구성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정책 추진 과정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관리 체계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리버풀의 경우 포괄적인 도시 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일관성 있는 도시 재생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혁신도시 정책이 일회적인 성과가 아닌 지속적인 지역 재성장 및 파급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견지하여야 할 방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것임.
- 지역 인구 감소 대응 정책과 관련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Čamprag(2018)가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도시 재성장에 대한 상반된 논의를 통해 더욱 굳건히 지지된다고 할 수 있는 바, 보다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즉, 이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대표적인 지역 인구 재성장 사례인 독일의 라이프치히에 대하여, 이들 지역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은 중앙정부 및 EU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바탕으로 지역 특화된 전략적 지역 개발 정책 프레임을 구축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반면, 성공적인 결과 이면의 향후 관리에 대한 지자체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한계점이 노정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음.
- 이러한 논의는, 지역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이 강력한 중앙정부의 재원 조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추진과 더불어 지자체의 정책 추진 여건이 심도 있게 진단되어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측면에서의 지자체의 역할의 중요성 및 이러한 추진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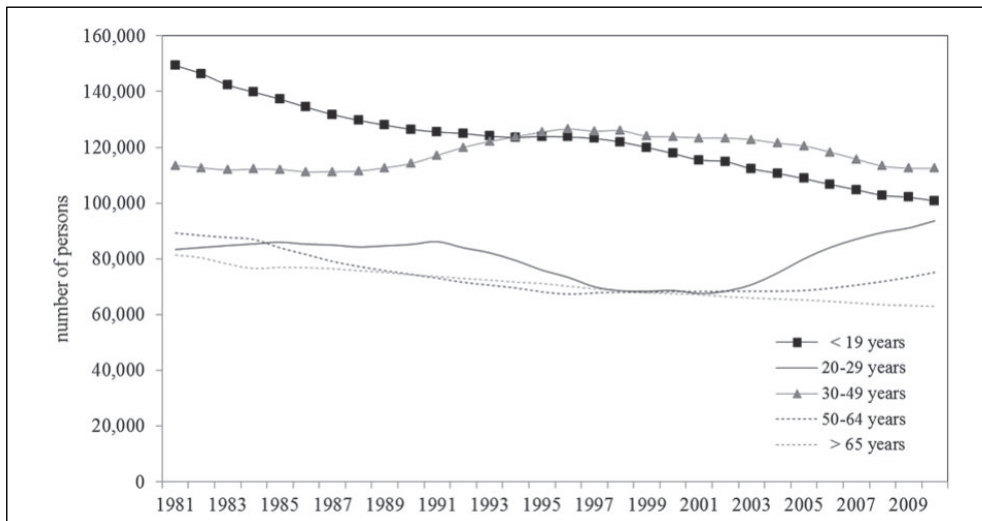
## 나. 리버풀 사례

- 리버풀의 도시 역사를 간략하게 개관하면 다음과 같음. 리버풀은 영국 북서부의 주요 항구이자 지역 도시로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약 40여 년간의 산업 구조 재편과 탈산업화로 인하여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결과를 경험함.
-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구직을 위하여 교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탈도시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1970년대 산업 구조 조정을 경험하면서, 옛 산업 혁명 당시 활용한 부두, 철도 및 중공업 부지의 광대한 부지가 방치되면서 도시가 점차 황폐화되는 결과가 야기됨(Couch, & Fowles, 2019).
- 리버풀 역시 앞서 살펴본 해외 수범 사례 지역인 라이프치히에서와 같이 중앙 정부의 강력한 역할이 도시 재성장에 결정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함. 즉, 산업 내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유치를 지원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추진하였음. 무엇보다도 재고 주택에 대한 도시 계획 사업에 대한 대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주택 투자 사업도 지원함. 브라운필드 재개발 사업은 1980년대 말까지 도시의 오래된(1919년 이전) 재고 주택에 대한 정부 보조금 개조 사업과 추가 도시 계획 정책으로 요약됨(Couch, & Fowles, 2019).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관측되는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심 지역의 주거 개발 및 황폐화된 부두 지역을 재건하는 소위 머지사이드 개발 조합(Merseyside Development Corporation) 역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 추진된 것임(Couch, & Fowles, 2019).
- 이러한 정책 추진의 결과, 1990년대 지역 경제가 회복되었고, 더욱이 유럽 지역 개발 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의 오브젝티브 원(Objective One) 프로그램에 따라 약 16억 파운드(현재 한화 기준 2.5조 원)의 도시재생 자금을 지원받게 되면서, 고등 교육, 건강, 금융 서비스, IT 및 생명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고용 확대가 이루어지게 됨.
- Haase et al.(2021)에 따르면, 리버풀 지역의 고용 실적은 1981년 459,000명에서 1991년 382,000명으로 감소, 핵심 지역에서의 고용 실적 역시 254,000명에서 195,000명으로 감소하였지만, 상기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추

진된 지역 재생 정책의 결과로 고용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까지 도시 지역에서 626,700개의 일자리, 핵심 도시에서 242,6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됨 (Labour Market Profile – Liverpool, n.d.; Turok & Edge, 1999).

- 이러한 고용 창출 실적은 2001년 이후 20-29세 연령대 인구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 양상을 통해서도 뒷받침되는 바, 구체적으로 리버풀의 연령대별 인구 규모 중 20-29세 인구 규모는 2001년 약 70,000여 명에서 2009년 100,000여 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남.

[그림 3-1] 영국 리버풀 지역의 연령대별 인구 규모 추세(1981~2010년)



자료: Rink, Haase, Grossmann, Couch, & Cocks(2012). From long-term shrinkage to re-growth? The urban development trajectories of Liverpool and Leipzig. Built environment, 38(2), 162-178.

<표 3-1> 영국 리버풀의 지역 재생 영향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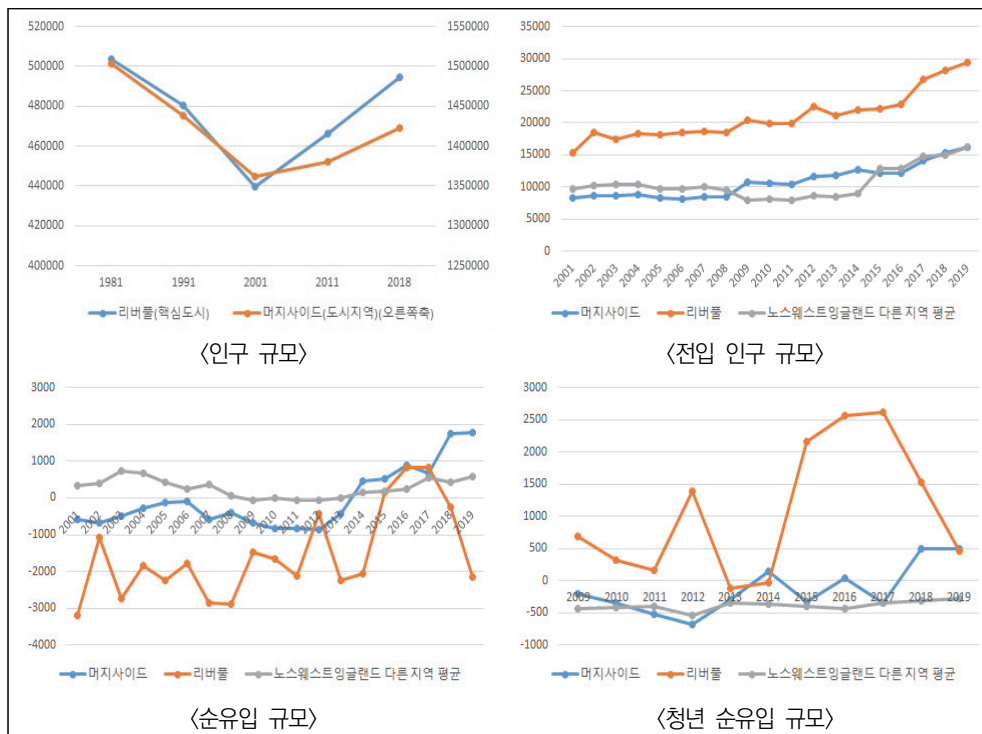
중앙정부의 강력한 재정 지원 하 추진된 지역 정책의 실효성
도시 경제 및 서비스 부문 중심의 국가 경제 성장의 배경적 전제
신속한 산업 구조 조정 기간 이후 회복
EU 및 중앙 정부 자금 지원을 포함한 일관된 장기 재생 전략
핵심 도시 지역에 대한 중점적 개발 강화

자료: Couch, & Fowles(2019)



○ 상기 지역 재성장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집계적 수준의 인구 변화 양상으로도 관측할 수 있는 바,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 추진 이후 인구 규모, 전입 인구 규모, 인구의 순이동 규모, 청년순이동 규모의 증가 양상이 이를 직접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특히, 정책 추진 전후 인구 규모 변화는 감소 이후 급격한 증가 양상의 소위 “V”자 양상이 명확히 관측되고 있음. 또한, 청년 순유입 규모가 지속적인 순유입 양상을 보이며, 크게 201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관측되는 바, 이 역시도 상기 도시 정책이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며, 인구변동이 정책 수요 및 정책의 성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그림 3-2] 영국 리버풀과 노스웨스트잉글랜드 내 다른 지역 평균 비교(2001-2019년)



자료: OECD, Regional Statistics. <https://stats.oecd.org/index.aspx?r=223218>에서 2023.5.26.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다. 소결: 인천광역시 지역 인구 정책에의 함의

- 지역 인구 감소라는 인구 위기, 도시 축소에 대응한 리버풀의 정책 추진 과정은 현재 인천광역시 내 관할 인구 감소 지역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바,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 인구 위기 지역의 낮은 수준의 재정적 여건을 감당하기 위한 공공지원과 공공투자 유치 정책을 초기에 도모하였다는 점임.
- 인천광역시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대부분의 낙후지역(인구 위기 지역)은 적극적인 공공정책 투자에 대한 소위 자생적 노력 없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지방교부세), 보조금에 크게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됨.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적 기조인 지역 주도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지역 역시 자구적 노력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산업 클러스터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중앙정부의 지원(가령, 초기 입지를 도모하기 위한 감면 제도 등)이 지역 재생장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민간 투자를 촉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 정책과의 유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복합적으로 시사하고 있음.
- Haase et al.(2021)는 리버풀의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한 도시 재생장(urban regrowth)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된 근거로,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제시하고 있음. 즉, 지역 간 교통 인프라 구축, 도시 재생, 주거 정비 및 관련 환경 개선, 사회 정책 인프라 등과 생태 활성화를 포함한 지역 기간산업 확대에 대한 외부 투자 및 자금 조달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언급하고 있음. 이러한 재정 지원 방식은 투자에 대한 계획적이고 일관된 접근 방식이 보장되는 특징을 띠고 있으며, 공공 부문과는 독립적으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지역 경제 재생장과 이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책 역시 지역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정책 방향으로 이해되는 바,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의 활성화와 병행하여 추진된 정책의 결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게 나타남. 즉, 이는 인구 위기 기간에 경험한 탈도시화에 따른 손실을 상쇄하고 도시 지

역의 재성장을 지원하면서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다각적인 정책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Haase et al., 2021).

- 요컨대, 지역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역적 요인과 맥락의 중요성을 간과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적 정책 대응 역시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상기 두 가지의 해외 수범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 및 주택 투자, 경제 재개발과 일자리 성장은 주로 지역 자원이나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보다는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가적 결정과 자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리버풀의 재성장은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거버넌스 내 제반 결정 등을 포함하여, 각각의 국가 정부의 사회적 책임이 강력하게 작용한 데 구조적, 경제적 성과를 유발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이러한 국가의 역할은 현재 인천광역시 내 관할 일부 지역 인구 위기에 국가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반추하여 개선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리 정책은 중앙정부-지역이 연계, 협력하여 보다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개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관리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인구활력계획 수립 추진은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역경제 선순환 매커니즘을 지역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중앙정부가 비수도권의 공간적 차별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인천광역시의 인구감소 지역 관련 정책 방향은 지역 인구, 특히 젊은층의 유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정책 대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일자리의 질적 제고와 대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지역 환류 체계 관련 인센티브 등의 질적,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책 방향의 세분화 역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측면으로, 향후 지역 정책 추진 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즉, 관할 지역 유형별 정책 지원을 차별화하여, 보다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중앙정부 관련 정책 개관

1.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표 3-2〉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부문별 핵심과제

분류	사업명	담당부처
전략1: (사람)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①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	지방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	교육부
	지역 맞춤형 우수 지역인재	교육부
	지역인재 취업지원	교육부
②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관광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체부
	새로운 가치창출로 지역문화 성장	문체부
	지역 간 연계협력과 지역 관광거점 육성	문체부, 국토부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특화관광육성	문체부, 해수부
	지역관광 혁신역량	문체부
③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취약지역 중심의 의료지원 강화	복지부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체계 구축	복지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역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복지부
	지역사회 성평등 인프라 구축	여가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역교통체계 개편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전략2: (공간)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①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	농식품부
	불편없는 농촌 '3·6·5 생활권' 구축	농식품부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다움 회복	농식품부, 환경부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어촌 조성	해수부
	맞춤형 귀농어·귀촌 정착 지원	농식품부, 해수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부, 새만금청, 해수부

분류	사업명	담당부처
②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국토부
	지역과 지역주민이 주도-상생	국토부
	지속가능한 뉴딜사업 기반 확립	국토부
	효율적 교통네트워크 구축 및 이용자 중심 서비스 향상	국토부
③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지원	행안부
	마을공동체 기반 지역역량 강화 및 활력촉진	행안부
	접경지역 성장기반 조성	행안부
	성장촉진지역·농어촌지역 개발 활성화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전략3: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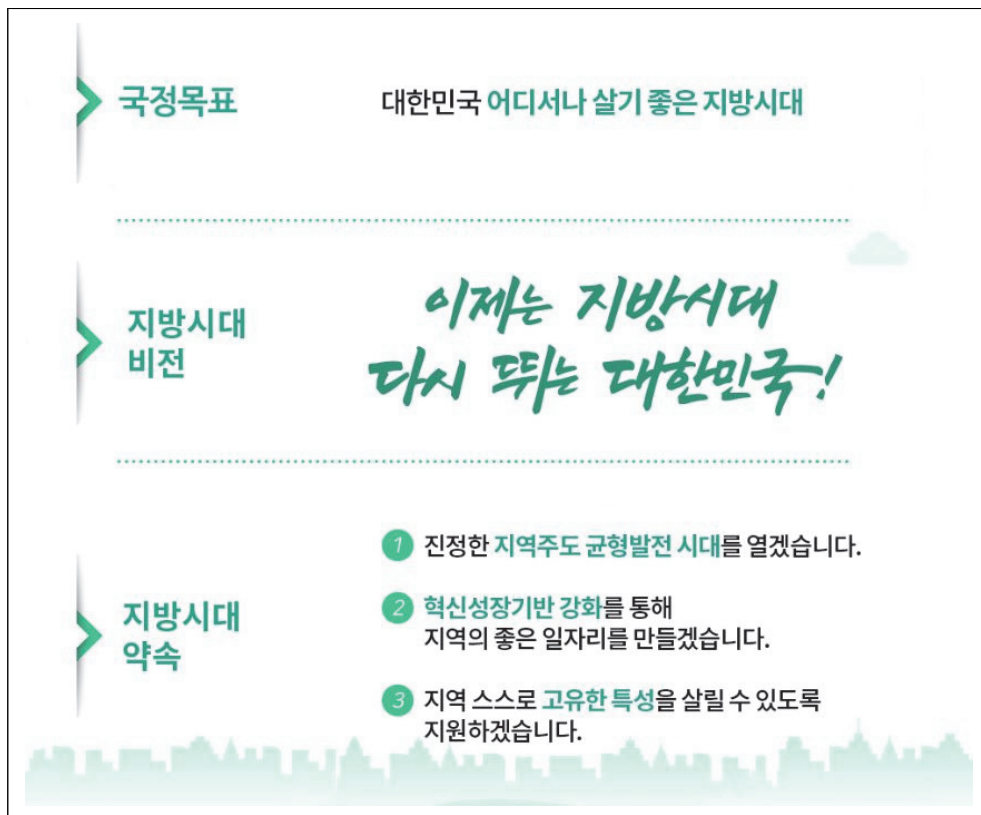
① 혁신도시 시즌2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국토부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국토부
	혁신도시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국토부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국토부
② 지역산업 혁신	(산업) 지역 주도 산업혁신 프로젝트 추진	산업부, 중기부
	(기업) 지역경제를 견인할 新주체 육성	중기부, 산업부
	(입지) 지역발전의 거점 육성	산업부, 국토부, 새만금청, 행복청
	(과학기술) 과학기술기반 자생적 지역혁신역량 확충	과기정통부
③ 지역 유희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국·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재부, 국토부
	산림자원을 활용한 활력있는 산촌 조성	산림청
	해양자원을 활용한 연안 도서지역 재창조	해수부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2019).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 2.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방향

### 가. 지방시대 기조

[그림 3-3] 국가균형발전 관련 현 정부의 국정목표/비전과 약속



자료: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국정목표/비전과 약속. <http://www.balance.go.kr/base/contents/view?contentsNo=27&menuLevel=2&menuNo=52>에서 2023.7.20. 인출.

## 나.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2022.4.27.)

〈표 3-3〉 15대 국정과제 및 76개 실천과제 개요

국 정 과 제		실천과제 (76개)	
①	지방분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재조정</li> <li>▶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li> <li>▶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개선</li> <li>▶ 지방분권 사전평가제도 개선</li> <li>▶ 특별자치시·도의 법적·행정적 위상 제고(제주·강원·세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li> <li>▶ 지방의회의 자율권 확대</li> <li>▶ 자치경찰권 강화</li> </ul>
②	지방재정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재정자주도 기반의 목표 설정</li> <li>▶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li> <li>▶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정진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자주재원 확충</li> <li>▶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li> <li>▶ 지방재정 위기 관리제도 개선</li> </ul>
③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운영</li> <li>▶ 지역대학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li> <li>▶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와 평가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지역대학까지 확대</li> <li>▶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li> <li>▶ 개방과 공유에 기반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li> </ul>
④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및 경영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능 확대</li> <li>▶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경쟁 촉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역량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li> <li>▶ 중부갑자와 작무갑자 개선으로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li> </ul>
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광역지역정부(메가시티)의 설치 및 운영</li> <li>▶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권혁신특구의 조성</li> <li>▶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지자체간 협력 활성화</li> </ul>
⑥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투표제도의 개선</li> <li>▶ 지방감사제도의 독립성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 및 역할 확대</li> </ul>
⑦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 및 규제특례지역(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가칭) 지정 및 운영</li> <li>▶ 지방투자 및 기업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li> </ul>	
⑧	공공기관 지방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추가 이전</li> <li>▶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발전 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거점 기능 강화</li> </ul>
⑨	농산어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청년뉴타운 조성</li> <li>▶ 쾌적한 친환경축산단지 조성</li> <li>▶ 농산어촌 생활인프라 구축</li> <li>▶ 이웃사촌 돌봄 주민운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자본집약형 스마트팜 혁신 클러스터 조성</li> <li>▶ 농촌소득원개발특별지구 조성</li> <li>▶ 산촌, 어촌의 특화사업 확대</li> </ul>
⑩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li> <li>▶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 및 항공물류 산업화</li> <li>▶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li> <li>▶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신한반 건설</li> </ul>
⑪	기업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대학 기반 「혁신 캠퍼스 타운」 조성</li> <li>▶ 지역기업 글로벌 혁신성장생태계 조성</li> <li>▶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강화</li> <li>▶ 지역금융 지원체계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융합캠퍼스(산학융합지구) 활성화</li> <li>▶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및 지역투자 플랫폼 구축</li> <li>▶ 개별 지역기업 밀착-원스톱 서비스 추진체계 개편</li> </ul>
⑫	신성장 산업의 권역별 육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도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li> <li>▶ 글로벌 신산업·혁신특구 지정 및 육성</li> <li>▶ 지역일자리 역량강화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재구조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산업단지 고도화</li> </ul>
⑬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대학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 인력 양성</li> <li>▶ 골목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로컬 인프라 구축</li> <li>▶ 중앙-지역 정책연계 투자협약제도 유연성 확보</li> <li>▶ 참여, 협력, 혁신을 통한 로컬 창조생태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컬 브랜딩, 골목상권 육성 및 산업화 촉진</li> <li>▶ 동네·마을 로컬 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정책연계 강화</li> </ul>
⑭	지역 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기초 사회문화 인프라 개념 정립 및 강화</li> <li>▶ 지역특화 로컬 콘텐츠 타운 조성</li> <li>▶ 지역 공동체 인프라 조성 및 지역 커뮤니티 활동 촉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지역 고유의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조성 및 협력 제고</li> </ul>
⑮	지역 공약의 충실한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으로 시너지 제고</li> <li>▶ 지역공약 이행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지표 재편해 지속적 관리</li> <li>▶ 지역공약 총괄·조정·점검하는 추진체계 마련해 실천 동력 확보</li> <li>▶ 공약사업 중심으로 지역주민 의견 수렴해 지역정책 체감도 제고</li> </ul>	

자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4.27.a).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

다. 균형발전 지역공약- 17개 시도 7대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 -(2022.4.27.) : 인천광역시

〈표 3-4〉 균형발전 지역공약- 17개 시도 7대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 -: 인천광역시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I. GTX-D Y자, GTX-E 노선 신설	1. GTX-D Y자, GTX-E 조속 건설
	2. 제2공항철도 건설
	3.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II.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지하화	4. 경인선(인천역~구로역) 지하화
	5. 경인고속도로(남청라IC~신월IC) 지하화
	6. 인천대로(문학IC~공단고가교~서인천IC) 지하도로 건설
III. 권역별 첨단산업 집중 육성	7. 노후산업단지 및 입주업체 환경개선 사업 지원
	8. 첨단의료복합단지 신규지정 및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9. 영종 항공정비단지 조성 및 공항경제권 구축
	10. 권역별 특화 첨단산업 육성 지원
IV.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	11.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 등 매립지 문제 해결
V. 제2의료원 설립·국립대학병원 유치	12. 제2의료원·국립대학병원·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지원 등
VI. 인천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	13. 인천 내항 주변 재생, 접근성 개선 등 지역 활력 제고
VII. 서북단 접경지역 시민 삶의 질 향상	14. 접경지역 교통여건 개선
	15. 어업 및 수도권 규제 완화

자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4.27.a). 균형발전 지역공약 -17개 시도 7대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



## 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2023.7.10.)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sup>6)</sup>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 통합 추진
- 국무회의('22.5.)에서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발표 이후, 업무보고시 분권위-균형위를 통합한 (가칭)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발표('22.7.)
- (계획 통합) 자치분권·균형발전 계획의 통합 및 상향식 수립
  -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통합한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평가
- (주요 시책)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시책·과제로 구성
  -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상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 시책 유지, 현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기회발전특구 등 지정·운영 근거 신설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
  - (구성)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포함, 39명 이내의 위원(당연직 18 + 위촉 21)
  - (심의·의결)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 총괄·점검 및 지원 등
  - (보고·점검)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국무회의에 결과보고, 필요 시 중앙지방협력회의 보고를 통해 지방에서도 추진상황 점검 가능
- (균특회계)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재원 및 예산절차 규정

6) 행정안전부(2023.7.7.).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7월 10일 부터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http://www.balance.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1&boardNo=9197&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41>에서 2023.7. 24. 인출.

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가. 기본계획 내 지역 관련 사업

〈표 3-5〉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내 “지역 및 균형발전 관련” 세부과제 및 세부사업

(추진전략)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세부과제	세부사업
4-1-가. 청년의 지역자립 지원(청년 지역사회활동 계좌제 도입)	-
4-1-가. 청년의 지역자립 지원(지역대학 역할 강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4-1-가. 청년의 지역자립 지원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지원
4-1-가. 청년의 지역자립 지원(로컬크리에이터 창업지원)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4-1-가. 청년의 지역자립 지원(청년 지역정착 고용사업 및 청년마을 조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4-1-가. 청년의 지역자립 지원(청년 지역정착 고용사업 및 청년마을 조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4-1-가. 청년의 지역자립 지원(청년 지역정착 고용사업 및 청년마을 조성)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4-1-나. 귀향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정착 지원(비과세특례적용)	-
4-1-나. 귀향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정착 지원(귀농귀촌활성화지원)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4-1-나. 귀향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정착 지원	-
4-2-가. 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
4-2-가. 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
4-2-가. 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
4-2-나. 인근 생활권 피해화 방지	-
4-2-다.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분석 인프라 조성	지역통계 인프라 강화
4-3-가.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
4-3-나. 선별적 지원 강화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2a).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http://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actionPlanDetail.do?articleId=18&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 에서 2023.6.21.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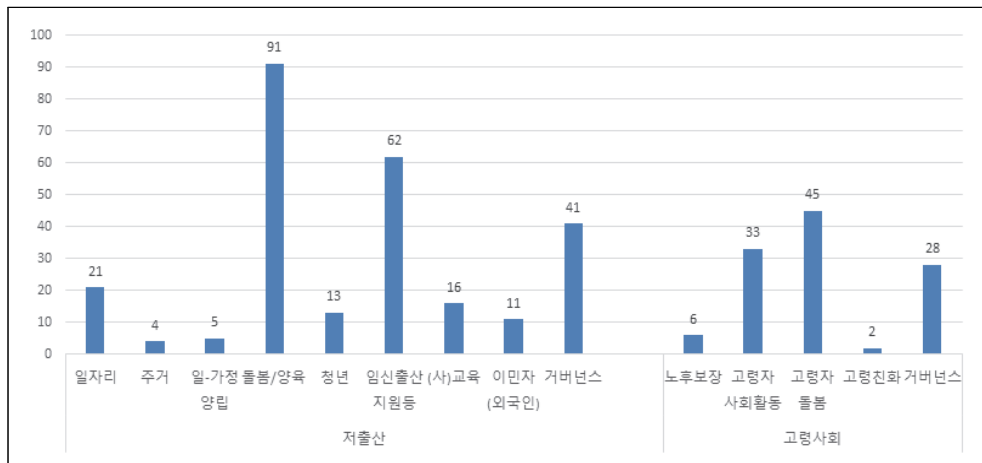
## 나. 인천광역시의 시행계획 사업 분석

### □ 과제수

- 2022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인천광역시 시행계획의 과제수는 저출산 분야가 264개, 고령사회 분야가 114개로 저출산 분야의 과제가 많으며 저출산 분야 중 자녀 돌봄 및 양육 영역의 과제가 91개로 가장 많음. 고령사회 분야에서는 고령자 돌봄(생애 마무리) 영역이 45개로 가장 많음.

[그림 3-4] 2022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인천광역시 시행계획 과제 수

(단위: 개)



주: 영역은 저자가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과제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영역에 모두 해당되어 과제수에 중복으로 포함하였음.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2b).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 저출산 분야 과제는 자녀 돌봄 및 양육이 34.5%, 임신출산 지원 및 임신·출산 건강 지원, 난임 지원 등이 23.5%, 거버넌스 및 기반 영역 과제가 15.5%, 일자리 8.0% 등으로 나타남.

〈표 3-6〉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저출산 분야 영역별 과제 수

(단위: 개, %)

영역	공동사업		자체사업		전체	
	과제 수	영역별 과제 비율	과제 수	영역별 과제 비율	과제 수	영역별 과제 비율
일자리	3	4.2	18	9.3	21	8.0
주거	2	2.8	2	1.0	4	1.5
일-가정양립	-	-	5	2.6	5	1.9
자녀 돌봄 및 양육	37	52.1	54	28.0	91	34.5
청년	2	2.8	11	5.7	13	4.9
임산·출산지원, 임산·출산건강, 난임	14	19.7	48	24.9	62	23.5
(사)교육	3	4.2	13	6.7	16	6.1
이민자(외국인)	6	8.5	5	2.6	11	4.2
거버넌스 및 기반	4	5.6	37	19.2	41	15.5
총계	71	100.0	193	100.0	264	100.0

주: 영역은 저자가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과제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영역에 모두 해당되어 과제수에 중복으로 포함하였음.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2b).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 고령사회 분야 과제는 고령자 돌봄(생애 마무리) 영역이 39.5%, 고령자 사회 활동 28.9%, 거버넌스 및 기반 2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7〉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고령사회 분야 영역별 과제 수

(단위: 개, %)

영역	공동사업		자체사업		전체	
	과제 수	영역별 과제 비율	과제 수	영역별 과제 비율	과제 수	영역별 과제 비율
노후보장	1	3.4	5	5.9	6	5.3
고령자 사회활동	5	17.2	28	32.9	33	28.9
고령자 돌봄(생애 마무리)	17	58.6	28	32.9	45	39.5
고령친화	-	-	2	2.4	2	1.8
거버넌스 및 기반	6	20.7	22	25.9	28	24.6
총계	29	100.0	85	100.0	1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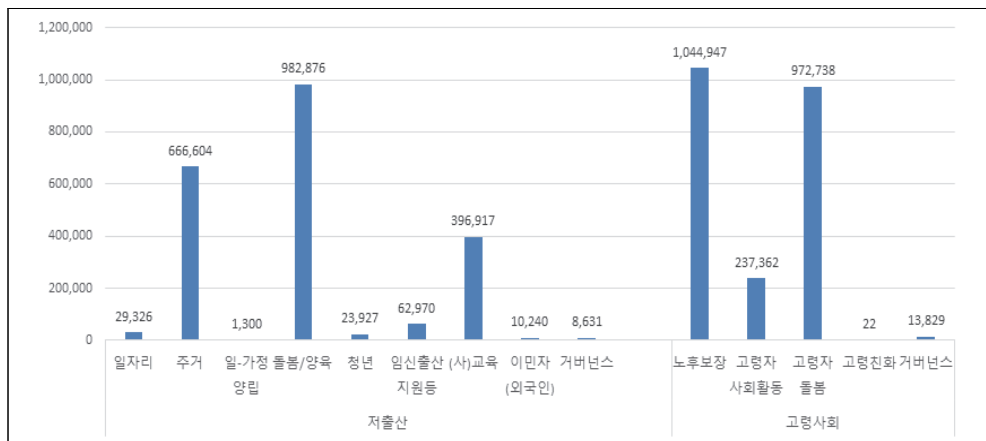
주: 영역은 저자가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과제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영역에 모두 해당되어 과제수에 중복으로 포함하였음.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2b).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 □ 예산

- 2022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인천광역시 시행계획의 저출산 분야 예산은 2조 1,830억 원 정도이며 고령사회 분야 예산은 2조 2,700억 원 정도로 고령사회 분야 예산이 약간 더 많음.
- 고령사회 분야의 노후보장 예산이 1조 450억 원 정도로 가장 많고 저출산 분야의 자녀 돌봄 및 양육 예산이 9,830억 원 고령자 돌봄 예산도 9,730억 원, 정도로 많음.

[그림 3-5] 2022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인천광역시 시행계획 예산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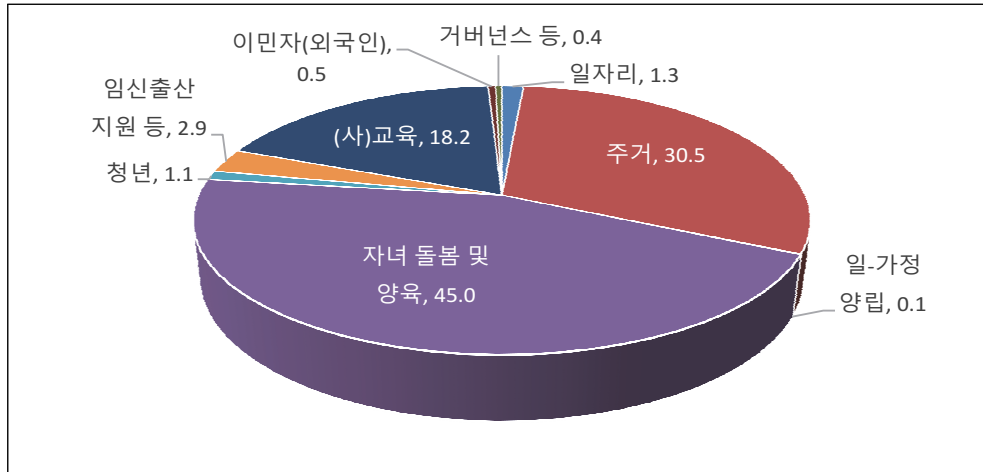
주: 영역은 저자가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과제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영역에 모두 해당되어 예산은 영역별로 절반씩 배분하였음.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2b).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 2022년 저출산 분야 예산은 자녀 돌봄 및 양육 영역이 45.0%, 주거 30.5%, (사)교육 18.2% 등으로 나타남. 자녀 돌봄 및 양육은 과제수도 가장 많고 예산도 가장 많지만 주거나 (사)교육 영역은 과제수에 비해 예산이 많으며 임신출산 지원 등은 과제수 대비 예산이 매우 적음.

[그림 3-6] 2022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인천광역시 저출산 분야 예산 비중

(단위: %)



주: 영역은 저자가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과제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영역에 모두 해당되어 예산은 영역별로 절반씩 배분하였음.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2b).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 일자리 영역은 자체사업 중 2022년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사업의 공사가 착공되어 추진됨에 따라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고 주거 영역은 공통 사업 중 행복주택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의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임신출산지원 영역은 2022년 정부 공통 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을 도입함에 따라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음.

〈표 3-8〉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저출산 분야 영역별 예산

(단위: 백만 원, %)

영역	'22년 예산			'21년 예산			증감 비율
	계	공통사업	자체사업	계	공통사업	자체사업	
일자리	29,325.5	16,980	12,345.5	19,721	15,285	4,436	48.7
주거	666,604	665,972	632	410,680	410,680	-	62.3
일-가정양립	1,300	-	1,300	1,335	-	1,335	-2.6
자녀 돌봄 및 양육	982,875.5	764,537.5	218,338	1,194,264.9	994,953.9	199,311	-17.7
청년	23,927	7,810	16,117	16,555	6,457	10,098	44.5
임산·출산지원, 임산·출산건강, 난임	62,970	47,731	15,239	44,380	15,978	28,402	41.9
(사)교육	396,917	127,662	269,255	335,501	128,521	206,980	18.3
이민자(외국인)	10,240	9,370	870	8,847	7,898	949	15.7
거버넌스 및 기반	8,631	2,417	6,214	8,287.8	2,016	6,271.8	4.1
총계	2,182,790	1,642,479.5	540,310.5	2,039,571.7	1,581,788.9	457,782.8	7.0

주: 영역은 저자가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과제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영역에 모두 해당되어 예산은 영역별로 절반씩 배분하였음.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2b),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 고령사회 분야는 모든 영역에서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하였음. 특히 고령자 사회활동 영역의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사업은 554억 증가

〈표 3-9〉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고령사회 분야 영역별 예산

(단위: 백만 원, %)

영역	'22년 예산			'21년 예산			증감 비율
	계	공통사업	자체사업	계	공통사업	자체사업	
노후보장	1,044,947	1,040,458	4,489	1,003,787	999,478	4,309	4.1
고령자 사회활동	237,362	228,189	9,173	179,839	171,515	8,324	32.0
고령자 돌봄 (생애 마무리)	972,738	746,636	226,102	927,438	734,111	193,327	4.9
고령친화	22	-	22	11	-	11	100.0
거버넌스 및 기반	13,829	8,599	5,230	11,988	6,600	5,388	15.4
총계	2,268,898	2,023,882	245,016	2,123,063	1,911,704	211,359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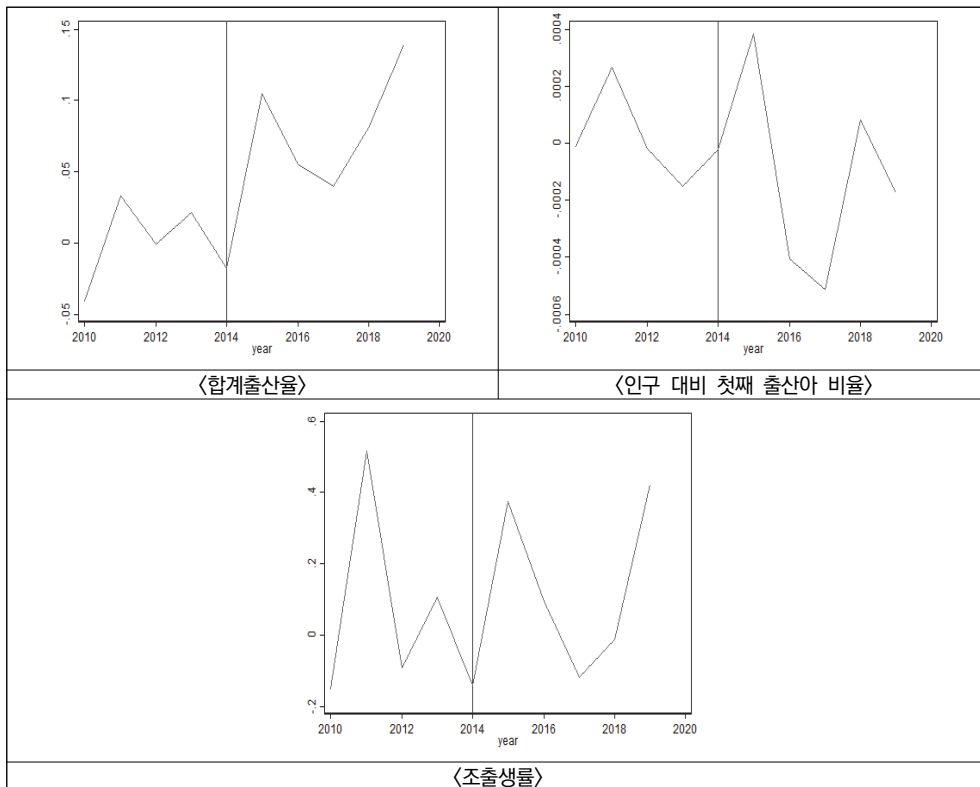
주: 영역은 저자가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과제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영역에 모두 해당되어 예산은 영역별로 절반씩 배분하였음.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2b),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 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지원금 효과 분석 사례<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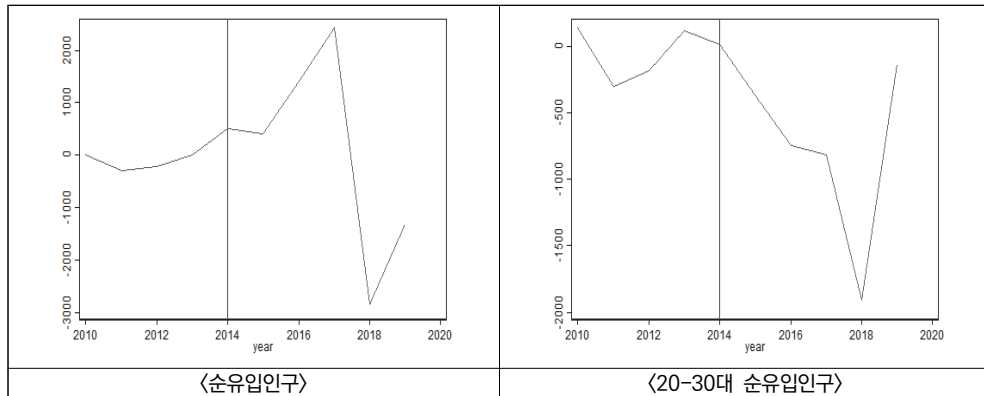
- 인천 동구는 첫째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서 500천 원이 제공(2015년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용진군, 강화군과 비교할 때 다소 작은 금액이지만, 계양구를 제외한 자치구에서 가장 크게 지급하고 있다는 특징
- 인천광역시 동구의 첫째아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15-49세: 5세 단위) 출산율, 출생아 수,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 20-39세 순유입 인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준실험적 분석을 통해 출산지원금 정책에 대한 효과를 살펴봄.

[그림 3-7] 관측변수별 처치효과 추세



7) 장인수, 우해봉, 박중서, 정찬우(2021). 제8장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발췌하여 정리함.





자료: 장인수, 우해봉, 박종서, 정찬우(2021)에서 재인용함.

- 상기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모든 관측변수가 대체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첫째아 출산지원금 지급 이전 연도에 비하여 일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이후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플라시보 검정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대체적으로 확보되지 않음.

〈표 3-10〉 각 관측변수의 처치 시점 이후 처치효과 추정 결과

구분	출산 관련 관측변수						인구 유입 관련 관측변수			
	합계출산율		인구 대비 첫째 출산아 비율		조출생률		순유입인구		20-30대 순유입인구	
연도	추정치	p-val	추정치	p-val	추정치	p-val	추정치	p-val	추정치	p-val
2015년 (처치 시점)	0.105	0.071	0.0004	0.143	0.374	0.286	407.092	1.000	-360.109	0.821
2016년	0.055	0.286	-0.0004	0.214	0.094	0.857	1404.284	0.893	-743.515	0.750
2017년	0.039	0.536	-0.0005	0.321	-0.118	0.857	2441.258	0.893	-814.180	0.964
2018년	0.081	0.321	0.0001	0.929	-0.013	1.000	-2839.073	0.786	-1910.265	0.429
2019년	0.139	0.071	-0.0002	0.786	0.422	0.536	-1319.187	0.964	-135.554	0.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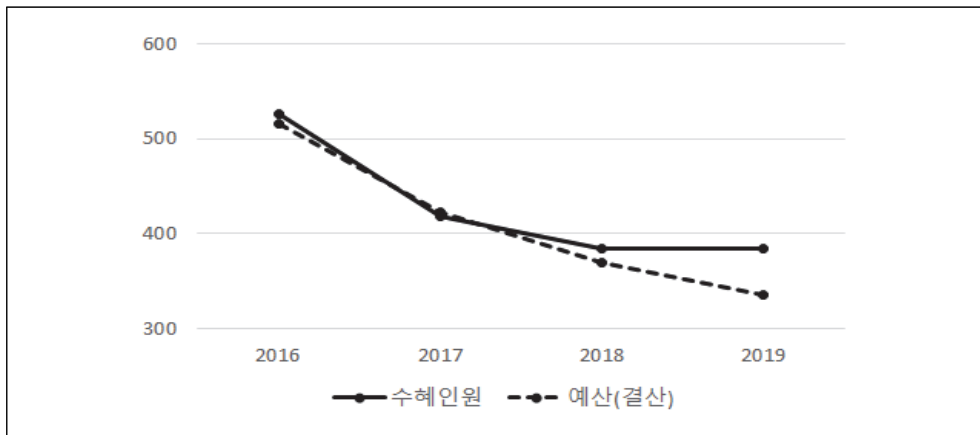
자료: 장인수, 우해봉, 박종서, 정찬우(2021)에서 재인용함.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관심지역인 인천 동구 사례를 대상으로 한 첫째아 출산지원금은 관측기간 내 인구의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의 유의한 효과를 유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관심지역(인구감소지역)과 같은 소위 상대적으로 낙후지역 출산지원금은 지역 인구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즉, 관심지역(인구감소지역)의 여러 인구 동태를 고려하면 이들 지역에서의 출산지원금 정책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단적으로 분석 대상 지역인 인천 동구의 연도별 출산지원금 수혜 인원과 예산 변화는 대체적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수혜인원 감소에 따른 예산 감소로 이해되고 있지만, 출산지원금이 과연 어느 정도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환류 및 평가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림 3-8] 인천 동구의 연도별 출산지원금 수혜 인원, 예산 변화(2016~2019년)

(단위: 명, 백만 원)



자료: 장인수, 우해봉, 박종서, 정찬우(2021)에서 재인용함.

#### 4. 인구정책TF(관계부처합동)

□ (지역소멸 대응)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 분야 및 논의방향, 2022.2.10. 관계부처 합동 내용 발췌)

- 1) 초광역권의 성장을 위한 거점도시 활성화 방안
  - 도심융합특구 활성화, 수도권 인구·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 2) 소멸위험지역 지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조성, 도시-지역 간 매칭·협력 등 지역 자립역량 강화 방안
- 3)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통한 다극체제 전환 등 중장기 대응전략

## 5.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사업 개관<sup>8)</sup>

### 가. 두 지역 알아보기

#### □ 사업 개요

- (의미) 도시 거주자가 정기적, 반복적인 지역 체류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과 교류하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갖는 것
- (방식) 도시 거주자의 다른 지역 거주 목적은 여가, 휴양, 체험 등으로 이에 대한 거주 지원, 체험 프로그램, 주민 교류 등으로 운영

#### □ 사업내용

- (환경조성) 빈집 등 유휴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거주공간 마련
- (사업홍보) 참여자 모집·지역정보 소개·커뮤니티 활성화 및 프로그램 소개 등을 위한 누리집 구축 등 홍보계획 마련
- (프로그램 마련)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알아보기 프로그램 마련
  - 지역명소 탐방 및 체험프로그램 참가 등, 지역주민 교류 프로그램 등

#### □ 사업주체

-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 □ 사업 관련 기관별 역할

- 행정안전부: 사업 시행지침 마련·배포, 공모 추진 및 사업비 지원, 전문 컨설턴트 추천, 사업 진행 상황 점검(예산 부적정 집행 사례 등 점검)
- 지자체: 사전절차 검토, 사업계획 수립·운영, 컨설턴트 운영, 사업 진행상황 점검, 홍보 등 사후 관리 방안 마련

8) 행정안전부. (2023). 2023년 상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워크숍.

□ 참여자 관리

- (신청 자격) 참여 희망하는 타 시도 지역 거주 도시민(만 18세 이상)
- (재신청 제한) 정당한 사유없는 중도포기자,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자는 퇴실조치 후 당해연도 재신청 불가
- (참여기간) 참가자는 원칙적으로 최소 1개월 이상 체류토록 계약서에 명시

□ 사후관리

- 지자체는 시설 조성 후 관리를 위해 전담관리자를 임명하거나 참가자 중 대표를 통해 공동운영하는 방식 중 취사하여 준비
- 지자체(또는 관리자)는 연 2회 이상 참가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선과제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지자체는 운영관련 정보를 지자체 누리집 '두 지역 살아보기' 페이지에 등록

□ 기타 행정사항

- (임대차 계약)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참여기관과 관계없이(한달 포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추후 불필요한 마찰 발생 예방
- (세부운영지침 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별도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운영상 필요한 제반사항은 지침에 따라 처리

나. 워크이션(workation)

□ 사업개요

- (의미)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근로자가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양을 동시에 즐기는 방식
- (방식) 기업 워크이션 참여자가 근무할 오피스 시설을 조성하고, 여유시간에 참여 가능한 지역 특화체험 프로그램 마련·제공

#### □ 사업내용

- (시설조성) 기업연계형 위케이션 운영을 위해 일정 수 이상 동시수용 가능한 스마트 위케이션 센터 조성
- (사업홍보) 참여자 모집·지역정보 소개·커뮤니티 활성화 및 프로그램 소개 등을 위한 누리집 구축 등 홍보계획 마련
- (프로그램 마련) 근무종료 후 참여할 지역특화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주민 교류 프로그램 마련

#### □ 사업주체

-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 □ 사업관련 기관별 역할

- 행정안전부: 사업 시행지침 마련·배포, 공모 추진 및 사업비 지원, 전문 컨설턴트 추천, 사업 진행상황 점검(예산 부적정 집행 사례 등 점검)
- 지자체: 사전절차 검토, 사업계획 수립·운영, 컨설턴트 운영, 사업 진행상황 점검(매월 행안부에 제출), 홍보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 □ 사업 관리

- (사전준비) 위케이션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적인 관광사업과 다르기에 관광유치와는 다른 관점과 절차를 통한 사업추진 필요
- (시설조성) 오피스 센터 조성을 위한 유희건물 확보→오피스 공간 설계 용역(필요시)→내부공사→오피스 사무용품 설치→관리·유지
- (관리·유지계획) 센터 준공 후 전담 책임자를 임명하여 운영하고 비수기를 대비한 센터활용 및 관리방안 마련도 필요
- (동반가족 배려) 기업형 위케이션 참여는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가 다수로 동반가족이 시간을 보내도록 참여프로그램 등 마련 필요
- (프로그램 마련) 지역자원 및 특성을 활용한 체험·액티비티 프로그램 마련

- (홍보계획 마련) 시설 조성 후 투자협약체결기업 및 해당 지자체에 대한 투자 관심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추진 필요
- (환류)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별도 페이지를 마련, 참여자 만족도 및 개선건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반영

□ 사후관리

- 지자체(또는 관리자)는 수시로 온라인 등을 통해 제기된 참여기업 및 참가자들의 불편을 수렴하여 개선과제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

□ 기타 행정사항

- (여행자보험 가입 검토) 웨케이션 참여기간 중 예상치 못한 상황발생 등 대비를 위해 기업 협약 시 근로자의 여행자보험 가입 등 논의
- (센터운영지침 마련)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별도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일상적인 센터 운영은 지침에 따라 처리

## 다. 로컬유학 생활 인프라 조성

□ 사업개요

- (목적) 로컬 유학생 및 가족의 지역 정착에 가장 필요한 주거시설 및 공용공간을 포함한 생활 인프라를 지원하여 생활인구 확대 추진
- (내용) 유학생가족(전체 또는 일부)이 로컬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유학기간동안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거주시설 또는 공용공간) 시설 조성 지원

□ 사업방향

- (주거시설 개선 지원) 가족체류형 지원을 위해 빈집 등을 활용한 리모델링 및 조립식 주택 신축 등 주거시설 조성시 시설비 일부 지원
- (공용공간 조성 지원) 생활 인프라 개선을 목적으로 유휴시설 재활용을 통한 공유 오피스, 주방 등 공용공간 조성시 시설비 일부지원

- (프로그램 지원) 유학생 학부모 대상 일자리 제공, 지역 주민과의 교류, 지역 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자체 프로그램 발굴 지원

□ 사업주체

-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 사업관련 기관별 역할

- 행정안전부: 사업 시행지침 마련·배포, 공모 추진 및 사업비 지원, 전문 컨설턴트 추천, 사업 진행상황 점검(예산 부적정 집행 사례 등 점검)
- 광역: 교육-광역-기초 협업체계 구축(교육청 간 업무협약서 증빙)
- 지자체: 사전절차 검토, 사업계획 수립·운영, 컨설턴트 운영, 사업 진행상황 점검(매월 행안부에 제출), 홍보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시도교육청: 유학생 모집·배정, 유학비 지원, 유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교육청 누리집 통한 홍보

□ 참여자 모집

- (사전준비) 로컬유학이 가능하도록 지역·수도권 교육청 간 업무협약 등을 통해 유학생 및 가족을 해당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어야 함
  - 참여대상: 도시에 거주하는 초·중등학생 및 동반 가족
- (운영정보 등록) 시설 조성 후 지자체는 지역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누리집 등에 시설 사진, 위치, 인근 학교 등의 정보를 등록

□ 사후관리

- (사후점검) 지자체는 시설물이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 (관리·운영) 지자체는 시설관리를 위해 참가자 중 대표를 통한 공동운영 방식, 협동조합에 의한 운영방식 중 선택하여 사전 준비

- (의견수렴 및 환류) 지자체 또는 관리자는 연 2회 이상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선과제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
- (인센티브 지급) 지자체는 참여자가 지역 내 창업, 장기전입, 지역사회 공헌 등 사유 발생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라.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 □ 사업개요

- (의미) 은퇴자 5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거주지역 조성
- (내용)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은퇴자들에게 공동체 생활을 통한 상호교류가 가능토록 거주시설, 체험프로그램 등 마련·지원

### □ 사업주체

-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 □ 사업관련 기관별 역할

- 행정안전부: 사업 시행지침 마련·배포, 공모 추진 및 사업비 지원, 전문 컨설턴트 추천, 사업 진행상황 점검(예산 부적정 집행 사례 등 점검)
- 지자체: 사전절차 검토, 사업계획 수립·운영, 컨설턴트 운영, 사업 진행상황 점검(매월 행안부에 제출), 홍보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 □ 사업관리

- (사전준비)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 주민의 우려를 차단하는 노력과 사업으로 얻어지는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방안 등 미리 검토
- (사업계획) 마을 계획인원, 운영방법, 행정·재정적 지원, 소요재원·조달 방법 등 포함 총괄계획 전문자문단 의견반영 수립
- (시설조성) 리모델링이 원칙, 예외적으로 신축, 임대추진



- (시설기준) 계획인원을 고려하여 시설별 규모 산정하되, 참여자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
- (커뮤니티 구성) 온라인 플랫폼, SNS등 활용 마을별·체험기수별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경험 등을 공유
- (프로그램 마련) 참여자 기수별 체험 교육 공동프로그램 운영
- (운영계획) 지자체 운영 전용 누리집 통한 체계적 관리

#### □ 사후관리

- (관리·운영) 지자체는 시설조성 후 관리를 위해 전담관리자 임명, 참가자 대표를 통한 공동 운영하는 방식 중 선택하여 준비
- (의견수렴 및 환류) 지자체는 참가자 퇴소시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개선과제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함
- (인센티브 지급) 지자체는 참여자가 지역 내 창업, 장기전입, 지역사회 공헌 등 사유 발생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마. 청년 복합공간 조성

#### □ 사업개요

- (의미) 청년층 지역 정착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일자리와 주거시설을 동시에 지원하여 청년 층 생활인구 확대 추진
- (방식) 청년층의 거주 공간과 창업 인큐베이팅, 구직 상담, 편의 공간 등을 동일 장소에 조성하여 사용

#### □ 사업내용

- (시설조성) 지자체 소유 시설이나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한 미활용 시설이 있는 경우 이를 리모델링하여 활용
- (프로그램) 지역주민과 교류·수익창출·참가자 재능기부·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자체 프로그램 발굴 및 타사업과의 연계

- (전용플랫폼) 사업 홍보, 참여자 모집·신청·접수 등을 원스탑으로 가능한 온라인 전용 플랫폼 구축

□ 사업주체

-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 사업관련 기관별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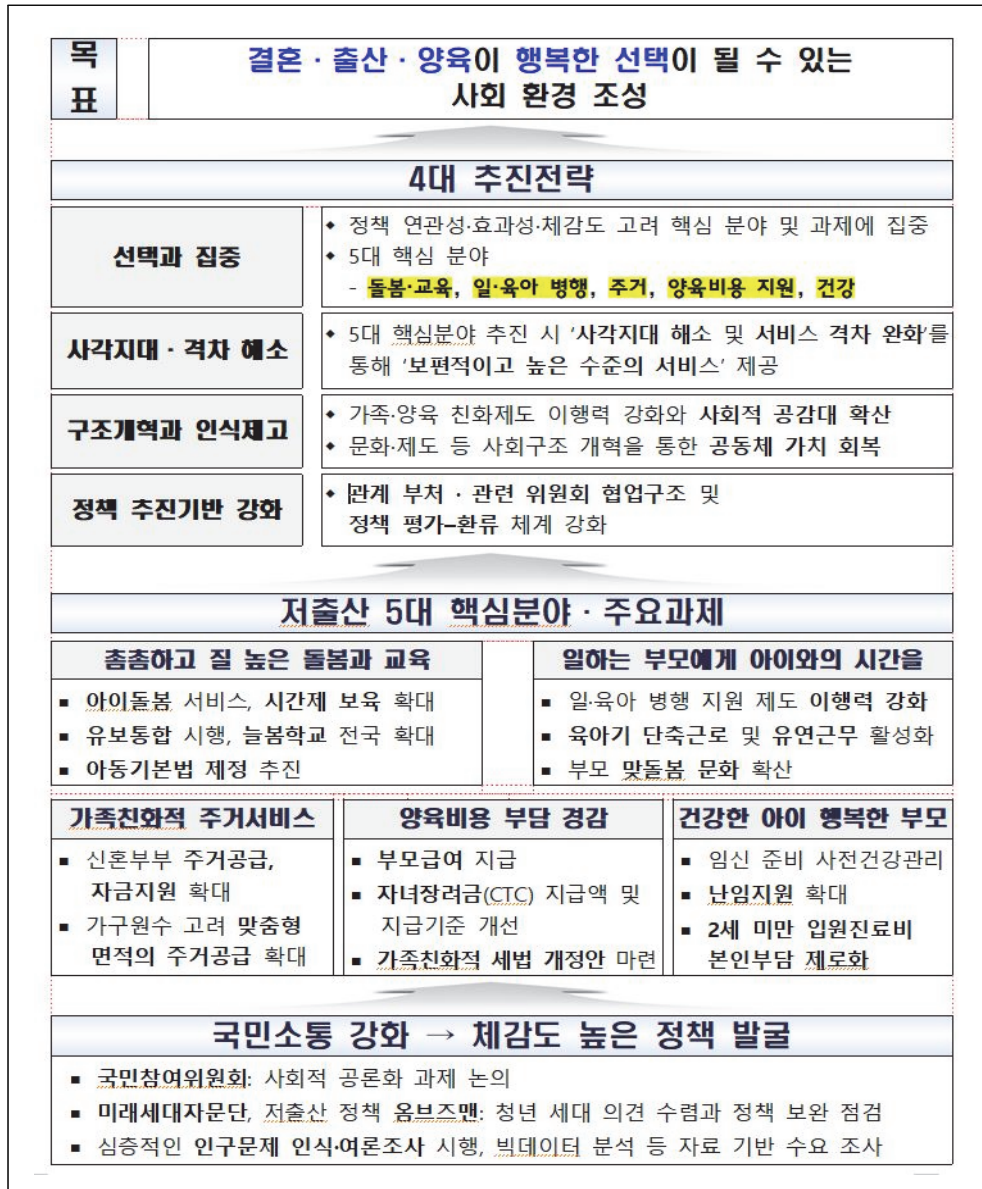
- 행정안전부: 사업 시행지침 마련·배포, 공모 추진 및 사업비 지원, 전문 컨설턴트 추천, 사업 진행상황 점검(예산 부적정 집행 사례 등 점검)
- 지자체: 사전절차 검토, 사업계획 수립·운영, 컨설턴트 운영, 사업 진행상황 점검(매월 행안부에 제출), 홍보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사후관리

- (운영정보 등록) 지자체는 사업운영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전용 플랫폼 및 지자체 누리집 등에 등록
- (관리자 선정) 시설 조성 후 관리를 위해 별도 관리자 임명 또는 참가자 중 대표 선정을 통한 방식 등을 준비
- (만족도 조사) 지자체는 연 2회 이상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선과제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
- (인센티브 지급) 지자체는 참여자가 지역 내 창업, 장기전입, 지역사회 공헌 등 사유 발생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6.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그림 3-9]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주: 각 핵심분야 및 주요 과제 내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 자료를 참조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3.3.28.).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p. 4. 그림 인용함.

〈표 3-11〉 고령사회 정책 목표 및 주요 추진 과제

목표	세대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
범주	주요 내용
1. 의료·돌봄 연계 혁신	초고령사회 진입('25) 대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삶(Ageing in Place)을 보장하는 통합적인 돌봄체계 혁신 추진
2.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맞춤형 주거지 공급(고령자복지주택 확대 및 고도화, 고령친화마을 조성 등), 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등으로 고령자 주거 수요 대응
3.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착수, 중장년 친화 일자리 사업 확대
4.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고령친화기술(Age-tech) 활용한 사각지대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 추진
5.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인구 팽창기 도입된 복지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혁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시스템 구현

주: 각 핵심분야 및 주요 과제 내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 자료를 참조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3.3.28.).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pp. 13-16.

7. 역이민 관련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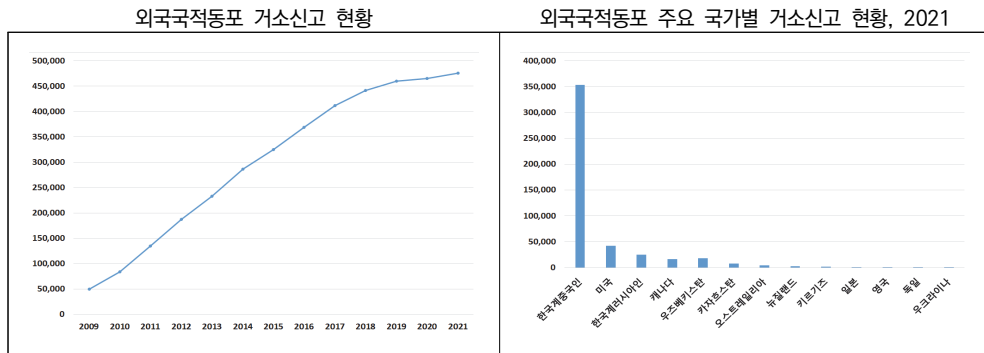
가. 개념

- 타국으로 이민한 사람이나 자녀가 영구적으로 이주할 목적으로 다시 고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의미
-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들을 역이민의 주된 이유로 제시할 수 있음.

나. 현황

-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는 외국국적동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이후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폭 증가하는 형태를 보임.
-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중국인이 35만 여 명으로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미국, 한국계러시아인, 캐나다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3-10]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2009~2021년) 및 외국국적동포 주요 국가별 거소신고 현황 (2021년)



자료: 통계청(2022).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 현황[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22&vw\\_cd=MT\\_ZTITLE&list\\_id=A8&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22&vw_cd=MT_ZTITLE&list_id=A8&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3.10.4.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다. 가능성 검토

- 현실적 문제 : 단순 노동자 고용이 아니라 우수 인재 확보가 목적인데, 우수인재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수인재의 범위를 어디로 할지와 우수인재를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불명확함.
- 재외동포의 역이민 추진 VS 우수인재 확보 : 재외동포를 선별하여 역이민을 추진하는 것이 재외동포의 역이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지가 애매한 부분이 있음.
- 고용 및 일자리 등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재외동포에 한정할 필요가 없음.
- 반면, 국내로 역이민 오는 재외동포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우수한 인재를 선별한다는 것은 정책의 추진 목적과 체계 등이 다를 수 있음. 또한 역이민하는 재외동포들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는 생산가능인구뿐 아니라 은퇴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자료와 통계 등을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어 보임.

## 라. 고려하고 있는 추진방안에 대한 긍/부정적 견해 검토

- 참고) 고려하고 있는 추진방안은 재외동포를 인천으로 선별적 역이민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 소재 바이오 기업 일자리 창출 등을 활용하는 것임.
- 상대적 박탈감 : 재외동포 중 우수한 인재 영입을 추진하는 것이 국내의 청년들로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음. 가령, 사회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선진교육을 받거나 언어적으로도 강점을 가진 청년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그리고 이는 국내 청년과 역이민 청년의 일자리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사회갈등 : 같은 일자리를 두고 청년 간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사회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 일자리 갈등의 양상이 청년-노년, 내국인-외국인 등에서 나아가 국내 청년-재외동포 청년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앞에서 기술한 상대적 박탈감 등의 이슈와 더불어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역이민자의 재이민 :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면서, 국내의 문화 및 가치관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음. 이러한 적응 문제는 역이민자의 재이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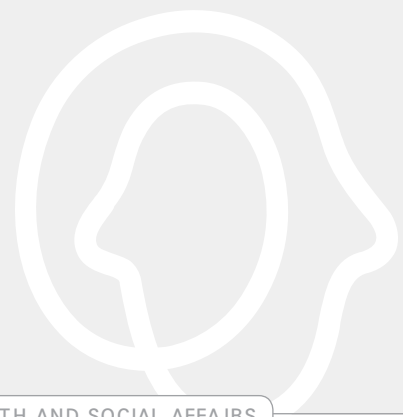
## 마. 추진 가능성 검토 등에 대한 소결

-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이민정책에 대해 준비하고, 다양한 부분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임.
- 우수인재 확보 차원이 아니더라도 국내에 체류하거나 역이민하는 재외동포 등의 증가는 확실히 보임.
- 다만 지역사회의 이민정책으로 재외동포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방안은 인재 확보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양한 사회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또한 재외동포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역이민을 추진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역이민 제도가 인구정책의 전략으로 실효성을 갖추는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므로,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4장

### 기존 인천광역시 관련 계획 및 사업 검토, 현안 도출

제1절 검토 필요성 및 내용

제2절 저출산 분야

제3절 고령사회 분야

제4절 인구구조(지역, 기타) 분야

제5절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분야



## 제4장 기존 인천광역시 관련 계획 및 사업 검토, 현안 도출

### 제1절 검토 필요성 및 내용

#### □ 필요성

- 그간 인천광역시는 저출산, 고령사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옴.
  -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저출산, 고령사회를 명시해서 인구나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에 해당됨.
  - 이뿐만 아니라 장사시설 수급, 치매관리, 지역사회보장계획, 인천광역시 발전계획과 같이 명칭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가 드러나지 않지만, 목표나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인구정책과 공통되거나 연계성이 높은 기본계획, 시행계획도 있음.
- 기존에 수립, 시행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통해 인천광역시가 세웠던 비전과 목표,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현안,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던 과제와 사업, 2023년 현재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의 성취,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사안을 파악할 수 있음. 기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추진과제를 평가함으로써 2023년 이후로도 중요한 쟁점을 살펴본 다음 미래 지향적 현안을 도출하려고 함.

#### □ 검토 대상

- 2017~2023년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수립, 추진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크게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구조(지역, 기타)로 구분함.
- 저출산 영역에서는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2018~2022년), 2023년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1권)이 있음. 2018년에 2022년까지 추진하는 5년 단위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 이와 별도로 모든 광역지자

체에서 수립하는 1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1권)도 연도별로 수립, 시행함.

- 인천광역시 자체적인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보다 1년 먼저 수립되었지만, 그 이후 과정을 모니터링하거나 업데이트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없음. 하지만,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연도별로 수립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제출, 평가받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고령사회 영역에는 인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 제1차 인천 고령사회대응 중장기 계획(2019~2023) 시행계획, 연도별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2권), 인천광역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2018~2023), 치매관리 시행계획이 있음. 인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2018년 저출산보다 1년 늦은 2019년에 별도로 수립되었고, 2019~2023년의 추진 기간 중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해서 추진함. 이와 더불어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수립하는 1년 단위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2권)도 연도별로 있음. 한편, 장사시설 수급에 관해서도 시행계획은 없지만,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음. 그 외에 연도별 치매관리 시행계획도 가지고 있음.

- 고령사회 영역에서는 5년 단위의 자체적인 중장기 계획 2개,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 공통인 연도별 시행계획 2개(총 11개), 자체적인 연도별 시행계획 1개(총 4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면서도 유사한 계획이 여럿임.

○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인구정책 추진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지역, 기타 계획으로 제5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제5기('23~'26)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인천광역시 발전계획(2018~2022)이 있음.

- 2018~2022년에 제3~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 추진되었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최근 현황인 2023~2026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2023년 시행계획을 살펴봄. 2018~2022년 인천광역시 발전계획은 지역(인천 전체, 소재 군·구) 인구에 관한 내용 중심으로 검토함.

○ 시행계획의 지속 사업 내용은 중복되기 때문에 가장 최신연도 내용을 기준으로 분석함.

〈표 4-1〉 분석대상: 2018~2023년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구분	명칭	연도
저출산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2018~2022년)	2018~2022년
	연도별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1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고령사회	인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	2023년
		2019~2023년
	제1차 인천고령사회대응 중장기 계획(2019~2023) 시행계획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도별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2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천광역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2018~2023)	2018~2023년
	연도별 치매관리 시행계획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구구조 (지역, 기타)	제5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2026년
	-제5기('23~'26)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2023년
	인천광역시 발전계획(2018~2022)	2018~2022년

제2절 저출산 분야

□ 기존 계획 평가

〈표 4-2〉 인천광역시, 중앙정부 저출산 영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비교: 비전, 목표, 분야, 과제, 사업

계획		내용		
인천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 (2018~2022년)	-비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 • 2018~2022: 합계출산율 1.14명 → 1.30명		
		-주요 목표: 임신·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전략 • 저출산 대응의 포괄범위 확장: 예비부부(청년층)부터 • 출산장려의 적용범위 확장: 첫째 자녀부터 • 출산·양육지원의 지역간 형평성 제고 • 다자녀 가정 지원책 발굴: 둘째 자녀로 전환 • 보편주의적 출산지원정책 추진		
		-5대 분야 13개 정책과제, 120개 사업		
		분야	정책과제	사업수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17개)	1) 청년고용활성화	16개
			2)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1개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46개)	1) 임신 출산 사회 책임시스템 구축	16개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11개
			3)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	19개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36개)	1) 맞춤형 보육	20개
			2) 돌봄지원체계 강화	12개
			3) 교육 개혁 추진	4개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10개)	1) 일·가정양립 실천분위기 확산	7개
			2)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일·가정 양립 실천여건강화	2개
			3)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활성화	1개
		저출산 대응기반 강화 (11개)	1) 임신·출산·양육 지원 인프라 구축	6개
			2) 친결혼·출산 사회분위기조성	5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2023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소관 부서	사업수	사업명
		영유아정책과	57개	1) 지역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지원, 2) 대체교사 지원, 3) 보수교육 지원, 4) 보조,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 5)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6)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 가정양육(부모교육) 사업 지원, 8)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9) 영유아보육료 지원, 10) 가정양육수당 지원, 11) 교재교구비 지원, 1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3)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 14) 아이돌봄 지원사업(보조), 15) 아이돌봄 지원사업(직접-신규), 16)

계획		내용		
		소관 부서	사업수	사업명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7)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8) 선천성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1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20)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21)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22)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비, 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4)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25)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지원, 26)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27) 난임 시술비 지원, 28)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29)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30) 첫만남이용권, 31) 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 32)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자체), 33)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34)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35) 어린이집 평가제 등 컨설팅 사업, 36)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 37)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38)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39) 무상보육 추진, 40)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 41)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42) 아이사랑꿈터 확충, 43) 찾아가는 아이사랑 플래너, 44) 아이돌봄 지원사업(자체), 45)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46) 장난감 무료 대여점 운영, 47)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48) 다자녀우대 아이모아카드 운영, 48) 보육정보 사업, 49) 공동주택시설개선비, 50)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 51)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52) NON-STOP 출산장려지원, 5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54) I-MOM 방문건강관리, 55)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56) 여성친화도시 조성
		인구가족과	1개	1)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아동정책과	13개	1)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2)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3) 입양 및 가정위탁 심리치료 지원사업, 4)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5)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6)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및 운영지원, 7)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8)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9) 아동수당 급여 지원, 10)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자체), 11)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12)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13) 아동학대예방사업
		청소년정책과	6개	1)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 4)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5)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교육청	7개	1) 누리과정 지원, 2) 초등돌봄교실 운영, 3)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학생 지원 강화, 4) 학교 성교육 내실화, 5)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6) 유치원 원외체험 학습비 지원, 7) 유치원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건강증진과	3개	1) 아동·청소년 정신증진 사업, 2)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구강보건사업, 3) 아동·청소년 자살 예방사업

계획		내용		
		소관 부서	사업수	사업명
		일부 지역	59개	<p>1)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기능보강(강화군), 2) 이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5개구), 3) 부평구 열린아버지학교 운영(부평구), 4)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군, 구), 5) 국공립 바다어린이집 근무수당(중구), 6) 장애아전담 보육교직원 복지수당(중구), 7) 아이돌보미 종사자 지원(미추홀구), 8) 다자녀 가정 및 임신부 대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10개 군, 구), 9) 출산·입양 장려금 지급, 10) 출생신고자 출산축하용품 지원(동구), 11)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연수구), 12) 소규모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연수구), 13) 방화후교실 운영(연수구), 14) 어린이집 보육장비비 지원(남동구),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환경개선비), 15)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다자녀가구 우대(부평구, 계양구), 16) 인구증대사업(출산지원금, 양육비, 생일축하금)(강화군), 17) 구립어린이집 환경 개선(계양구), 18) 민간어린이집 등 환경개선(계양구), 19) 출생아기 사진 및 메시지 게재 사업(계양구), 20) 취약보육 거점형 어린이집 지정 운영(서구), 21) 장애통합어린이집 언어치료사 지원(서구), 22) 공동육아나눔터 초등돌봄교실(서구), 23)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24)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25) 어린이집 살균소독비(연수구), 26) 영유아 유모차·카시트 대여(계양구), 27) 결식아동 확대 급식비 지원(강화군), 28) (재)인천동구장학재단 장학사업 지원(동구), 29) 모자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연수구), 30) 모자건강지원증진 프로그램 운영(연수구), 31) 로타바이러스 위탁 예방접종 사업(연수구), 32) 아기주민등록증발급(연수구), 33) 남동어린이날 행사(남동구), 34) 다자녀 가정 병원 진료비 감면(계양구), 35)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강화군), 36) 영유아단체보험지원(용진군), 37)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남동구), 38) 아동권리 읍부즈퍼스 운영(남동구), 39)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서구), 40)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부평구), 41) 임신·출산·육아 서비스 종합안내 책자 제작(부평구), 42) 출산가정 배려 초인종 대신 톡톡 스티커 제작(부평구), 43)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사업(부평구), 44) 다자녀(3자녀 이상) 자동차 취득세 감면(지방세정책담당관), 45) 임신준비 건강관리 지원 사업(중구보건소), 46)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동구보건소), 47) 임신부 자동차 표시증 발급(미추홀구 보건소), 48) 우아한(우리와의아가행복한) 출산문화 만들기(미추홀구), 49) 임신부 마더박스 지원(연수구), 50)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부평구), 51) 예비부부 엽산제 지원(계양구), 52) 셋째아 출산모 무료 스케일링 지원(계양구), 53) 임신·출산·육아 종합안내책자 제작(계양구), 54) 산후우울 예방관리(서구), 55) 모자건강관리교육 프로그램 운영(서구), 56) 모유수유 장려사업(강화군보건소), 57) 다자녀 가정 병원 진료비 감면(부평구), 58) 첫아이, 직장인 산모 등 유축기 대여(부평구), 59) 전동차 내 임신부 배려석 운영</p>



계획	내용		
중양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목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구분	추진과제	세부과제수
	모두가 누리는 워라벨	1) 일-양육 병행 가능한 노동 환경 실현	13개
		2) 개인의 생애와 조화를 이루는 노동 환경 확립	4개
		3)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으로 워라벨 실현	4개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1) 성평등한 일터 조성	7개
		2) 고용상 성차별·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 강화	5개
		3) 여성 집중 돌봄노동 분야 일자리 질 개선	7개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1)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10개
		2) 아동의 균등한 초·등돌봄 환경 조성	3개
		3)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2개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1) 아동가구 소득보장 및 생활지원 강화	11개
		2) 아동의 균형적 발달과 성장 보장	6개
		3) 아동·청소년의 보호안전망 강화	9개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1) 성·재생산권의 포괄적 보장	4개
		2) 생애 전반 생식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9개
		3)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	8개

주: 1) 인천광역시(2018).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위한(2018~2022년)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  
 2) 인천광역시(2023). -2023년도 인천광역시-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I).  
 3) 관계부처합동(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 양육 친화적 방향성 설정

- 인천광역시의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 방향성은 양육 친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비전과 목표: 인천에서는 비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목표로는 “임신·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제시함. 중앙정부에서는 비전과 목표에 “임신, 출산, 양육”을 대신해서 “세대”, “함께”, “행복”, “지속 가능”, “삶의 질”, “성평등”, “공정”, “사회 혁신”을 내세운 것과 차이가 있음.
- 인천시의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2018~2022년) 총 120개의 사업 중에서도 양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수가 맞춤형 보육 20개, 돌봄지원체계 강화 12개, 임신·출산·양육 지원 인프라 구축 6개로 많음.

- 2023년에 시행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보면, 양육(보육, 유아교육, 초등돌봄, 아동·청소년 교육)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2018년에 수립된 중장기 기본계획보다도 대폭 증가함.
- 소관부서를 보더라도 53개의 사업 중에서 영유아정책과 31개, 아동정책과 9개, 청소년정책과 5개, 교육청 4개, 건강증진과(아동·청소년 정신증진 사업,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구강보건사업, 아동·청소년 자살 예방사업) 3개, 강화군(국공립법인 어린이집 기능보강) 1개씩이라 거의 양육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달성하고자 하는 합계출산율을 제시

- 2018년에 수립된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에서는 2018년 1.14명에서 2022년 합계출산율 1.30명에 도달하는 것을 성과지표로 제시.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인천광역시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1.006명, 2019년 0.940명, 2020년 0.829명, 2021년 0.778명, 2022년 0.75명(잠정)까지 점차 하락함.
- 중앙정부에서는 2019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할 때부터 더이상 합계출산율 수치를 목표로 제시하지 않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를 혁신시키겠다고 방향성을 전환한 것과 차이가 있음.

○ 양육 중심의 비전, 목표와 달리 전략, 분야에서는 저출산 대응 범위와 대상 확장

- 인천광역시의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을 보면, 예비부부(청년층)로 저출산 대응의 포괄범위 확장, 첫째 자녀부터로 출산장려의 적용범위 확장, 둘째 자녀로 전환해서 다자녀 가정 지원책 발굴, 보편주의적 출산지원정책 추진을 5대 전략으로 내세움.
- 5대 분야, 13대 정책과제에도 청년, 일자리, 주거, 일·가정양립, 대응기반 강화와 같은 분야, 정책과제가 설정되어 있음.
- 청년 일자리·주거대책의 분야에 청년고용활성화(16개 사업),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1개 사업) 정책과제 제시

-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분야에 일·가정양립 실천분위기 확산(7개 사업),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일·가정양립 실천여건 강화(2개) 정책과제 제안
- 저출산 대응기반 강화 분야에서도 친결혼·출산 사회분위기 조성(5개) 정책과제가 포함됨.
- 이는 양육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대상을 청년, 예비부부로 확장하고, 자녀 수가 적어도 지원정책의 수급 자격을 확대하겠다는 보편주의적 지향점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저출산 영역에 해당하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의 5대 분야로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1개 분야 외에 “모두가 누리는 워라벨”,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의 4개 분야로 범위를 훨씬 넓게 설정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협소함. 중앙정부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의 정책과제의 사업 수는 단 1개에 불과하고, 사업 수가 5개인 친결혼·출산 사회분위기 조성도 결혼보다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방점이 찍혀 있어서 임신, 출산의 전 과정에 장벽이 되는 결혼, 주택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함.

#### ○ 관련성 낮은 세부 추진과제 및 사업 다수 포함

- 세부 추진과제를 보면, 너무 간접적으로만 관련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예: 전역장병 등 예비구직자 취업 특강,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 각종 청소년 부서 사업
  - 2023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2023년)에서도 대체교사 지원, 보수교육 지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학생 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정신증진 사업,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구강보건사업, 아동·청소년 자살 예방사업은 아동·청소년복지 차원에서는 중요할 수 있으나 저출산 영역의 인구정책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재검토 되어야 함.

- 사업 수가 많아 부합도가 높아 보이지만 막상 저출산 영역의 인구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들을 제외할 필요 있음.

○ 인천시 지역에 대한 진단, 소재 군·구의 특징과 차이를 반영한 정책과제 부족

-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했을 때, 인천 지역의 특징에 대한 진단이 별로 없어 인천에서 특히 주력해야 하는 과제가 명확하지 않음.
- 출산·양육지원의 지역간 형평성 제고라는 전략을 제외하면, 막상 인천 내 군, 구별 특징과 차이를 반영한 정책과제, 사업을 찾아보기가 어려움.

□ 쟁점

○ 기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를 통해 앞으로의 인구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파악하게 됨.

○ 주요대상: 인천에서 그동안 수립 및 시행된 기본계획, 시행계획에서의 추진과제, 사업 주요 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와 그들의 자녀임. 자녀는 연령이 어릴수록 지원하는 사업이 많고, 초등학생, 청소년으로 성장할수록 지원이 대폭 감소함. 청년층, 예비부부, 예비부모까지 대상을 확장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제시하면서도 실제 추진된 정책과제와 사업에서는 많지 않음.

○ 추진과제 범위: 임신, 출산, 양육을 강조하는데 그중에서도 양육에 관한 추진과제와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함. 추진과제의 범위도 일자리, 주거 등으로 확장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그동안은 인천시가 저출산 영역에서 이에 관해 지원한 사업이 적었음.

○ 중앙정부 추진 기조와 정합성(2023년 기준): 2022~2023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1년까지와는 조금 다른 저출산 정책 방향성을 가짐. 예를 들어, 부모급여를 제외한 현금성 급여는 지양하고, 부모급여도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며,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등 시설보육에 편중되지 않고 가정 내 부모에 의한 양육도 중요시 함.

- 기존에는 돌봄시설(운영, 비용), 돌봄 인력 인건비 지원 예산 비중이 높았음. 또한,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등으로 명칭 다양)에 대해서

는 효과성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지자체 간 경쟁적으로 확대되어 옴.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수요자(지역주민)가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지원방식 다변화 필요

○ 인천시 특징에 대한 진단: 다른 지역(전국 평균, 인접한 서울, 경기 수도권, 다른 광역지자체)과 비교해서 인천시의 저출산 현상, 지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먼저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나아가 인천시 내 군, 구 또는 생활권별 특징이나 차이에 대한 파악을 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모색되어야 함.

#### □ 현안 도출

- 인구정책(출산, 사망, 이동, 세부 지역 인구, 생활(유동)인구 등)을 중심에 두고 이와 관련된 생애과정별 대상(청년, 신혼부부, 임신-출산-양육기)으로 초점을 맞춰야 관련성이 높은 추진과제 선별 가능
- 다자녀우대: 2018년 수립된 저출산 대응 중장기 계획에서는 2명 이상을 다자녀 가정으로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유자녀 또는 아동 전체로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
- 출산, 입양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지역화폐, 현물, 바우처, 주택 및 금융상품과 연계해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상생효과 유도
- 시설 돌봄과 더불어 가정에서 부모 역할(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등) 지원
- 초등학교 이후 (방과후)돌봄에 대한 지원(예: 늘봄학교)
-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에서 민간 기업(중소), 자영업, 특수고용종사자 등으로 제도 이용 대상 확대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합계출산율(출생아수), 고령화율뿐만 아니라 군, 구별 도시화율에 따른 맞춤형 접근
  - 연수구 송도, 서구 청라와 강화군, 옹진군 간 다른 접근

- 예를 들어, 신도시에는 어린이집 부족으로 신규 공급 필요, 젊은 인구가 유출되는 구도심, 군 지역에는 분만시설 부족과 어린이집 폐원 등에 대응하면서 밀접해서 생활SOC 공급

○ 인구가동(전입이 많은 신도시-전출이 많은 구도심) 간 다른 욕구와 이슈

- 서울로 출퇴근하는 생활인구의 교통 지원, 베드타운 성격을 지닌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 다문화가정(결혼이주, 이주노동자, 외국인)에 대한 지원(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 인천광역시 관할 구군별 차등적인 지역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

○ 지속적인 공급 및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와 지속적인 인구 감소나 재개발이 필요한 구의 정책은 다른 방향으로의 차별성 있는 접근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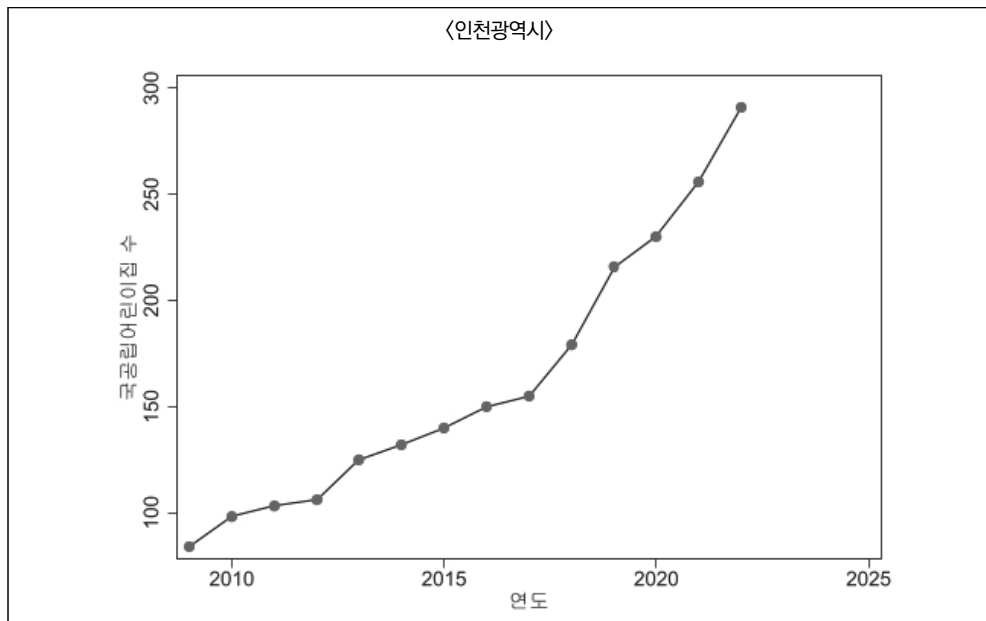
○ 가령,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어떤 지역은 확충이 필요하지만 어떤 지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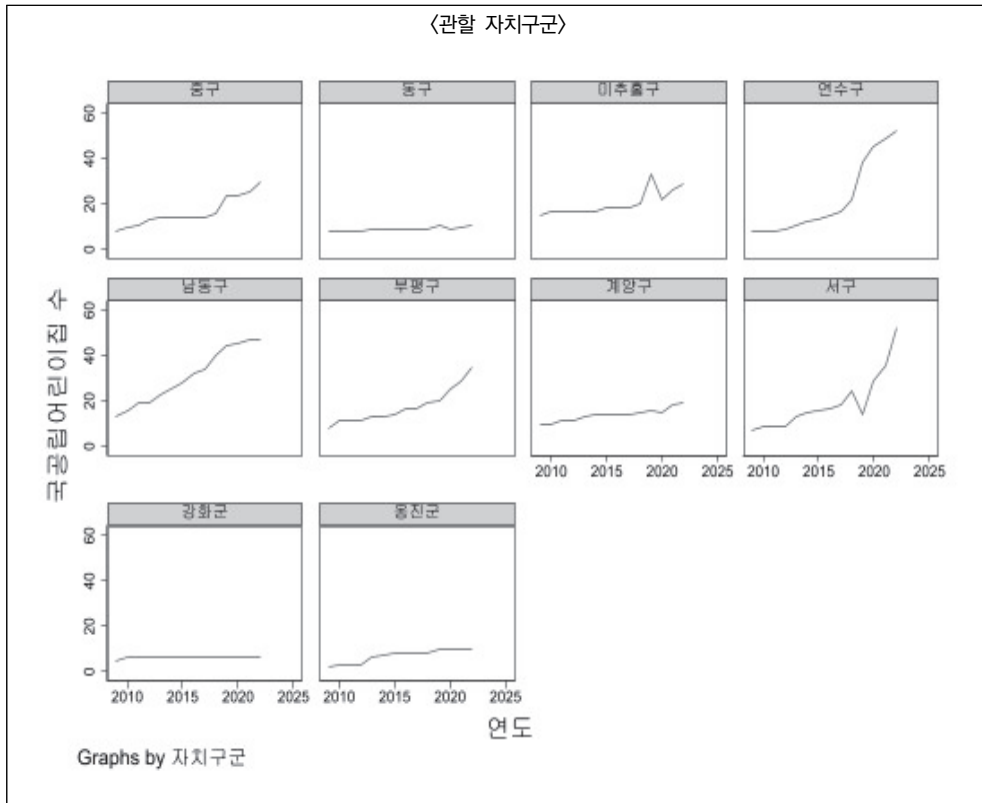
- 차별성 있는 접근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본 연구 전반에 걸쳐 기술되어 있으며, 자치구군 중점전략에서도 이를 직,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또한 다양성을 고려하겠다는 비전과 목표는 지역 간 불균형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포함하고 있음.
- 예컨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수요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
- 구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고 있지만 지역별로 국공립어린이집 변화(증가 및 감소) 양상이 다를 수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0-6세 영유아 인구(수요)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변화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 방향 도출하고자 함.
- 다만 확충이 필요한 지역 역시 재정 여건이나 자치구정/군정 방향이 어떠한지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 및 추진 가능성이 상이함을 전제할 수밖에 없음.

-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관할 자치구군별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공급 및 이용률 현황을 살펴보고 차등적인 정책 방향의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자 함.
- 최근 2009-2022년 간 인천광역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수(공급)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관할 10개 자치구군별 변화는 증가폭과 등락 여부 등에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그림 4-1]).
  - 보다 구체적으로, 관측기간 내 인천광역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2009년 84개에서 2022년 291개로 크게 증가하였음.
  - 다만, 관할지역별로는 그 변화 양상이 사뭇 다른데, 연수구(2009년 8개→2022년 52개), 남동구(13개→47개), 서구(7개→52개) 등은 관측기간 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동구(8개→11개), 강화군(5개→6개)은 관측기간 등락이 존재하거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4-1]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수(2009-2022년)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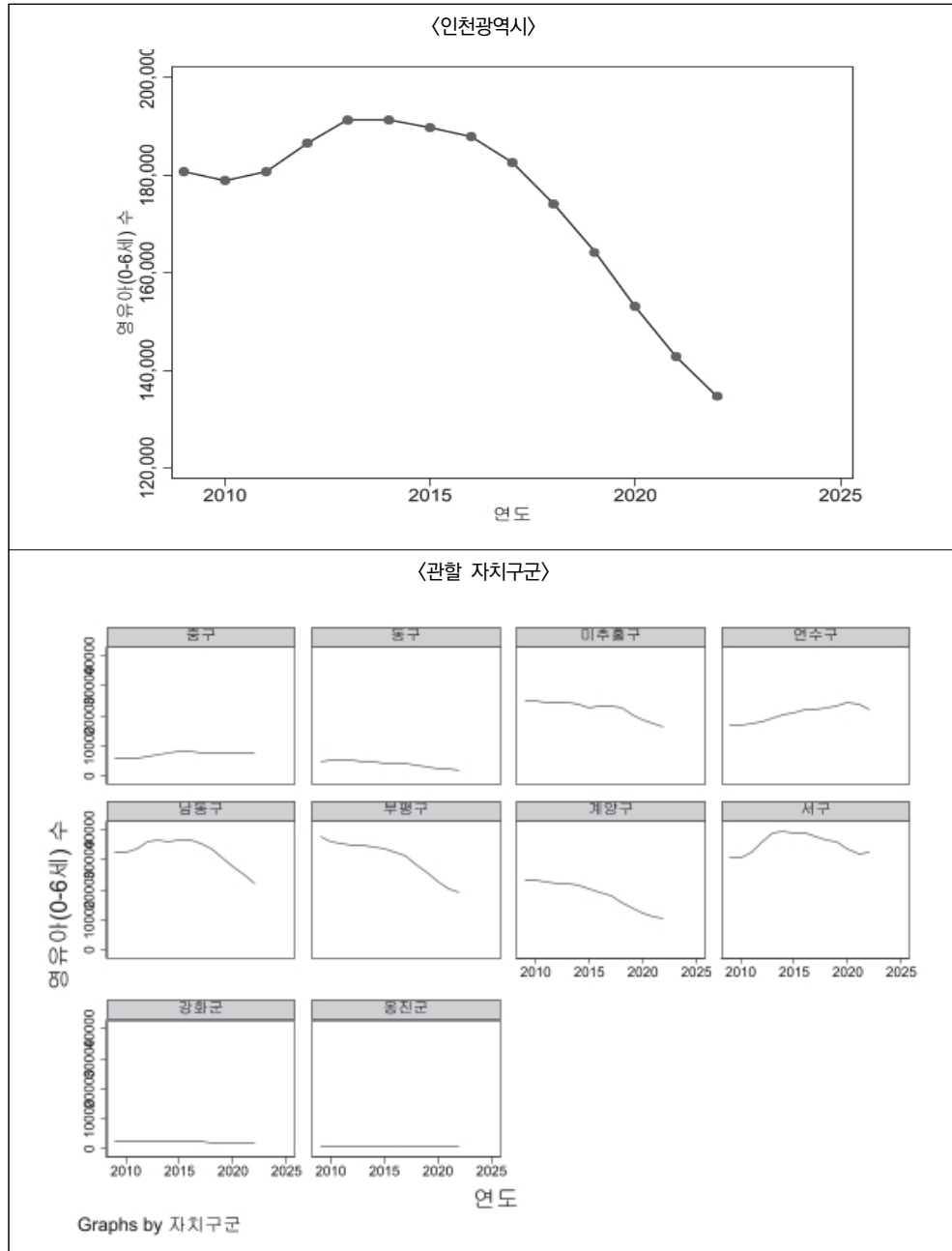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각연도(2009~2022년) 보육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한편, 2009~2022년 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가능 0-6세 영유아 수는 2009년에서 2010년 미미하게 감소하고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관할 자치구군 별 양상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변화 폭과 감소 시점 등에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부평구는 관측기간 초반 0-6세 영유아 수가 가장 많았으나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은 상대적으로 영유아 수가 작으며, 감소폭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연수구는 지속 증가하였으나 최근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부평구, 계양구는 인천광역시 전체 영유아 수 감소시기보다 더 빠른 시점에서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가능 영유아 수(2009-2022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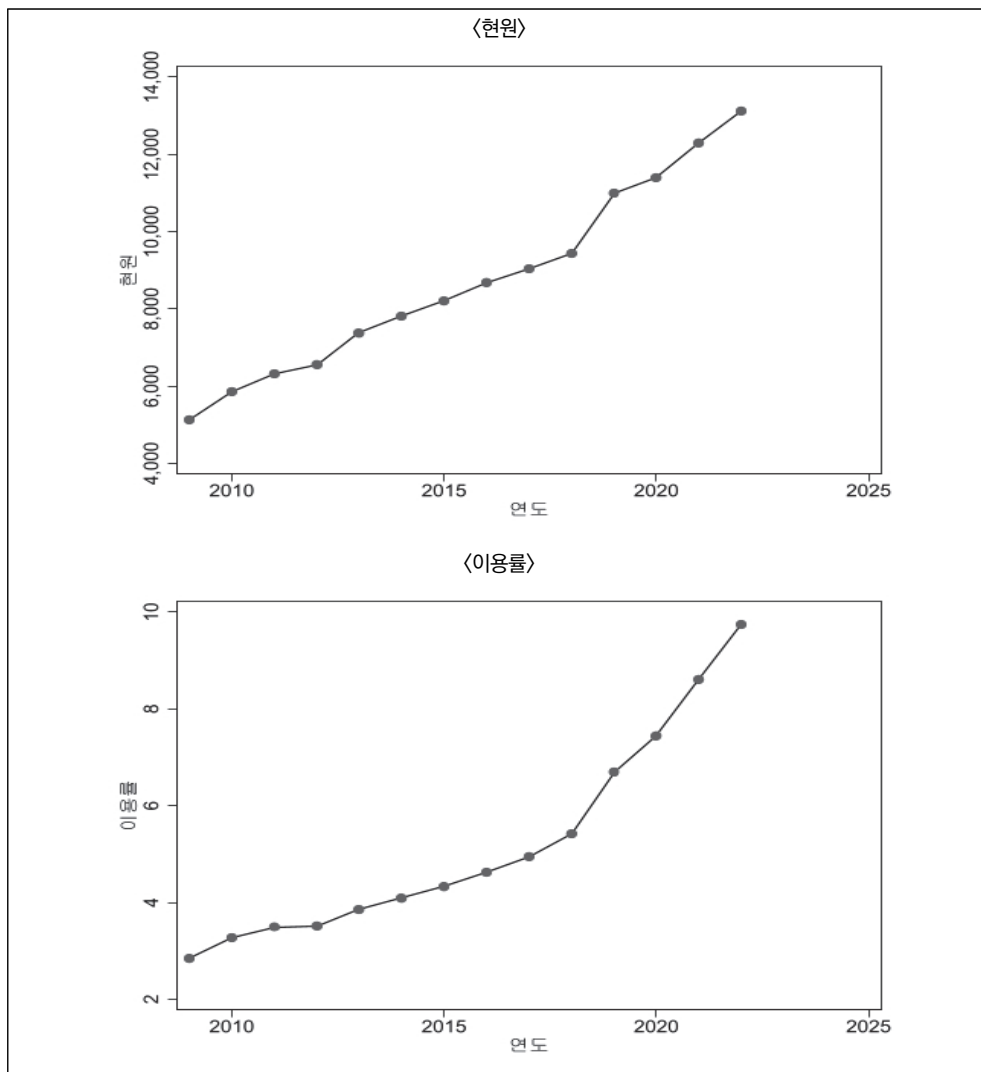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각연도(2009-2022년) 보육통계; 통계청, (2023a).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3.7.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영유아 인구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현원의 비율로 이용률을 산출한 결과, 인천광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영유아 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3]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현원, 이용률(2009~2022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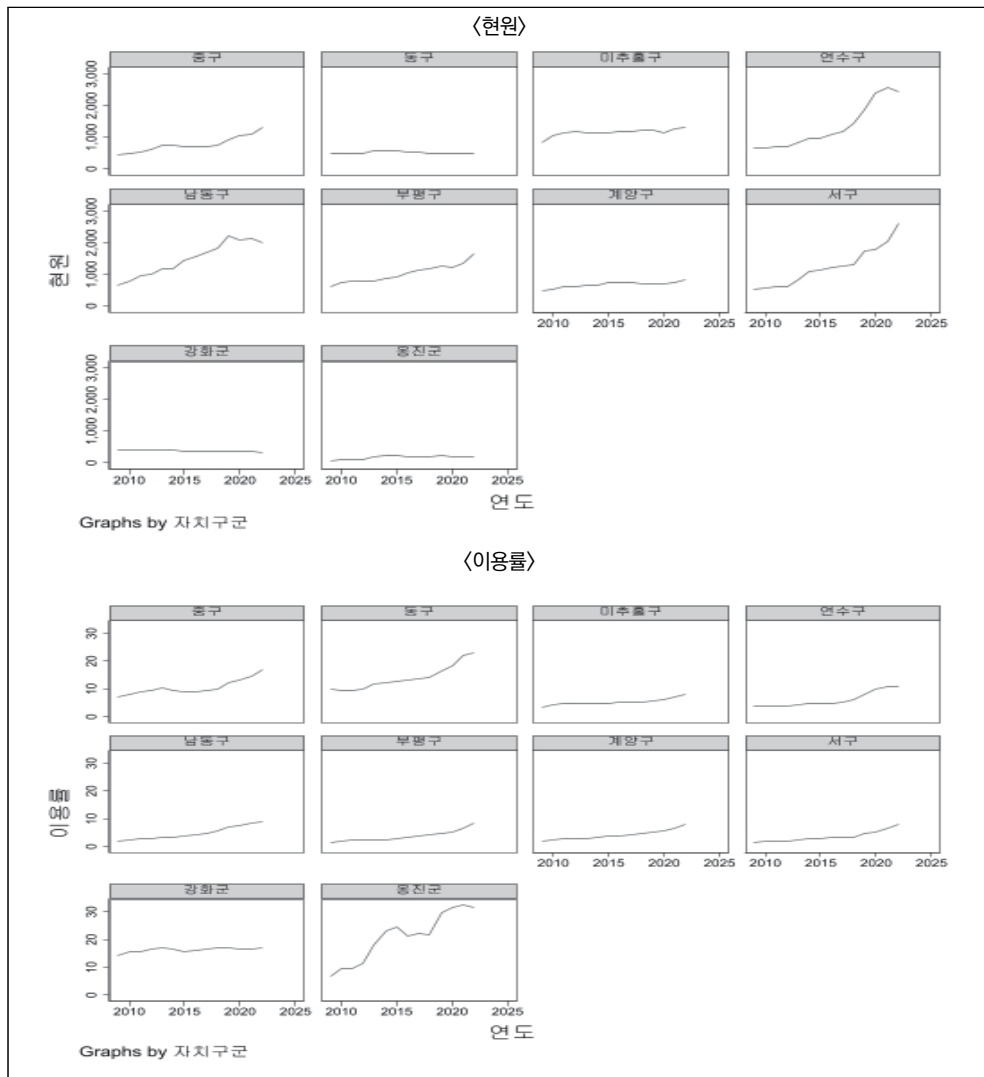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각연도(2009~2022년) 보육통계; 통계청, (2023a).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3.7.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현원과 이용률을 자치구군별로 살펴본 결과, 증가 및 감소(등락) 양상이 자치구군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미미하게 증가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등락을 반복하며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으며, 큰 변화가 없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음.

[그림 4-4] 인천광역시 자치구군별 국공립어린이집 현원, 이용률(2009-2022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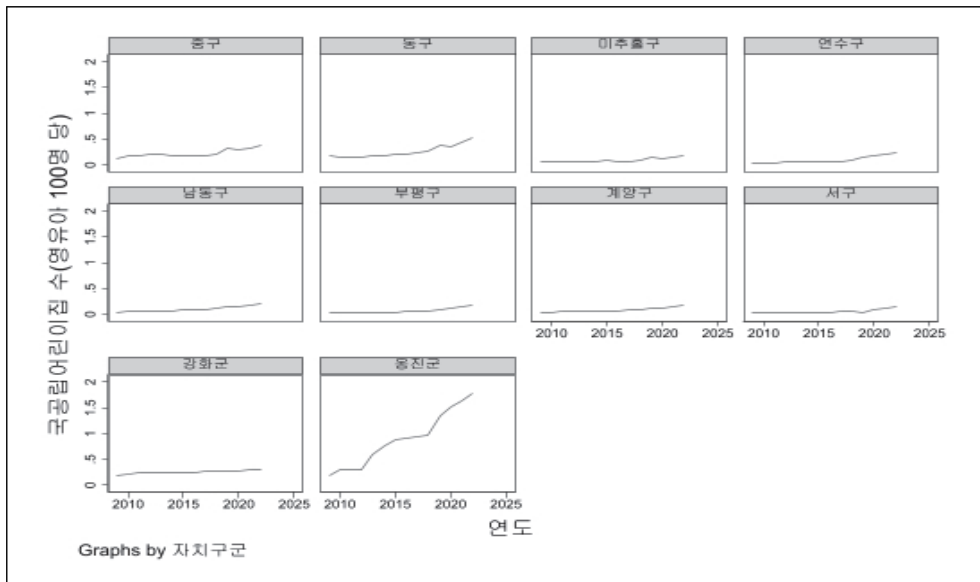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각연도(2009-2022년) 보육통계; 통계청, (2023a),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3.7.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영유아 100명 당 국공립어린이집 수를 관할 자치구군별로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미미한 증가폭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용진군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용진군의 경우 영유아 인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동시에 현원 규모 역시 등락을 반복하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이용률이나 영유아 100명 당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5] 인천광역시 자치구군별 영유아 100명 당 국공립어린이집 수(2009~2022년)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각연도(2009~2022년) 보육통계; 통계청, (2023a),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3.7.5.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정책 추진 시 정책 수요의 특성과 유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러한 특성은 다양한 정합성을 고려할 때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인천광역시가 관할 자치구군의 특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조정, 관할을 할 필요가 다분함. 이는 인천광역시 관할 구군별 차등적인 지역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과도 그 궤를 같이하는 논의임.

- 단적인 예로 영유아 보육 관련 사업의 주된 수혜자인 영유아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산 규모가 크게 책정되고 있는 측면, 또한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이후 예산 미집행 문제가 야기될 개연성이 높음.
- 유사한 사업 추진에 따른 인접 지역으로의 유출 문제(광역단위가 다르지만 지리적 인접 특성에 따른 초광역 이동과 이에 따른 예산 집행 측면에서의 비효율성)가 바로 그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또한 다자녀 출산 지원 관련 사업은 현재 저출산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실효성이 낮은 정책일 수 있음.
- 현재의 저출산 양상을 고려할 때, 다자녀가 아닌 첫째아의 출산부터 장려하는 정책에 주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즉, 출생아 수가 상대적/절대적으로 많지 않은 지역의 사정을 고려할 때, 다자녀 출산 정책은 정책 수요와 정책 추진 여건이 심도 있게 고려되지 못한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보다 정책 수요와의 유기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제3절 고령사회 분야

#### □ 기존 계획 평가

〈표 4-3〉 인천광역시, 중앙정부 고령사회 영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비교: 비전, 목표, 분야, 과제, 사업

계획		내용		
인천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2019~2023)	-비전: 더 나은 고령사회를 여는 인천		
		-목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고령사회		
		-추진기반: 1.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환경 조성, 2. 노후의 삶을 편안하게 디자인하는 지역사회 기반 조성		
		-중장기 정책과제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1.노후소득보 장 강화	1) 노후 소득설계  2)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활동 기반 조성	1) 노후 준비를 위한 재무설계 교육 활성화, 2) 시니어 직업훈련 교육의 다양화 추진  1) 노인일자리 신규 발굴 및 수행기관 확충, 2) 공익형 노인일자리 급여 수준 증진, 3) 지역사회 일자리 사업을 위한 인력풀 구축 및 연계 강화, 4) 취약계층의 안전한 소득활동 지원 보장

계획		내용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3) 스마트 Job 지원	1) 중장년과 청년세대가 함께 하는 세대 통합형 창업 지원 2) 어르신이 행복한 노인일자리 개발 체계 강화
		2.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1) 고령사회 서비스 제공 강화 2) 노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교육 강화	1) 지역 중심의 원스톱 통합 정보 플랫폼 기반 구축, 2) 고령사회 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 확산 1) 다양한 연령 및 분야별 생애설계 교육 확산, 2) 노년기 교육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
		3.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1) 고용 기회 및 현장에서의 참여 제고	1) 지역기반 노인적합일자리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2) 고령자 문화·복지 서비스 다각화	1) 인천효도림복지카드 도입
			3) 소외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1) 균형적인 권역별 노인복지 및 여가시설 운영의 다변화, 2) 액티브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활성화 추진, 3) 지역사회 개방형 경로당 모형 조성
		4. 통합 돌봄의 강화	1) 치매예방 및 관리 강화	1) 생활밀착형 치매지원 기관 확대, 2)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
			2)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 인프라 확대	1) 노인요양시설의 확대 및 기능 보강, 2) 사물인터넷을 통한 안심안부 서비스 확대, 3)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네트워크 활동 강화
			3) 건강 및 공공 의료지원 기능 강화	1) 장기요양노인을 위한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대
			4) 고령자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지원	1) 노인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활동 확산
		5. 생애마무리 지원 강화	1) 지역사회 장사문화 조성 관리	1) 장사시설 수급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2)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3) 봉안당 건립 및 안치단 설치 추진
			2) 편안한 삶의 마지막을 위한 문화환경 조성	1)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준비 교육 확산
		6. 고령친화환경 기반 조성	1) 안전과 편리성이 보장되는 교통환경 개선	1) 누구나 승하차가 쉬운 저상버스 도입 확대, 2)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추진, 3) 노인 교통안전교육 실시, 4) 고령운전자 스티커(실버마크) 부착 확산, 5)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인센티브 개발
			2) 고령사회 정책 역량 강화 및 추진 기반 정비	1)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추진체계 구축, 2) 노인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3) 노인정책모니터링단 운영 및 의견수렴 촉진

계획		내용	
저출산·고령사 회 시행계획 (2023년)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소관 부서	사업수	사업명
	노인정책과	30개	1) 기초연금 지급, 2)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3)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입소시설 운영 지원, 4)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특별생계비 지원, 5)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6) 인천시립요양원건립, 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8)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9) 자연친화적 장사시설 인프라 구축, 10)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CCTV 설치, 11) 전문시니어 양성교육, 12) 市노인인력센터 운영, 1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지원, 14)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사업운영 지원, 15) 재활용품 수집노인 및 장애인 안전한 활동지원, 16) 효드림복지카드 지원, 17)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부담금, 18)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등외자), 19) 노인요양시설 지원 및 관리(등외자), 20) 개인(노인)운영시설 지원 및 관리, 21) IoT 지능형 안심폰 보급, 22)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23)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24) 경로식당 및 재가노인 무료배달급식소 인력 지원, 25) 재가노인 식사배달, 26) 서비스(정보) 맵 제작, 27) 50+지원단 운영, 28) 웰다잉 교육, 29)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30) 장사시설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 수립
	건강증진과	9개	1) 치매안심센터 운영, 2) 건강노화를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방문건강관리서비스), 3) 치매 공공후견인 지원, 4)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5) 뇌건강학교 운영, 6)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운영, 7) 중증 치매노인 돌봄기술(휴머니티드)추진, 8)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지방전환사업), 9) 도서지역 등 건강증진 사각지대 개선
	보건의료정책과	3개	1) 의료취약계층 의료급여서비스 지원, 2) 건강생활지원센터 확대, 3) 인천 손은 약손사업
	버스정책과	1개	1) 저상버스 도입
	교통정책과	2개	1) 노인교통안전 교육, 2) 노인보호구역 확대 및 보행환경 개선
일부 지역	19개	1) 어르신을 위한 행복버스 운영(동구보건소), 2) 함께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연수구), 3)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동구), 4) 장수노인 활동비 지원(옹진군), 5)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동구), 6) 대상포진 비용지원 사업(연수구), 7) 만수노인문화센터 건립(남동구), 8)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 사업(계양구보건소), 9) 독거노인 관리 사업(강화군보건소), 10) 거점 인지건강센터 운영(강화군보건소), 11)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보청기, 개안)(옹진군보건소), 12)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지원(연수구), 13) 노인 무료급식소 조리사 인건비 지원(부평구), 14) 경로식당 급식조리인력 지원(서구), 15) 거동불편 어르신 성인용 보행 지급사업(서구), 16) 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미추홀구), 17)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강화군), 18) 독거노인 공동나눔터 지원(강화군), 19) 저소득 독거노인 등 간병비 지원(옹진군)	

계획		내용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소관 부서	사업수	사업명
	노인정책과	16개	1) 액티브 경로당 사업, 2) 민간시설 활용 여가보급 사업, 3) 노인여가복지시설 어르신 디지털 정보화 교육 확대, 4) 개방형 경로당 사업, 5) 경로당 방역(소독비) 지원, 6) 어르신 행복 공동밥상 지원, 7) 고령사회 대응센터 운영, 8) 재무설계 교육 및 생애설계 상담, 9) 전문인재 양성(제2의 경력개발 교육), 10) 경력개발 인재뱅크 운영, 11) 생애설계 교육(인생재설계 교육), 12) 재취업지원서비스 위탁교육사업, 13) 50+커뮤니티활성화지원 사업, 14) 어르신 지역사회 참여지원, 15)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운영 지원, 16)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청년정책담당관	13개	1)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2)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4) 청소년 국제교류 운영, 5)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및 추가 구축, 6) 지역대학 취업지원 사업, 7) 인천재직 청년 복지포인트, 8)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9) 청년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드림For청년통장, 10) 인천 청년 면접지원(드림나래) 사업, 11)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12) 청년의무 고용할당제 확대, 13)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교육청	6개	1) 고교 무상교육 추진, 2)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3) 유, 초, 중, 고 무상급식 지원, 4)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5) 저소득층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6) 활기찬 노후를 위한 백세누리 프로그램
	창업벤처과	5개	1)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및 교육, 2) 인천창업펀드 운영, 3) 지퍼지기 투자유치 지원사업, 4) 인천창업카페 운영, 5) 창업포럼
	교육협력담당관	2개	1)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2) (재)인천인재평생교육원 장학사업 지원,
	인구가족과	1개	1)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
	일자리경제과	1개	1)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경제정책과	2개	1)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2) 일자리박람회 등 개최
	노동정책과	1개	1) 일하는 여성 권익향상 지원
	농축산과	2개	1)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2)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
	주택정책과	1개	1) 공공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우선공급
	주거정비과	1개	1) 빈집정비사업
	여성정책과	1개	1) 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운영
일부 지역	37개	1) 청년창업 재정지원 사업(부평구), 2)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3) 찾아가는 음악교실 운영(연수구), 4) 초·중학생을 위한 영재교육(서구), 5) 구립도서관·작은도서관 관리 지원, 6) 권역별 4차산업 특성화 메이커스LAB운영(서구), 7) 찾아가는 진로 진학 학부모 설명회(서구), 8) 저소득층 외국어교육 지원사업(서구), 9)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동구), 10) 평생학습관 운영(서구), 11) 무주택	



계획		내용	
		소관 부서	사업수      사업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강화군), 12) 일자리 박람회 개최(동구), 13)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남동구), 14) 취업성공 다짐돌 청년인턴 사업(서구), 15) 공공주택 건설사업(강화군), 16) 시간제청년근로자 자려금 지원(강화군), 채용박람회(남동구), 17) 일자리창출을위한 중소기업맞춤형성장 프로젝트(남동구), 18) 전문여성 육성 및 지원(여성의광장), 19) 경력단절 여성 대상 약국사무원 양성과정 추진(남동구), 20) 일자리박람회 개최(미추홀구), 21) 일자리박람회 개최(미추홀구), 22) 찾아가는 평생학습 하산콜 강화(미추홀구), 23) 경로당(생활잡기) 기능보강(연수구), 24) 경로당 개보수(연수구), 25) 경로당 여가문화 활성화사업(연수구), 26) 50+세대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연수구), 27) 초등학교인정 문해교육(남동굴벚학교) 운영(남동구), 28) 경로당(생활잡기) 기능보강(부평구), 29) 노인복지관(노인문화센터) 셔틀버스 운영 지원(서구), 30) 경로당 활성화 및 기능보강사업(서구), 31) 경로당 안마의자 렌탈 지원사업(서구), 32) 경로당 정비사업(강화군), 33) 경로당 기능보강 및 환경 개선(강화군), 34) 경로당 개보수 지원 사업(계양구), 35) 행복한 제2막 인생도약 과정 운영(인재개발원), 36)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특강 운영(미추홀도서관), 37) 책으로 만나는 실버도우미 양성 및 활동지원(미추홀도서관)
인천광역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2018~2023)	-장사시설 운영개선방안		
	구분	운영개선방안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연장기간·횟수 조정 -단기안치시설 마련 -고인과 유족을 위한 공간 확충 -자연장지의 체계화 및 효율화 -산골장소의 고품격화 -인력의 전문성 확충	
	묘지	-묘지일제조사를 통한 무연분묘 파악 -묘지 재개발을 통한 자연장지화 -기타 묘지: 집단묘지공원 추진, 영종메모리얼파크 추진방안	
	해양장	-해양장에 대한 홍보 및 이미지 개선 -해양장을 포함한 산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장사문화 발전	-시민의식의 전환 -노인복지시설, 학교 등과의 제휴를 통한 교육사업 실시 -종교단체와 협력강화 -장사시설 환경정비를 통한 이미지 개선 -기술발전에 발맞춘 미래의 장사문화 구축	
2022년 인천광역시	-비전: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뇌건강 도시 인천 구현 -목표: 인천형 치매통합관리서비스 기반 구축		

계획		내용	
치매관리 시행계획		-영역1: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	
		추진과제	세부과제
		1.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	1) 치매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2) 新노년층 선제적 치매예방과 사회활동 지원, 3) 치매예방 올인원! ‘인생바꿈’ 프로그램 운영, 4) 산림·농림 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 발굴
		2. 치매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 투입	1) 치매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2) 초로기 치매 통합관리, 3) 초로기 치매환자 사회활동지원 ‘가치함께 사진관’ 운영
		3. 치매돌봄의 지역사회 관리 역량 강화	1) 쉼터 프로그램 운영, 2) 치매안심 돌봄터(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운영, 3)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회의 및 행사 운영, 4) 인간존중 치매환자 돌봄 기법(휴머니티드) 추진, 5) 실종예방사업
		4.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1) 치매가족 돌봄 역량 강화 교육 및 자조모임(가족카페) 운영, 2) 치매가족 자조모임 대담집 발간 및 자조모임 멘티 지원, 3)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물품 지원, 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영역2: 치매관련 정책기반 강화	
		추진과제	세부과제
		1. 치매관리 전달체계 효율화	1)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 2)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3) 치매안심센터 및 관련기관 종사자 교육, 4) 치매관리 지역자원 현황조사 및 민·관 협력 사례 발굴
		2. 치매관리 공급인프라 확대 및 전문화	1)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지원, 2)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치매안심병동 운영, 3)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건립, 4)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의사업
3.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치매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확대	1) 인천시 군·구 치매관련 특성 비교분석 연구 및 일상생활 가이드 마련, 2) 치매관리서비스 비대면 ICT 활성화 지원, 3) 비대면 치매예방 인지재활, 인식개선 콘텐츠 개발		
4. 치매환자도 함께 살기 좋은 환경 조성	1) 치매친화 영화관 ‘가치함께 시네마’ 운영, 2) 앱 ‘가치함께 eBOOK 운영’ 및 치매관련 콘텐츠 확산, 3) 치매극복 걷기행사 및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운영, 4)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 확대, 5) 치매파트너 및 파트너플러스 양성, 6) 치매극복 선도단체 및 기관 지정 운영, 7) 청소년 대상 치매관련 정책제안 대회 실시, 8) 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운영 및 공공후견사업, 9) 신중년 일자리 연계 ‘치매서포터즈’ 사업		
중앙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목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추진전략: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구분	추진과제	세부과제수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	4개
-공·사적연금의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		9개	
-고령친화 금융환경 구축		2개	

계획	내용		
	구분	추진과제	세부과제수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9개
		-방문형 건강관리·의료서비스 활성화	4개
		-치매노인 종합적 관리·지원	7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고령자 중심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체계 완비	5개
		-지역사회 복귀지원 및 입원·재입원 예방 강화	5개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6개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	8개
		-의료·요양 기능 조정 및 적정 이용 유도	4개
	고령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주택 공급 확대	5개
		-고령친화커뮤니티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3개
		-고령자의 교통복지기반 구축	5개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질 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7개
		-생애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7개
-추진전략: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구분	추진과제	세부과제수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교육 공공성 강화·격차완화	4개	
	-미래사회 대비 교육혁신	6개	
	-전문인재로서의 성장경로 구축	7개	
평생교육 및 직업 훈련 강화	-체계적 생애경력개발 지원	5개	
	-평생교육·직업훈련 다양화 및 확대	8개	
	-누구나 평생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6개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이행기 지원	-청년의 안정된 삶의 여건 조성을 위한 일자리 지원	10개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 기반 마련	3개	
	-안정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7개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 정책 강화	3개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지원	7개	
	-미래 여성핵심인력 양성 기반 구축	3개	
신중년의 품격 있고 활기찬 일·사회참여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7개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전문성 활용한 고용·창업기회 확산	9개	
	-신중년의 사회참여 활성화	8개	

주: 1) 권미애, 김재희, 김신경(2019).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2) 인천광역시(2023). -2023년도 인천광역시-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II).

3) 인천광역시(2022). -치매걱정 없는 뇌건강도시 구현을 위한-2022년도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시행계획.

4) 인천연구원(2018).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5) 관계부처합동(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표 4-4) 인천광역시, 중앙정부 계획 간 비교와 본 연구에서의 고려사항 논의

목표	현 정부	본 연구에서 고려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	배제있는 부분 (중장기 계획 기준)	유지 또는 삭제 (중장기 계획 기준)	논의사항
	세대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고령사회			
1. 의료-돌봄 연계 체계 혁신	-초고령사회 진입('25) 대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삶(Ageing in Place)을 보장하는 통합적인 돌봄체계 혁신 추진	4. 통합돌봄 강화 치매예방 및 관리강화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 인프라 확대 - 건강 및 공공의료지원 기능 강화	(돌봄) 지역 내 공급-수요 형평성 강화(강화군, 웅진군 등) 1인가구에 대한 돌봄 강화(+ 고령친화기술 포함)	유지	-종합재가센터 확충('24~'26 목표로 설정)
2.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맞춤형 주거지 공급(고령자복지주택 확대 및 고도화, 고령친화마을 조성 등), 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등으로 고령자 주거 수요 대응	6. 고령친화 사회환경 기반 조성	(주거) 고령친화 주거 관련 내용 부재 (인프라 확대 뿐 아니라 기존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도 포함) :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의 차원에서	유지(교통환경)	-베리어프리 건물 확충 -주거복지센터 운영 -노복/종복 확충 -공공보건인프라 확충(시립노인요양 시설('23 준공), 공공심야약국)
3.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착수, 중장년 친화 일자리 사업 확대	노후 소득보장 3.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증진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활동 기반 조성 스마트 JOB 지원 고용기회 및 현장에서의 참여 제고	(사회참여) 일자리 참여 제고 노인일자리 확대 (민간형, 사회서비스형) 여가문화 인프라 접근성 제고(예: 경기도 사례)		-일자리지역 수준에서 검토할 수 있는 범위 설정 검토 필요 -정책여건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 필요
					-인천형 새 일자리사업 -전문시니어 양성교육(60+)

현 정부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		본 연구에서 고려		
목표	세대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고령사회		(돌봄(고령친화기술) 1인가구+ 맞춤형 돌봄 파트에 추가	-지역 수준에서 검토할 수 있는 범위 설정 검토 필요	
4.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고령친화기술(Age-tech) 활용한 사각지대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 추진	-		(노후준비) - 노후준비 교육 강화(BB세대)	-인구문제와 직접 관련되는지 검토 필요 (중요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5.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인구 팽창기 도입된 복지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혁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시스템 구현	2.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노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교육 강화			
-	-	노후 소득보장	노후 소득설계	삭제		
-	-	2.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고령사회 서비스 제공 강화(정보 플랫폼, 고령사회 이미지 개선)	유지		
		5. 생애마무리	지역사회 장사문화 조성관리 편안한 삶의 마지막을 위한 문화환경 조성	유지	-	

자료: 1) 권미애, 김재희, 김신경(2019),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2) 인천광역시(2023). -2023년도 인천광역시-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II).

### ○ 비전, 목표

-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의 비전은 “더 나은 고령사회를 여는 인천”이고, 목표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고령사회”임. 한편, 중앙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목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임. “모든 세대”, “삶의 질”, “행복”, “더 나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고 정합성이 맞음.
- 인천시의 중장기 계획에는 중앙정부와 달리 “사회 혁신”이라는 점이 드러나지는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음.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2018~2023)에서는 비전이나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음.
- 2022년 인천광역시 치매관리시행계획에서는 비전을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뇌건강 도시 인천 구현”, 목표를 “인천형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기반 구축”으로 정함. 비전에서는 치매라는 상황을 인정하되, 뇌건강 도시를 구현함으로써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임. 목표에서도 “치매통합관리서비스 기반”이라는 체계, 환경의 구조 강화를 강조하고 있고, “인천형”으로 지역 고유의 강점을 살리겠다는 자신감도 드러냄.

### ○ 추진전략(대과제)

-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에서는 대과제로 1. 노후소득보장 강화, 2.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3.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4. 통합 돌봄의 강화, 5. 생애마무리 지원 강화, 6. 고령친화 환경기반 조성을 정함. 중앙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3년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과 비교했을 때,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분야와 대체로 유사함.
- 중앙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분야 구분: 1.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2.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3.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4.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5.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 하지만, 중앙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3년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라는 분야가 하나 더 있는데,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에는 이와 매칭되는 대과제가 없음. 목표에서 “모든 세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제는 미래 인재 육성,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청년, 여성, 신중년을 포괄하기보다는 현재 노인에 치중되어 있음.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에서 대과제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의 중과제 “노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교육 강화”가 이 분야와 부합하지만, 중과제 1개와 소과제 2개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중앙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분야 구분: 1.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2.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3.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 이행기 지원, 4.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5. 신중년의 품격 있고 활기찬 일·사회참여

#### ○ 추진과제(중과제) 및 세부사업(소과제)

-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의 중과제는 대과제별로 2~4개로 구분되어 어느 정도 균형에 맞게 배분되었다고 판단됨. 그에 비해 소과제는 중과제 내에서 다시 1~5개로 나뉘어서 과제 수에 차이가 큰 편임.
- 예를 들어, 6. 고령친화환경기반 조성의 1) 안전과 편리성이 보장되는 교통환경 개선 중과제에는 (1) 누구나 승하차가 쉬운 저상버스 도입 확대, (2)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추진, (3) 노인 교통안전교육 실시, (4) 고령운전자 스티커(실버마크) 부착 확산, (5)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인센티브 개발의 5개 소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반면, 3.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의 1) 고용 기회 및 현장에서의 참여 제고, 2) 고령자 문화·복지 서비스 다각화, 4. 통합 돌봄의 강화의 3) 건강 및 공공 의료지원 기능 강화, 4) 고령자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지원, 5. 생애마무리 지원 강화의 2) 편안한 삶의 마지막을 위한 문화환경 조성 중과제에는 소과제가 1개씩만 있음.

- 중과제, 소과제로 구분을 했지만, 막상 추진과제 수가 적었던 분야는 체계화해서 통합을 하거나 향후 수립될 중장기 계획에서 더 많은 추진과제를 발굴,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인천광역시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2023년)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에서 추진된 세부사업 중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에서 도출된 중과제, 소과제가 추진된 것도 일부 있지만, 전국 공통 사업과 기초지자체 자체 사업을 취합한 것이 대부분임.

-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인천시청 노인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30개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인천시 소재 일부 군·구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19개, 인천시청 건강증진과 9개 순이었음. 그 외에 보건의료정책과 3개, 교통정책과 2개, 버스정책과 1개씩의 사업이 있었음. 즉, 시청에서는 노인정책과가 주무부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건강·보건·의료, 교통 업무 부서도 동참하는 것이고, 군·구별 자체 사업도 다양하다고 볼 수 있음
-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에서 노인정책과 사업이 가장 많았던 것과는 다르게, 일부 지역의 사업이 37개로 가장 다수를 차지함. 이어서 노인정책과 16개, 청년정책담당과 13개, 교육청 6개, 창업벤처과 5개 순이었음. 그 외에도 교육협력담당관, 인구가족과,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과, 노동정책과,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여성정책과와 같은 여러 부서가 1~2개의 사업을 맡고 있음.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에서는 공통 사업보다는 군·구별 자체 사업이 특히 많고, 주로 노인과 아울러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폭넓은 분야에 걸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2018~2023)은 장사시설 운영 개선방안을 인천가족공원, 묘지, 해양장, 장사문화 발전으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에도 생애마무리 지원 강화의 대과제가 있었지만, 막상 중과제, 소과제가 충분



하지 않았음. 인천광역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2018~2023)에 제안된 추진과제를 앞으로 수립될 인구정책 종합계획에서도 생애마무리 지원 강화를 위해 반영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시행계획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 “치매관련 정책기반 강화”의 추진과제, 세부과제도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에는 치매관리 추진과제가 적는데, 향후 수립될 인구정책 종합계획에는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추진과제, 세부과제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기존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에서 두드러지지 않았던 전달체계 효율화,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을 참고할 수 있음.

-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 1.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4개 세부과제), 2. 치매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 투입(3개 세부과제), 3. 치매돌봄의 지역사회 관리 역량 강화(5개 세부과제), 4.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4개 세부과제)
- 치매관련 정책기반 강화: 1. 치매관리 전달체계 효율화(4개 세부과제), 2. 치매관리 공급인프라 확대 및 전문화(4개 세부과제), 3.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치매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확대(3개 세부과제), 4. 치매환자도 함께 살기 좋은 환경 조성(9개 세부과제)

#### □ 쟁점

- 인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 중앙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2023년 인천광역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간 정합성
  - 중앙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2023년 인천광역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은 서로 연동되어 정합성이 높는데 비해 자체적으로 수립, 추진하는 인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은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에 해당하는 분야와 정책과제를 포함하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큼.

- 인천시의 독자적인 고령사회 중장기 계획이고 노인을 중심으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청년, 여성, 노인, 평생교육 등까지 영역을 확장하지 않아도 됨.
- 하지만, 노인뿐만 아니라 고령화를 경험하는 모든 세대의 사회구성원으로 대상을 포괄하고 고령화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향하는 인구정책이라는 관점에서는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와 관련된 영역, 정책과제가 대폭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비록 인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2023년 인천광역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에는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영역의 세부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재구조화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추진과제를 제안할 수 있겠음.

○ 인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에서의 영역과 추진과제보다 범위 확장

- 영역을 노후소득보장 강화,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통합돌봄의 강화, 생애마무리, 고령친화사회환경 기반 조성의 6개로 구분했는데, 이는 2023년 시행계획에 비해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의 정책과제(영역)가 더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함.
- 하지만, 노후소득보장 지원 제도의 범위를 좁게 설정함. 소득에서 자산(주택)을 소득으로 전환하는 주택연금, 농지연금 관련 내용이 부재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중고령자 일자리, 기업에 대한 지원도 누락되어 있음. 2023년 이후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에서도 노후소득보장 지원 제도의 범위를 지금까지와 같이 유지할 것인지 확장할 것인지 고려해야 함.
- 또한, 문화, 여가도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 한정하는 경향을 보임. 사회참여의 범위(노인복지관,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주민센터)도 협소하게 규정하고, 문화, 여가와 혼재되어 있음.
- 노인주거복지시설도 협소하게 규정되었는데, 최근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국토교통부, LH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러한 다기능 주택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생애마무리 추진과제는 웰다잉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 외에 전 생애과정에서의 죽음준비, 2022년 제정된 고독사예방법에 근거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단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장례 및 장사, 유족에 대한 상담도 추가될 수 있음.

○ 2023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의 체계화

- 목표(모든 세대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고령사회), 정책추진방향(노후 소득 보장 및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강화, 행복을 더하는 여가문화 보급 및 사회 활동 참여 활성화, 노인맞춤형 공공 돌봄 체계 및 인권보호 강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 사회환경 조성)은 적절해 보임. 또한, 인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에는 없는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대영역도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됨.
- 하지만, 목표, 정책추진방향에서 모든 세대, 노후 준비를 강조한 것과 달리 역점시책은 거의 노인 대상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함.
- 고령사회 정책을 1)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2)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3)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 5)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의 5개 영역으로 다시 나뉘었는데 1) 영역은 세부과제 8개, 2) 영역은 세부과제 13개, 3) 영역은 세부과제 17개, 4) 영역은 세부과제 6개, 5) 영역은 세부과제 1개로 세부과제 수도 차이가 너무 큼.
- 범주와 하위 세부사업 분류가 체계적이지 않으므로 재범주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군, 구, 신도심 대 구도심, 생활인구, 인구이동(전출입, 통근)과 같은 인구 구조에 대한 관점 및 영역이 부재하여 이를 추가할 수 있겠음.
  - 인권보장, 학대피해, 보호에 대한 영역과 추진과제도 찾아보기 어려워 신규로 추진해볼 수 있음.
  -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은 영역에 비해 추진과제 수가 너무 적어서 추진과제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다른 영역과 통합해볼 수 있음.

-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과제와 세부사업도 많은데, 2023년 중앙정부 기조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축소로 전환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도 가능함.
  -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은 장사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웰다잉, 고독사 예방으로 다양화될 필요 있음. 2023년 시행계획에서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이 아닌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에서 웰다잉 교육,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를 추진하고 있음.
  - 너무 많은 세부과제(사업)가 나열되어 있어서 통합, 재구조화해서 축소할 필요가 있음. 특히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대영역에 분류가 맞지 않거나 관련성이 낮은 세부사업이 다수 들어가 있어 있는 상황임.
- 인천광역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인천광역시, 2019)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고령사회 대응 정책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음.
- 종합재가센터 확충('24~'26 목표로 설정), 베리어프리 건물 확충, 주거복지센터 운영, 노복/중복 확충, 공공보건인프라 확충(시립노인요양시설('23 준공), 공공심야약국), 인천형 새 일자리사업, 전문시니어 양성교육(60+)

#### □ 현안

- 2018년에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중장기 계획이 수립될 때보다 최근 들어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확대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분야가 앞으로의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에서도 현안으로 다뤄져야 함
- 민간,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 간병(보험)서비스
  - 노인복지법에서 협소하게 규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보다 폭넓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고령자주택 공급, 지원
  - (대중교통, 교통사고, 병원 동행 등), 지역사회 환경, 빈집 처분
  - 세대통합 및 공존(상생)
  - 청장년, 중장년 대상 노후(생활)준비 추진과제 강화

- 문화, 여가는 노인복지법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까지 연계하여 확대
- 자산관리(상속, 증여),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 디지털 소외와 격차 완화
- 장애인 또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 인권보장, 학대피해, 보호에 대한 영역 및 추진과제
-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사후 장사시설에 더해서 웰다잉, 고독사, 호스피스, 연명의료 등으로 확대
- 사회서비스(원) 고도화, 고령친화산업, 복지기술 등 활용

## 제4절 인구구조(지역, 기타) 분야

### □ 기존 계획 평가

〈표 4-5〉 인천광역시, 중앙정부 인구구조 영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비교: 비전, 목표, 분야, 과제, 사업

계획	내용		
인천광역시 발전계획 (2018~2022)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과제
	지역 청년 인재양성과 사회진출 활성화	지역 대학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	-대학 자율역량 강화 지원사업(ACE+)(인하대)
		지역맞춤형 우수 지역인재 양성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인하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인천재능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인하공업전문대학)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인천재능대학) -인천시민대학 지정 및 운영 -평생교육진흥원 지원
		지역 교육 혁신 역량 강화	-교육혁신지구 운영 사업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교육청 비법정전출금 지원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인천형 미래교실 조성

계획	내용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과제
생활밀착형 지역 맞춤형 보건복지체계 구축		지역인재 취업 및 사회진출 준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사업</li> <li>-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li> <li>-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li> <li>-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li> <li>-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li> <li>-청년 면접지원 서비스</li> <li>-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li> <li>-시·군·구 상생협력 일자리사업 추진</li> <li>-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도입</li> <li>-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Dream for 청년통장' 도입</li> <li>-청년정책 전달기구 설치</li> </ul>
		취약지역 중심의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서지역보건의료사업 지원</li> <li>-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li> <li>-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li> <li>-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li> <li>-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li> <li>-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li> </ul>
	생활밀착형 지역 맞춤형 보건복지체계 구축	지역중심 보건복지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li> <li>-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장비 확충</li> <li>-계양구 청소년수련관 기능 보강</li> <li>-공공시설 중심의 '공동돌봄나눔터' 설치</li> <li>-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li> <li>-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li> <li>-복지공동체 "인천보듬지킴이"사업</li> <li>-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li> <li>-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li> <li>-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지원</li> <li>-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지원(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지원)</li> <li>-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기능 보강</li> <li>-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li> <li>-인천 복지기준선 설정</li> <li>-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축</li> <li>-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등 대폭 확대</li> <li>-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관리시스템 구축</li> <li>-체험형 안전교육을 위한 119시민안전체험관 건립</li> <li>-범죄예방 도시디자인(셉티드) 도입으로 범죄위험 해소</li> <li>-광역시 최초 시민 안전보험제도 도입</li> </ul>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역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li> <li>-노인일자리 확대</li> <li>-장애인일자리 지원(복지일자리)</li> <li>-장애인일자리 지원(복지일자리)</li> <li>-보육서비스 다양화</li> </ul>

계획	내용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과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역 교통체계 개편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사업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자체)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보조) -장애인 콜택시 지원업무 -저상버스 구입보조(보조)
		인천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 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의 여건 개선을 통한 거주강소화	접경지역·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통합 지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기초생활기반 확충, 주민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마을공동체 기반의 지역활력 촉진	-마을기업 육성(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지원) -도시텃밭 활성화 및 도시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확대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2023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소관 부서	사업수	사업명
	인구가족과	11개	1)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2) 다문화가족 글로벌 인재 육성,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4) 한국어교육 운영 지원사업, 5)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6)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7)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8)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9) 통합적 가족서비스 기반 조성(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0)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11)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영유아정책과	1개	1) 출산인구 플러스 아카데미
	아동정책과	1개	1)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개선 사업추진
	노인정책과	1개	1) 세대통합 사업
	노동정책과	2개	1) 근로자 무료합동 결혼식, 2) 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교육청	1개	1)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일부 지역	11개	1) 한부모 가정 명절 위문(강화군), 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강화군), 3) 저출산 인구개선 인구교육(연수구), 4) 저출산 대응 구민의식 교육(인구교육) 및 인식개선캠페인(부평구), 5) 찾아가는 인구인식 개선교육(계양구), 6) 3세대 이상 효사랑 지원금 지원, 7) 효행수당 지급(중구), 8) 효행수당 지급(동구), 9) 효행수당 지원(옹진군), 10) 농어촌총각장가 보내기 사업(강화군), 11)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사업(옹진군)

계획	내용		
중앙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추진전략: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구분	추진과제	세부과제수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기반 마련	9개
		-다양한 가족의 아동양육 지원 강화	5개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4개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연령통합 및 생애연령 기준 재정립 논의	4개
		-세대 간 교류와 소통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	3개
		-연령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개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다양한 노동을 포용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7개
		-개인단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	5개
		-중소기업·비정규직 및 다양한 노동에 대한 보호 강화	3개
	지역상생 기반 구축	-세대공존 지역사회 조성	6개
		-생활권 중심의 상생형 지역계획 수립	3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선별적 지원 강화	4개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기술혁신을 통한 스마트 돌봄 체계로의 전환	6개
		-고령친화기업 지원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 마련	5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분야별 사회시스템 수급 조정	6개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3개

주: 1) 서봉만, 최태립, 조상운, 오수영, 이하리(2018). 인천광역시 발전계획(2018~2022). 인천연구원.

2) 인천광역시(2023). -2023년도 인천광역시-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II).

3) 관계부처합동(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에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특화된 영역 및 추진과제는 구성되지 않음.
- 중앙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연동되어 매년 수립 및 추진되는 2023년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2023년)에서 인천시 및 소재 군·구에서 시행하는 세부사업을 취합하여 정리해 놓았지만, 방향성, 추진과제는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인천시, 소재 군·구별 인구구조, 인구이동, 생활인프라 수급을 위한 방향성은 인천광역시 발전계획(2018~2022)에서 다루어졌음. 인천광역시 발전계획(2018~2022) 중에서 지역 청년 인재 양성과 사회진출 활성화, 생활밀착형 지역 맞춤



보건복지체계 구축, 인구감소지역의 여건 개선을 통한 거주강소화 추진전략이 인구정책과 관련됨.

- 지역 청년 인재 양성과 사회진출 활성화: 지역대학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1개 세부과제), 지역맞춤형 우수 지역인재 양성(7개 세부과제), 지역교육 혁신 역량 강화(6개 세부과제), 지역인재 취업 및 사회진출 준비 지원(11개 세부과제)
- 생활밀착형 지역 맞춤 보건복지체계 구축: 취약지역 중심의 지원 강화(6개 세부과제), 지역중심 보건복지체계 구축(20개 세부과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역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5개 세부과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역교통체계 개편(5개 세부과제)
- 인구감소지역의 여건 개선을 통한 거주강소화: 인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1개 세부과제), 접경지역·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통합 지원(1개 세부과제), 마을공동체 기반의 지역활력 촉진(3개 세부과제)

#### □ 쟁점 및 현안

○ 저출산·고령화의 수준이나 지원 제도, 서비스, 인프라 수요·공급에 있어서 구·군별 차이가 크고, 행정구역과 일치하지는 않아도 생활관계인구가 활동하는 생활권이 정책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인구 유출보다 유입을 늘리기 위한 지자체간 경쟁도 이루어지고 있음.

- 2021년 인천광역시의 합계출산율은 0.778명인데 소재 구·군·구별 합계출산율은 강화군 1.166명, 옹진군 1.050명, 연수구 0.902명, 서구 0.893명, 중구 0.822명, 남동구 0.723명, 동구 0.688명, 계양구 0.685명, 부평구 0.667명으로 차이가 큼.

〈표 4-6〉 2018~2022년 인천광역시 및 소재 군·구의 합계출산율

(단위: 명)

지역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잠정)
인천광역시	1.006	0.940	0.829	0.778	0.75
중구	1.018	0.993	0.816	0.822	0.80
동구	1.005	0.995	0.697	0.688	0.68
미추홀구	0.951	0.878	0.798	0.713	0.67
연수구	1.059	1.013	0.946	0.902	0.85
남동구	1.006	0.915	0.808	0.723	0.66
부평구	0.954	0.839	0.713	0.667	0.67
계양구	0.904	0.829	0.669	0.685	0.63
서구	1.119	1.077	0.950	0.893	0.87
강화군	1.064	1.251	1.312	1.166	1.12
옹진군	1.341	1.293	1.125	1.050	1.00

주: 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군구 합계출산율, 2018~2021.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3)에서 인출함(2023. 6. 8.).  
2) 통계청 보도자료(2023. 2. 22.).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4&list\\_no=423833&act=view&mainXml=Y](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4&list_no=423833&act=view&mainXml=Y)에서 인출함(2023. 6. 8.).

- 김세진 외(2022)의 연구에 따르면, 인천시 소재 군·구의 고령사회정책 자원 공급 유형이 고령자 인구 규모나 다른 시군구와 비교했을 때 〈표 4-7〉과 같이 크게 5개 유형으로 구분됨.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도 인천시의 고령사회정책 자원 공급에 특징이 있고, 이와 동시에 인천시 소재 군·구 내에서도 의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 의료복지시설, 노후소득보장제도 참여자 수, 여가활동 인프라, 주거복지시설 공급 수준에 차이가 큰 상황임.

〈표 4-7〉 인천광역시 소재 군·구의 고령사회정책 자원 공급 5개 유형

유형 특징	해당 군, 구
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 공급 수준 높음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재가복지시설 공급 수준 높음	중구, 동구, 서구
노후소득보장제도(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 여가활동 인프라 많음	옹진군
여가, 주거복지시설, (상급)종합병원 공급 적음	연수구
의료복지시설이나 주거복지시설 중심 공급	강화군

자료: 김세진 외(2022).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외에도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등의 생활인구가 강조됨.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하는 지방소멸대응기 금도 배분되기 시작함. 인천에서는 강화군, 옹진군 2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됨.
  - 인천시는 현행 2군·8구의 행정구역을 2군·9구의 행정구역으로의 전면 개편을 추진 중(핵심: 기존 서구 → 서구와 검단구 2개구, 기존 중구 영종도 일대 → 영종구,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 → 제물포구로 개편)
  - 군·구의 행정구역이 아니어도 동구의 원도심이나 연수구의 송도, 청라 신도시 간 인구구조, 인구이동, 생활인프라 상황이 매우 다름.
- 하지만, 인천시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이와 같은 군, 구별 차이, 생활인구, 인구이동, 원도심과 구도심의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추진전략, 추진과제, 사업에 잘 나타나지 않음.
- 저출산, 고령사회 중장기 계획과 시행계획은 인천시, 인천시 내 군, 구, 생활권, 지역의 인구 특성을 반영한 접근이 부족하고 중앙정부 틀에 기존에 시행하던 사업을 취합해서 맞춤.
- 군·구 기초지자체별로 특화 사업을 하더라도 인천시에서 인구, 생활인프라의 군·구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행정구역 개편, 군·구 간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게 하는 조정 등의 역할을 해주어야 함.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천광역시 발전계획(2018~2022)에서 추진하는 전략, 과제, 세부과제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인구와 관련되어 있음. 다시 말해, 인천광역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인구정책과의 긴밀하게 연동되어야 하는 상황임. 따라서,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에서도 발전계획의 방향성, 추진전략,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를 반영하고, 협력적인 추진체계도 강화해야 할 것임.
- 인천광역시 발전계획(2018~2022)은 크게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가 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가는 지역혁신, 지역 내 불균형 해소 전

락, 인천광역시 특화발전 및 연계협력 전략으로 구분되고 추진과제가 많음.  
인천광역시 발전계획(2018~2022)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하위 지역별 접근에 해당하는 추진과제 참고

#### □ 원도심 활성화 전략<sup>9)</sup>

- 일찍부터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나타난 중구 내륙, 동구, 미추홀구와 최근 인구 감소 경향이 심해지고 있는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일부, 연수구 일부 지역, 인구 증가세가 나타나는 역세권 지역 등에 서로 다른 대책 필요
  - 원도심 내에서도 역세권 주변은 인구가 증가하나 역세권 인근과 연결한 주변 지역은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나타나 원도심 역세권 전체의 맥락을 고려한 계획과 관리 필요
- 인천항과 주변 산업단지, 역사유적과 관련이 높은 중구 내륙과 동구는 인천항의 재생과 지역의 장소성을 기반으로 활성화 가능
  - 중구는 인천항 재생사업 및 개항장 연계
  - 동구는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혼합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정리 방안 필요
  - 중구와 동구는 고령 인구가 많아 노인 친화적 디자인 도입 우선시
-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역세권, 특히 경인선 주변의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대한 계획 및 전략 필요
  - 역세권 주변 상업지역에서는 오피스텔 건축이 증가하면서 인구가 증가하지만 연결한 주거지역에서는 공·폐가가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남
  - 원도심 내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주거형 오피스텔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
  - 역세권 상업지역에 대한 적절한 용도와 밀도 관리가 필요하고 주거지역과의 연계 관리방안 필요
- 최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부평, 계양, 남동, 연수구 일대 지역은 90년대 택지

9) 해당 부분은 안내영(2020). pp. 107~108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한 것임.

개발로 형성된 곳으로 상대적으로 고령화와 노후화가 심화한 곳은 아님. 노후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 가꾸기, 리모델링 활성화 등 전략 필요

- 주택 자체의 재건축, 재개발보다 마을 주변의 주차장, 공원, 쉼터, 커뮤니티 시설 등 공공 공간 확보와 환경 개선 도모

#### □ 도서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및 생활인프라 확대<sup>10)</sup>

○ 영종도는 인구증가 추세이나 인구증가량에 비해 의료, 돌봄시설 등 생활인프라 부족

○ 강화군은 전원도시 전략을 강화하고, 옹진군은 위치별 특성화 전략 필요

- 강화도 본섬 대부분에서 인구가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연환경’으로 나타남. 강화군은 도시와 가까우면서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전원생활이 강화군의 인구 유입 전략이 될 수 있음.
- 옹진군은 접경 지역의 섬과 북도면, 남쪽의 영흥면, 자월면, 덕적면이 매우 다른 상황에 놓여 있음. 접경 지역 서해5도가 있는 백령면, 연평면, 대청면은 통일 관련 접경지 사업과 연계하여 발전방안 구상, 북도면은 영종~신도~강화 평화 도로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 이에 대비한 도로 등 기반시설의 강화 필요, 육지와 연계된 영흥면은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난개발에 대한 관리 필요, 남측지역 자월면, 덕적면은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크게 진행된 지역으로 섬 지역에서도 주민 생활편의 확보방안 필요

○ 도서지역의 공간적 특징을 반영한 서비스 공급 전략 마련

- 섬은 각각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모든 시설과 서비스를 유지하기는 어려움.
-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도 더욱 감소하여 최소 공급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함. 이미 영종도에서는 승객이 원하는 버스정류장에서 차

10) 해당 부분은 이인재 외(2020), p. 243; 안내영(2020). pp. 116~119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한 것임.

량을 호출하여 버스 노선과 관계없이 가고 싶은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새로운 개념의 버스 서비스인 I-MOD를 시험 중임. 육지까지 이동 거리와 시간이 긴 도서는 응급을 다투는 의료서비스가 관건임. 현재 시행 중인 닥터헬기의 확대와 논의 중인 스마트 원격 의료 실현 필요

- 강화군과 옹진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30% 이상인 면이 대부분임.
- 한계 취약(고령화로 인해 공동체의 기능 유지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을 형성하고 있는 도서에 대한 대책 필요

#### □ 매력적인 신시가지 조성<sup>11)</sup>

##### ○ 밀도를 낮추고 충분한 기반시설 공급으로 매력적인 주거환경 조성

- 인천 도시개발사업은 서울 도시개발사업과 비교할 때 개발밀도가 높고 기반시설 토지면적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청라신도시, 송도신도시 등에서는 학교 수가 충분하지 않아 학급당 학생 수가 인천시 평균보다 높은 현상을 나타내고, 응급실을 갖춘 의료기관이 신시가지 지역에 부족한 현상을 보임.

## 제5절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분야

#### □ 기존 계획의 추진체계 평가

- 지난 몇 년 동안 인천시가 저출산, 고령사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다양하게 수립했다는 점은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고도 평가할 수 있음. 하지만, 여러 기본계획, 시행계획이 분절적이면서도 중복적인 아이러니한 추진체계의 모습을 보임.

11) 해당 부분은 안내영(2020). 요약 p. 6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한 것임.

〈표 4-8〉 인천시 인구정책 관련 부서 및 업무

조직		업무
여성가족국	인구가족과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인구정책 기본 조례 운영, 인구정책 자문회의 운영
	노인정책과	-노인복지·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노인장기요양 중장기계획 수립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 수립
	영유아정책과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수립 -저출산 대응 정책 개발업무 등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건강증진과	-치매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평가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정책기획관		-발전계획 수립
		-정책자문단 운영 및 지원
		-미래정책 연구 및 개발
		-인구 이동/동향 통계

자료: 인천광역시청, 시(市) 조직도, <https://www.incheon.go.kr/IC040221>에서 인출함(2023. 6. 8.).

- 분절성: 저출산 대응 중장기 계획, 고령사회 대응 중장기 계획이 각각 수립, 추진됨. 고령사회 영역에서도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치매관리 시행계획이 존재하는 데 이들을 연계할 수 있는 추진체계(거버넌스, 시행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는 명확하지 않음. 그 밖에 제5기 인천광역시 지역 사회보장계획(2023~2026) 세부사업에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 영역과 관련되고, 인천형 어르신 새일자리 공모사업, 효드림 통합복지카드, 치매예방 및 환자 가족 지원, 배리어프리 건물 확충으로 장애인어르신 이동환경개선, 전문시니어 양성교육 프로그램은 고령사회 영역과 연계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기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간의 추진체계 연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중복성: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추진, 모니터링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과 별도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연동된 시행계획도 있어서 행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음.

○ 추진체계의 분절성과 중복성은 마땅히 추진해야 할 영역, 과제, 사업이 누락되더라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함. 예를 들어, 중앙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면, 저출산에 해당하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 고령사회에 해당하는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의 영역 외에도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이라는 두 개의 영역이 더 있음.

-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1)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2)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3)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이행기 지원, 4)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5)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1)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2)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3)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4) 지역상생 기반 구축, 5)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 하지만, 인천시에서 그동안 수립, 추진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중장기 계획에는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지역상생 기반 구축,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에 해당하는 정책과제, 사업이 거의 추진되지 않았거나 시행되더라도 인구정책의 틀 내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음.

#### □ 쟁점 및 현안

-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정책 관련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별도의 부서, 시점에서 각각 수립, 추진할 것인지 통합할 것인지 지자체장의 결정이 요구됨.
- 산발적으로 분산된 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여 기본계획, 시행계획 간 연계, 통합의 근거 마련
- 인천시청 내 총괄 및 주무부서: 인구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 모니터링, 평가, 환류하려면 인천광역시청 내 어느 조직에서 어떻게 총괄 및 주무부서 역할 분담을 할지 논의, 결정될 필요가 있음.
  - 주무부서: 저출산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은 주로 여성가족국에 소속된 영유아정책과에서 담당함. 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



획 수립은 노인정책과에서 담당함. 여성가족국 내에는 영유아정책과, 노인 정책과 외에 인구가족과가 있음. 인구가족과에서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총괄: 여성가족국 외에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청년정책담당관, 미래준비특별위원회를 관리하는 정책기획관이 있음. 여성가족국, 청년정책담당관, 정책기획관 간의 업무 연계, 협력, 조율을 할 수 있는 총괄부서와 책임자가 명확해져야 함.

○ 중앙정부-기초지자체와의 관계: 광역지자체인 인천광역시청 내 부서들 외에도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군·구, 읍·면·동·리의 기초지자체와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 보고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되어야 함.

○ 민·관 거버넌스: 민간기관과의 사업 추진, 전문가의 자문, 언론 홍보,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 방안도 반영될 필요가 있음.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비해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기반, 군, 구역량강화, 거버넌스, 인프라 확충, 관리체계(입법, 운영 점검 및 평가)의 전략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따라서 긴밀하게 구성,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체계를 인구정책에도 활용할 것인지,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추진체계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추진체계는 현재와 같이 별도로 두고 공통된 사업만 연계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함.

- 부서, 계획별 체계적,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거버넌스 운영을 하기 위해 제5차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 시행계획 참고
- 단,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인프라 수요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군, 구별 인구 측면에서 평가, 추진과제를 제시하지는 않아서 주의를 요함.





## 제5장

### 전문가 심층 설문조사

제1절 전문가 심층 설문조사 개요

제2절 전문가 심층 설문조사 결과



## 제5장 전문가 심층 설문조사

### 제1절 전문가 심층 설문조사 개요

#### 1. 조사 목적

- 본 전문가 심층 설문조사는 인천광역시의 인구 변화 특성을 분석하고 기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관련 사업 및 정책을 평가하여 인구정책 관련 주요 분야별 의제를 발굴하고 핵심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 인천광역시의 저출산 및 인구 변동, 고령사회, 그간 인천광역시 추진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관련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세부 정책 분야별 인천광역시 내/외 전문가를 함께 조사하여, 향후 정책 방향 도출을 위한 내/외적 시각을 최대한 균형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2. 조사 설계

□ 본 조사의 설계는 아래와 같음.

〈표 5-1〉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저출산 및 인구 분야, 고령사회 분야 세부 분야별 전문가	
	저출산 및 인구	고령사회
	일자리	소득보장
	주거	사회참여
	임신출산 지원, 임신출산건강, 난임	고령자 돌봄
	자녀돌봄 및 양육	고령친화
	일-가정 양립	고령사회환경
	이민자(외국인)	
	(사)교육	
	청년	

구분	내용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대상자	총 46인(저출산 및 인구 분야 24인, 고령사회 분야 22인) 인천광역시 내 전문가 각 분야별 8/4인
조사 기관	에스티아이
조사 기간	2023년 6월 27일 ~ 7월 26일

### 3. 조사 내용

□ 본 조사는 크게 저출산 및 인구 분야와 고령사회 분야로 구분되어 수행되었으며, 각 분야별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저출산 및 인구 분야는 공통 조사 항목으로 인천광역시 추진 정책 분야별 중요도, 영역별 우선순위, 효과성/효율성/시급성 평가를 수행함. 또한, 인천광역시의 주요 현안 관련하여 출산지원금의 중앙정부 부담 필요, 각 주체별 적정 부담 비율, 외국인(다문화) 정책 확대 필요성, 적절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인천광역시 내 인구편중현상에 대한 정책 개입 필요성, 청년의 순유입 증가를 위한 우선 추진 필요 정책, 중앙정부의 생활인구 활용 정책 중 인천광역시에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세부 정책 현안 과제 중요도, 기타 추가 의견 조사를 수행함.
- 고령사회 분야는 인천광역시 추진 정책 분야별 중요도, 영역별 우선순위, 시급성, 과제 간 정합성, 과제 간 포괄성, 확대 필요 정책 영역 평가, 향후 정책과제 우선순위, 지역특성 고려 사업분야 우선순위, 세부 정책 현안 과제 중요도, 기타 추가 의견 조사를 수행함.
- 또한, 각 분야별 향후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참고 사항을 수령하기 위하여 각각의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응답 이유를 추가적으로 수령함.

〈표 5-2〉 조사 내용

분야 구분	세부 항목
저출산 및 인구	<p>〈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광역시 추진 정책 분야별 중요도</li> <li>• 영역별 우선순위</li> <li>• 효과성/효율성/시급성</li> </ul> <p>〈인천광역시의 주요 현안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지원금의 중앙정부 부담 관련</li> <li>• 각 주체별 적정 부담 비율</li> <li>• 외국인(다문화) 정책 확대 필요성</li> <li>• 적절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li> <li>• 인천광역시 내 인구편중현상에 대한 정책 개입 필요성</li> <li>• 청년의 순유입 증가를 위한 우선 추진 필요 정책</li> <li>• 중앙정부의 생활인구 활용 정책 중 인천광역시에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li> <li>• 세부 정책 현안 과제 중요도</li> <li>• 기타 추가 의견 조사</li> </ul>
고령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광역시 추진 정책 분야별 중요도</li> <li>• 영역별 우선순위</li> <li>• 시급성, 과제 간 정합성, 과제 간 포괄성</li> <li>• 확대 필요 정책 영역</li> <li>• 향후 정책과제 우선순위</li> <li>• 지역 특성 고려 사업 분야 우선순위</li> <li>• 세부 정책 현안 과제 중요도</li> <li>• 기타 추가 의견 조사</li> </ul>

## 제2절 전문가 심층 설문조사 결과

### 1. 저출산, 인구 변화 대응

#### 가. 정책 분야 기초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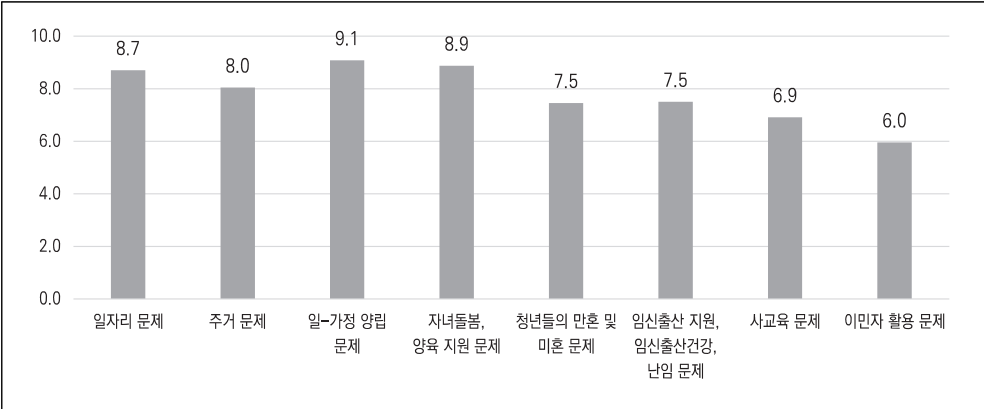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의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 중 각 분야별 중요도를 10점 리커트 척도로 표기한 결과,

- ‘일-가정 양립 문제’의 중요도가 9.1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자녀 돌봄, 양육 지원 문제’ 8.9점, ‘일자리 문제’ 8.7점, ‘주거문제’ 8.0점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음.

- ‘청년들의 만혼 및 미혼 문제’와 ‘임신출산 지원, 임신출산건강, 난임 문제’는 각각 7.5점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다고 응답한 정책 영역은 ‘이민자(외국인) 활용 문제’ 6.0점, ‘사교육 문제’ 6.9점이었음.

[그림 5-1] 인천 지역 저출산 및 인구 측면 정책 영역별 중요도

(N=24, 단위: 점)



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10점)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표 5-3> 인천 지역 저출산 및 인구 측면 정책 영역별 중요도

(단위: 명, 점)

정책 영역	사례수	평점
일자리 문제	(24)	8.7
주거 문제	(24)	8.0
일-가정 양립 문제	(24)	9.1
자녀돌봄, 양육지원문제	(24)	8.9
청년들의 만혼 및 미혼 문제	(24)	7.5
임신출산 지원, 임신출산건강, 난임 문제	(24)	7.5
사교육 문제	(24)	6.9
이민자 활용 문제	(24)	6.0

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10점)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 중요도가 낮은 정책 영역의 경우, 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이민자(외국인) 활용 관련하여 중요도를 낮게 판단한 근거는 저출산 및 인구 측면에서 관련도가 낮다는 의견이 많음.
  - 저출산 원인 차원에서 볼 때 현재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과 출산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더 강력한 원인으로 판단되는 바, 청년의 만혼과 미혼에 영향을 주는 주거와 일자리 개선·확대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사교육이나 이민자 활용 문제는 결혼을 결정하는 주체가 고려하는 요인은 아니므로 중요도를 낮게 판단함.
  - 이민자 활용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영세기업 인력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다른 정책들과 결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음.
    - 임금 등의 문제로 외국인 활용이 확대되는 것과 내국인의 저출산 문제의 연관성은 낮다고 생각함. 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 활용 문제는 일부 한계 사업장 또는 저부가가치 산업 사업장의 영위 문제에 더 밀접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인천의 인구를 볼 때 아직 이민자 활용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함.
  - 인천은 아직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므로 이민자 활용 문제의 중요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으며 우선적으로 내국인 활용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인천의 현재 및 미래산업구조가 타 지역 대비 이민자를 활용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
    - 이민자 문제는 우리나라 정서상 시기적으로 중요도가 높지는 않음. 정책적 접근에서도 저급노동자보다는 고급인력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 등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 이민자 활용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민자 관련 부정적 효과 등 이민자 활용 관련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 이민자 활용 문제를 인천시 저출산 및 인구 정책으로 내세우기에는 고용 정책 및 중앙정부와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현재 논쟁이 분분한 상황에서 인천시 저출산 이슈로 가져오기는 조심스럽다고 판단됨.
  - 외국인 인력을 통한 저출산 및 인구 문제 해결 방식은 장기적으로 사회갈등 야기 등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임.
  - 많은 연구에 의하면 이민자가 한국의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출신국의 출산율이 높다고 하여 이민자가 한국으로 이주 후 출신국과 같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 이렇게 볼 때 이민자의 유입은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에는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이민자를 활용한 지원확대는 또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 예를 들면 경력단절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가사도우미라던가 보육돌보미 활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일자리의 질이 오히려 하락함.
- 사교육 문제 관련하여 중요도를 낮게 판단한 근거는 사교육 문제 해결이 쉽지 않으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을 주장함.
  - 사교육이 큰 부담이며 이것이 출산 기피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사교육 문제가 국가적 정책으로 해결이 쉽지 않으며 정책수단의 효과성 보다는 역차별 문제제기 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인천시 저출산 관련 정책 의제로 추진하기에 적합해 보이지 않음.
  - 한국의 사교육 문제는 공교육 질 강화로 해결할 수 없음. 한국의 사교육은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학습 결손 보충을 위한 사교육이 아니라 입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사교육이 중심이기 때문임. 입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사교육은 교육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고 임금 격차 완화 등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으로 접근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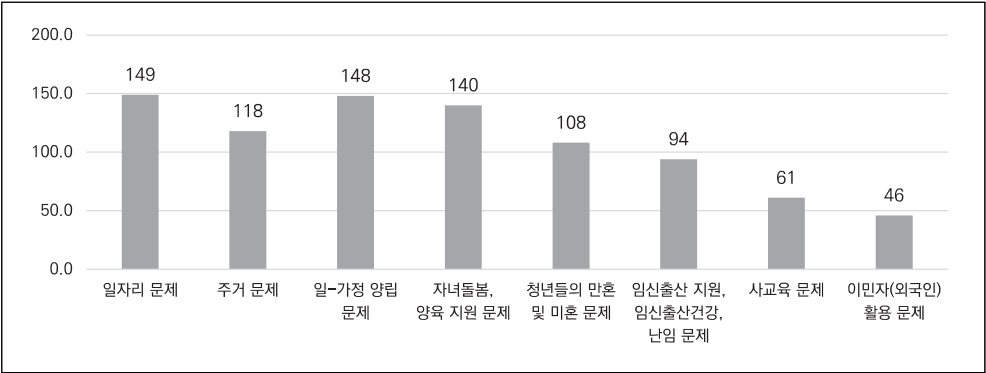
-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적게 낳다 보니 한 아이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생겼다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함. 사교육에 지출이 가능한 계층은 공교육의 질이 나아져도 경쟁사회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사교육에 계속 집착하게 됨. 공교육 질 강화는 꼭 필요하나 저출산 대책이라기보다는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우리나라의 인적자원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 사교육의 문제는 공교육의 질 강화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함. 공교육의 질 강화로 해결될 수 있는 사교육은 보충학습 부분이라면, 현재 다들 힘들어하는 막대한 사교육 비용은 공교육의 질과 상관없이 남보다 앞서기 위한 사교육에서 비롯되기 때문임. 개인의 적성에 맞으면서도 보수가 적절한 다양한 일자리가 있는 지역사회라면 남보다 앞서기 위해 사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보호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함.

○ 인천 지역 저출산 및 인구 정책 영역에 대해 1순위부터 8순위까지 우선순위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 일자리 문제, 일-가정 양립 문제, 자녀 돌봄 및 양육 지원 문제, 주거 문제, 청년들의 만혼 및 미혼 문제, 임신출산 지원, 임신출산 건강, 난임 문제, 사교육 문제, 이민자(외국인) 활용 문제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타나 앞서 정책 영역별로 중요도를 질문한 문항과 순위는 약간 달랐지만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남.

[그림 5-2] 인천 지역 저출산 및 인구 측면 영역간 상대적 우선순위 (종합)

(N=24, 단위: 점)



주: 종합 순위 점수는 1순위 응답을 8점, 2순위 7점, 3순위 6점, 4순위 5점, 5순위 4점, 6순위 3점, 7순위 2점, 8순위 1점으로 환산해 합산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표 5-4> 인천 지역 저출산 및 인구 측면 영역간 상대적 우선순위 (종합)

(단위: 점,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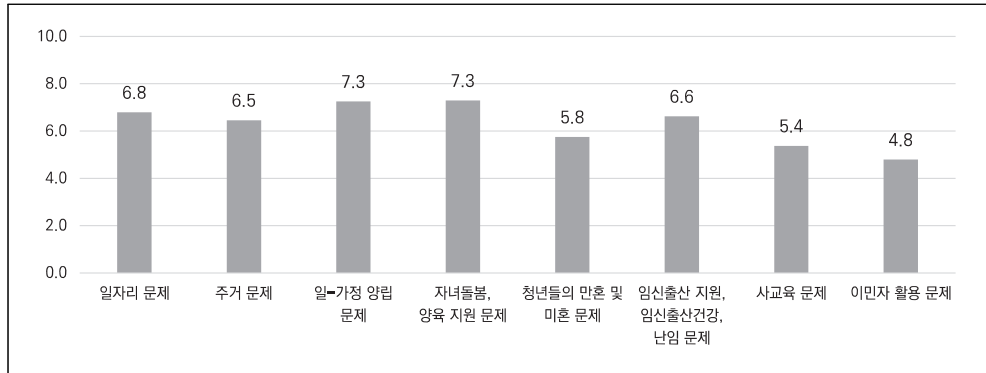
정책 영역	종합 순위 점수	종합 순위
일자리 문제	149	1
주거 문제	118	4
일-가정 양립 문제	148	2
자녀돌봄, 양육지원문제	140	3
청년들의 만혼 및 미혼 문제	108	5
임신출산 지원, 임신출산건강, 난임 문제	94	6
사교육 문제	61	7
이민자(외국인) 활용 문제	46	8

주: 종합 순위 점수는 1순위 응답을 8점, 2순위 7점, 3순위 6점, 4순위 5점, 5순위 4점, 6순위 3점, 7순위 2점, 8순위 1점으로 환산해 합산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 현재 인천광역시의 저출산 및 인구 주요 정책이 인천의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 일-가정 양립 문제와 자녀 돌봄 및 양육 지원 문제에 대한 정책 효과성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민자(외국인) 활용 문제와 사교육 문제, 청년들의 만혼 및 미혼 문제에 대한 정책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5-3] 인천 지역 저출산 및 인구 측면 정책 영역별 효과성

(N=24, 단위: 점)



주: 전혀 효과가 없다(1점)~매우 효과가 있다(10점)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표 5-5〉 인천 지역 저출산 및 인구 측면 정책 영역별 효과성

(단위: 명, 점)

정책 영역	사례수	평점
일자리 문제	(24)	6.8
주거 문제	(24)	6.5
일-가정 양립 문제	(24)	7.3
자녀돌봄, 양육지원문제	(24)	7.3
청년들의 만혼 및 미혼 문제	(24)	5.8
임신출산 지원, 임신출산건강, 난임 문제	(24)	6.6
사교육 문제	(24)	5.4
이민자 활용 문제	(24)	4.8

주: 전혀 효과가 없다(1점)~매우 효과가 있다(10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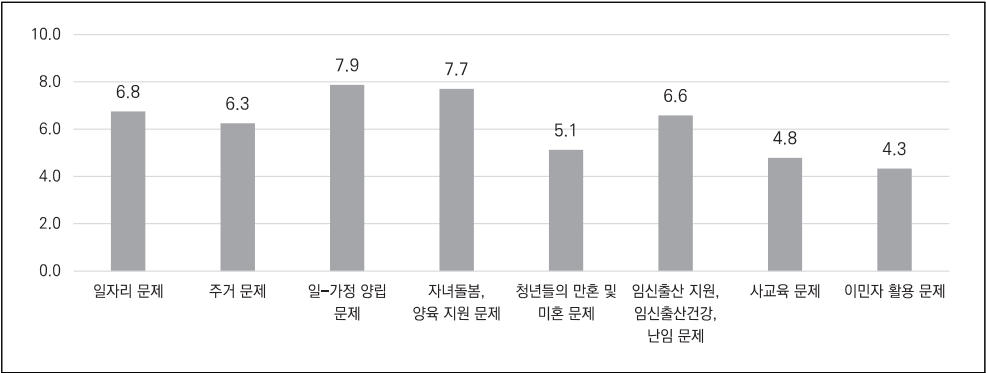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 인천의 저출산 및 인구 주요 정책은 정책이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거의 유사하게 일-가정 양립 문제와 자녀 돌봄 및 양육 지원 문제의 효율성이 높았고 이민자(외국인) 활용 문제와 사교육 문제, 청년들의 만혼 및 미혼 문제에 대한 효율성이 낮게 나타남.
- 그러나 일가정 양립과 자녀 돌봄 및 양육 지원 정책의 경우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 효율성 측면에서 점수가 효과성보다 더 높게 나타난 반면 효과성이 낮은 정책들은 효과성에 비해 효율성을 더 낮게 응답함.

[그림 5-4] 인천 지역 저출산 및 인구 측면 정책 영역별 효율성

(N=24, 단위: 점)



주: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1점)~매우 효율적이다(10점)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표 5-6> 인천 지역 저출산 및 인구 측면 정책 영역별 효율성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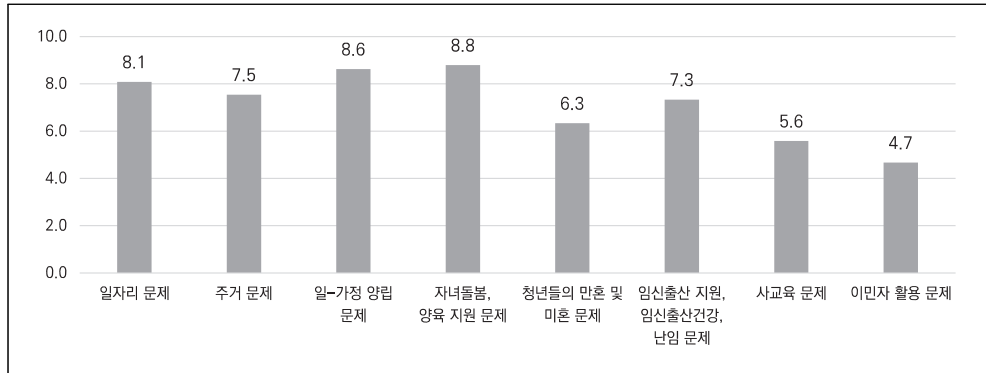
정책 영역	사례수	평점
일자리 문제	(24)	6.8
주거 문제	(24)	6.3
일-가정 양립 문제	(24)	7.9
자녀돌봄, 양육지원문제	(24)	7.7
청년들의 만혼 및 미혼 문제	(24)	5.1
임신출산 지원, 임신출산건강, 난임 문제	(24)	6.6
사교육 문제	(24)	4.8
이민자 활용 문제	(24)	4.3

주: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1점)~매우 효율적이다(10점)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 인천 저출산 및 인구 주요 정책이 얼마나 시급한지에 대해서는,
- 자녀 돌봄 및 양육 지원 문제 8.8점, 일-가정 양립 문제 8.6점, 일자리 문제 8.1점, 주거 문제 7.5점, 임신출산 지원, 임신출산 건강, 난임 문제 7.3점, 청년들의 만혼 및 미혼 문제 6.3점, 사교육 문제 5.6점, 이민자(외국인) 활용 문제 4.7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5-5] 인천 지역 저출산 및 인구 측면 정책 영역별 시급성

(N=24, 단위: 점)



주: 전혀 시급하지 않다(1점)~매우 시급하다(10점)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표 5-7〉 인천 지역 저출산 및 인구 측면 정책 영역별 시급성

(단위: 명, 점)

정책 영역	사례수	평점
일자리 문제	(24)	8.1
주거 문제	(24)	7.5
일-가정 양립 문제	(24)	8.6
자녀돌봄, 양육지원문제	(24)	8.8
청년들의 만혼 및 미혼 문제	(24)	6.3
임신출산 지원, 임신출산건강, 난임 문제	(24)	7.3
사교육 문제	(24)	5.6
이민자 활용 문제	(24)	4.7

주: 전혀 시급하지 않다(1점)~매우 시급하다(10점)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 나. 출산지원금 부담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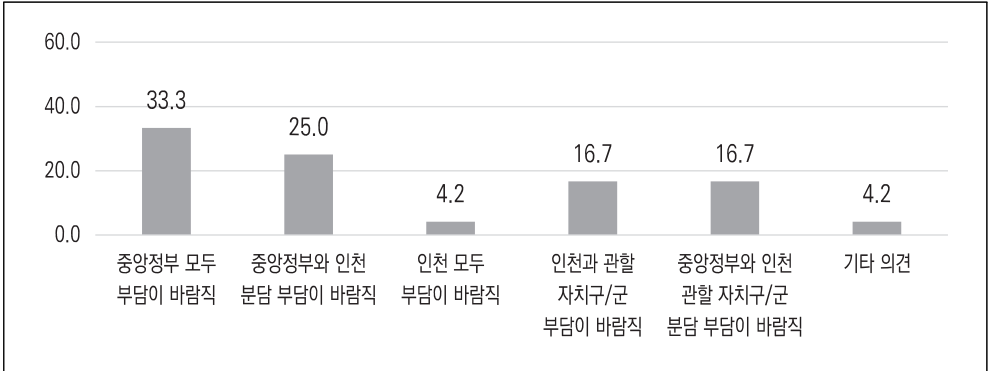
○ 저출산 정책 중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추진 중인 출산지원금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분담 필요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3.3%로 가장 많았고,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41.7%(중앙정부

+인천시 25.0%, 중앙정부+인천 관할 자치구/군 16.7%)에 달해 중앙정부의 분담에 대해 긍정적 의견이 많았음.

[그림 5-6] 출산지원금 중앙정부 분담 필요 주장에 대한 의견

(N=24, 단위: %)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표 5-8> 출산지원금 중앙정부 부담 필요 주장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계	(24)	100.0
중앙정부 모두 부담이 바람직	(8)	33.3
중앙정부와 인천 분담 부담이 바람직	(6)	25.0
인천 모두 부담이 바람직	(1)	4.2
인천과 관할 자치구/군 부담이 바람직	(4)	16.7
중앙정부와 인천 관할 자치구/군 분담 부담이 바람직	(4)	16.7
기타 의견	(1)	4.2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 출산지원금 중앙정부 부담 필요 주장에 대한 의견

○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 분담 부담이 바람직

- 출산을 제고는 국가적 과제이므로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구와 군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산지원금에 따른 인접 구 및 군으로의 과도한 인구이동 등 지자체 수준에서의 인구경쟁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단위에서 출산지원금을 부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친출산 환경 조성과 인구 유지 목적의 정책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라고 단언할 수 없음. 중앙 및 광역이 맡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미시적인 복지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임.
- 군구별로 하게되면 무분별한 지원금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 및 인천시에서의 기획과 재원으로 추진할 필요
- 중앙정부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며, 지자체의 인구 정책 등을 위한 자율성, 자치권 등의 확보 유도가 필요함. 그래서 기본적인 지원금은 중앙정부, 추가적인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결정토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중앙정부 모두 부담이 바람직

- 지자체의 경제적 여력에 관계 없이 전국적으로 같은 수준의 현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지역 간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음.
- 실거주보다는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 옮기는 등의 출산지원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이동하는 양상은 국가 전체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보다는 조삼모사의 정책. 출산에 대해 동일하게 지원을 하되, 취약한 지역의 경우 향후 아기가 커가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여러 지원을 받고, 자연스레 그 지역에 조금 더 많은 이들이 눌러 살게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출산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중앙정부가 출산초기에 전체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제공하고 자치단체는 출산 이후 아동들이 커가는 과정에서의 정책들에 비용을 조금 더 사용하는 형태로 정책이 설계될 필요. 그렇게 하면 출산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여러 행정비용도 줄어드는 등의 효과도 생겨날 것임.
- 제로섬 게임인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저출산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라면 왜 중앙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인지 물어야 함.
- 출산지원금의 경우 시군구별로 달리하는 것이 결국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보다는 인구를 빼앗는 효과만 존재함. 출산율을 올리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의 과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산정책은 인천만의 문제를 넘어 한국 전체의 문제임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확대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출산지원금은 보편적 수당 성격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중앙정부와 인천 관할 자치구/군 부담 부담이 바람직

- 출산지원금은 출산지원정책으로서 효과성이 크지 않고, 인근 지자체와제로섬 관계를 보이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함께 지원금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
- 중앙정부, 인천광역시, 관할자치구/군 3자 부담으로 중앙정부는 인천광역시 전체 출산지원금의 일부를 정액지원하고 인천광역시 관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군에 대해 출산지원금 하한선 보장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저출산에 대한 중앙, 광역, 기초의 책임의식 고양 필요. 예산 매칭 및 정책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성 제고가 어려움.

○ 인천광역시와 관할 자치구/군 부담이 바람직

- 중앙정부가 지급하게 되면 지자체만의 차별적 지원금 효과가 사라질 것임. 인천광역시의 출산지원금 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중앙정부가 지급하더라도 그 지원금에 인천광역시만의 추가적인 지원금이 있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출산지원금 정책은 인접 지역 간 인구 경쟁을 유발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제한적으로 보임. 자녀 양육 비용의 측면에서는 영유아 시기보다 청소년 시기가 더 많은 부담을 가계에 주고 있음. 또한 출산지원금 정책은 첫만남 이용권 등으로 이미 중앙정부 정책에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음. 출산지원금보다 지역 육아 인프라 구축이 더 시급한 과제임. 출산지원금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보다 지역 육아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다고 판단됨.
- 출산지원금은 해당 지자체가 얼마나 인구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함. 아동의 성장은 출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돌봄, 교육, 진로, 취업에까지 이르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첫 단추에 해당하는 출산지원금에도 인색한 지자체는 이후의 아동성장에도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인천광역시라는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는 출산지원금과 같은 생애초기 지원금보다는 이후의 양육지원비용을 광역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은 지방 정부의 책임이므로 출산지원금 정책은 지방마다 지역 인구의 특성이 있는 만큼 각 지방 정부가 알아서 시행하여야 할 정책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중앙 정부가 부담을 나누어야 할 정책은 아니라고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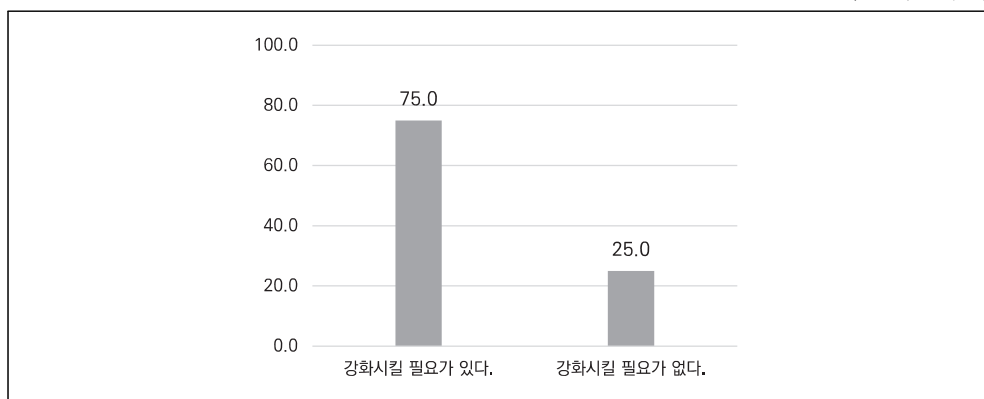
#### 다. 외국인 정책 확대 관련

○ 인천시 외국인(이민자) 정책 확대에 대해서는,

-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75%로 강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응답 25%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5-7] 외국인 정책 확대 필요성

(N=24, 단위: %)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표 5-9〉 외국인 정책 확대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계	(24)	100.0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18)	75.0
강화시킬 필요가 없다	(6)	25.0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 □ 필요성

## ○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인천광역시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외국인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인구 감소의 폭을 줄이거나 일정 규모의 인구 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이들의 이민, 또는 한국에서의 거주를 기대할 수 있다면 감소하는 인구에 대응하는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인천시는 대표적인 산업도시이자 중소기업체 비중이 높은 지역임.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추진 불가피. 다만 이 경우에도 아직 광범위하게 남아있는 경단이나 청년, 중고령자 등 비경활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정책과 보조를 맞춰 추진할 필요 있음.
-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시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력 유치의 필요성은 낮지만, 국적 취득 비율 1위, 외국인 규모 3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다문화정책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더불어 대학 재정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유치도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 인천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외국인 비율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됨. 전술한 것과 같이 외국인 유입으로 출산율이 단기간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지만,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 그 주요한 이유는 사회통합 때문임.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서 고립되는 만큼 사회적 갈등 발생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됨.

-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이민자 비율이 낮은 국가임. 다른 OECD 국가들은 출산으로 인한 인구 증가보다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인구 증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한국은 특히 저출산 추세가 전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확보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이민 확대가 필요함. 이에 따라 현재 이민청 설립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 등에서 나타나듯이 이민자 정책은 지자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장기적으로 이주민 인구가 확대될 수 밖에 없음.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정책을 추진하여야겠지만 외국인 비중이 높은 인천광역시도 선도적으로 외국인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책 강화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인천시 교육청 차원에서는 다문화학생지원계획에서 다문화학생 교육지원의 측면을 다루고 있기는 한데, 그 외에도 인천의 경우 외국인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를 위해 추진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정책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공공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외국인 비율이 적지 않은 인천시가 선제적인 외국인 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준비는 곧 인천시의 인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저출산 경향은 한번 자리잡히게 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힘들. 더구나 이미 가임여성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출산율을 조금 높인다고 해서 고령화 경향을 되돌리기는 불가능함. 생산가능연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화를 경험한 이른바 선진국에서도 이주민을 받아들여 노동인구 부족 및 고령화 현상을 타개하고 있음. 하지만 인천시의 이주민 정책은 아직까지도 수동적이고 제한적임. 최근 인천에 재외동포청이 개청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재외동포만이 아닌 이미 인천에 와 있는 이주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램. 이미 있는

이민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주가 이루어지는 이주민의 특성상 인천의 이주민이 차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평판이 확산되면 자연스럽고 인천으로 향하는 이주민도 늘어날 것임.

- 외국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는데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언어와 아동양육을 위한 교육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언어문제와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를 꼽음. 인천시 내에서의 통합 문제도 있으므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새롭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유치되어 외국인과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여건, 주거여건, 정주여건 등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구정책적 측면보다는 노동 및 정주여건 등을 위한 지원강화가 필요함. 외국인이 인천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인구정책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인천은 공단, 농업, 어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외국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음. 한국국적취득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결혼이주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에서 기인한 것이리라 생각함.

#### ○ 강화시킬 필요가 없음

-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은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외국이 도입 지원을 강화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인천은 현재 노동자 부족이 심각한 산업 현장(농업, 어업,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문제를 겪고 있는 타 지역에 비해 나은 환경임. 이 보다는 가시적인 바이오 기업 투자 및 이에 따른 내국인 고용 및 주거에 더 신경써야 하는게 아닐까 함.
- 영역에 따라 다를 사안인 만큼 주요 외국인 정책 확대 또는 축소라는 거대한 용어로 단언하기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음. 다만 외국인의 경우 국적이

나 인적자본 축적 정도, 한국에의 입국 목적 등에 따라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들의 특성을 보다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일은 필요할 것임.

- 인천광역시 외국인 비율이 많은 것은 지역적 특성이나 문화적 특성에 따른 것인데, 이들을 정착시키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기존의 인천시 인구들이 선호하는 방향인지에 대한 인식 조사가 우선되어야 함.

#### □ 강화해야 할 정책

##### ○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외국인의 장기 거주 또는 이민의 동기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한국에서의 근로가 장기 거주 또는 이민 결정을 위한 주요 요인일 수 있음.
-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제시하고 외국인 사업주의 경영 리더십부분의 교육과 취업을 하고자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인천시는 송도, 청라, 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고급인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외국어 행정지원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해됨.
- 외국인 노동력 확보가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천의 공업, 농업, 어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 외국인 자녀 지원

- 인천시의 경우, 외국국적 출신자로부터 태어난 자녀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자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장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자녀의 학교 생활 및 사회통합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의 노동력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외국인 자녀 지원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인천에는 고려인 인구가 상당히 많으나 이들 자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학교 생활 및 대학 진학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음. 외국인자녀의 성장과 적응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유학생의 정착 지원

-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민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임 이미 국내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다수인 바 이들을 일차적으로 한국사회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 유학생은 상대적으로 고학력자들이므로 단순외국인력에 비해 정착시 우리사회에 미칠 부작용도 작을 것임.
-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인천시에 정주하게 만드는 것은 인천시의 인재 육성 방안이자, 국제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한국국적 미취득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 앞서 답변했듯이 해외에서 오는 이주민들은 이미 들어와 있는 이주민 커뮤니티를 통해 이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이 강함. 한국국적을 미취득했더라도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평판이 이주민 커뮤니티를 통해 본국들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젊은 이민자를 폭넓게 받아들여려면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과제가 되어야 함.

## 라.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관련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바람직한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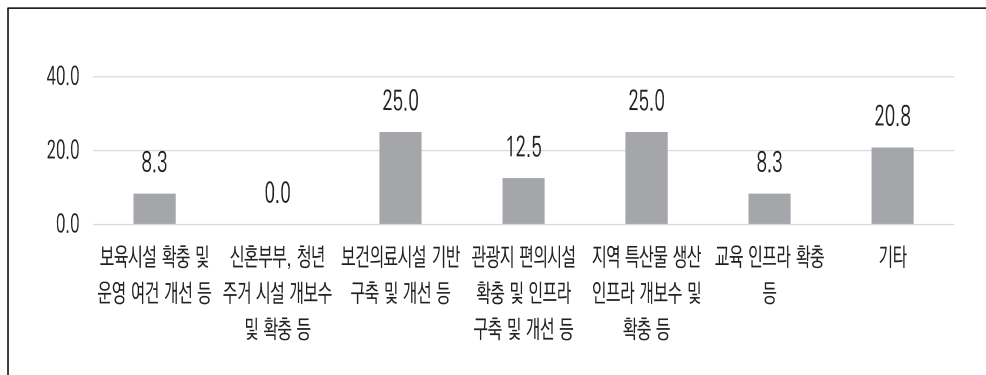
-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 및 개선 등’과 ‘지역 특산물 생산 인프라 개보수 및 확충 등’이 각각 25%로 가장 많았고,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 및 개선 등’이 12.5%, 보육 여건 개선 등과 교육 인프라 확충 등이 각각 8.3%로 나타났다.



- 기타 의견으로는 일자리 개선이나 기업유치 및 일자리 확보 등 일자리에 관한 의견이 많았음.

[그림 5-8] 적절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N=24, 단위: %)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표 5-10〉 적절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계	(24)	100.0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여건 개선 등	(2)	8.3
신혼부부, 청년 주거 시설 개보수 및 확충 등	(0)	0.0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 및 개선 등	(6)	25.0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 및 개선 등	(3)	12.5
지역 특산물 생산 인프라 개보수 및 확충 등	(6)	25.0
교육 인프라 확충 등	(2)	8.3
기타	(5)	20.8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 □ 적절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 ○ 지역 특산물 생산 인프라 개보수 및 확충 등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일자리 감소, 교육 환경, 고령화 등 다양한 이유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인구 유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보임. 보건시설 구축, 신혼부부 시설 개보수, 보육시설 확충 등의 노력으로 인구감

소세를 막는 것은 어려워 보임. 이러한 지역을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지역으로 재조성하는 것이 인구유입의 인센티브 또는 인구감소세의 완화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지역 특산물 생산과 같은 대표성 있는 지역으로 브랜드화 하는 것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바람직한 사용이라고 판단됨.

-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타 지역으로 통근을 하는 청년 등이 많다면 청년이나 보육을 위한 정책에 투입을 이야기하겠지만 강화, 옹진지역의 청년이 많지 않은 만큼 중앙정부에서 교부받은 지원금은 해당 지역에 재량권을 최대한 부여해서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임.
- 기본적으로 지역 내 생산성이 확대되면, 인구가 증가하고, 그 이후 보육이나 교육, 보건의료시설 등이 따라와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사실상 다 필요하지만, 일단은 지역 내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가장 먼저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 및 개선 등

- 인천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의료시설 접근성이 가장 열악함. 즉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공공의료시설, 병원, 종합병원에 접근한다는 것임. 그러나 의료는 보편적 서비스로 공적 영역에서 제공되어야 안심하고 거주할 곳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필수사회재 역할이 있음. 그런 의미에서 보건의료시설 기반을 구축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수익 측면에서 민간 보건의료시설이 지방에서 감소하고 이는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됨. 공적 예산으로 보건의료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반드시 그 지역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쓰여야 한다고 판단됨. 유입인구, 정주인구들의 기본적인 삶이 잘 꾸려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 및 개선에 힘을 써야 한다고 판단됨.
- 저출산문제와 함께 고령화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강화군, 옹진군, 동구에 출산율 상승 및 아동안구 유입을 통한 인구증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다만 해당 지역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노인층마저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 및 개선 등

- 인구의 감소로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지자체 강화, 옹진군 등에는 전 세계적으로 웨케이션(일을 하면서 휴가를 즐기는 근무형태의 신조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포르투갈의 리스본을 모델링하여 지원을 계획, 활용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
- 강화군, 옹진군 등의 특성을 살리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 교육 인프라 확충 등

- 젊은 부모가 지역을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교육여건임. 그래서 출산지원금을 많이 주는 지역에서 아이를 낳다 살다가도 아이가 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지역을 떠나는 경우도 많다고 함. 학령기를 지역에서 보낼 수 있다면 그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므로, 교육 인프라 확충에 우선적으로 투자했으면 함. 물론 이미 고령화가 너무 진척이 되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청년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교육 인프라 확충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서 인구감소가 나타나는 가장 핵심 원인을 먼저 진단해보아야 함.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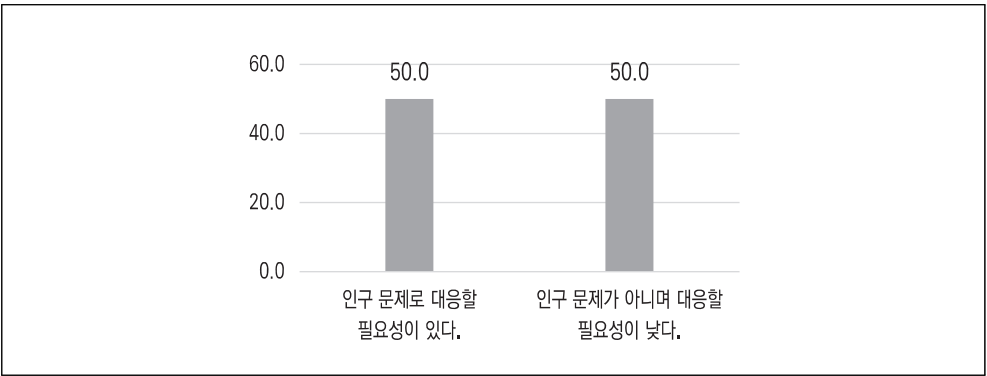
- (해당 기초지자체의 결정) 지역마다 사회경제적 여건과 인구변동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

마. 인천광역시 관할 지역 내 인구편중 특성 관련

- 인천 내에서의 지역 간 인구편중 현상에 대해 인천이 개입해야 하는 인구문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 인구 문제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과 인구 문제가 아니며 대응할 필요성이 낮다는 응답이 반반으로 나타남.

[그림 5-9] 인천 내 지역 간 인구편중현상 개입 필요성

(N=24, 단위: %)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표 5-11〉 인천 내 지역 간 인구편중현상 개입 필요성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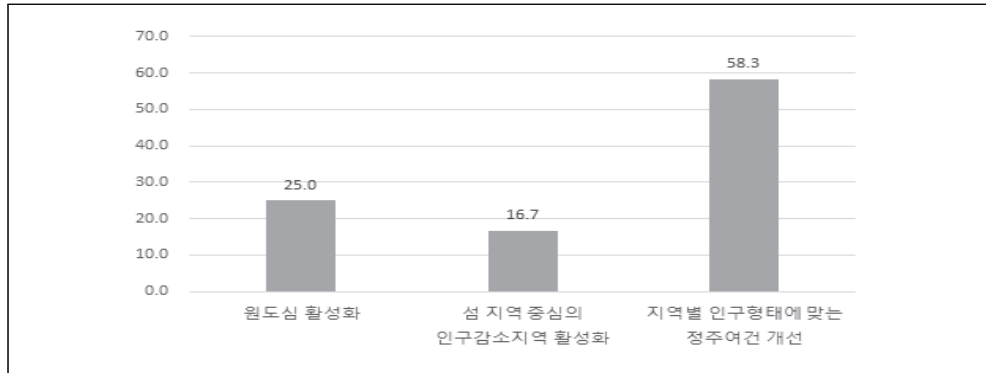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비율
계	(24)	100.0
인구 문제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12)	50.0
인구 문제가 아니며 대응할 필요성이 낮다	(12)	50.0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 인천 내 지역 간 인구편중 현상에 대해 인천이 인구문제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 지역별 인구형태에 맞는 정주여건 개선을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로 가장 많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은 25.0%, 섬 지역 중심의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16.7%로 나타남.

[그림 5-10] 인천 내 지역 간 인구편중현상에 대해 인천이 우선 대응해야 할 정책 분야

(N=12, 단위: %)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표 5-12〉 인천 내 지역 간 인구편중현상에 대해 인천이 대응해야 할 정책 분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계	(12)	100.0
원도심 활성화	(3)	25.0
섬 지역 중심의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2)	16.7
지역별 인구형태에 맞는 정주여건 개선	(7)	58.3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 □ 인천광역시 관할 지역 내 인구편중 현상에 대한 개입 필요성

## ○ 인구 문제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 인천광역시 내의 인구 불균형이 지나치게 심해지는 경우 전체적인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각종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인구가 감소할 경우 정주여건이 나쁜 지역은 더욱 인구가 감소하고 일자리나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에 인구가 집중하는 양극화 현상 불가피.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공공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핵심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될수 있도록 해당 지역을 집중 개발할 필요 있음.
- 인구 문제 해결이 경제적 활성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서 인구 감소 지역의 소득 여건이 나아진다면 자연스럽게 교육, 육아 등 인구 감소 관련 정책들

이 필요해 질 것으로 보임. 다만 전적으로 경제적 활성화가 우선될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저출산 대책 등이 유사한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

- 지역 내에서의 인구 집중도 차이는 장기적으로 인천시 내에서의 불평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특정 지역에 인구가 집중될 경우 주거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청년층 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 이는 출산율 하락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됨. 따라서 지자체는 관할 구역 내에서의 인구 분포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인천시는 섬지역의 인구 소멸문제도 있지만 원도심의 인구가 신도시로 흡수되는 문제도 심각함. 이로인해 사회적 교육 인프라 격차, 인구격차 등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 차원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의 인구집중지수가 가장 높은 것은 광역시이면서도 군이 2개 존재하고, 수도권외의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원도심이 쇠락하는 현상 때문으로 보임. 신도시가 인구를 대거 흡수해 원도심의 쇠락이 가중되는 현상을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경우, 원도심의 공동화와 신도시의 과밀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원도심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특정 지역으로 인구가 몰리지 않도록 개입해야 함.
- 인천시가 개입해야 하지만 실제 예산적 측면에서 적극적 개입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강화군이나 옹진군 등과 같이 섬지역은 중앙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
- 인천시의 도심지역인 중구, 동구 등의 인구감소가 지속화되고 있으며, 옹진군은 고령화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반면에 경제자유구역과 신도시개발이 추진 중인 연수구, 서구 등의 인구집중현상은 가속화되어 외부지역에서의 유입인구보다 도심지역의 인구가 연수구, 서구 등으로 이전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인천시는 중구와 동구의 행정구역통합, 서구의 분구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도심지역의 인구유출방지를 위한 도심활성화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통계치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020년 이후 외국인 인구를 제외한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

으로는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어 개발사업 등의 조정을 통해 인천지역내 인구이동문제의 대응과 외국인 인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인구 문제가 아니며 대응할 필요성이 낮다.

- 인구편중 현상은 생활 인프라,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임. 인구 집중도를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구편중 현상을 야기한 요인들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비효율적인 재정적 지출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지 않은 곳으로 이전시켜야 하는 등 비효율적 재정 지출을 동반하게 될 것임. 또한 인구 집중도를 낮추는 것이 인천광역시에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임.
-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섬지역이 많은 인천시의 특성상 인구집중도가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음. 그러나 이를 인구문제로까지 대응할 필요는 없음.
- 인구 집중도는 현존하는 주거, 교통, 교육, 노동시장 등 종합적인 지역인프라의 차별에 따른 결과로, 이러한 상황을 단편적 정책개입으로 개선하려 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오히려 스펠오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 더욱 효율적임.
- 인천이 자족도시로써의 기능이 떨어지는 점이 문제이지 지리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심각한 인구집중도는 불가피한 부분이라 생각됨. 다만 인천의 상당수의 인구가 서울로의 출퇴근이고 인천의 산업이 점차 쇠락해서 조금이라도 서울로의 통근이 편한 곳에 인구가 몰리는 상황일 것임을 감안한다면 인천의 산업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 인구의 집중도가 높은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인구가 거주하지 않은 곳을 오히려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 지역 간 인구편중 현상을 인천광역시 주도로 해체하는 것보다는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더 힘써야 할 필요가 있겠음. 지역 내 불균형에 너무 초점을 두면, 인천시 전체 인구 관리 정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임.

- 지역 간 인구 편중 현상은 취업이나 주거 문제와 연관이 있으며 인구문제로 취급하여 개입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됨.

#### □ 인천광역시 관할 지역 내 인구편중 현상 대응 우선 정책 분야

##### ○ 지역별 인구 형태(인구 증가지역 인프라 등 증가 요인 파악에 따른)에 맞는 정주여건 개선

- 지역 내 인구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지역 단위에서의 인구 구조와 인구 동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보여짐.
- 신도시는 신도시대로의 문제가 있음. 예를 들면 원도심에서 교육 인프라(초중고등학교의 TO)를 이미 다 채우고 있어서 신도시에는 신규 중고등학교가 설립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로 인해 과밀학급 문제 등이 심각함. 원도심은 도심공동화로 인한 빈집문제, 노인의 증가와 아동의 감소로 인한 공원 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가 있음. 이런 지역별 인구형태를 고려하여 정주여건을 다각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지원해야하므로 원도심과 섬지역에 맞는 특화된 계획을 구상하고 설계하여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원도심 활성화 정책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10년 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실효성이 낮은 상황으로 지역별 계층별 인구특성에 따른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생활SOC 차원의 정주여건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인천의 자치군구는 지리적, 산업적 특성이 매우 상이함. 각 지역특성에 맞춘 인구정책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함.

##### ○ 섬 지역 중심의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큰 지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응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다분함.

##### ○ 원도심 활성화

- 원도심이 침체된 이유를 살피고 시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원도심이 공동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 섬 지역의 인구감소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인천시의 노력으로 도저히 해소할 수 없는 상황임.
- 원도심은 신도심과 다른 접근이 필요함. 아파트나 개발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 예컨대, 원도심 중심의 마을만들기, 공원, 도로환경 개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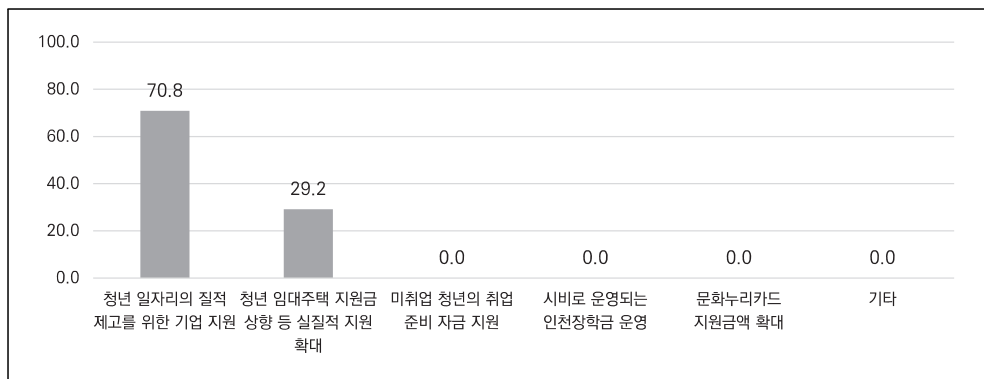
## 바. 인천광역시 청년 유입 증가를 위한 우선 추진 정책

○ 청년 유입 증가를 위해 인천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청년 대상 정책에 대해서는,

- 청년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이 70.8%로 가장 높았고 청년 임대주택 지원금 상향 등 실질적 지원 확대가 29.2%로 나타남.

[그림 5-11] 청년 유입 증가를 위한 우선 추진 정책

(N=24, 단위: %)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표 5-13〉 청년 유입 증가를 위한 우선 추진 정책

(단위: 명, %)

정책 영역	사례수	비율
계	(24)	100.0
청년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17)	70.8
청년 임대주택 지원금 상향 등 실질적 지원 확대	(7)	29.2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 자금 지원	(0)	0.0
시비로 운영되는 인천장학금 운영	(0)	0.0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확대	(0)	0.0
기타	(0)	0.0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 ○ 청년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 청년층의 이동은 대학교와 일자리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장학금 제공이나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은 인천광역시가 아닌 각 교육기관의 역할이므로 인천광역시는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 추진으로 청년층을 유입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임. 일자리 관련 정책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 공급과 수요 간 미스매치(mismatch)를 줄이는 것인바, 제시된 보기 중 청년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청년에게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봄.
- 인천광역시는 처음도 일자리, 마지막도 일자리를 추구해야 함. 바이오특구의 장점을 살려 전후방 연계효과가 높은 산업 및 기업정책 필요. 기타 주거 등 인프라는 자연스럽게 조성됨.
-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지역에 안착할 수 있음.
-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괜찮은 일자리와 문화 등 기반 시설일 것임. 청년 일자리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이 성장할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청년들이 지역내에서 문화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 확충될 필요 있음.
- 인천시의 경우 청년층 순유입이 발견되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인천시의 삶의 여건이 우수한 것인지, 또는 타 지역 및 외부 여건의 악화로 인해 상대적인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임. 그 이유는 인천시가 타 시도

의 상황 악화로 인해 인구 유입을 경험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다시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인천시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정주하여야 할 것이며, 여러 관련 정책 중 청년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인천시 청년의 취업행태를 살펴보면, 실제로 일자리가 부족하여 서울이나 경기도로 나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낮은 주거비 등의 장점으로 인구는 유입되지만 이들이 인천시에 정주하기보다는 잠깐 머물다가 일자리가 있는 지역으로 다시 떠나는 행태임. 따라서 청년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통해서 기업들이 청년들에게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청년 인구가 정주하는데 중요한 여건이라고 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 30인 미만 영세소기업 및 산단지역 일자리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지원 및 상권 형성 등 인프라 지원 필요
- 인천광역시 5인 미만 또는 1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청년에 대해서 시가 복지카드 지원
- 일단은 일자리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지면 다른 문제들은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다만, 기업지원이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 질적 제고로 이어지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임.
- 인천시의 청년인구증가는 양질의 일자리 증가 보다는 저렴한 주거비(서울의 50~60% 수준)로 인하여 서울 외곽지역에서 인천시로 유입되는 인구증가요인이 더 크게 좌우하고 있음. 하지만 이들 청년계층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 이주가 높은 계층으로 인천시 정착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적 제고와 양질의 주택지원 정책이 필요함.
- 청년들의 일자리가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면 외부로부터의 청년 유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직주근접은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청년층의 유입이 많았던 것에는 서울, 경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용의 영향이 있었을 것임. 유입인구의 장기 정착을 위해 일자리 개선 정책의 시행이 필요함.

- 청년 유입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일자리 창출임. 다만, 정부나 광역 단체가 지역 내에서 새로운 일자리 등을 만들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음. 일자리 질적 제고를 위한 지원과 함께 역량 강화도 같이 진행되어야 함.

○ 청년 임대주택 지원금 상향 등 실질적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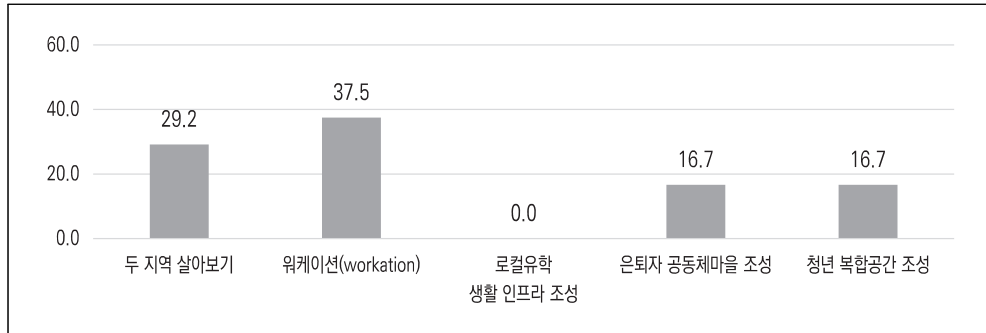
- 유입 청년층의 정착 지원 필요함. 대체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수혜 개인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약하다고 생각함.
-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중요한데, 임대주택 자체의 규모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규모를 갖춰야 함. 현재의 지원과 더불어 미래의 장기 거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로 청년이 유입된 것은 서울이 집값이 폭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지불 가능한 주거를 찾아서 인천으로 온 이유가 큼. 일자리를 위해 기업을 지원하거나 취업 준비를 돕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내기 어려우므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인센티브 필요
- 인천에 유입되는 청년들에게 주택부분이 해결되면 인천에서 일자리를 찾고 인천에서 소비하고 인천에서 결혼을 하고 삶을 향유할 것이라고 생각함.
- 아직까지는 인천이 청년층에게 베드타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함. 우선은 더 많은 청년층을 인천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 유입된 청년들에게 매력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사. 인천광역시 생활인구 활용 정책 중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 생활인구 활용 정책을 추진한다고 할 때 행안부 생활인구 관련 공모사업 중 가장 실효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 위케이션 37.5%, 두 지역 알아보기 29.2%,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 및 청년 복합공간 조성이 각각 16.7%로 나타남.

[그림 5-12] 생활인구 활용 정책 중 실효성 높은 정책

(N=24, 단위: %)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표 5-14〉 생활인구 활용 정책 중 실효성 높은 정책

(단위: 명, %)

정책 영역	사례수	비율
계	(24)	100.0
두 지역 살아보기	(7)	29.2
워케이션(workation)	(9)	37.5
로컬유크 생활인프라조성	(0)	0.0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4)	16.7
청년 복합공간 조성	(4)	16.7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 ○ 두 지역 살아보기

- '두 지역 살아보기'가 다섯 개의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활용 공모 사업 중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강화군, 옹진군, 동구 등은 이미 인구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함. 이 지역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가능한 직군은 매우 한정적일 수 있고, 동 지역에 위치한 대학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시된 세부사업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일단 시범적으로 거주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친밀도를 높일 수 있다고 봄. 은퇴자 공동체 마을 등은 의료시설 접근성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주변에 강화군에서 주말별장을 갖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음. 도로사정이 좋아지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함. 두 지역 살아가기가 중년층 이상의 지역 유입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이후 두 지역 살아가기를 통해 지역의 인프라가 어느정도 갖추어진 후에는 위케이션을 통해 젊은 연령대의 생활인구 유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생활인구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도서 지역의 특성 상 일 자리를 지원하는 데에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 거주자의 지역 체류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짐.

○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 인천광역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다른 도시에서도 멀지 않기 때문에 은퇴자 마을로 적당함. 시골 지역은 청년을 유입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완전한 농어촌 지역에 비해 인천광역시 강화, 옹진, 동구의 경우 농어촌의 특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큰 병원과의 접근성도 양호한 곳으로 수도권 인구의 은퇴 이후 생활을 영위하기 적합한 곳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임. 물론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큼을 생각한다면 수도권 은퇴 인구의 생활을 위한 곳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정주 여건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에 인구집중지역 거주자의 생활체험이 오히려 지역 회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됨. 또한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도 상대적으로 기대수명이 짧은 인구 유입이 갖는 한계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기대수명과 더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인구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음. 다만 고령자의 의료기관 수요, 소일거리 등에 부응할 수 있는가도 중요할 것 같음.
- 강화, 옹진, 동구는 인구가 감소한다는 공통점 외에는 사실 매우 다른 지역임. 동구는 원도심이고 강화는 연육교가 있어서 사실상 섬은 아니며 옹진은 섬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만한 정책은 없음. 그나마 적용가능한 정책을 선택한다면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임. 강화는 차로 접근이 가능하고 옹진은

웅진군 출신의 인천시민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마을 형성이 가능하리라고 봄. 강화나 웅진에는 두 지역 살아보거나 워케이션을 시도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직장인 상황 상 확산되기는 힘들. 원도심인 동구에는 청년 복합공간을 고려해볼만 하나, 주거보다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

○ 워케이션(workation)

- 수도권, 특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기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시도 지역 대비 유리함.
- 소득수준 향상으로 여가를 중시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 자연환경이 좋은 소지역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당장은 은퇴후 해당지역으로 정주하지는 않겠지만 워케이션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기존 주민들과의 유대관계 형성시 인구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인천시는 수도권에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음. 캠핑인구 등의 증가로 인하여 캠핑차량 등의 파킹 장소가 없는데, 이를 강화도를 비롯한 다양한 섬지역에 장소를 제공해주고 이들이 주말이나 주중에 인천에서 지낼 수 있도록 거점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함.
- 수도권 근거리로 해당지역은 수도권 거주 근로자들의 접근이 용이함. 강화군 등은 지역 관광 자원 활용 및 나머지 지역은 관광 자원 개발
- 지속적 거주보다는 일시적 방문을 하되, 일과 휴양을 즐길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면, 지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인천의 바닷가를 중심으로 수도권의 워케이션 활동이 가능한 관광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럴 경우, 수도권에서 유동인구, 관계인구 이동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 강화, 웅진군의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워케이션 사업에 공모할 필요
- 생활인구를 활용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관광 활성화를 통해 많은 인구의 유입과 체류를 높이는 것으로 판단됨.

### ○ 청년 복합공간 조성

- 생활인구 관련 정책이 고려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으로 보여짐. 이는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는데, 이렇게 낙후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고, 거주비용이 낮을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유치한다면 도시재생을 이루고, 동시에 인구 감소 추세 완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강화군, 옹진군, 동구 등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젊은 사람들의 유입 정책이 필요함.
- 생활인구는 정주인구, 유동인구, 고용인구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책수요를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인천시는 도시의 유지관리보다는 개발, 성장적 측면이 강한 지역으로 청년복합공간 조성이 가장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아. 인천광역시 세부 정책 현안 과제 중요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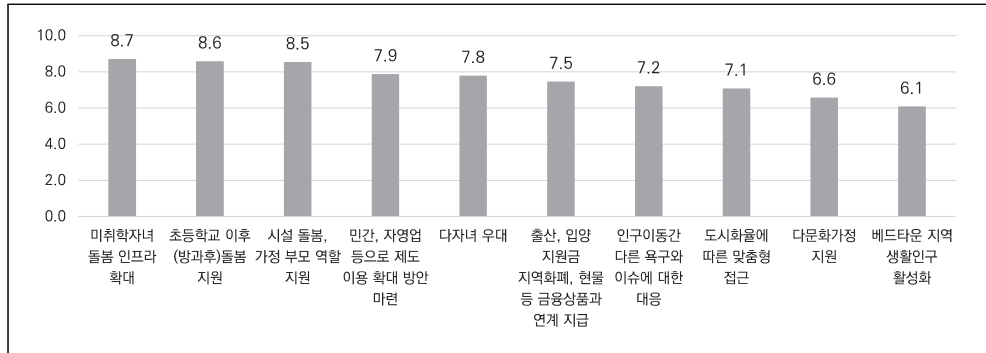
○ 인천시의 저출산 양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출한 현안에 대하여 중요도를 질문한 결과,

- 미취학자녀 돌봄 인프라 확대가 8.7점, 초등학교 이후 돌봄 지원이 8.6점, 시설돌봄과 더불어 가정에서 부모 역할 지원이 8.5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정책 현안 과제는 베드타운 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6.1점, 다문화가정 지원 6.6점 등임.



[그림 5-13] 세부 정책 현안 과제 중요도

(N=24, 단위: 점)



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10점)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표 5-15〉 세부 정책 현안 과제 중요도

(단위: 명, 점)

정책 영역	사례수	평점
다자녀 우대	(24)	7.8
출산, 입양지원금 지역화폐, 현물 등 금융상품과 연계 지급	(24)	7.5
시설 돌봄, 가정 부모 역할 지원	(24)	8.5
미취학자녀 돌봄 인프라 확대	(24)	8.7
초등학교 이후 (방과후)돌봄 지원	(24)	8.6
민간, 자영업 등으로 제도 이용 확대 방안 마련	(24)	7.9
도시화율에 따른 맞춤형 접근	(24)	7.1
인구이동간 다른 욕구와 이슈에 대한 대응	(24)	7.2
베드타운 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24)	6.1
다문화가정 지원	(24)	6.6

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10점)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친출산 환경 조성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부모가 주도로 돌봄의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저출산 제도들이 금전적 지원과 출산/양육 환경의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가족 내에서 출산의 가치, 자녀의 돌봄 등 가족에 대한 가치가 다른 것들로 대체되기 어렵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외부적 충격에 의해 출산의 결정이 volatile하지 않을 수 있음. 이러한 가치관은 부

모의 직접적인 돌봄과 육아로부터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중소기업으로 제도적 확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임.

- 자녀를 갖지 않는 부부가 늘고 첫째아 출산이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다자녀 혜택을 한자녀까지 늘릴 필요가 있음. 아동돌봄의 양적, 질적 개선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임. 신도심-구도심 간 불균형 문제는 인천과 같은 오래된 도시들의 중요한 현안임.
- 인천의 특성 - 대도시이면서, 동시에 농촌/섬지역이 공존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
- 출산부터 성장시까지 아이 돌봄에 대한 전향적 지원책 마련 필요
- 인천광역시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추진에는 인천의 인구이동이나 인구구조를 고려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각 지역의 도시화율, 통근 등을 고려한 연구, 정책이 중요해 보임. 지원금의 지역화폐 연계는 상대적으로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도 아닐 것이지만 지역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됨. 자영업, 특수고용종사자 등의 제도 활용 확대 또한 매우 필요한 일이지는 하나 사회보험료 징수 등의 문제 등과 함께 고민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인천광역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됨.
- 직업이 안정되고 육아휴직과 복직, 경력 유지 측면에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상당한 안정성을 보이고 이들 집단에서의 출산도 높음. 문제는 민간영역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인데 이를 다른 중소기업이나 특고 등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지원 등)한다면 저출산 및 인구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또한 자녀 돌봄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도 유아녀가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봄. 나머지는 사실 중장기적이거나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낮다고 보임.
- 저출산 문제의 주요 핵심이 자녀 양육이므로 해당 애로사항을 완화할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이나 돌봄지원 등이 매우 중요

- 위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중요하다고 생각됨.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출산 관련된 국민 인식 변화가 뒤따를 때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됨. 출산이라는 현상은 문화적인 측면도 강하게 작용하는 만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현재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결국 미취학 자녀 및 초등자녀에 대한 돌봄문제, 사교육비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이 마땅히 없기 때문임. 인천시 역시 이러한 인프라에 대한 격차가 신도시와 구도심 간에 매우 큰 상황임. 이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임. 더불어서 유연근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은 미비한 상황이어서 인천시 차원에서 이를 지원한다면 도움이 될 것임.
- 자녀를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됨.
- 인천은 10개 군구의 상황이 매우 달라 지역별 맞춤형 대응이 매우 중요함. 이주민이 이미 많은 도시의 강점을 활용해 다양한 배경을 지닌 젊은 인구를 받아들이야 함. 앞서도 언급했듯이 청년은 이동이 활발한 시기이므로 청년을 자기 지역에 묶어두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이 실제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해야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출산 지원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저출산 정책으로 보기는 어려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은 이미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우리나라 노동환경상 적용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음. 저출산 정책보다는 전반적인 노동환경을 바꾸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 인천시는 서울로부터의 독립된 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서울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는 경향으로 가고 있음. 또한 인천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천내 지역간 인구격차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그래서 지역간 이동에 대한 지원보다는 지원금확대, 다자녀우대, 인프라 확대 및 지원 등의 정책이 우선적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음.
- 현재의 저출산관련 정책은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음. 새로

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정책이 더 넓은 영역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더 실효성 높다고 생각함.

-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보다는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결혼 이민자 가정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현재는 아기를 낳아도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여건임. 저출산문제는 인구 뿐만 아니라 사업체, 일자리 등 경제 부문 및 교육부문이 함께 협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임.
- 지역 내 저출산 및 인구정책을 고려함에 있어 기업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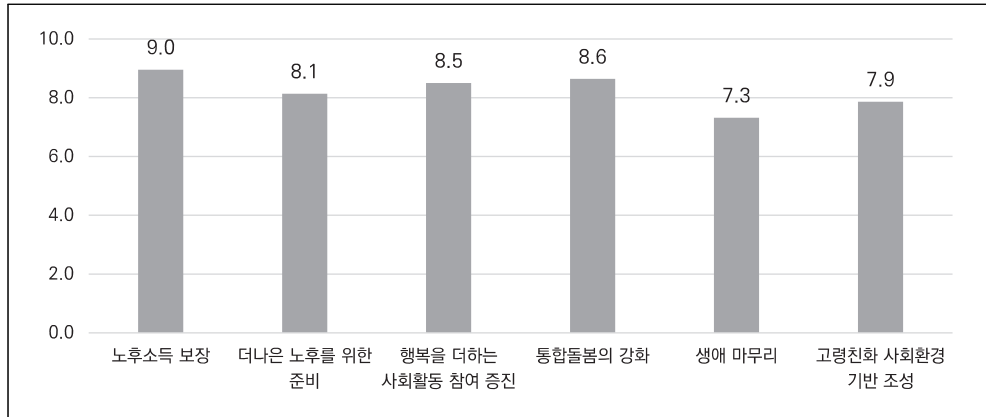
## 2. 인구 고령화 대응

### 가. 정책 분야별 기초 평가

- 인천광역시의 고령화 대응 측면에서 정책 영역별 중요도를 10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한 결과,
  - 노후소득 보장 영역이 9.0점으로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통합돌봄 강화 8.6점,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8.5점,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8.1점, 고령친화 사회환경 기반 조성 7.9점, 생애 마무리 7.3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5-14]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측면 정책 영역별 중요도

(N=22, 단위: 점)



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10점)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표 5-16〉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측면 정책 영역별 중요도

(단위: 명, 점)

정책 영역	사례수	평점
노후소득 보장	(22)	9.0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22)	8.1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22)	8.5
통합돌봄의 강화	(22)	8.6
생애 마무리	(22)	7.3
고령친화 사회환경 기반 조성	(22)	7.9

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10점)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 □ 정책 분야별 중요도 낮은 이유

## ○ 생애 마무리

- '생애 마무리'에서 장례문화 확산과 봉안당 건립 등을 지자체의 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음.

## ○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중 사회참여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에 해당하나 세부과제라고 보기에 다소 모호하며 추상적임. 세부과제는 이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음. 지역기반 노인 적합 일자리도 일자리 발굴인지 확대인지 등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음. 고령인구가 많아질수록 경로당 중심의 인프라에서 보다 다양한 이용 시설이나 다양한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혹은 세대구분이 없는) 공공/민간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시각도 있음.

#### ○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영역의 경우, 타 정책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하였음. 통합정보 플랫폼 기반 구축, 이미지 개선, 생애설계 교육, 노년기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정책은 사업내용이 불분명(예, 노년기 교육 전문인력이란 누구를 의미하는지?, 통합정보 플랫폼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노인 특히 후기노인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 이미 민간영역에서 다양한 정보플랫폼들이 구축되어 있음)하여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음(단순 활동 건수 등 산출지표만 확인 가능).

#### ○ 통합돌봄의 강화

- 수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임. 통합돌봄의 취지인 복지, 보건, 의료의 연계함에는 동의함. 그러나 돌봄의 창구(예를 들어 케어메니저 부재)를 일원화 하지 않는 이상 산발적이고 파편적인 서비스로 어려움이 상존함.

#### ○ 노후소득 보장

- 노후소득 보장 정책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중앙정부가 아닌 인천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다는 생각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 ○ 고령친화 사회환경 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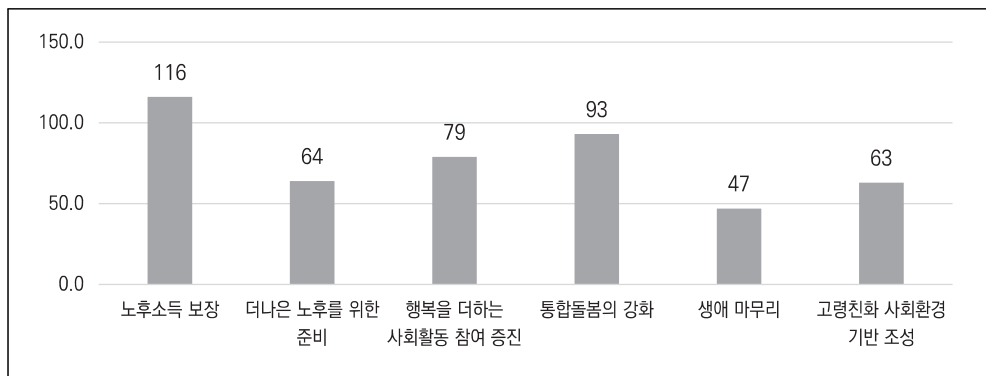
-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추진 등의 활동은 실제로 고령자의 삶의 질과 연결되는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

○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측면에서의 정책 영역에 대해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우선순위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 노후소득 보장, 통합돌봄 강화,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고령친화 사회환경 기반 조성, 생애 마무리 순으로 나타나 앞서 정책 영역별 중요도와 순위가 일치함.

[그림 5-15]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측면 정책 영역간 상대적 우선순위 (종합)

(N=22, 단위: 점)



주: 종합 순위 점수는 1순위 응답을 6점, 2순위 5점, 3순위 4점, 4순위 3점, 5순위 2점, 6순위 1점으로 환산해 합산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표 5-17〉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측면 정책 영역간 상대적 우선순위 (종합)

(단위: 점, 순위)

정책 영역	종합 순위 점수	종합 순위
노후소득 보장	116	1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64	4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79	3
통합돌봄의 강화	93	2
생애 마무리	47	6
고령친화 사회환경 기반 조성	63	5

주: 종합 순위 점수는 1순위 응답을 6점, 2순위 5점, 3순위 4점, 4순위 3점, 5순위 2점, 6순위 1점으로 환산해 합산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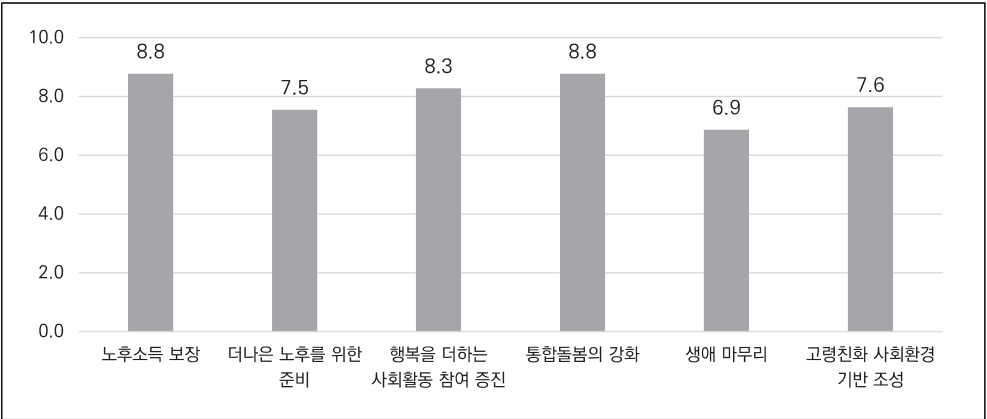
○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정책 영역별 시급성에 대해서는,

- 노후소득 보장과 통합돌봄 강화가 각각 8.8점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고,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영역도 시급성이 8.3점으로 높게 나타남.

- 생애 마무리 정책 영역은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중요도와 시급성이 모두 낮음.

[그림 5-16]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측면 정책 영역별 시급성

(N=22, 단위: 점)



주: 전혀 시급하지 않다(1점)~매우 시급하다(10점)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표 5-18〉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측면 정책 영역별 시급성

(단위: 명, 점)

정책 영역	사례수	평점
노후소득 보장	(22)	8.8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22)	7.5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22)	8.3
통합돌봄의 강화	(22)	8.8
생애 마무리	(22)	6.9
고령친화 사회환경 기반 조성	(22)	7.6

주: 전혀 시급하지 않다(1점)~매우 시급하다(10점)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 고령화 대응 정책 영역 및 과제 간 정합성에 대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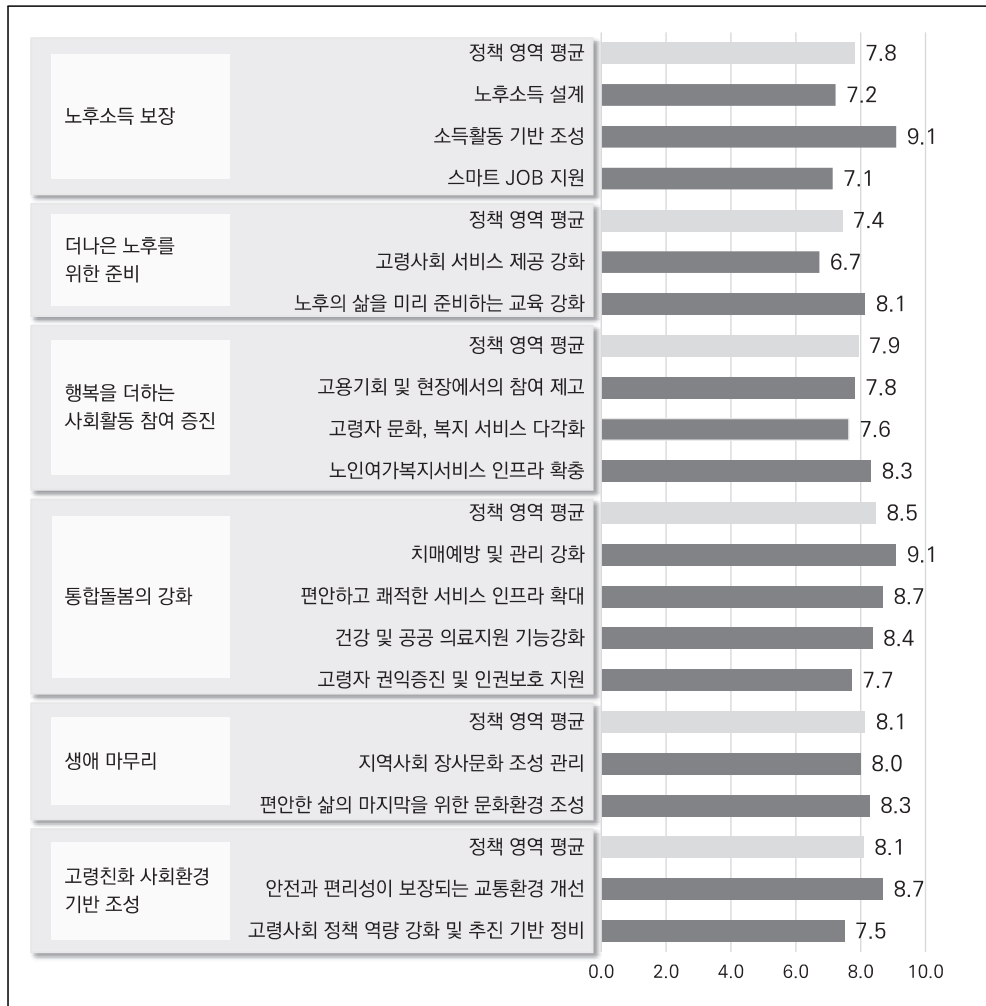
- 정합성이 가장 높은 과제는 노후소득 보장 영역의 ‘소득활동 기반 조성’ 과제와 통합돌봄 강화 영역의 ‘치매예방 및 관리 강화’ 과제였고 정합성이 가장 낮은 과제는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영역의 ‘고령사회 서비스 제공 강화’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통합돌봄 강화’ 영역의 과제 간 정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영역은 정합성이 낮게 나타남.

[그림 5-17]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정책 영역 및 과제간 정합성: 정책 영역 평균

(N=22, 단위: 점)



주: 정합성이 매우 낮다(1점)~정합성이 매우 높다(10점)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표 5-19〉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정책 영역 및 과제간 정합성: 정책 영역 평균

(단위: 명, 점)

정책 영역		사례수	평점	정책 영역 평균
노후소득 보장	노후소득 설계	(22)	7.2	7.8
	소득활동 기반 조성	(22)	9.1	
	스마트 JOB 지원	(22)	7.1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고령사회 서비스 제공 강화	(22)	6.7	7.4
	노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교육 강화	(22)	8.1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고용기회 및 현장에서의 참여 제고	(22)	7.8	7.9
	고령자 문화, 복지 서비스 다각화	(22)	7.6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22)	8.3	
통합돌봄의 강화	치매예방 및 관리 강화	(22)	9.1	8.5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 인프라 확대	(22)	8.7	
	건강 및 공공 의료지원 기능강화	(22)	8.4	
	고령자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지원	(22)	7.7	
생애 마무리	지역사회 장사문화 조성 관리	(22)	8.0	8.1
	편안한 삶의 마지막을 위한 문화환경 조성	(22)	8.3	
고령친화 사회환경 기반 조성	안전과 편리성이 보장되는 교통환경 개선	(22)	8.7	8.1
	고령사회 정책 역량 강화 및 추진 기반 정비	(22)	7.5	

주: 정합성이 매우 낮다(1점)~정합성이 매우 높다(10점)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 □ 정책 과제 간 정합성 낮은 이유

## ○ 노후소득보장 영역

- 노후소득 설계 a. 재무설계 교육은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영역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적절함. 노인이 되기 이전부터 준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 b. 시니어 직업교육훈련만 단독 제시하기보다 취업연계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적절함.
- 노후소득 설계와 시니어 직업훈련 교육 다양화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음. 직업훈련이 노후소득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취업지원과의 매개를 통해 연관성을 높일 수 있음.
- 노후소득보장 첫 번째 중과제의 경우 노후소득설계인데, 직업훈련 교육 다양화는 일자리와 연관되어 있어 2번째 또는 3번째 중과제와 더 어울림. 또

한, 현재 노후소득보장 영역의 세 가지 중과제는 모두 일자리 지원, 근로를 통한 소득 보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할 수 없는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대책은 무엇인지 추가적인 중과제 도출이 필요함.

- 스마트 JOB 지원-세부과제 간 정합성이 낮다고 판단됨. 중과제, 세부과제 모두 표현의 추상성이 높아서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려움.

#### ○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영역

- 고령사회 서비스 제공 강화와 고령사회 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 확산은 정합성이 매우 낮음.
- 고령사회 서비스 제공 강화-세부과제 간 정합성이 낮다고 판단됨. 세부과제 두 개가 서로 이질적이라고 판단되며, 이들을 중과제로 묶을 때 현재 중과제 제목은 너무 광범위한 표현임.
- 고령사회 서비스 제공 강화 관련 중과제에서 고령사회 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 확산은 고령친화 사회환경과 더 관련 깊어 보임.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대 과제는 노년기의 훈련, 맞춤형 생애교육, 다양한 직업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측면에서 (중과제) 스마트 JOB 지원은 이 대과제에 더 어울려 보임.

#### ○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영역

- 고령자 문화, 복지 서비스 다각화-복지카드 도입은 현금지원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기대효과가 있으므로, 서비스 다각화 보다는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로 '~서비스 이용 지원 강화 또는 접근성 강화'와 같이 중과제 제목 변경을 제안함.
-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경로당의 경우 지역사회속에서 사랑방기능과 액티브경로당, 지역사회 개방 경로당의 요구는 지역현황을 반영하여 유연한 대응이 필요함. 초고령사회 경로당의 이용 평균 연령이 80~90대로 높아지면서 과거 경로당에 나오시던 분들이 감소하고 새로운 5060세대는 눈길을 주지 않는 상황임 (지역에 따라서 5060세대가 들어와 액티브한 경로당도 존재하나 많지 않은 상황) 따라서 모두 액티브해야 하는 것이 아닌 유연하고 다양한 경로당환경 조성이 중요함.

○ 통합돌봄의 강화 영역

- 고령자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지원은 통합돌봄의 강화라는 대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 지 모호함. 노인인권은 고용/소득보장, 돌봄보장, 존엄한 생애 말기 등 다양한 대과제와 모두 연결되어 있으므로, 차라리 마지막 고령친화 대과제의 하나로 보는 것이 더 어울릴듯함.
- 건강 및 공공 의료지원 강화-장기요양노인을 위한 공공 서비스 인프라 확대의 경우, 중과제는 건강, 의료 측면에서 공공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는데 세부과제에서 그 대상을 장기요양노인에 한정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 그리고 공공서비스 인프라의 범위를 건강, 의료 영역인지, 장기요양 영역인지, 혹은 그 이상의 범위인지 명확히 기술하지 않았음. 중과제과 세부과제의 대상과 서비스 범위가 잘 맞지 않은 것 같음.

○ 고령친화 사회환경 기반 조성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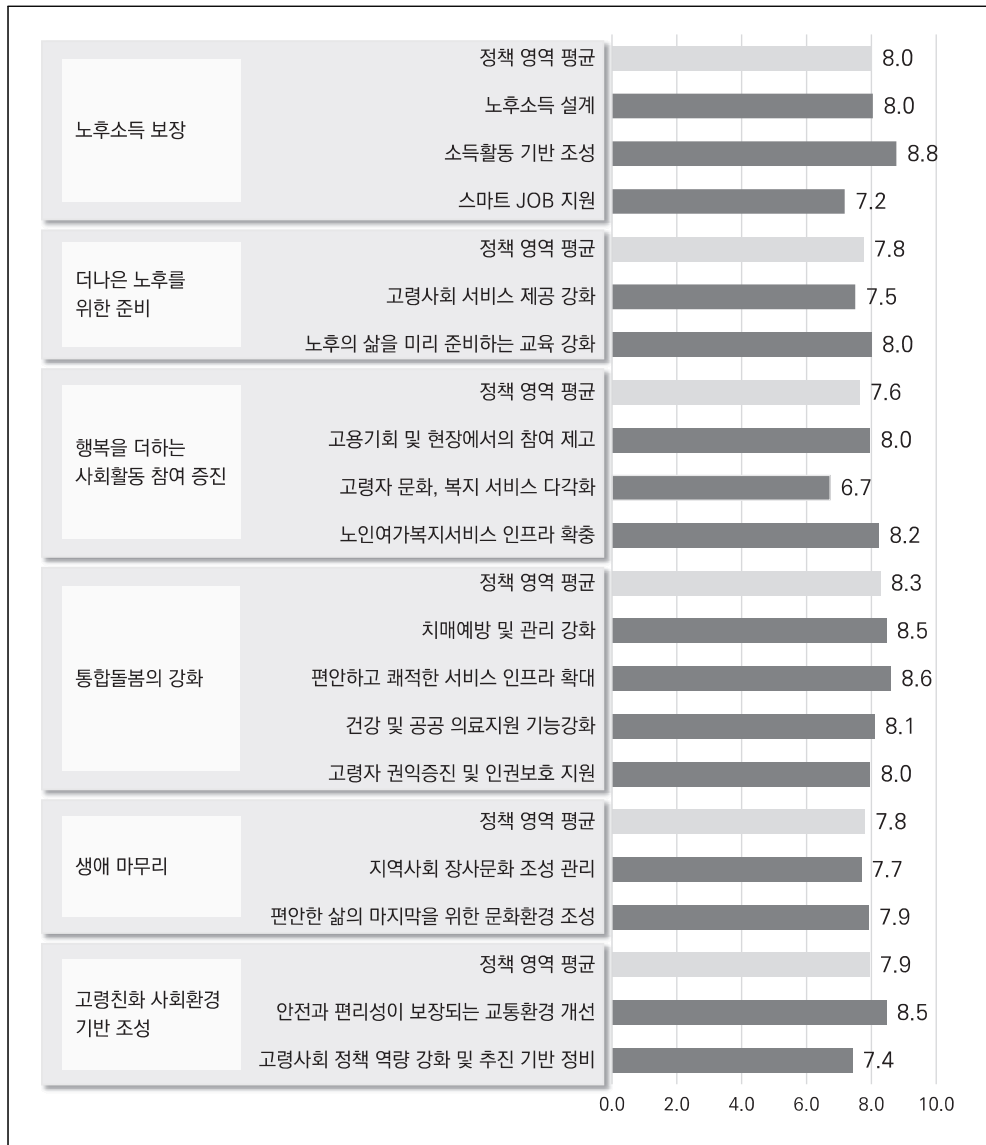
- 고령사회 정책 역량 강화 및 추진 기반 정비는 인천시 노인들의 실질적인 혜택 강화를 위해 그다지 실효성 있는 전략으로 이해되지 않음.

○ 고령화 대응 정책 영역 및 과제 간 포괄성에 대해서는

- 포괄성이 가장 높은 과제는 노후소득 보장 영역의 ‘소득활동 기반 조성’ 과제였고 포괄성이 가장 낮은 과제는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영역의 ‘고령자 문화, 복지 서비스 다각화’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통합돌봄 강화’ 영역의 과제 간 포괄성이 높았고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영역의 과제 간 포괄성이 낮았음.

[그림 5-18]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정책 영역 및 과제간 포괄성: 정책 영역 평균 추가

(N=22, 단위: 점)



주: 포괄성이 매우 낮다(1점)~포괄성이 매우 높다(10점)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표 5-20〉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정책 영역 및 과제간 포괄성: 정책 영역 평균 추가

(단위: 명, 점)

정책 영역		사례수	평점	정책 영역 평균
노후소득 보장	노후소득 설계	(22)	8.0	8.0
	소득활동 기반 조성	(22)	8.8	
	스마트 JOB 지원	(22)	7.2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고령사회 서비스 제공 강화	(22)	7.5	7.8
	노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교육 강화	(22)	8.0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고용기회 및 현장에서의 참여 제고	(22)	8.0	7.6
	고령자 문화, 복지 서비스 다각화	(22)	6.7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22)	8.2	
통합돌봄의 강화	치매예방 및 관리 강화	(22)	8.5	8.3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 인프라 확대	(22)	8.6	
	건강 및 공공 의료지원 기능강화	(22)	8.1	
	고령자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지원	(22)	8.0	
생애 마무리	지역사회 장사문화 조성 관리	(22)	7.7	7.8
	편안한 삶의 마지막을 위한 문화환경 조성	(22)	7.9	
고령친화 사회환경 기반 조성	안전과 편리성이 보장되는 교통환경 개선	(22)	8.5	7.9
	고령사회 정책 역량 강화 및 추진 기반 정비	(22)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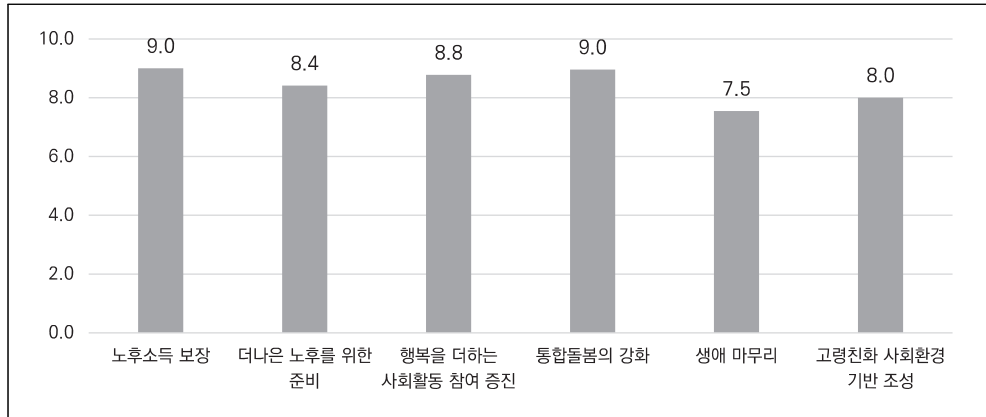
주: 포괄성이 매우 낮다(1점)~포괄성이 매우 높다(10점)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나. 확대 필요 세부 분야

- 기존 인천 고령화 정책 중 확대해야 할 정책 영역에 대해서는,
  - 노후소득 보장 영역과 통합돌봄 강화 영역,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영역이 높게 나타났고 생애 마무리 영역은 낮게 나타남.

[그림 5-19]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관련 확대해야 할 정책 영역

(N=22, 단위: 점)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10점)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표 5-21〉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확대해야 할 정책 영역

(단위: 명, 점)

정책 영역	사례수	평점
노후소득 보장	(22)	9.0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22)	8.4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22)	8.8
통합돌봄의 강화	(22)	9.0
생애 마무리	(22)	7.5
고령친화 사회환경 기반 조성	(22)	8.0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10점)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 □ 확대 필요 세부 분야

- 고학력, 숙련기술직, 전문직 고령자 대상의 인력풀 구축 및 관리, 취업지원 - 지식, 경력 등을 활용한 사회적 기여 활동 참여 기회 확대(봉사활동, 보람일자리 등)
- 노인특화시설 확충보다는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한 지역사회 시설 및 문화공간 확충
- 노인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추가 검토될 것을 제안함.

- 고령친화 주거환경조성 - 고령자 거주주택의 안전한 환경과 자립적인 이동과 생활유지를 위해 거주주택을 노화에 대응하여 주택을 개조하거나 낙후된 주택의 지역사회내 다른 주택(노인주거복지시설, 일반 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이동 지원 등 aging in place를 위한 정책이 추가될 필요
- 무엇보다 소득 강화에 대한 기반 마련이 필요함. 또한, 저소득, 저자산 고령자에 대한 소득, 의료 등 필수사항에 대한 지원이 필요. 주거지원 강화 필요
- 고령자의 주거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고령친화산업을 확대하여 지역의 니즈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Aging in Place 지원 정책, 세대간 교류 정책 필요
- 고령자 주거 관련 영역이 누락되어 보임.
- 향후 단독노인, 혹은 부부노인 등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주거 형태(소규모 임대아파트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통합돌봄의 강화에 다양한 세부 재가서비스 제공 정책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생애 마무리 정책에는 소득이나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영장례제도나 고독사 위험계층 대상 다양한 사업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에는 건강관련 정책(만성질환관리, 의료비 지원, 이웃이 서로를 돌보는 이웃지기 건강리더 등의 사업)들 포함 필요
- 첫째, 고령자 여가 활동할 때 이용하는 공간으로 식당, 생활권 공원, 아파트내 공터 비율이 높으므로, 고령자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가문화 시설을 확충하고, 여가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고령친화 사회환경 기본 조성 항목에 고령자 맞춤형 지원주택/공공주택 공급, 무장애 설계 적용 필요함.
- 시니어하우징 서비스 관련 부분이 빠져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시니어하우징 자체가 매우 낮은 공급을 보이고 있음. 인천의 경우 연금 수급률과 수급액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음. 즉, 인천지역의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함을 의미하며, 국가에서 혹은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하우징의 공급이 미래에 더욱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여



기서 나온 통합돌봄과 같은 양로 시설(치매 혹은 장애를 가진 노인)보다는 좀 더 활동적인 노인들이 즉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액티브 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계획과 확대가 중요해 보임.

- "1.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특히 급속한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과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함. 디지털 교육/디지털 환경에서의 노인인권보호/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 지원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음.
- 2. 돌봄/장기요양에서 공공서비스 확산도 중요하지만, 현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기관의 서비스 질과 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통합돌봄의 강화 대과제 아래 서비스 강화 관련 중과제가 있지만 지금의 세부과제로는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한 것 같음.
- 노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조성을 위한 폐교초등학교의 노인학교화, 아파트 신설시 노인가구-신혼가구-아동양육가구-딩크족 가구 등 다양한 세대가 공동주거가 가능하도록 주택 배정, 통합돌봄과 관련한 노인안심주택(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이 주거환경에서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제공이 가능한 공공부문 주택) 등이 필요함.
- 후기 고령노인이 늘어나고 있어 노인의 건강에 대한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도 필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질 필요. 덧붙여 길어진 노후에 대응하는 노인 주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시 정책으로 고려할 필요
- 여가활동 관련하여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어떤 방향으로 확대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며, 경로당의 이미지 개선과 활용방안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전 년도 과제로 WHO 및 주요국들(독일, 영국, 일본, 대만 등)의 최근 웰다잉 지원정책의 추세 및 특징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를 수행한 결과, 국제적인 추세는 지역의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돌봄 서비스 기관과 지원서비스 공공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해당 시스템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의료 및 돌봄서비스 지원과 웰다잉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 시스템을 통합 및 조직화하고 있었음. 그리고 이러한 통합화 및 시스템화의 주요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 및 노인 인구 증가에 따

른 대응 전략의 일환이었음. 인천시 역시 2050년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가 39.3%로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주요국의 정책 운영 사례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음.

- 고령자가 지역사회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통합돌봄 내 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중과제로 건강 및 공공 의료지원 기능 강화 정책이 포함 되어 있지만, 세부과제에는 장기요양노인을 위한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대 정책만 제시됨. 방문의료 등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함.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서비스 확대도 필요함.

#### □ 확대 불필요 세부 분야

- 생애 마무리는 지자체 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중요도나 시급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소득 없이는 나머지 항목도 향상되기 매우 어려우며, 특히 저소득, 저자산 고령자는 기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쉬움. 또한, 주거안정 없이는 다른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가중되기 때문에 무주택 혹은 시설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안정된 주거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
  - 인천시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주거급여 등의 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고령사회를 대비할 때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전반적인 영역 모두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만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생애 마무리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과의 비교 측면에서는 현재 인천 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때 공급 차원에서 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의 경우 확대 필요성이 낮다고 생각됨.
- 고령친화 사회환경 기반 조성 부분은 현재로서는 인천시에서 확대를 크게 고려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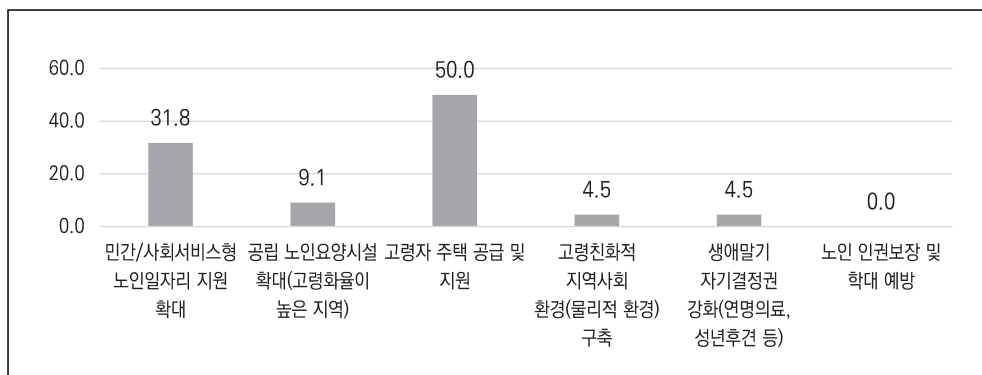
#### 다.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 정책 우선순위

○ 기존에 제시된 정책과제 이외에 인천 고령화 대응 관점에서 향후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응답은

- 1순위의 경우 고령자 주택공급 및 지원이 50%로 가장 많았고,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도 31.8%로 많았음.
- 2순위는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가 36.4%,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환경(물리적 환경) 구축이 22.7%, 고령자 주택 공급 및 지원이 18.2% 등으로 나타남.
- 종합해보면, 고령자 주택 공급 및 지원,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5-20]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관련 향후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정책과제\_1순위

(N=22, 단위: %)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표 5-22〉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관련 향후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정책과제\_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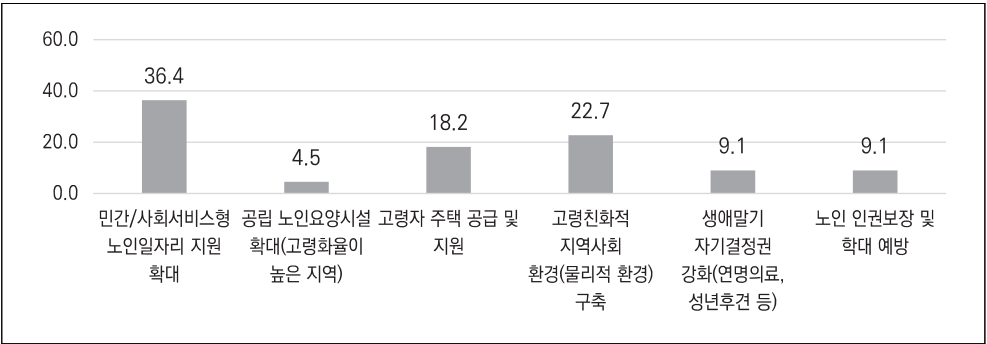
(단위: 명, %)

정책 영역	사례수	비율
계	(22)	100.0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7)	31.8
공립 노인요양시설 확대(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2)	9.1
고령자 주택 공급 및 지원	(11)	50.0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환경(물리적 환경) 구축	(1)	4.5
생애말기 자기결정권 강화(연명의료, 성년후견 등)	(1)	4.5
노인 인권보장 및 학대 예방	(0)	0.0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그림 5-21〕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관련 향후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정책과제\_2순위

(N=22, 단위: %)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표 5-23〉 인천 지역 고령화 대응 관련 향후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정책과제\_2순위

(단위: 명, %)

정책 영역	사례수	비율
계	(22)	100.0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8)	36.4
공립 노인요양시설 확대(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1)	4.5
고령자 주택 공급 및 지원	(4)	18.2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환경(물리적 환경) 구축	(5)	22.7
생애말기 자기결정권 강화(연명의료, 성년후견 등)	(2)	9.1
노인 인권보장 및 학대 예방	(2)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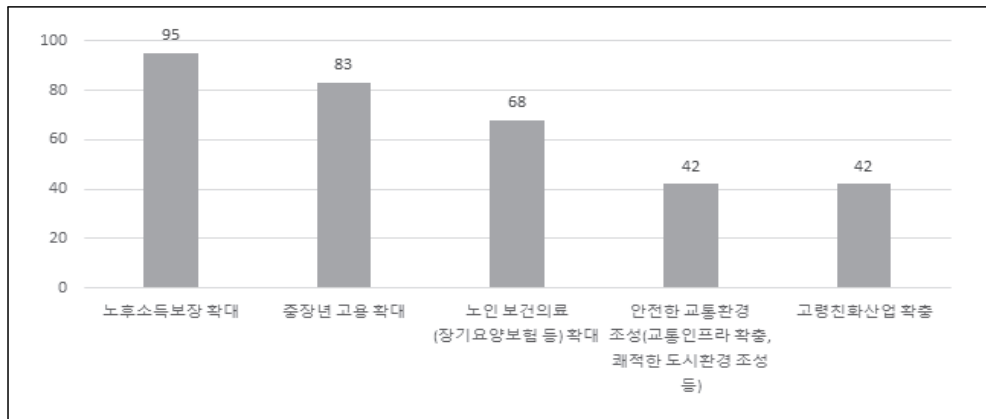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 인천의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였을 때 향후 고령사회 대응 분야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 노후소득보장 확대, 중장년 고용 확대, 노인 보건의료(장기요양보험 등) 확대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남.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교통인프라 확충,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과 고령친화산업 확충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남.

[그림 5-22] 향후 고령사회 대응 정책 분야의 우선순위 (종합)

(N=22, 단위: 점)



주: 종합 순위 점수는 1순위 응답을 5점, 2순위 4점, 3순위 3점, 4순위 2점, 5순위 1점으로 환산해 합산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표 5-24〉 향후 고령사회 대응 정책 분야의 우선순위 (종합)

(단위: 점, 순위)

정책 영역	종합 순위 점수	종합 순위
노후소득보장 확대	95	1
중장년 고용 확대	83	2
노인 보건의료(장기요양보험 등) 확대	68	3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교통인프라 확충,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42	4
고령친화산업 확충	42	4

주: 종합 순위 점수는 1순위 응답을 5점, 2순위 4점, 3순위 3점, 4순위 2점, 5순위 1점으로 환산해 합산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 □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 정책 1순위

### ○ 노후소득보장 확대

- 노년부양비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 속도, 세부지표별 광역지자체 공급 순위 등을 고려할 때, 노후소득보장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후기 고령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 확대 등 돌봄 기반을 갖추는 것도 우선과제임.
- 노인의 경제적 자립이 독립적 생활과 삶의 만족도를 위해 첫째 조건이라고 생각함. 그러한 측면에서, 노년기 소득 보장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함.
- 소득보장을 통한 안정된 노후로 연결, 고령화에 따라 유연한 고용(일정한 직장이나 사무실에 속하지 않고 다양한 일을하면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2030 세대의 잡노마드 개념 적용)으로 중장년의 지속적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건강유지, 고령친화환경 조성이 필요함.
- 지속적으로 언급하지만, 최우선 과제는 소득이 보장되어야 함. 물론 개인적으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인천을 포함한 전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월등히) 최고 수준임. 국가나 지자체에서 소득을 모두 보전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연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절반을 넘기 때문에 고용의 확대가 시급함. 또한, 중장년에서 실업을 하거나 하면 고령실업상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중장년에 대한 고용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고령자가 되어 지원하는 것보다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 것임.
- 노후 빈곤 개입: 노후소득보장 확대 노후 빈곤 예방을 위해 중장년 고용 확대 필요
- 국내 고령자들은 노후 소득보장 준비가 미흡하여 빈곤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인천시의 경우 타 영역 대비 소득보장 및 고용 영역이 부족해 보이므로 노후소득보장 확대를 최우선 순위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노년기 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서비스로서 보건의료 서비스와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함.

- 인천광역시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 빠르다는 것은 결국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함. 지역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인들이 빈곤하거나 저소득에 놓여있다면 부양비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음. 지자체 차원에서 노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노인일자리 확대 등).
- 노령인구에 진입하는 기존 40대, 50대 세대는 노후대비 경제적 준비에 충분한 기회가 없는 세대로 노후 소득보장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
- 총부양비의 급격한 상승 전망은 현재 인천의 고령화 정도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고령화 속도 면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빠를 것으로 예상됨. 고령화가 주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빈곤 문제와 자살 문제가 가장 큰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음. 그런 맥락에서 노후소득보장 확대, 그리고 소득보장과 관련된 고용 확대 그리고 의료 서비스 등의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 노인 및 노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의 소득보장과 함께 주거환경에서 자신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보건의료서비스+장기요양서비스의 연계/통합 제공임.
- 현재도 그렇고, 고령화가 더 심화될수록 경제적 상황은 매우 중요함. 특히 인천은 타 지역에 비해 연금수급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고령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인천시의 향후 노년부양비의 폭발적인 증가 전망을 고려할 때, 노후소득보장 확대와 중장년 고용 확대는 인천시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으로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짐. 특히, 통계에 따르면, 인천시 고령자의 공적 연금 수급률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27.4%)이고 고령자의 56%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 앞서 제시한 2개 정책의 추진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임.

○ 중장년 고용 확대

- 경제적 여건과 건강은 노후 삶의 질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기에 중장년의 고용을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 관련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중장년 세대의 노후준비가 중요한 시점으로 노년기로 진입하기 전 노후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고령화정책에 포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노인 보건의료(장기요양보험 등) 확대

- 노인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자체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돌봄에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주택환경 조성 등이 요구됨.
- 고령자가 가능한 오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노동참여는 사회적으로 경제성장의 바탕이 되고, 개인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며, 정부의 재정 수입 확대, 지출 감소에 영향을 미침. 다음으로는 보건의료 정책을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를 확충하여, 노인이 지역사회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노인이 머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할 수 있음. 교통 환경 등 인프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과 소득보장 확대가 우선이라고 봄. 고령친화산업 확충은 시장의 영역이고, 지자체의 개입으로 오히려 시장이 왜곡될 수 있으니 신중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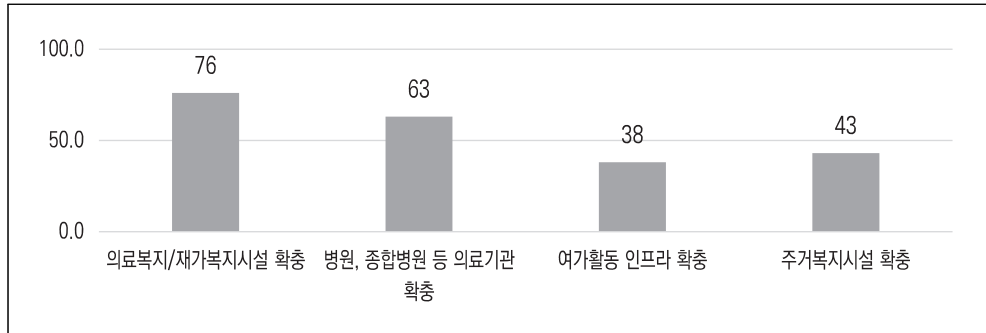
**라. 인천광역시 지역특성 고려 사업분야 우선순위**

- 인천광역시 군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추진 과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의료 복지재가복지시설 확충, 병원-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확충, 주거복지시설 확충, 여가활동 인프라 확충 순으로 나타남.



[그림 5-23] 인천광역시 군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추진 과제 우선순위 (종합)

(N=22, 단위: 점)



주: 종합 순위 점수는 1순위 응답을 4점, 2순위 3점, 3순위 2점, 4순위 1점으로 환산해 합산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표 5-25〉 인천광역시 군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추진 과제 우선순위 (종합)

(단위: 점, 순위)

정책 영역	종합 순위 점수	종합 순위
의료복지/재가복지시설 확충	76	1
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확충	63	2
여가활동 인프라 확충	38	4
주거복지시설 확충	43	3

주: 종합 순위 점수는 1순위 응답을 4점, 2순위 3점, 3순위 2점, 4순위 1점으로 환산해 합산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 □ 인천광역시 지역특성 고려 사업분야 1순위

##### ○ 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확충

- 사회서비스 관련 인프라 접근성이 열악한 농산어촌의 경우, 보건의료 시설 확충에 대한 고령자의 수요가 특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여가복지시설의 경우에도 농산어촌이 소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지원이 요구됨. 주거복지시설의 경우(제시된 것만으로는 어떤 시설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농산어촌의 자가 비율이 높고 자신의 집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비율도 높아 정책의 우선순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2군 지역이 섬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수요가 매우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질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의료기관 및 의료복지 등 높은 의료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며, 도시지역에

비해 여가활동 인프라가 낮을 것이므로 이를 3순위로 선택함. 주거의 경우 도시에 비해 섬 지역의 상황이 나을 수도 있음.

- 고령화가 매우 높은 섬지역은 상대적으로 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임. 특히 병원과의 접근성이 중요한 노년의 시기 동안 고립된 섬에서 지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임. 의료기관 확충 및 의료복지 시설의 확충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이런 의료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서비스 등도 제공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고령화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의료기관과 복지, 돌봄서비스의 수요 증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인천광역시 내에서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확충과 의료복지/재가복지시설 확충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임.
- 병원, 종합병원 등 보다는 보건소 역할 강화, 재택의료센터와 같은 방문진료/방문간호 인프라 확충, 서비스 활성화를 제안함.

#### ○ 의료복지/재가복지시설 확충

- 고령화에 따라 의료적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의료복지, 재가복지시설의 확충이 중요하며, 더불어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기답게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여가활동 지원이 중요함. 병원 등 의료기관은 필수적인 요소로 적절한 수준은 갖추어야 할 것임.
- 지역차이와 복지차이 간 간격이 가장 큰 것이 의료 및 돌봄서비스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섬지역의 경우 서비스 접근성이 열악한 특성이 있음. 고령자의 경우 특히 의료/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 관련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노후화된 주택의 성능 개조 및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병원 등 의료기관의 확충도 필요할 수는 있지만, 소위 슈퍼고령사회에서는 자기 집/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사에 의한 방문 의료/방문진료 및 간호사에 의한 방문간호가 더 중요함. 그런 의미에서 노인안심주택과 같은 주거복지시설의 확충과 함께 방문진료/방문의료/방문

간호 스테이션과 같은 자기 집/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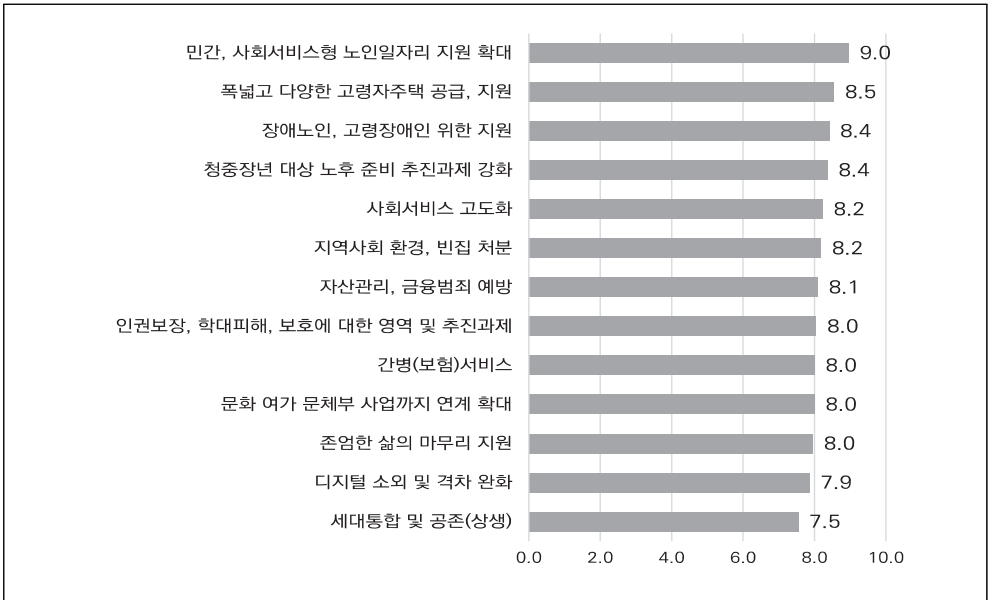
- 섬지역의 경우 충분한 의료와 보건복지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임. 선택지가 시설에 대한 확충밖에 없어서 체크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무조건적인 시설의 확충보다는 건강 등의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도심지역의 병원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노인이 지역사회에 더 오래 거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서비스 중 의료복지/재가복지시설 확충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됨.

#### 마. 세부 정책 현안 과제 중요도 평가

- 인천시의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출한 정책 현안에 대하여 중요도를 질문한 결과,
  - 민간,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가 9점으로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세대통합 및 공존(상생)은 7.5점으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가장 낮았음.

[그림 5-24]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현안 과제 중요도

(N=22, 단위: 점)



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10점)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표 5-26>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현안 과제 중요도

(단위: 명, %)

정책 영역	사례수	평점
민간,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22)	9.0
간병(보험)서비스	(22)	8.0
노인복지법에서 협소하게 규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보다 폭넓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고령자주택 공급, 지원	(22)	8.5
(대중교통, 교통사고, 병원 동행 등), 지역사회 환경, 빈집 처분	(22)	8.2
세대통합 및 공존(상생)	(22)	7.5
청장년, 중장년 대상 노후(생활)준비 추진과제 강화	(22)	8.4
문화, 여가는 노인복지법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까지 연계하여 확대	(22)	8.0
자산관리(상속, 증여),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예방	(22)	8.1
디지털 소외와 격차 완화	(22)	7.9
장애노인 또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22)	8.4
인권보장, 학대피해, 보호에 대한 영역 및 추진과제	(22)	8.0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사후 장사시설에 대해서 웰다잉, 고독사, 호스피스, 연명의료 등으로 확대	(22)	8.0
사회서비스(원) 고도화, 고령친화산업, 복지기술 등 활용	(22)	8.2

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10점)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 인천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와 그에 비교해 떨어지는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후기 고령자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일자리 지원과 돌봄 지원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임. 즉, 민간,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와 간병(보험)서비스, 디지털소외와 격차 완화, 장애인/고령장애인 지원, 생애 마무리 지원 등이 중요성이 큰 정책 과제로 판단됨. 사회서비스(원) 고도화, 고령친화산업, 복지기술 등 활용의 경우, 향후 고령자를 위한 사회서비스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정책 과제임.
- 인천시의 경우 '소득보장 및 고용' 영역을 좀더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고려가 부족한 '고령자 주거' 영역에 대한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장애인/고령장애인과 고령자의 인권보장, 학대피해, 보호 영역은 고령기 노후 삶의 질과 존엄한 삶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임.
- 지자체 차원에서는 노인의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노인일자리 지원, 또한 이들의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고령자주택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노인의 욕구가 높은 돌봄 및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영역에 대한 정책적 영역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임. 우선 이러한 상황이 마련되고 난 뒤의 세대통합이나 문화 및 여가, 디지털 소외와 같은 영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의료기관이나 요양원/양로원 등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자기 집/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IT기술이 접목된 노인안심주택 및 세대공존형 주택이 필요하고, 자기 집/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소득문제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아야 하고, 또한 자기 집/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서비스+장기요양 서비스+일상생활 지원 사회서비스가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인천 시민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과 웰다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의 안정성 확보와 현명한 자산관리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준비된 노년과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공 지원서비스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노동시장 참여 확대, 노후소득보장 확대, 의료 및 돌봄서비스 확대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함. 위에 제시된 간병 서비스의 경우에는, 민간 보험 방식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지 우려됨.

## 바. 고령사회 대응정책 추진 추가 고려사항

- 정책 과제 마련 및 선정 시 정책대상인 고령자의 수요나 욕구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경기, 인천권은 비교적 전국대비 고령화율이 낮은 편임. 따라서 다른 지역보다 고민할 시간이 더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일과 여가의 균형을 이룰수 있도록 사회변화에 따른 일의 개념의 재정의, 노동(일)유연화에 대한 생각을 나눌수 있는 계기와 장을 마련하는 것이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준비의 하나일 것임.
- 인천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화 심화 속도가 빠를 것이므로 청년층이나 중년층이 인천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인천에 유입할 수 있는 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이 필요
- 인천시만의 노인실태조사가 필요할 수 있음. 보사연에서 수행하는 노인실태조사도 있지만 이는 시도단위에서 분석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구 및 군 단위의 분석이 가능한 노인실태조사가 필요함. 여기는 소득, 의료, 주거 등이 필수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며, 가급적 노인의 입장에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함. 현황 파악이 문제 해결의 첫번째 열쇠임을 되새길 필요가 있음.
- 인천은 개항이후 가장 빠르게 발전한 만큼 가장 빠르게 지역 간의 도시 분화와 빈부격차가 발생함. 특히 소외된 고령자들이 구도심을 중심으로 모여 살면서 노인들의 거주구간은 슬럼화하는 현상을 보임. 따라서 인천시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은 급변하는 인구 구조 대응 측면에서 매우 시급한 정책과제임. 정책 입안 시 단기, 중기, 장기를 구분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의 전략이 필요하며 주변 경기도나 서울과 연계하여 수도권의 젊은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정책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가령 낮은 임대료의 청년주택제공, 무료 대중교통

비, 수도권과 연계된 대중교통강화를 통해 베드타운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베드타운은 지방재정의 강화와 함께 주변상권을 강화할 수 있음.

- 인천은 시의 규모나 인구수에 비해 노인복지수준이 낙후되어 있음. 특히 대한 노인회의 영향력이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여 전문성이 떨어짐.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대한노인회 위탁이나 시직영을 지양하고 전문적인 민간 운영 체제로의 전환이 중요함.
- 인천광역시외의 경우 섬 지역을 포괄하는 공공서비스 마련과 정책 확대를 통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시의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라 판단됨.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 정보를 상세히 포괄하는 통계 구축과 자료 구축 시스템이 좀 더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통계 및 세부적 정보 구축이 전제 되어야만 좀 더 체계적이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 운영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인천 고령자의 종사 직종을 보면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공적연금 수급률은 낮고 기초연금 수급률도 평균보다 높음. 따라서 중고령자부터 노후생활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노인들의 비율은 고령이 될수록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공공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할 뿐 아니라 부족한 장기요양인력을 확보할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임.
-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하위 지역별(권역별) 서비스 제공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노인복지와 관련된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초빙해서 상시적으로 인천시 노인복지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제로 추진하는 것이 요구됨. 인천시 노인복지의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거의 없음.







## 제6장

###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추진체계와 중점 추진전략

제1절 배경

제2절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추진체계

제3절 추진전략별 중점 세부과제

제4절 분야별,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제5절 인천광역시 관할 자치구/군 인구정책 주요 방향



## 제 6 장

#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추진체계와 중점 추진전략

### 제1절 배경

#### □ 인천광역시 지역 특성 분석 요약

- 첫째, 인천은 상대적으로 인구 이동이 빈번함. 즉, 서울 인근에 위치한 대도시이지만,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높지 않아, 젊은 부부 등의 유입이 적지 않은 지역임.
- 둘째, 송도·영종·청라·검단 등 신도시 개발지역이 곳곳에 있고, 도심 내에서도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주거밀집도가 높아지는 도시여서 신도시/도심 재개발지역과 원도심/재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 간 인구변동의 격차가 작지 않은 지역임.
- 셋째, 도심 곳곳에 공업지역이 산재한 곳이고, 제조업 중심의 공업지역이 쇠락하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부평구), 공장과 주거지가 혼재한 지역(미추홀구, 남동구), 공장과 주거지가 분리된 지역(동구) 등 주거지역과 공장지역이 혼재된 특성을 띠는 지역임.
- 넷째, 8개의 도시지역 자치구와 2개의 농어촌지역 섬인 군으로 구성되어 있음. 용진군의 경우 섬들이 흩어져 있어서 하나의 통일된 특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강화군의 경우 큰 하나의 섬을 중심으로 한 군지역이지만, 육로로는 인천시와 직접 연결되지 못하고, 반드시 김포를 거치거나, 아니면 다리를 건너 들어가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이동이 쉽지는 않은 지역임.

#### □ 비전, 인식, 목표의 의미와 추진전략 구성

- 향후 5년 간(2024-2028년)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비전, 인식, 목표 구성은 급변하는 인구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관점을 최우선적으로 견지한 데 기인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 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

는 전국가적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1) 관할 지역 간 인구 규모, 인구 구조 양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 2) 높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지정학적 위치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외국인, 이민자 유입 규모가 큰 특성을 고려함.

○ 인천광역시는 무엇보다도 지역 간 양극화 해소 및 (이민자-내국인)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이해 하에 하기 **비전**을 제시함.

- 비전에서의 다양성은 내국인과 외국인/세대 간 다양성/ (관할 구군) 지역 간 다양성 등 인천광역시 내 존재하고 있는 여러 다양성을 복합적으로 의미함.
- 특히 이 중 지역 간 다양성 및 이에 따른 격차를 해결하여야 할 현안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발전의 동력으로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전제하고 긍정적인 다양성의 힘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 이를 위한 기본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음.

1.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 독일의 인구정책 표제 “모든 연령이 행복하게....”를 벤치마킹함. 인천광역시 내 어디서나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출산 및 고령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강화함.
2.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인천광역시가 현재 그리고 향후 경험할 인구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작점은 무엇보다도 인천광역시의 인구 변동이 정책 수요이자, 정책 추진 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며, 이를 위해서는 두 요인 간 유기성을 최대한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전략 수립이 요구됨.
3. **(모두를 고려하고 배려하는 정책)** 인천광역시 내 관할 지역 간 인구 변동 및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완화하여 지속적인 상생기반을 구축함. 더불어 사는 공존 사회 구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내 지리적, 사회문화적 인접 지역 간 협력 체계를 추구하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다분함.

- 또한, **인식**은 비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 수립된 목표를 설정하는 기본 방향으로, 비전과 목표 간 가교(bridge) 역할을 수행
- 아울러 **추진전략**은 상기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요 전략을 의미하는 바, 1. 일자리, 2. 주거, 3. 일-생활 균형, 4. 자녀 양육, 5. 임신/출산, 6. 청년 지원, 7. 교육, 8. 노후 생활, 9. 노후 건강, 10. 외국인(다문화) 지원, 11. 인구구조 변화 대응, 12. 인구 고령화 대응의 총 12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음. 인구변동 및 저출산 대응 전략은 1-7, 고령사회 대응 전략은 8-9이며, 10-12는 기반 강화 범주로 각각 구분됨.

## 제2절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추진체계

### □ 비전

- "다양성을 상생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인천"

### □ 이해

- "협력과 공존의 지역사회 표본, 인천광역시"

### □ 목표

1.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
2.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3. 모두를 고려하고 배려하는 정책

### □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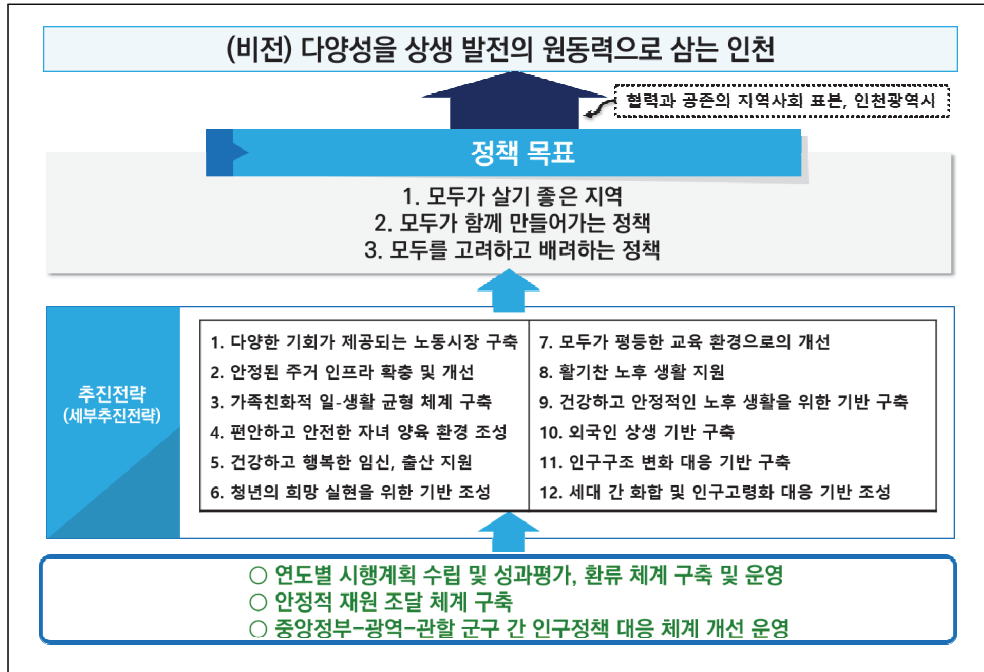
1.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는 노동시장 구축
2. 안정된 주거 인프라 확충 및 개선
3. 가족친화적 일-생활 균형 체계 구축

4. 편안하고 안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
5.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 지원
6. 청년의 희망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7. 모두가 평등한 교육 환경으로의 개선
8.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
9.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기반 구축
10. 외국인 상생 기반 구축
11. 인구구조 대응 기반 구축(거버넌스 및 관련 현안)
12. 세대 간 화합 및 인구고령화 대응 기반 조성

□ **거버넌스 체계**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환류 체계 구축 및 운영
- 안정적 자원 조달 체계 구축
- 중앙정부-광역시-관할 구군 간 인구정책 대응 체계 개선 운영

[그림 6-1]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추진체계



자료: 저자 작성함.

#### □ 중점 세부과제 구성 기본 방향

-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정책의 실질적 추진 가능성 최우선적으로 고려<sup>12)</sup>
- 정책의 추진 여건(지역 잠재력) 및 수요와의 유기성 제고
- 기존 추진 정책 검토에 따른 개선 방향 반영(특히 정책 사각지대 해소)
- 집중에 따른 소수 수혜자보다는 다수 수혜자가 두루 누리는(수혜자 확대) 정책
- 정책의 수요 측면 고려 및 행동 변화 유발 수준의 정책 확대 방향
-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인천형 모델 구축
- 타 시도의 우수 사례 부분적 벤치마킹

12) 무분별하고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 최대한 지양, 실현 가능성 우선 고려

### □ 추진전략별 중점 세부과제 도출 과정

- 첫째, 인천에서 기 추진된 저출산, 인구 변동, 고령사회 대응 직, 간접적 관련 유관계획 검토 사항을 기반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와의 정합성 등을 제고하여 유지, 강화, 신설되어야 할 정책 영역 등에 대한 논의 수행
-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수립 관련 SWOT 분석을 수행하여, 인구변동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강/약점과 기회/위협 요인을 정리하여 참고

〈표 6-1〉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수립 관련 SWOT 분석 결과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입지 및 신도시 적시 개발 등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인구 증가 지역</li> <li>• 높은 외국인 인력 활용 가능성 및 관련 적극적 시정 방향에 따른 실효성 있는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가능</li> <li>•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가격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원도심 개발 등의 관련 맞춤형 정책 지속 추진</li> <li>•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입에 따른 재정자립도 증가: 자체적인 정책 추진 기반 강화(2023년 기준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인구정책 대응 후발: 종합적인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 경험 적음</li> <li>• 지리지형적 특성에 따른 인구 규모 및 인구 구조 변화의 관할 지역 간 격차(양극화) 심화</li> <li>• 균형발전지표 주관지표 전국 평균 하회, 높지 않은 주민 정책 체감도</li> <li>• 중소기업 입지에 따른 상대적으로(서울과 비교하여) 낮은 일자리의 질(임금 수준, 근로환경 등): 젊은층의 주된 유출 요인으로 지적</li> </ul>
기회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생활인구 증대 가능성</li> <li>• 국제관광도시 선정 및 국제공항 입지 등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li> <li>•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향후 높은 발전 가능성 기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적으로 급격한 수준의 인구 초고령화 심화 전망에 따른 복지 수요 및 재정지출 증대</li> <li>• 상대적으로 높은 지대와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에 따른 기업 입지 가능성 저하</li> </ul>

자료: 저자 작성함.

- 셋째, 첫 번째 및 두 번째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인구변동, 고령사회 정책 전문가 총 46인(저출산 및 인구 분야 24인, 고령사회 분야 22인), 인천광역시 내 전문가 각 분야별 8/4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sup>13)</sup>
  - 인천광역시의 인구변동 대응 측면에서 정책 영역별 중요도, 시급성, 조정(확대 또는 신설)되어야 할 정책과제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3) 본 보고서 5장 참고



- 앞선 세 범주의 논의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를 도출하되,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된다는 점을 염두하여 세부과제를 선정
  - 단적으로, 고령사회 분야 소득보장 지원 정책의 경우, 전문가 조사결과에서는 정책의 중요성 및 시급성에 있어 높았으나, 제도의 설계 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차원의 접근이 선행되고 보완적으로 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요 과제로 포함시키지 못함.

#### □ 추진전략별 중점 세부과제

: 5개년 지속 추진 및 세부사업 내 세부사업 계획 수립(시행계획 등)

##### 1.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는 노동시장 구축

- 지역인재 채용 인센티브 제공
-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 청년 신규 입직자(뿌리, 반도체 분야) 장려금 확대

##### 2. 안정된 주거 인프라 확충 및 개선

- 청년 주거취약계층 지원
-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상향 지원
- 전입 근로자 및 타지 유입 대학생 주거 지원
- 청년 및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연계 지원

##### 3. 가족친화적 일-생활 균형 체계 구축

-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확대(개인 및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에서 민간 기업(중소), 자영업, 특수고용종사자 등으로 육아휴직 제도 이용 대상 확대

4. 편안하고 안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

- 다자녀우대정책 확충: 유자녀 또는 아동 전체로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
- 출산, 입양 지원금의 지역화폐, 현물, 바우처, 주택 및 금융상품과의 연계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상생효과 유도
- 초등학교 이후 (방과후)돌봄에 대한 지원(예: 늘봄학교 연계 추가 지원(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충 등))
- 공공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지원 확대

5.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 지원

- 난임, 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
- 생애초기건강관리 자체사업 추진 및 확대

6. 청년의 희망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 청년 직업훈련 지원 확대 및 인천 취업 연계 강화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인천형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확대 프로그램 운영

7. 모두가 평등한 교육 환경으로의 개선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방송 연계 인프라 구축
- 2자녀 이상 가구 온라인 교육 참여 바우처 지원 사업

8.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내실화
- 신노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연계
- 문화여가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대
- 노후준비 지원 강화
- 취약 신중년 자녀 지원 사업

9.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기반 구축

-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 취약 고령자 건강 지원 강화
-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지원

10. 외국인 상생 기반 구축

- 외국인 자녀 지원
- 한국국적 미취득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유학생의 정착 지원

11.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반 구축

-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생활인구 유입 제고
- 도서 지역 내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 서울, 경기로 출퇴근하는 생활인구의 교통 지원, 베드타운 성격을 지닌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 구축
- 세컨하우스 관련 지원
-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모색

12. 세대 간 화합 및 인구고령화 대응 기반 조성

- 유희시설 활용한 세대 통합 및 화합 인프라 확대
-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지속 개선
- 취약 고령인구 정주여건 개선 사업 확대

### 제3절 추진전략별 중점 세부과제

#### 1.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는 노동시장 구축

##### 1) 경제자유구역 내 중소기업 지역인재 채용 인센티브 제공

###### □ 필요성(추진배경)

- 청년층의 지속적인 서울로의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개선 필요
-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중소기업 고용(일자리)의 질을 보다 제고하고 청년층의 지원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인재 채용 인센티브 지원 제도 구축 필요
- 기존에 추진되었던 정책의 양적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원: 일자리의 질적 제고와 청년층의 고용 환경 개선에 따른 유출 방지 목적

######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연 20개 기업
- 사업대상 :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중소벤처기업 20호(선정)
- 사업비 : 2,000백만 원/연
  - 산출기초 : 100백만 원×20호=2,000백만 원
- 주요내용 : 지역 인재 신규 채용 시 월 임금 일정 기간(6-12개월) 지원, 기업 비품 및 전기세 일부(특정기간) 지원, 신규 직원 교통비 일정 기간 지원, 기업 유류비 일정 기간 지원 등, 지원 대상 기업은 공모로 진행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100 (중복 가능)	20	20	20	20	20
사업비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 추가 고려 사항

- 고용안정자금 일시 및 특정 기간 부분 지급(기업 지원) 형식과 개인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2)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 □ 필요성(추진배경)

- 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담긴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을 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7월 10일 시행
- 인천광역시는 강화군,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이 가능함. 지정 대상은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으로(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으로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 지방정부가 기업과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방정책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정함.
- 인수위의 지역균형발전비전을 고려할 때 인천광역시는 특히 “인천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과 관련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2호/년
- 사업대상 :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 사업비 : 2,000백만 원(시비 매칭 및 지원 이전 인프라 구축 등)
  - 산출기초 : 1,000백만 원×2호=2,000백만 원
- 주요내용 :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에 따른 기업 세제 혜택(시비를 통한 추가 지원) 등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10(중복 가능)	2	2	2	2	2
사업비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 추가 고려 사항

-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이전 대상 부지 확보, 관련 인프라 구축 시 시설물 관리, 안전시설 및 인허가 사항 관련 검토 필요 등

## 3) 청년 신규 입직자(뿌리, 반도체 분야) 장려금 확대

## □ 필요성(추진배경)

- 기존에 추진되었던 신규입직자 경력형성장려금 지원 사업\*이 ‘고용안정 선제 대응패키지 지원 사업’ 예산 전액 삭감(‘24년 고용노동부 정부예산안 발표(‘23. 8.29.))으로 중단됨.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중 장려금 사업

- 23년부터 지역형플러스 일자리사업 신설로 청년 신규 입직자(뿌리, 반도체 분야)에 대한 장려금 지원(12개월, 총400만원 지원)
- 정책의 행동 변화를 유발하고, 청년층의 인천 내 노동시장 이탈 방지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년 간 800-1,000만원 지원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

##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미정
- 사업대상 : 청년 신규 입직자(뿌리, 반도체 분야)
- 사업비 : 1,200백만 원(신설 지역형플러스 일자리사업 확대)
- 주요내용 : 인천 뿌리·반도체 내일채움공제, 인천 뿌리·반도체 경력이음 채움공제 지원 규모 증대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	-	-	-	-	-
사업비	9,000	1,200	1,500	1,800	2,100	2,400

## □ 추가 고려 사항

- 현재 지원 대상자인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식서비스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3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연소득이 기준중위소득(3,741만원)의 150% 이하) 확대 내지는 지원 금액 증대를 위한 추가 논의 필요

## 2. 안정된 주거 인프라 확충 및 개선

### 1) 청년 주거취약계층 지원: 매입임대 사업

#### □ 필요성(추진배경)

- 청년들은 학업을 마치고 직장에 입사하거나 초기 경력 단계에 있을 때가 주거를 위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며, 그 중 주거비용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함
- 안정적인 주거는 청년들의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가능하게 하며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통해 취업과 사회활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음
- 주거 문제는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으며, 주거 안정성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음.

####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연간 100호
- 사업대상 : 만 19~39세 사이 청년
- 사업비 : 30백만 원×100호=3,000백만 원/연
- 주요내용 :
  - 기존 주택을 매입 후(평균 매입비용 1억원 예상) 저소득가구 대학생·청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70% 수준)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는 것으로 1호당 3천만원 정도의 예산투입을 가정함.
  - 사업대상인 만 19세~39세의 청년에게 신청을 받아, 추천을 통해 공급하며 소득조건(부모 포함여부), 거주지 조건(인천 거주자 한정 또는 타 지역 출신자 우대 등)의 고려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주체는 인천광역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도시개발공사가 수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500	100	100	100	100	100
사업비	15,000	3,000	3,000	3,000	3,000	3,000

#### □ 추가 고려 사항

- 1호당 매입가격의 70% 정도로 임대하면서 30% 정도의 재정투입이 예상되나, 자치단체 또는 도시공사가 해당 부동산을 자산의 형태로 소유하는 것이므로, 향후 잠재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매입하는 방식으로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2) 청년 주거취약계층 지원: 청년 주거채움(인프라 지원 사업)

### □ 필요성(추진배경)

- 청년층의 서울 및 인근 수도권 지역의 이주를 방지하고 지역 내 장기적 정주 유인 필요
- 타 지역 대비 우수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무엇보다도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지역 내 계층 간, 청년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인천광역시만의 독자적인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수립, 추진할 필요

###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청년 주거취약계층 대상자 1천여 명
- 사업대상 : 매년 2백 명 선정
- 사업비 : 400백만 원/연
  - 산출기초 : 2백만 원×200명=400백만 원
- 주요내용 : 청년 주거채움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도배, 수리 등의 내부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창문 등의 외부 단열 시설 지원, 방범용 창틀 지원, 자물쇠 등 보안 지원, 소화기 등 안전 지원 등
- 주거취약계층은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기준에 맞게 선별하며, 지역 자원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갖춘 우수한 소상공인 및 영세업체를 지원사업의 수행 대상업체로 지정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대상자	1,000	200	200	200	200	200
사업비	2,000	400	400	400	400	400

### □ 추가 고려 사항

- 취약계층의 수요 파악을 통한 핀셋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적극 고려할 필요



## 3) 신혼부부 대출이자 상환지원: 신혼 주거채움 플러스

## □ 필요성(추진배경)

- 1인 가구 대응을 위한 청년 주거채움 사업은 인프라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면, 신혼부부는 자금적 측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요구됨.
- 청년은 미래 주거지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인프라 개선 사업은 주거지 탐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인프라 지원 사업이 타당함.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주거지 탐색과 함께 미래 정착 주거지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혼부부의 임차 선택 및 자가 소유 시 혜택을 제공한다면 주거지 결정의 유인책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신혼부부는 지역 정주의 의도가 다분하며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자가 소유, 안정적 주거를 기반으로 한 친출산 환경 조성 필요

##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1,000호이며, 주거취약계층 우선 지원(최대 2회)
- 사업대상 : 현재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 사업비 : 3,000백만원
  - 산출기초 : 3백만원×1,000호=3,000백만원
- 주요내용 : 시중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신혼부부의 거주년도, 자녀 유무,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등 지원함(최대 3백만원). 고용사업과의 복합 연계를 통해서 직장에서 내주도록 지원하는 형태도 가능함.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업비	15,000	3,000	3,000	3,000	3,000	3,000

## □ 추가 고려 사항

- 개별가구의 가계 부채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4) 전입 근로자 및 타지 유입 대학생 주거 지원: 전입 근로자

## □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 인천광역시 입지 중소기업 중 타지에 연고를 둔 근로자 대상 주거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이들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
- 인천광역시의 일자리 환경 중 주요 요인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바, 인천광역시의 정책 추진 여건 등의 정합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정책 과제 추진 요구

##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100인/연
- 사업대상 : 인천광역시 관할 자치구/군 기업 근로자 중 타지 주민등록 근로자
- 사업비 : 200백만 원(산출기초 : 100인×200만 원/년=200백만 원)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소재 기업 근로자 중 타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 전입시 주거자금 지원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500(중복 가능)	100	100	100	100	100
사업비	1,000	200	200	200	200	200

## □ 추가 고려 사항

- 주거 지원 자금의 일시금 지급과 월세 등 분할 지원 방안 검토하여 택일 필요

## 5) 전입 근로자 및 타지 유입 대학생 주거 지원: 타지 유입 대학생

## □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 인천광역시 입지 대학교를 대상으로 타지에 연고를 둔 학생 대상 전입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200인/년
- 사업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중 타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 사업비 : 200백만 원(산출기초 : 200인×100만원/년=200백만 원)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에 유입하는 경우 주거 관련 지원금 지급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1,000 (중복 가능)	200	200	200	200	200
사업비	1,000	200	200	200	200	200

## □ 추가 고려 사항

- 정책대상자인 대학생 대상 조사를 통해 일시 지급 주거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선호도 파악 후 정책 설계 필요

6) 청년 및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연계 지원

□ 필요성 (또는 추진배경)

- 2023년 3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정책(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9232호, 2023.3.14. 일부개정) 제36조의3)이 시행됨.
  - 이는 당초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만 해당되었던 것이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이라면 누구나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해 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상기 중앙정부 정책에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감면을 연계하여 제 공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인구 변동 및 저출산 양상에 선제적이고 보다 정책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 업 량 : 미정
- 사업대상 : 인천광역시 내 청년(18-39세<sup>14)</sup>) 및 신혼부부 중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이들(신청)
- 사 업 비 : 추후 산출 가능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내 청년(18-39세) 및 신혼부부 중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일시적 재산세(일부~전액) 지원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	-	-	-	-	-
사업비	-	-	-	-	-	-

□ 추가 고려 사항

- 생애최초 주택 인정 기준의 명확한 고지 및 해당 사업 신청 독려 체계 구축 필요

14)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1항의 청년 연령 참조

### 3. 가족친화적 일-생활 균형 체계 구축

#### 1)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확대(개인 및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 □ 필요성(추진배경)

-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확산하여 근로자가 직장가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및 사업운영을 통해 가족친화 직장문화 형성을 위한 '가족친화기업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
- 무엇보다도 그간 추진되어 온 가족친화인증기업제도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 필요

#####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연 50개 기업
- 사업대상 : 가족친화(재)인증 기업 50호(선정)
- 사업비 : 5,000백만 원/연
  - 산출기초 : 100백만 원×50호=5,000백만 원
- 주요내용 :
  -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준비를 지원하고 기업환경 및 근로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친화제도 지원
  -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동안 인증기준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고 가족친화 경영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 및 관리 체계화
  - 가족친화인증 준비를 위한 정부인증 획득 지원: 가족친화인증을 위한 국가수준인증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관내기업 대상 직장교육 지원, 가족친화 경영 등 공유
  -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임직원 대상 인센티브 발굴·지원
  - 중소기업 활용 가능 인센티브 내 중앙정부(금융위, 과기부, 문체부, 고용부 등) 인센티브 이외 인천광역시 일자리 사업 인건비 지원 신설(확대)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250 (중복 가능)	50	50	50	50	50
사업비	2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 □ 추가 고려 사항

- 현재 인천광역시 가족친화기업 기업 인센티브 현황 파악 및 개인, 기업 인센티브 신설 및 확대 필요, 조례 반영 등

- 2)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에서 민간 기업(중소), 자영업, 특수고용종사자 등으로 육아휴직 제도 이용 대상 확대

□ 필요성(추진배경)

- (육아휴직 대상자 확대)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육아휴직 급여의 대상을 비임금 근로자 등으로 확대하여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을 확대하여 육아휴직 사용 여건 조성
- 육아휴직자의 직장 적응 및 복귀 지원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돌봄권 보장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연 20개 기업
- 사업대상 :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중소벤처기업 20호(선정)
- 사업비 : 2,000백만 원/연
  - 산출기초 : 100백만 원×20호=2,000백만 원
- 주요내용 : 인천 관내 중소벤처기업(선정) 대상으로 지역 단위 기업, 새일센터 등과 연계한 육아휴직 직장복귀 프로그램 운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등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100 (중복 가능)	20	20	20	20	20
사업비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추가 고려 사항

- 특고 등 육아휴직 대상이 확대된 중앙정부 시책(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21-2025))과의 균형 고려 불가피

#### 4. 편안하고 안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

1) 다자녀우대정책 확충: 유자녀 또는 아동 전체로 지원대상 범위 확대

##### □ 필요성(추진배경)

- 지원대상 아동의 확대를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친출산,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자녀 우대 카드(인천 New 아이모아 카드 대상자(다자녀 출산 가정, 2자녀 이상) 확대(1자녀 이상)) 필요(단, 출산 자녀 수별로 차등화)

#####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사업비는 추가 필요 재원분을 의미)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약 10,000가구(추가 고려분)
- 사업대상 : 인천 거주 1자녀 출산 가구 약 10,000가구(신청)
- 사업비 : 5,000백만 원/연
  - 산출기초 : 0.5백만 원×10,000가구=5,000백만 원
- 주요내용 : 출산으로 돌봄 공백 발생한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 확대 및 다자녀 기준 완화, 종합검진, 관광, 여성·체육·문화시설 추가 지원, 인천형 가사돌보미 서비스 지원("서울형 가사돌보미 서비스 지원" 벤치마킹)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50,000 (중복 가능)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사업비	2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 □ 추가 고려 사항

- 현재 다자녀 우대 카드에 가사돌보미 서비스 지원 바우처 추가 반영 필요

2) 출산, 입양 지원금의 지역화폐, 현물, 바우처, 주택 및 금융상품과의 연계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상생효과 유도

□ 필요성(추진배경)

- 출산·입양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출산 및 양육비용 부담 해소에 기여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특히, 출산·입양 지원금을 지역화폐 및 주택 및 금융상품 이자 지원 상품 등과 연계하여 지급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 2024년 추진 예정 중인 첫만남지원금 200만원 상향과 별도로, 출산·입양 가정에 지역화폐, 주택 및 금융상품 이자 지원 상품 연계 지급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사업비는 추가 필요 재원분을 의미)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10,000가구/연
- 사업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신청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이 있는 가구
- 사업비 : 10,000백만 원/연
  - 산출기초 : 1백만 원×10,000가구=10,000백만 원
- 주요내용 : 출산·입양 가정에 지역화폐(지역 내 소비 가능), 주택 및 금융상품 이자 지원 상품 연계 지급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50,000 (중복 가능)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사업비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추가 고려 사항

- 적지 않은 예산(5년 간 약 5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 확보



3) 초등학교 이후 (방과후)돌봄에 대한 지원(예: 늘봄학교 연계 추가 지원(프로그램 및 인  
프라 확충 등)

□ 필요성(추진배경)

- 초등학생 등 자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마을, 학교를 기반으로 방과후 돌봄 공간을 확충하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방과후 돌봄과 교육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저소득층·맞벌이 가구의 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초등 방과후 돌봄 교실 운영을 통한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에게 학습지도, 체험활동, 생활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 지원 및 사교육비 절감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10개 초등학교/연
- 사업대상 : 인천 관내 10개 초등학교
- 사업비 : 1,000백만 원/연
  - 산출기초 : 100백만 원×10호=1,000백만 원
- 주요내용 :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중 일부에 대해 시비 지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내 방과후아카데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50	10	10	10	10	10
사업비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추가 고려 사항

-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가능성 검토, 중앙정부 관련 공모사업 지원을 통한 재원 조달 방안 선결 필요 등

#### 4) 공공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지원 확대

##### □ 필요성(추진배경)

- 보육 서비스 제공 환경 개선 측면에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한 공공형어린이집이 확충될 필요
- 다만,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중 일정 선정요건을 충족하고, 선정심사단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선정 전후 품질 관리 체계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수요자의 수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다분함.
- 또한 지속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지역별로 차별적이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다분함.

#####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미정
- 사업대상 : 인천 관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전환 어린이집
- 사업비 : 20,000백만 원/연(중앙정부 지원 규모 포함)
  - 산출기초 : 2022년 기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조사업(8,576백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8,488백만 원) 및 지원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주요내용 : 공공형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전환 어린이집 대상, 장기임차, 리모델링 비용 지원 확대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	-	-	-	-	-
사업비	1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 □ 추가 고려 사항

- 사업량 등 선 확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대상 및 확대 규모 조정 고려 필요
- 추가 재원 조달 방안 선결 필요 등

## 5.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 지원

### 1) 난임, 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

#### □ 필요성(추진배경)

- 만혼에 따른 첫째아 출산 연령 증가, 난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저출산 정책 대응 필요
- 현재 인천광역시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난임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선별이 아닌 보편적인 측면에서의 난임, 건강 관리 측면에서 상존하는 사각지대를 제거할 필요

####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미정
- 사업 대상: 인천 관내 고위험임산부, 난임 부부 연령 무관
- 사업비 : 5,000백만 원/연(추가 재원)
  - 산출기초 : 2022년 인천광역시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예산 규모(각 약 2.94억 원, 31.81억 원)를 고려한 추가 재원 제시
- 주요내용 : 난임부부(여성) 연령 무관 난임 시술비 지원 및 확대(신선배아 10회(현 9회), 동결배아 8회(현 7회), 인공수정 6회(현 5회)),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관련 임신부 연령 및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관 지원대상 확대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	-	-	-	-	-
사업비	2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 □ 추가 고려 사항

- 재원 조달 관련 광역-기초 간 매칭 비율 조정 필요

2) 생애초기건강관리 자체사업 추진 및 확대

□ 필요성(추진배경)

- 중앙정부가 2023년도 추진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총 14개 시·도, 54개 시·군·구 56개 보건소)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가 이를 유사하게 자체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미정(중앙정부 시범사업 선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대상 :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가정
- 사업비 : 미정(중앙정부 시범사업 선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주요내용 : 출산 후 8주 이내 1회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 운동, 수면 등 기본적인 건강상담, 교육 서비스 및 양육서비스 지원 등 출산 후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친출산 환경 조성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	-	-	-	-	-
사업비	-	-	-	-	-	-

□ 추가 고려 사항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범사업 내용을 준용하여 인천형 사업 구축 및 확대 필요

## 6. 청년의 희망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 1) 청년 직업훈련 지원 확대 및 인천 취업 연계 강화

#### □ 필요성(추진배경)

- 인천시의 청년 문제 중 하나는 특히 인접 지역에 비하여 일자리의 양적, 질적 측면이 낮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유출하는 비율이 낮지 않다는 점임.
- 일자리의 양적, 질적 제고 이외에 미취업 청년의 역량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타 지역이 아닌 인천 지역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 설계를 통해 청년이 보다 살기 좋은 인천 지역 조성을 도모할 필요
  -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 취업 지원 중 직업훈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은 인천지역대학 취업지원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 데이터·AI기술 활용인력 양성교육 등이 있지만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지원 내용 측면에서 한계점이 존재하며, 인천지역으로의 취업을 유인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39세 미취업 구직 청년(구체적 수치는 미정)
- 사업비 : 1,500백만 원/연
  - 산출기초 : 2백만 원×500명=1,000백만 원(청년직업훈련비용 실비 지급 규모), 청년직업훈련 수혜대상이 취업할 경우 취업성공보너스 추가 지급(3백만 원/인, 취업 성공률 50% 가정)
- 주요내용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직업훈련 관련 사업들을 일원화하여 미취업 구직 청년에 직접적으로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수정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7,500	500	1,000	1,500	2,000	2,500
사업비	22,500	1,500	3,000	4,500	6,000	7,500

#### □ 추가 고려 사항

- 지원 범위(수혜금액, 수혜인원 등) 및 재원 조달 가능성 사전 검토 필요

## 2)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 필요성(추진배경)

- 2022-2024년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가 지난 2022년 추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연계하여 인천 거주 청년 대상으로 연령을 추가 연장하여 지원하는 사업임.
- 상기 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는 목적보다는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 측면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에 주목하고 있으며, 1인당 월 20만원(연 240만원) 지급
- 정책의 사각지대를 포함하여, 정책 수혜자의 수요 측면(인천 대학가 원룸 월세 평균 약 40여 만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1인당 지원 규모를 보다 확대하여 한시적 운영이 아닌 중장기적 측면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
- 고령화 및 평균연령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을 범위를 확장하여 무주택 청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천 남동구 등 제조업 산업단지가 쇠퇴하여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은 지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3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추가 지원 방향을 마련할 필요

##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인천 거주 18-39세 무주택 저소득 청년(독립하여 월세 거주)
- 사업비 : 20,000백만 원/연
  - 산출기초 : 5백만 원×4,000명=20,000백만 원/연
- 주요내용 : 현재의 지원 규모인 월 20만원을 40만원으로 상향(연 20만원 규모로 관리비 등 지원), 지원규모 점증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23,000	4,000	4,000	5,000	5,000	5,000
사업비	115,000	20,000	20,000	25,000	25,000	25,000

## □ 추가 고려 사항

- 지원 범위(수혜금액, 수혜인원 등) 및 재원 조달 가능성 사전 검토 필요
- 인천시 평균연령을 고려하여 확장할 연령을 재검토할 필요
- 인천시에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을 조사하여 기존 지원금 상향이나 추가지원 방향을 마련하고, 지역 유출 방지와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연계 방향을 검토할 필요

## 3) 인천형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확대 프로그램 운영

## □ 필요성(추진배경)

- 문화체육관광부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고 있음.
  - 지원금을 대부분 소진했을 경우 남은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 개인 돈으로 충전하여 사용하면 할인 혜택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용자가 문화누리카드의 혜택 중에서도 지원금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인천시 문화누리카드의 불용액 비율은 2021년 기준 10%대입).
  - 또한 문화누리카드 사용가능 가맹점을 찾는 것이 번거롭고, 카드충전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함.
- 문화누리카드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문화누리카드 사용을 위한 대책이 필요
  - 인천시민들이 문화누리카드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생활 속에서 유용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불용액을 활용해 지원금액을 15만원까지 확대하고, 카드 이용 및 충전 방법을 홍보해야 함.
  - 또한 가맹점의 수와 업종을 다양화하여 문화생활을 위한 지역 인프라를 확대 구축해 나아가야 함.

##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200,000명 (추정) ('22년 기준 약 170,000명) 변동 가능
- 사업대상 : 인천지역 소외 계층
- 사업비 : 20,000백만 원/연 (추정) '21년 예산 12,291백만 원), 변동 가능
- 주요내용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확대 및 가맹점 수와 업종 다양화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사업비	1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 □ 추가 고려 사항

- 문화누리카드 불용액 활용방안을 고려하고 인천시 추가예산 금액을 검토하여 상향 금액을 설정할 필요
- 또한 인천 지역 내 문화누리카드 사용가능 가맹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가맹점 협약을 확대해 나아가야 함.

## 7. 모두가 평등한 교육 환경으로의 개선

### 1)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방송 연계 인프라 구축 (1)

#### □ 필요성(추진배경)

- 관내 학교 안 및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함.
- 민간의 온라인 교육플랫폼으로부터 강의 콘텐츠를 구매하여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

####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초, 중, 고 교과관련 콘텐츠 및 어학, 자격증 등 비교과 콘텐츠 구매 (무료배포 전제)
- 사업대상 : 관내 6세~18세(초, 중, 고등학생) 누구나
- 사업비 : 10,000백만 원/연
  - 산출기초 : 서울특별시 서울런 예산 16,500백만 원(2021년도)
- 주요내용 : 학습에 필요한 교육컨텐츠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관내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초, 중, 고등 교과관련 콘텐츠 및 검정고시, 자격증, 어학, 공무원 시험 등에 관한 강의를 구매하여 대상자에 무료로 제공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	-	-	-	-	-
사업비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 추가 고려 사항

- 양질의 콘텐츠의 확보, 콘텐츠 제공을 위한 온라인 인프라 조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2)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방송 연계 인프라 구축 (2)

## □ 필요성(추진배경)

-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2년 평균 사교육비가 50.9% 증가하였으며,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소득격차로 인해 학부모 불안이 고조되는 동시에, 사교육 확산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도 예외는 아님.
-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평등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함.
-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2023년 4월부터 메타버스 기반 교육 플랫폼 ‘위캔버스(WeCanVerse)\*’ 베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천시 교육청은 교육 혁신 방안으로 위캔버스 베타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 공교육 교과과정을 연계한 체험형 학습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학급 운영에 필요한 학습관리시스템(LMS)의 모든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초 3D 기반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
- 교육 혁신을 통해 양질의 학습지원을 위한 인천시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위캔버스 서비스를 통해 학생과 교사가 상호작용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기반을 마련할 필요

##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90학급 (초·중·고등학교 30학급 씩)
- 사업대상 : 인천시 초·중·고등학교 학급
- 사업비 : 2,400백만 원(3년간) (\*VR 구입비 및 콘텐츠 이용료 추정/ 실제 사업비 미상)
- 주요내용 : 인천시 초·중·고등학교 학급에 EBS가 개발한 위캔버스 서비스 적용을 통해 3D기반의 체험형 학습 기회 제공방안 마련

## □ 연도별 소요예산액 (추정)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450	90	90	90	90	90
사업비	3,400	1,400*	500**	500**	500**	500**

\* VR 구입비 및 콘텐츠 이용료, \*\* 콘텐츠 이용료

## □ 추가 고려 사항

- 인천시 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위캔버스의 체험형 학습 커리큘럼 수요를 조사하고, EBS와 업무 협약 추진방안을 검토할 필요

## 3) 2자녀 이상 가구 온라인 교육 참여 바우처 지원 사업

## □ 필요성(추진배경)

- 사교육비 지속 증가에 따른 자녀 양육 부담 증가가 결과적으로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됨. 즉, 안정적인 양육 체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사교육비 증가가 지적되었음.
- 저출산 대응을 포함하여 친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시적으로는 공교육 체계 개선 및 강화와 더불어 미시적으로는 교육비 부담 경감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특히 둘째아 이상 출산한 소위 다자녀 가구는 교육비 부담이 자녀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방안을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가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 기간 참여가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음(CBS 정책 제안 벤치마킹).

##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대상 : 인천광역시 거주 중, 고 취학자녀가 2인 이상 가구(소득 기준 적용)(지원 및 공모)
- 사업비 : 250백만 원/연(인천광역시 세부 추진 방향에 따라 변동)
  - 산출기초 : 50만원×5,000가구=250백만 원
- 주요내용 :
  - 가구중위소득 기준 저소득 가구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 취학자녀가 2인 이상 가구에 대하여 온라인 교육(EBS 등) 교육 참여 시 6개월(약 50만원) 참여 가능 바우처 제공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2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사업비	1,250	250	250	250	250	250

## □ 추가 고려 사항

- 지원가구 선별을 위한 가구소득 기준 설정, 다른 유사 정책 중복 수혜 처리 등 고려 필요

## 8.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

###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내실화

#### □ 필요성(추진배경)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생산적 활동을 기반으로 노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대표적인 노인 사회참여 지원 정책으로, 인천광역시 내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이어짐.
- 인천의 경우 목표 사업량 대비 추진실적 비율(추진율)이 전국 평균(106.5%)을 상회하는 109.4%로 나타나,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 내 적극적인 수요를 가늠할 수 있음.

2021년(개, 명, %)			2020년(개, 명, %)		전년대비 비율(%)	
추진실적	누적참여 인원	목표 대비 추진율	추진실적	누적참여 인원	추진실적	누적참여 인원
47,449	53,585	109.4	46,907	51,153	101.2	104.8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21).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통계 동향. p.54.

- 다만 현행 공익형 지원사업에 치중된 기존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한계와 지역 내 베이비붐 세대 규모 확대 등의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일자리 지원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함.

\* ('21(인천)) 공익활동형 82.3%, 시장형 6.4%, 사회서비스형 8.7%, 취업알선형 2.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1)

- 따라서 기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다각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의 적극적 발굴이 필요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대상 : 인천광역시 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수요)자
- 사업비 : 1,332,848백만 원(5년간)
  - 산출기초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 주요내용 :

- 참여자 및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다각화
  - (공공형)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소득 보전 기능 강화
  - (시장형)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 생산품 판매 온라인 채널 지원 확대 (예: 인천시 노인일자리 생산품 판매 채널 확대)
  - (사회서비스형)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적자본 및 수요처의 욕구를 고려한 일자리 발굴 및 관련한 일자리 공모사업 확대
- (예) ICT 기술을 접목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발굴을 위한 공모사업 확대 및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확대 / 노인 돌봄 공백 수요를 반영한 노인 일자리사업과의 연계 등(노인맞춤형돌봄 제공시, 생활지원사 부재시 노노케어 제공 방안 등)
-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등 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력 체계 강화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 개소/명(일자리수), 백만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270/285,123	50/54,123	52/55,500	54/57,000	56/58,500	58/60,000
사업비	1,332,848	233,652	239,493	345,960	252,516	261,227

□ 추가 고려 사항

- 노인정책과 현안, 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구체적 추진 방향과의 정합성 고려 필요

## 2) 신노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연계

## □ 필요성(추진배경)

-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거나 이제 노년기에 진입한 이른바 신노년 세대의 경우, 현재 노인 세대와는 이질적 특성을 지니는 집단으로 사회참여 역시 현재의 방식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인천에 거주하는 예비노인(만 50~64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노년기에 일자리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69.8%로 2018년에 비해 14.5%p 증가(양지훈, 2022)
- 따라서 신노년 세대의 인적자본과 생애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경력개발형 일자리 발굴(김수린 외, 2020)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연계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함.
-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업무 역량 및 숙련도가 있는 경우, 본인의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 참여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취업지원기관(고용복지+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을 통한 전직(재취업)교육 및 취업 연계 내실화 필요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대상 : 지역 내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 취(창)업 욕구가 있는 자
- 사업비 : 미정(인천광역시 세부 추진 방향에 따라 변동)
- 주요내용 : 지역 내 취업지원기관 및 노후준비지원센터 등을 통한 생애경력 개발 및 이행 서비스 제공,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확대 및 지역 내 기업(또는 기관)으로의 구직 연계를 위한 상담,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실시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	-	-	-	-	-
사업비	-	-	-	-	-	-

## □ 추가 고려 사항

- 노인정책과 현안, 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구체적 추진 방향과의 정합성 고려 필요

### 3) 문화여가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대

#### □ 필요성(추진배경)

○ 노년기 사회참여가 갖는 순기능을 고려시, 지역 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작업은 중요함.

- 노인실태조사 원시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를 통한 인천 지역 분석 결과, 향후 사회참여 활동 의향 중 취미·여가 활동에 대한 응답은 92.4%로 매우 높고, 다음으로 학습활동 34.5%, 자원봉사활동 3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같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문화여가 인프라가 수반되어야 하나, 인천지역의 경우 노인 인구 대비 여가복지시설((노인/사회)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 등) 수가 적은 것\*으로 제시됨(김세진 외, 2022)).
- 문화여가 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여가경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질 높은 프로그램 확대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21(인천)) 노인 10만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378.9개소 (노인복지관 5.6개소, 경로당 365.3개소, 노인교실 8개소(김세진 외, 2022))

\*\* ('21(인천)) 노인 10만명당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수 39.9개소(전국평균 52.9개소(김세진 외, 2022))

####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대상 : 지역 내 60세 이상 중고령자

○ 사업비 : 540백만 원(5년간)

- 산출기초 : 민간시설 활용 여가문화보급 사업 예산 활용

○ 주요내용 :

- 노인수 대비 문화여가시설 공급 적정성 분석을 바탕으로 한 노인 문화여가 시설 증축 또는 기존 시설의 기능 재정립을 통한 문화여가 제공 기능 강화

- 특히 지역 내 공공 여가시설 이용 욕구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지역문화원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을 통한 문화여가 교육 제공 기회 확대
- 상대적으로 문화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 또는 원도심의 경우, 지역 내 유희시설을 이용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제공 및 비대면 문화활동, 여가문화활동 꾸러미 제공 등 제공방식의 다양화 추진
-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과 연계 등
- 노인의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제공되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이외 지역 내 문화여가 프로그램 이용 촉진을 위한 바우처 보급 제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지원(1인당 연간 11만원)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80,000	12,000	14,000	16,000	18,000	20,000
사업비	540	100	104	108	112	116

#### □ 추가 고려 사항

- 노인정책과 현안, 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구체적 추진 방향과의 정합성 고려 필요

#### 4) 노후준비 지원 강화

##### □ 필요성(추진배경)

-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는 반면 은퇴시기는 앞당겨지고 있어, 공식적 은퇴 이후 생활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됨.
  - 다만 이같은 노후준비는 노년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각 생애주기마다 경험하는 주요한 생애사건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 특정 연령대만이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본인의 삶을 점검하고 대비할 수 있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노후준비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연계를 주축으로 하는 노후준비지원 사업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도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중. 부가적으로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노후준비 서비스 강화 및 이용률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대상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노후준비 지원서비스 이용자
- 사업비 : 미정(인천광역시 세부 추진 방향에 따라 변동)
- 주요내용 :
  -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운영 설치\* 및 광역-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간 역할 정립을 통한 내실있는 노후준비서비스(재무 및 비재무 영역에 대한 균형적 서비스) 제공
  - \* 노후준비지원법 시행령 개정('22)에 따라 시도 단위의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가능, 현재 전라북도 및 부산광역시 지정운영(조종도, 2022.6.20.).
  - (광역) 노후준비 심층 상담, 노후준비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배포(광역 → 지역)



- (지역) 관할 지역 내 자원 파악 및 연계, 지역민의 노후준비 상담(상시), 사회적 변화 및 지역민의 수요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제공\*,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 등

\* 지역 내 정주인구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방식(찾아가는 서비스 등) 다양화

- 지역 통합플랫폼을 통한 노후준비 상담 및 이용 절차 안내,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내용 게시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	-	-	-	-	-
사업비	-	-	-	-	-	-

#### □ 추가 고려 사항

- 노인정책과 현안, 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구체적 추진 방향과의 정합성 고려 필요

5) 취약 신중년 자녀 지원 사업

□ 필요성(추진배경)

- 취약 신중년의 경우 본인의 길어진 노후 기간 대비와 자녀 지원의 이중고로 인하여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낄 가능성이 높음.
- 이들의 노후 기간 대비를 위한 재취업 및 심리적 안정 등 신중년 당사자 이외에도 이들의 자녀를 지원함으로써 (취약) 신중년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대상 : 인천광역시 거주 신중년(50-60대) 저소득층, 취약 자녀가 있는 이들 (지원 및 공모)
- 사업비 : 미정(인천광역시 세부 추진 방향에 따라 변동)
- 주요내용 :
  - 가구중위소득 기준 저소득 가구 중 가구주가 신중년인 이들의 자녀 학업 보조금, 학용품 구입 등 지원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	-	-	-	-	-
사업비	-	-	-	-	-	-

□ 추가 고려 사항

- 노인정책과 현안, 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구체적 추진 방향과의 정합성 고려 필요

## 9.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기반 구축

### 1)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 □ 필요성(추진배경)

○ 인천 지역 특성상 원도심 및 도서지역의 경우 고령화율 뿐 아니라 75세 이상의 후기노인 밀집도 역시 높아, 보건의료 이용 수요 역시 높을 것으로 예견됨.

- 다만 해당 지역의 의료시설 공급 분포는 인천광역시 전체 평균을 밀돌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22)를 파악한 결과, 인천광역시가 11.9개인 반면 용진군은 3.6개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강화군 12.7개, 동구 13.2개 등의 순\*

\* 요양병원이 포함된 병상수이며, 주로 의원급(한의원 포함) 다수 포진

- 병(의)원 또는 종합병원 접근시간 역시 용진군의 경우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시에서 추진 중인 '1섬 1주치 병원' 등의 사업은 매우 긍정적이며, 향후에도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기 위한 노력 필요

####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대상 : 도서지역 → 원도심 지역 등 단계적 확대

○ 사업비 : 미정(인천광역시 세부 추진 방향에 따라 변동)

○ 주요내용 :

- 원도심 및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 공공의료원의 단계적 확충을 통한 공공보건시스템 강화

-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인천 지역 종합병원과 협력하여 추진 중인 ‘1심 1주치 사업’ 확대
  -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 지원 사업 확대 및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강화\* 등
- \* 공중보건이 배치되지 않은 도서지역 중심으로 보건진료소 및 보건소간 원격진료 확대
- 보건지소의 건강증진사업 확대(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관리 및 방문건강관리 등)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	-	-	-	-	-
사업비	-	-	-	-	-	-

□ 추가 고려 사항

- 노인정책과 현안, 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구체적 추진 방향과의 정합성 고려 필요

## 2) 취약 고령자 건강 지원 강화

## □ 필요성(또는 추진배경)

- 향후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천광역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자(가구주 65세 이상 1인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 1인 고령자 가구, 대상자 변동 가능)의 건강 지원에 종합적 지원 프로그램 설계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현재 추진 중인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독거노인 간병비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 및 1인당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인천광역시 인구 고령화 및 사회적 양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인천광역시 관할 취약 고령자 약 10,000인 대상/연(변동 가능)
- 사업비 : 500백만 원(산출기초 : 2022년 현재 관련 프로그램 예산 약 81백만 원 및 지원 규모, 지원 대상 확대 고려)
- 주요내용 : 취약 고령 가구 건강보험료, 간병비, 의료비(실비) 지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등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50,000 (중복가능)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사업비	2,500	500	500	500	500	500

## □ 추가 고려 사항

- 대상자 및 지원 규모, 지원 범위 선정, 지원 방식 고려 등에 따라 소요예산 변동 가능

### 3)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지원

#### □ 필요성(추진배경)

- 생애말기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에 따라, 웰다잉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촉구됨.
- 인천시 역시 생애말기 자기 결정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나, 대다수 고독사 예방 또는 장사 인프라 구축에 치중된 경향
-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측면 뿐 아니라 스스로 인생을 정리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 생애말기 돌봄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 및 정비 등의 노력이 병행될 필요성이 있음.

####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대상 : 인프라 확대 대상 지역 선정 과정 필요
- 사업비 : 미정(인천광역시 세부 추진 방향에 따라 변동)
- 주요내용 :
  - 생애말기 돌봄 강화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 확대\*
    - \* 중앙정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 확대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협조로 진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관련한 인식개선 및 홍보 강화
  - 노후준비서비스와 연계하여 생명존중, 죽음교육 등 시행
  -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	-	-	-	-	-
사업비	-	-	-	-	-	-

#### □ 추가 고려 사항

- 중앙정부 차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확대, 공용윤리위원회 확대 등 병행 필요

## 10. 외국인 상생 기반 구축

### 1) 외국인 자녀 지원

#### □ 필요성(추진배경)

- 인천 거주 외국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들의 자녀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
- 특히 경제자유 구역의 외국인 자녀들은 중도입국자인 경우가 많아 학교 및 사회 적응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외국인 자녀의 안정적인 학교 생활과 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
- 외국인종합지원센터 등에도 관련 교육이 일부 있으나,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참여하는 수가 많지 않아 실제적인 효과는 크지 않음.
- 가구방문을 통해 외국인 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사회 적응 지원
- 아울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료 지원을 통한 양육 경제적 부담 절감을 통한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 해당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재외동포(고려인)주민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을 외국인 자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600명(외국인 자녀 교육)+2,000명(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 사업대상 : 인천 거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자녀
- 사업비 : 700백만 원/연
  - 산출기초 : (외국인 자녀 교육) 50만원×600명=300백만 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20만원×2,000명=400백만 원
- 주요내용 : 방문학습 지원, 사회적응 지원 관리, 심리 상담 지원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14,000	2,600	2,700	2,800	2,900	3,000
사업비	4,000	700	750	800	850	900

#### □ 추가 고려 사항

- 인천시 미추홀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학습지 교육 사업을 운영중임. 인천시 전체 외국인 주민 자녀로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 내용도 학습뿐 아니라 한국사회 적응과 심리 상담 등을 포함하는 방안 고려

## 2) 한국국적 미취득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 □ 필요성(추진배경)

-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면서 국적취득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국적취득을 원하지만 행정적, 경제적 이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음.
- 국적취득 비용 지원뿐 아니라 국적취득을 위한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이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행정적 절차 등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상담 지원도 제공

###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600명
- 사업대상 : 인천 내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 사업비 : 300백만 원/연
  - 산출기초 : 50만원×600명=300백만 원
- 주요내용 : 국적취득 필요 수수료 지원, 국적취득 지원 프로그램(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이해 교육 등) 운영, 국적취득 절차 상담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3,000	600	600	600	600	600
사업비	1,500	300	300	300	300	300

### □ 추가 고려 사항

- 지원을 받고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을 국적취득 지원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용하여 정책의 선순환 효과를 얻는 방안도 고려 가능



## 3)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1)

## □ 필요성(추진배경)

-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외국인 노동력 확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음.
- 고용허가제 등에 의한 외국인 노동자 수급에서 나아가 우수한 노동력을 지닌 근로자 확보 방안 필요
- 지역 내 우수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전반적 관리 및 지원 필요
- 계속 정착을 원하는 유학생을 위한 취업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통해 장기적으로 노동력 확보
- 시간제취업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유학생의 선택권 확대 필요

##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300명
- 사업대상 : 인천 내 외국인 유학생
- 사업비 : 900백만 원/연
  - 산출기초 : 300만원×300명=900백만 원
- 주요내용 : 외국인 유학생 역량 강화 교육, 인천시 내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 및 매칭 사업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1,500	300	300	300	300	300
사업비	4,500	900	900	900	900	900

## □ 추가 고려 사항

- 시간제취업제도 등에 대한 개선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며, 인천시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필요

## 4)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2)

## □ 필요성(추진배경)

- 유학생의 체류자격은 유학비자(D-2, 학위과정)와 일반연수(D-4, 어학연수)가 있으며,
- 유학생은 주당 25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일반연수(D-4)의 경우 입국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나, 단순 노무(편의점, 식당 등) 가능, 제조업 원칙적 제한하고 있음.

##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비예산사업
- 사업대상 : 관내 대학 및 대학원 재학 중인 유학생
- 사업비 : 비예산사업(제도개선)
- 주요내용 :
  - ① 유학생(D-2, D-4 등)의 일자리 확보 가능성 제고 :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의 체류자격의 활동허가제 중 시간제 취업허가 조항 완화 노력
  - ② 지역특화형 비자(F-2-R) 사업 대상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대상이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되어 제조업이 기반인 지역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음. 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제조업 기반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필요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	-	-	-	-	-
사업비	-	-	-	-	-	-

## □ 추가 고려 사항

- 관내 유학생 노동력의 활용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비자 제도에 대한 개선노력을 수행하는 비예산사업으로, 제도개선의 권한이 중앙부처에 있어 관련 지자체와의 협력과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5) 유학생의 정착 지원

## □ 필요성(추진배경)

-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적응과 정착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
- 지역과 대학 등이 연계하여 ‘유학생 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유학생을 위한 플랫폼 및 센터 내에서는 행정지원, 일자리 연계,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

##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1개소
- 사업대상 : 인천 내 외국인 유학생
- 사업비 : 600백만 원/연
  - 산출기초 : 600백만 원×1개소=600백만 원
- 주요내용 :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한 센터 및 시설 확충, 인천시 내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 및 매칭 사업, 심리상담 서비스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5	1	1	1	1	1
사업비	2,150	600	300	350	400	500

## □ 추가 고려 사항

-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의 업무 내용 및 대상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외국인 유학생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위치 선정 중요

## 11.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반 구축(거버넌스 및 관련 현안)

### 1)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생활인구 유입 제고

#### □ 필요성(추진배경)

-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강화·옹진군을 비롯해 관심지역인 동구의 특성(강화 및 옹진군은 도서지역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접근성이 좋지 못한 반면, 동구는 동인천역과 도원역이 입지해 앞선 지역과 달리 접근성이 좋은 편이나, 북서쪽으로 항구가 위치하고 있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공업 및 상업지역 면적 비중이 높음. 따라서, 거주민의 추가 유입보다는 생활인구를 추가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을 고려할 때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거주보다 체류 인구의 추가 유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
- 지역 내 체류 인구 증가는 생활 서비스 시설 입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 간 이동성 증진을 위해 기존의 교통수단 외 다양한 통행수단 (예, 카셰어링) 공급 필요
- 강화·옹진군 브랜드 요소인 농산물을 팜스테이와 연계, 로컬브랜드 강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행안부 5대 사업 공모 지원을 위한 모델 개발 필요

####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인천광역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 내 농산물 생산, 판매업체 20개(선정)
- 사업비 : 2,000백만 원/연  
- 산출기초 : 100백만 원×20호=2,000백만 원
- 주요내용 : 로컬브랜드 강화를 위한 팜스테이 연계 프로그램 운영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100 (중복 가능)	20	20	20	20	20
사업비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 추가 고려 사항

- 소규모 통행수단 체계 구축을 목표로 사업 시행 이후 시점을 단-중-장기로 구분하여 비용 일체 또는 일정액 지원하는 등의 방안 검토 필요
- 도서지역으로의 이동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시 기존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하여 통행비용을 절감(예, 환승)시켜줄 수 있는 방안 도입 필요
- 시 내 인구감소지역 군구의 로컬브랜드를 토대로 체류 인구 유입 방안 모색 시 지역의 자연환경 또는 대규모 시설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이 고려될 수 있음.

## 2) 도서 지역 내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 □ 필요성(추진배경)

- 생활인구를 활용한 지역 활력 도모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는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등 소위 낙후지역에 대해서 보다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인천광역시의 인구감소지역은 모두 섬 지역이며, 인천광역시의 유동인구 특성 역시 이들 지역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생활인구 5대 활용 공모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는 이들 지역의 내, 외적 접근성을 보다 제고하는 측면에서의 교통인프라를 체계적, 유기적으로 확충할 필요

##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5호
- 사업대상 : (향후)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활용 공모사업 선정지역 5곳
- 사업비 : 1,000백만 원/연
  - 산출기초 : 1,000백만 원×5호=5,000백만 원
- 주요내용 : 섬 지역과 내륙 간 선박 노선 확충, 섬 지역 내 선박과 카셰어링 연계 프로그램 운영(인천광역시-민간 업체 협약 등), 대중교통비 묶음 할인 등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25	5	5	5	5	5
사업비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추가 고려 사항

- 예산 추계를 파악하기 위한 대략적인 유동인구 추계 필요
- 선박-카셰어링 연계 시 시비 지원 규모 파악 필요

3) 서울,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생활인구의 교통 지원, 베드타운 성격을 지닌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 구축

□ 필요성(추진배경)

- 인천광역시는 2019년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개시 후 누적 가입자 수가 19년 대비 약 15배 증가(23년 4월 기준)<sup>15)</sup>하고, 규모 측면에서 광역시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가 유의미함을 시사함.
- K-패스 사업(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국토교통부, 2024년 추진 예정)의 확대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내 거주민의 이동성을 촉진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보다 상대적으로 비용 효율 및 효과적일 수 있음.
  - 신규 버스 및 지하철 노선의 설치, 기존 노선 연장 등에 따른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단위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지원사업의 확대는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변동될 수 있음에 비용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음.
- 개인단위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지역 중 주거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유자전거 등과 같은 퍼스널모빌리티 이용 촉진을 통해 지역 내 활동성을 제고 시킬 수 있는 K-패스 사업 연계 추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 필요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대상 : 인천광역시 유동 인구밀집지역(사업량은 미확정)
- 사업비 : 10,000백만 원(시비 매칭 및 인프라 구축 등)
  - 산출기초 : 2021년 서울시 따릉이 예산 규모(약 30,000백만 원) 및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을 고려한 예산 산출, 이후 운영비용은 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내용 : 광역 대중교통 이용도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공유자전거 설치 및 운영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	-	-	-	-	-
사업비	42,000	10,000	8,000	8,000	8,000	8,000

□ 추가 고려 사항

- 2024년 7월 K-패스사업의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로 개인 또는 가구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통행이 이루어지는 구역의 특성(예, 주거/인구밀도, 대중교통 접근성 등) 또한 지원 수준 결정 요소로 고려 필요
-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 부담 및 공공성에 대한 균형적 시각 견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등

15)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95244>

## 4) 세컨하우스 관련 지원; 세컨하우스 인프라 구축 관련 빈집 개조 사업

## □ 필요성(또는 추진배경)

- 5도 2촌, 4도 3촌 등 인천광역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생활 인구의 양적 증대 및 유인 기반 구축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제고 필요
- 노후 인프라 개선을 통한 원도심 활력 제고 및 생활인구 시책 사업 관련 주거 시설 기반 구축 필요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인천광역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내 빈집 약 50호/연
- 사업대상 : 인천광역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내 노후화된 빈집(어느 정도 개조 가능한 시설물 대상)
- 사업비 : 1,000백만 원(산출기초 : 50호(1년)x2,000만 원(리모델링 관련) =1,000백만 원)
- 주요내용 :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 활력 제고 및 원도심 재개발 기반 구축을 위한 세컨하우스 공급을 위하여 관할지역 내 빈집 개조사업 추진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250	50	50	50	50	50
사업비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추가 고려 사항

- 건물 구조안전검사 및 설계변경 과정의 용이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선 등
- 사업대상 선정 기준, 시설관리 등 사후 조치 관련 법령, 훈령, 예규 보완 필요

5) 세컨하우스 관련 지원: 매입 비용 지원 사업

□ 필요성(또는 추진배경)

- 인천광역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 생활인구를 활용한 원도심 활력 제고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낙후지역 세컨하우스 매입자 대상 매입비용 일부 지원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인천광역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 매입자 약 30인/연
- 사업비 : 300백만 원(산출기초 : 지원금액 1,000만원×30인=300백만 원)
- 주요내용 : 세컨하우스를 포함한 주말주택 매입비용 일부 지원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150	30	30	30	30	30
사업비	1,500	300	300	300	300	300

□ 추가 고려 사항

- 관련 조례 등에 반영, 다른 수당과의 단가 차이에 따른 추가 조례 제정 필요성 검토 등



## 6)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모색

## □ 필요성(또는 추진배경)

- 현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중 인천광역시 특색에 보다 부합하는 도심융합특구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기반 구축 사업 추진 필요
  -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하며(지방시대위원회, 2023.9.12.), 교통체계가 잘 구축된 지역 도심지에 복합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층 유출 방지와 유입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띠는 특구사업임.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대상 : 인천광역시 도심
- 사 업 비 : 미정
- 주요내용 : 중앙부처 도심융합특구 조성 관련하여 도심에 일자리, 삶, 여가 등 복합거점을 조성하도록 규제 완화 및 지원 등 인천시 자체적으로 유사하게 사업 추진(인천시 특색에 맞는 도심융합특구 사업 구상 및 모색 등)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	-	-	-	-	-
사업비	-	-	-	-	-	-

## □ 추가 고려 사항

- 관련 부서 및 참여 부서 협의 필요 등

## 12. 세대 간 화합 및 인구고령화 대응 기반 조성

### 1) 유희시설 활용한 세대 통합 및 화합 인프라 확대

#### □ 필요성(추진배경)

- 향후 인천광역시의 출생아 수가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인구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급격한 인구 고령화는 고령인구를 중심으로 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갈등을 보다 심화시킬 개연성이 높음.
- 세대 통합과 세대 간 화합을 바탕으로 공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구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고령인구를 포함한 전 연령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정책 대응이 필요
  - 현재 사회 문제로 촉발되고 있는 세대 갈등은 비단 인천광역시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향후 전망되는 인천광역시의 인구 변동 특성을 고려하면 세대 간 갈등 해소, 세대 화합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다분함.

####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인천광역시 관할 구군 내 개보수 요 경로당, 커뮤니티센터 내 유희공간 등 공실 30개소
- 사업비 : 3,000백만 원/연(수요 및 재정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산출기초 : 100백만 원×30개소=3,000백만 원
- 주요내용 :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 및 커뮤니티센터, 빈집, 공실 등을 활용하여 공용공간을 구성하고, 소규모 카페, 작은도서관 등 어메니티 시설 구축 사업, 세대 갈등 해소 프로그램(관련 영상 상영, 강연 등) 운영 등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190(중복 가능)	30	30	40	40	50
사업비	19,000	3,000	3,000	4,000	4,000	5,000

#### □ 추가 고려 사항

- 세대 통합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요 파악 선결 필요
- 사업 대상 선정 방식(공모/지정 등) 고려 필요

## 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지속 개선

## □ 필요성(추진배경)

- 인천광역시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령인구를 정책 대상으로 하는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제도 개선, 확대가 요구됨.
- 현재 인천광역시는 노인보호구역 확대, 고령자 대상 교통 안전 교육,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자 대상 교통비 지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상기 정책에 덧붙여 고령인구의 통행수단이 대체적으로 보행(도보)임을 고려할 때 보행자 우선도로 설정, 고령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앙분리대 설치, 고령인구의 교통 편의성을 보다 제고하는 100원 택시(전라남도 최초 운영, 벤치마킹) 등의 인프라 구축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필요

##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30개소, 19개 지역
- 사업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특히 고령자 밀집 지역 중심)
- 사업비 : 3,380백만 원/연
  - 산출기초 : 100백만 원×30개소=3,000백만 원(인프라 구축, 지역별 수요 등에 따라 변동 가능), 20백만 원×19지역(읍, 면)
- 주요내용 : 보행자 우선도로 설정에 따른 개보수 작업, 고령자 밀집 지역 중심의 중앙분리대 추가 설치(고령자 무단횡단 사전 방지 차원), 관내 일부 지역(읍, 면) 조건부 100원 택시(근거리 이동 시 지원 등) 운영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150/95	30/19	30/19	30/19	30/19	30/19
사업비	16,900	3,380	3,380	3,380	3,380	3,380

## □ 추가 고려 사항

- 인프라 확충, 개보수 사업 지원 필요 지역 선정
- 100원 택시 운영 관련 인천과 관할 군 지역(읍면 지역) 간 매칭 부담 비율

### 3) 취약 고령인구 정주여건 개선 사업 확대

#### □ 필요성(추진배경)

-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인구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다분함.
- 예를 들어, 1인 가구(여성 고령 1인가구(독거노인), 저소득 1인 가구, 초고령(85세 이상 등) 1인 가구 등) 가구주 특성에 따라 취약성이 노정되는 이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다분함.

#### □ 사업개요(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4.1.-2028.12.
- 사업량 : 미정(인천광역시 관내 고령 1인가구 등 취약 고령인구 일부)
- 사업비 : 2,000백만 원/연(수요 및 재정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산출기초 : 2022년도 인천광역시 관련 세부사업(독거노인 공동나눔터 지원, 저소득 독거노인 등 간병비 지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등) 예산 규모 및 추가 확대 측면을 고려하여 산출
- 주요내용 : 1인 가구 대상 간병비 지원, 거주공간 정비 및 집기 교체 지원, 식료품 구입 바우처 지원 등 사업

####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	-	-	-	-	-
사업비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 추가 고려 사항

- 기존 추진 사업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세부 지원 방향 수립 필요
- 현 제도하 사각지대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

〈표 6-2〉 추진과제 우선순위 및 범주별 분류

구분	세부추진과제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이후 (방과후)돌봄에 대한 지원(예: 늘봄학교 연계 추가 지원(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충 등))</li> <li>○ 난임, 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li> <li>○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방송 연계 인프라 구축</li> <li>○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보건 의료 인프라 확충</li> <li>○ 취약 고령자 건강 지원 강화</li> <li>○ 외국인 자녀 지원</li> <li>○ 한국국적 미취득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li> <li>○ 유학생의 정착 지원</li> <li>○ 세컨하우스 관련 지원</li> <li>○ 유희시설 활용한 세대 통합 및 화합 인프라 확대</li> <li>○ 취약 신중년 자녀 지원 사업</li> <li>○ 2자녀 이상 가구 온라인 교육 참여 바우처 지원 사업</li> </ul>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인재 채용 인센티브 제공</li> <li>○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li> <li>○ 청년 신규 입직자(뿌리, 반도체 분야) 장려금 확대</li> <li>○ 전입 근로자 및 타지 유입 대학생 주거 지원</li> <li>○ 청년 및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연계 지원</li> <li>○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확대(개인 및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li> <li>○ 출산, 입양 지원금의 지역화폐, 현물, 바우처, 주택 및 금융상품과의 연계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상생효과 유도</li> <li>○ 생애초기건강관리 자체사업 추진 및 확대</li> <li>○ 청년 직업훈련 지원 확대 및 인천 취업 연계 강화</li> <li>○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지원</li> <li>○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생활인구 유입 제고</li> <li>○ 서울, 경기도 출퇴근하는 생활인구의 교통 지원, 베드타운 성격을 지닌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 구축</li> <li>○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모색</li> </ul>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주거취약계층 지원</li> <li>○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상향 지원</li> <li>○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에서 민간 기업(중소), 자영업, 특수고용종사자 등으로 육아휴직 제도 이용 대상 확대</li> <li>○ 공공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지원 확대</li> <li>○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li> <li>○ 인천형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확대 프로그램 운영</li> <li>○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내실화</li> <li>○ 신노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연계</li> <li>○ 문화여가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대</li> <li>○ 노후준비 지원 강화</li> <li>○ 도서 지역 내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li> <li>○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지속 개선</li> <li>○ 취약 고령인구 정주여건 개선 사업 확대</li> </ul>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녀우대정책 확충: 유자녀 또는 아동 전체로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li> <li>○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li> </ul>

주: 단기는 3년 이하 추진, 중기는 3~7년 이내 추진, 장기는 7년 이상 기간 추진, 제도 개선은 과제의 주요 추진 방향 이 법, 제도 개선인 경우를 각각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함.

제4절 분야별,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 앞서 언급한 12개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각각의 세부 추진과제를 정책 분야 및 생애주기(정책대상)별로 구분하여 살펴봄.

〈표 6-3〉 세부 추진과제의 정책 분야별 분류

영역	구분	세부추진과제
인구 변동/ 저출산	일자리	○ 지역인재 채용 인센티브 제공 ○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 청년 신규 입직자(뿌리, 반도체 분야) 장려금 확대
	주거	○ 청년 주거취약계층 지원 ○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상향 지원 ○ 전입 근로자 및 타지 유입 대학생 주거 지원 ○ 청년 및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연계 지원
	일-생활 균형	○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확대(개인 및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에서 민간 기업(중소), 자영업, 특수고용종사자 등으로 육아휴직 제도 이용 대상 확대
	자녀 양육	○ 다자녀우대정책 확충: 유자녀 또는 아동 전체로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 ○ 출산, 입양 지원금의 지역화폐, 현물, 바우처, 주택 및 금융상품과의 연계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상생효과 유도 ○ 초등학교 이후 (방과후)돌봄에 대한 지원(예: 늘봄학교 연계 추가 지원(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충 등) ○ 공공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지원 확대
	임신/출산 지원	○ 난임, 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 ○ 생애초기건강관리 자체사업 추진 및 확대
	청년 지원	○ 청년 직업훈련 지원 확대 및 인천 취업 연계 강화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인천형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확대 프로그램 운영
	교육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방송 연계 인프라 구축 ○ 2자녀 이상 가구 온라인 교육 참여 바우처 지원 사업
고령사회 대응	노후 생활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내실화 ○ 신노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연계 ○ 문화여가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대 ○ 노후준비 지원 강화 ○ 취약 신중년 자녀 지원 사업
	노후 건강	○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 취약 고령자 건강 지원 강화 ○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지원
기반 강화	외국인 (다문화)	○ 외국인 자녀 지원 ○ 한국국적 미취득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유학생의 정착 지원

영역	구분	세부추진과제
	인구구조 변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생활인구 유입 제고</li> <li>○ 도서 지역 내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li> <li>○ 서울, 경기로 출퇴근하는 생활인구의 교통 지원, 베드타운 성격을 지닌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 구축</li> <li>○ 세컨하우스 관련 지원</li> <li>○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모색</li> </ul>
	인구 고령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희시설 활용한 세대 통합 및 화합 인프라 확대</li> <li>○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지속 개선</li> <li>○ 취약 고령인구 정주여건 개선 사업 확대</li> </ul>

자료: 저자 작성함.

〈표 6-4〉 세부 추진과제의 생애주기별 분류

구분	세부추진과제
영, 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녀우대정책 확충: 유자녀 또는 아동 전체로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li> <li>○ 출산, 입양 지원금의 지역화폐, 현물, 바우처, 주택 및 금융상품과의 연계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상생효과 유도</li> <li>○ 초등학교 이후 (방과후)돌봄에 대한 지원(예: 늘봄학교 연계 추가 지원(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충 등))</li> <li>○ 공공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지원 확대</li> </ul>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방송 연계 인프라 구축</li> <li>○ 2자녀 이상 가구 온라인 교육 참여 바우처 지원 사업</li> </ul>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인재 채용 인센티브 제공</li> <li>○ 청년 신규 입직자(뿌리, 반도체 분야) 장려금 확대</li> <li>○ 청년 주거취약계층 지원</li> <li>○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상향 지원</li> <li>○ 전입 근로자 및 타지 유입 대학생 주거 지원</li> <li>○ 청년 및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연계 지원</li> <li>○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에서 민간 기업(중소), 자영업, 특수고용종사자 등으로 육아휴직 제도 이용 대상 확대</li> <li>○ 난임, 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li> <li>○ 생애초기건강관리 자체사업 추진 및 확대</li> <li>○ 청년 직업훈련 지원 확대 및 인천 취업 연계 강화</li> <li>○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li> <li>○ 인천형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확대 프로그램 운영</li> </ul>
중장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노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연계</li> <li>○ 취약 신중년 자녀 지원 사업</li> </ul>
노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내실화</li> <li>○ 문화여가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대</li> <li>○ 노후준비 지원 강화</li> <li>○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보건 의료 인프라 확충</li> <li>○ 취약 고령자 건강 지원 강화</li> <li>○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지원</li> <li>○ 유희시설 활용한 세대 통합 및 화합 인프라 확대</li> <li>○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지속 개선</li> <li>○ 취약 고령인구 정주여건 개선 사업 확대</li> </ul>

주: 특정 생애주기에 해당되지 않는 소위 범 생애주기적 과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생애 주기 구분이 어려운 사업은 제외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함.

○ 또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추진 관련 중앙정부 및 관할 지자체와의 협력 여부에 따른 중점 세부사업을 구분하여 정리함.

〈표 6-5〉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추진 관련 중앙정부 및 관할 지자체와의 협력 여부에 따른 중점 세부사업 구분

범주 구분	중점 세부사업
중앙정부와의 협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및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연계 지원</li> <li>○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에서 민간 기업(중소), 자영업, 특수 고용종사자 등으로 육아휴직 제도 이용 대상 확대</li> <li>○ 다자녀우대정책 확충: 유자녀 또는 아동 전체로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li> <li>○ 초등학교 이후 (방과후)돌봄에 대한 지원(예: 늘봄학교 연계 추가 지원(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충 등))</li> <li>○ 공공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지원 확대</li> <li>○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내실화</li> <li>○ 외국인 자녀 지원</li> <li>○ 한국국적 미취득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li> <li>○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li> <li>○ 유학생의 정착 지원</li> <li>○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모색</li> </ul>
인천광역시 자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인재 채용 인센티브 제공</li> <li>○ 청년 신규 입직자(뿌리, 반도체 분야) 장려금 확대</li> <li>○ 청년 주거취약계층 지원</li> <li>○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상환 지원</li> <li>○ 전입 근로자 및 타지 유입 대학생 주거 지원</li> <li>○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확대(개인 및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li> <li>○ 출산, 입양 지원금의 지역화폐, 현물, 바우처, 주택 및 금융상품과의 연계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상생효과 유도</li> <li>○ 난임, 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li> <li>○ 청년 직업훈련 지원 확대 및 인천 취업 연계 강화</li> <li>○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li> <li>○ 인천형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확대 프로그램 운영</li> <li>○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방송 연계 인프라 구축</li> <li>○ 2자녀 이상 가구 온라인 교육 참여 바우처 지원 사업</li> <li>○ 신노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연계</li> <li>○ 문화여가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대</li> <li>○ 노후준비 지원 강화</li> <li>○ 취약 신중년 자녀 지원 사업</li> <li>○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li> </ul>
인천광역시-관할 구군 협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li> <li>○ 생애초기건강관리 자체사업 추진 및 확대</li> <li>○ 취약 고령자 건강 지원 강화</li> <li>○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지원</li> <li>○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생활인구 유입 제고</li> <li>○ 도서 지역 내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li> <li>○ 서울, 경기도 출퇴근하는 생활인구의 교통 지원, 베드타운 성격을 지닌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 구축</li> <li>○ 세컨하우스 관련 지원</li> <li>○ 유희시설 활용한 세대 통합 및 화합 인프라 확대</li> <li>○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지속 개선</li> <li>○ 취약 고령인구 정주여건 개선 사업 확대</li> </ul>

자료: 저자 작성함.



- 아울러, 인천광역시 관할 지역 내 지역격차 해소, 상생, 맞춤형 방안 범주별 중점 세부사업을 구분하여 정리함.

〈표 6-6〉 인천광역시 관할 지역 내 지역격차 해소, 상생, 맞춤형 방안 범주별 중점 세부사업 구분

범주 구분	중점 세부사업
지역 간 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li> <li>○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li> <li>○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생활인구 유입 제고</li> <li>○ 도서 지역 내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li> </ul>
지역 간 상생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이후 (방과후)돌봄에 대한 지원(예: 늘봄학교 연계 추가 지원 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충 등)</li> <li>○ 공공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지원 확대</li> <li>○ 서울, 경기로 출퇴근하는 생활인구의 교통 지원, 베드타운 성격을 지닌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 구축</li> <li>○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지속 개선</li> <li>○ 취약 고령인구 정주여건 개선 사업 확대</li> <li>○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모색</li> </ul>
지역 맞춤형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li> <li>○ 인천형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확대 프로그램 운영</li> <li>○ 외국인 자녀 지원</li> <li>○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li> <li>○ 유학생의 정착 지원</li> <li>○ 도서 지역 내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li> <li>○ 서울, 경기로 출퇴근하는 생활인구의 교통 지원, 베드타운 성격을 지닌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 구축</li> <li>○ 세컨하우스 관련 지원</li> </ul>

주: 지역 간 상생 협력은 인천광역시 관할 지역 간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지역 맞춤형 방안은 특히 인천광역시 관할 특정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함.

## 제5절 인천광역시 관할 자치구/군 인구정책 주요 방향

### □ 관할 자치구/군 인구정책 기본 방향

○ 추가적으로 인천광역시 관할 자치구/군별 인구정책 주요 방향에 대해서 제시함.

- 이는 본 연구의 2장에서 살펴본 인천광역시 자치구/군별 주요 정책 수요(인구 변동 특성), 잠재력 특성 및 최근 현안 및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
- 또한, 출생아 수(출산율) 감소에 대응하는 측면에서의 친출산 환경 조성, 인구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의 친고령사회 환경 조성, 다양한 사회 정책 분야에 대한 대응 기반 강화는 인천광역시 모든 자치구/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하기 표에서는 각 자치구/군별 차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방향을 제시함.

○ 관할 자치구/군별 인구정책 주요 방향은 자치구/군의 정책 수요 및 정책 추진 여건 진단과 더불어 중앙정부와의 소통 관련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인천광역시의 역할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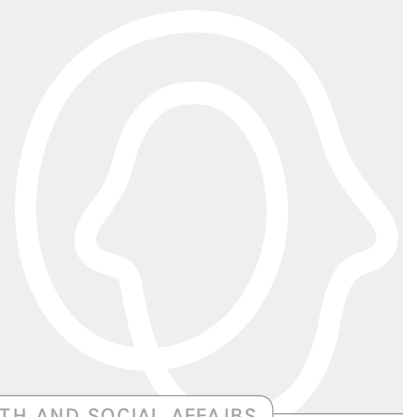
〈표 6-7〉 인천광역시 관할 자치구/군별 인구정책 주요 방향

자치구/군	주요 방향
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현재 중구는 원도심 중구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 비율은 1:2.5 정도이며, 인구증가는 영종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되고 있음.</li><li>• 영종 국제도시는 인구의 사회적 증가(순유입)에 따른 정주 인프라 확대 정책 수요(주거, 일자리 등) 반영, 생활인구 규모의 지속적 유지와 이를 활용한 지역 활력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서비스 및 인프라 확대 등에 주목할 필요</li></ul>
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원도심 동구 지역은 중구와 같이 고령인구, 재개발이 되는 지역 및 재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인천광역시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원도심 중구+동구=제물포구], [영종 국제도시=영종구]로 합구/분리를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원도심 동구는 원도심 활력 제고를 위한 과제 추진(관심지역 지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적극 활용 모색 포함)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인구비율(상주인구 대비)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 특색 인프라 구축 및 브랜드 개발 등에 주목하는 것을 고려</li></ul>
미추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구 규모 감소(순유출 증가)에 대응하는 정주 여건 개선</li><li>• 주거(전세) 인프라 비위 단속 관련 법, 제도 개선</li><li>• 원도심+공장지대가 혼재한 지역이고, 재개발이 많이 되지 않는 지역이어서 저렴한 집값, 빌라, 다세대주택 등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들이 유입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최근 전세사기 대상 지역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지역임을 고려한다면, 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 인구의 유입을 보장할 수 있는 안심주거/안심주택 정책을 통해 인구유입을 가속화시키는 데 주목할 필요가 다분</li></ul>

자치구/군	주요 방향
연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의 관할 동 간 격차 해소</li> <li>인구의 사회적 증가(순유입)에 따른 정주 인프라 확대 정책 수요(주거, 일자리 등) 반영</li> <li>원도심 연수구와 송도국제도시로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지역이고, 송도국제도시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젊은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원도심 연수구는 계획도시적인 성격도 있지만,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도 등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원도심 연수구를 중심으로 인구유입이 가능한 시나리오, 직장-주거 거리 단축 등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li> </ul>
남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 인구 유입 지역이지만, 최근 순유출 특성에 대한 대응</li> <li>공단 노후화 개선을 포함한 일자리 양적 확충과 일자리 미스매치 개선, 외국인(다문화) 노동력 활용 관련 제도 개선</li> <li>남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인구집단이 유입되는 지역이지만, 원칙적으로 산업정기에 따라 인구변동이 있으며, 또한 남동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근로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산업정책과 주거정책을 인구정책과 연결시키는 데 주목할 필요</li> </ul>
부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5년간 관측된 인구의 사회적 감소에 대응하는 정주 여건 개선</li> <li>서울 및 경기 인접 지역 생활인구 유입 관련 정책 추진</li> <li>대우자동차/GM의 쇠락에 따라 60만명 이상이었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지만, 과거부터 문화/여성/아동/가족에 대한 배려가 지속되는 자치구임을 고려한다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지속 강화하고 지역 강점으로 부각시킬 필요</li> </ul>
계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 규모 감소(순유출 증가)에 대응하는 정주 여건 개선</li> <li>서울 인접 지역 생활인구 유입 관련 정책 추진</li> <li>인천 8개 자치구 중 서울출퇴근 인구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고, 사회정책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역의 특성을 띠고 있으며, 전형적인 서울출퇴근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소규모 신도시 건설이 가장 긴요하게 고려될 필요</li> </ul>
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의 사회적 증가(순유입)에 따른 정주 인프라 확대, 정주 여건 정책 수요(주거, 일자리 등) 반영(광역시 관할 자치구 중 인구 규모 1위 및 지속적인 인구 유입)</li> <li>환경 측면 인프라 개선</li> </ul>
강화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인구의 사회적 증가 및 생활인구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요 반영</li> <li>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적극 활용</li> <li>인천에서의 유입은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고, 인구소멸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가운데, 수도권, 또는 서울/고양 지역에서 카페사업 등 문화관광사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장년 창업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li> </ul>
옹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인구 관련 특색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정주 여건 지속 개선</li> <li>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적극 활용</li> <li>섬지역 특성상 인구유입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고, 인구유출을 늦추는 것이 필요한데, 인구유출을 늦추는 정책의 개발 자체가 어려움, 영흥도 같은 경우 화력발전소, 백령도 같은 곳은 해병대 주둔 등이 인구 유출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인구유입 매리트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섬은 육지와 다리 연결, 거리가 먼 백령도 등 접경지역은 패속선 운항 등으로 이동자유 자체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데 주목할 필요</li> </ul>

자료: 저자 작성함.





## 제7장

### 환류 체계와 자원 조달 방안

제1절 평가 및 환류 방안

제2절 자원 규모 및 조달방안



## 제 7 장      환류 체계와 자원 조달 방안

### 제1절 평가 및 환류 방안<sup>16)</sup>

#### 1. 인천광역시 정책 성과평가 체계(환류 체계)의 구축 및 실질적 활용

- 개별 지역의 인구 동태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 인구 동태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라든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또 성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노력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보다 심도 있게 해당 각각의 지역에서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
- 단적으로 2021년 인천광역시의 3개 자치구군에 대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 지역 지정 이후 이들 차등적인 재정, 행정지원을 받고 이러한 지원에 대하여 인구감소지정 개별 지역과 광역이 5년 단위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내용은 우리 지역의 인구 동태 특수성을 주도면밀하게 관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 특수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특히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역 인구 동태의 명확하고 지속적인 관측과 분석, 그리고 정책의 환류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는 다양한 사회정책 범주에서 상당히 많은 계획이 수립, 추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성과평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산발적이고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평가에 대한 논의는 미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16) 해당 절 내 1,2는 장인수 외(2022)의 내용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정리하였음.

- 훌륭한 정책이 추진된다고 해도, 이에 대한 평가 체계가 없다면 정책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성과평가 체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성과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 등의 정비 보완을 통해, 일원화된 체계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단적으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2021.12.30. 제정) 제 6조에서는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와 같이 추진실적 평가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시행계획의 평가 결과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음.
-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제시되어 있는 시행계획 종합평가에 대한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공표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평가가 지속적인 인천광역시 해당 기간 인구정책 시행계획(향후 종합계획 포함)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소위 평가, 환류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인천광역시의 인구 감소 특성이 다른 인구 감소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정도가 다소 미약한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인구 규모 변화 특성은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역의 경기 변동 및 산업 구조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는 지역의 인구 구조 변화 특성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자,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이해되기 때문임. 이러한 점에서 이들 지역의 경제, 산업 구조의 특성은 인구 변화 특성과 복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특성은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에 대한 성과를 관측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집계 지표 산출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시사함. 추가적으로, 이들 다양한 집계 변수와 인구 동태 간 인과관계와 역인과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은 이들 지역의 인구 변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출하는 데



중요한 작업으로 의미가 있다 할 것임. 또한, 산업구조에 대한 종단적 변화를 심도 있게 관측하고 해석하는 작업 역시 향후 이들 지역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광역지자체-개별기초지자체 간 역할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협력-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적 작업으로 이해되고 있음.

- 특히, 향후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성과평가 체계의 주요 방향 중 하나로 인구 위기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점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장인수 외, 2020). 이들 지역은 현재 자체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중앙-광역에 의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도모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사후 평가 체계가 구축되고, 지역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음(장인수 외, 2020).
- 지역 인구 동태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심도 있게 관측하기 위하여 통계청 집계자료가 두루 활용되고 있는 바, 이들 지표가 지역의 다각적인 변화를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역시 중요함. 지역의 변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지표 활용과 지속적인 관측에 대한 논의 역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 집계수준의 분석과 함께 가용할 수 있는 미시자료를 활용한 분석은 직접적인 정책의 수혜 대상인 개인 차원의 행태를 보다 정교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

## 2. 성과지표 설정 및 지속적 수정 보완 및 개선

-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관련 다양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제시되고 있음.
- 다만, 인천광역시의 잠재력 및 정책 수요, 정책 추진 여건을 복합적으로 진단하는 동시에 여건 변화 파악과 같은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지표로서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보완할 필요가 다분함.
- 관련된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인구변동 및 정책 성과(결과) 특성

을 지속적으로 측정, 관측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 개별 지표가 얼마나 밀도 있게 잘 구축되었는지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향후 제시될 인천광역시의 인구정책 목표와 추진전략을 포함하여, 추진 여건 및 정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성과지표는 적절성, 명확성, 측정가능성과 같은 지표 충족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요건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적절성은 해당 지표들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반영하고 있는 정도, 명확성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결과적 양상이 어느 장소(또는 정책 경로 내 어느 지점)에서 어떠한 특성을 띠면서, 어느 정도로 발생하였는지를 클리어하게 측정하는 정도, 측정가능성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결과를 실제로 (유용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각각 의미함(우해봉, 장인수, 임지혜, 2020 수정인용).
- 또, 지역의 인구 규모가 어떠한 연유로 변화되었는지, 즉 자연적 변화에 기인하고 있는지 사회적 변화에 기인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인구변동 핵심지표의 선정이 요구됨.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주된 변화 특성 중 하나가 지역 인구 분포 특성임을 고려하면, 지역 인구가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아져서 증가하였는지, 아니면 전출자 수보다 전입자 수보다 많아져서 증가하였는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또한, 재정 여건 진단 지표와 관련하여, 재정자립도는 국가균형발전의 기조인 지역의 자립적 경제 성장 기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세외수입과 같은 자체적인 세입만이 고려되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는 지역 재정 여건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됨.

### 3. 성과지표 제시

○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각 추진전략별 성과지표와 종합 성과지표(인구변동 측면)를 다음(〈표 7-1〉, 〈표 7-2〉)과 같이 제시함.

〈표 7-1〉 종합성과지표 및 12개 추진전략별 성과지표

종합성과지표		자료
관할 지역 인구 규모의 변이계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민등록인구현황)
인구의 사회적 증감(순이동 규모)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추진전략	성과지표	자료
1.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는 노동시장 구축	실업률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통계청 고용동향
2. 안정된 주거 인프라 확충 및 개선	임대주택 공급(건설, 매입, 임차형)	인천도시공사
3. 가족친화적 일-생활 균형 체계 구축	성별 육아휴직자 수 (초회수급자 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4. 편안하고 안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	국공립어린이집 수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5.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 지원	인구 10만 명 당 난임시술 진료 수혜자 수 변화(최근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 청년의 희망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청년고용률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
7. 모두가 평등한 교육 환경으로의 개선	초중고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	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8.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실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통계
9.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기반 구축	공공노인병원 병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기관현황
10. 외국인 상생 기반 구축	전문(E1-7, 10), 비전문취업(E9, H2) 근로자 수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통계
11. 인구구조 대응 기반 구축(거버넌스 및 관련 현안)	인천 10개 자치구군 균형발전지표 핵심지표 변이계수 평균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지표
12. 세대 간 화합 및 인구고령화 대응 기반 조성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보건복지부 노인시설현황

자료: 각 핵심성과지표의 자료원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표 7-2〉 12개 추진전략별 성과지표별 최신 지렛값과 2028년 성과목표

종합성과지표		최신 지렛값	성과목표 (2028년)
관할 지역 인구 규모의 변이계수		0.700	0.695
인구의 사회적 증감(순이동 규모)		28,101명	40,000명
추진전략	성과지표	최신 지렛값	성과목표 (2028년)
1.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는 노동시장 구축	실업률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3.9% (2022.12월)	2.0%
2. 안정된 주거 인프라 확충 및 개선	임대주택 공급(건설, 매입, 임차형)	3,123호 (2021년)	5,000호
3. 가족친화적 일-생활 균형 체계 구축	성별 육아휴직자 수 (초회수급자 수)	남성: 1,015명 여성: 2,970명	남성: 2,500명 여성: 4,500명
4. 편안하고 안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	국공립어린이집 수	291개 (2022년)	350개
5.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 지원	인구 10만 명 당 난임시술 진료 수혜자 수 변화(최근 5년간)	52.5명	60명
6. 청년의 희망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청년고용률	50.5% (2023년 2분기)	60.0%
7. 모두가 평등한 교육 환경으로의 개선	초중고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	57.0만원 (2022년)	50.0만원
8.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실적	47,449건 (2021.12)	55,000건
9.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기반 구축	공공노인병원 병상수	276개 (2021년)	300개
10. 외국인 상생 기반 구축	전문(E1-7, 10), 비전문취업(E9, H2) 근로자 수	19,831명 (2021년)	21,000명
11. 인구구조 대응 기반 구축 (거버넌스 및 관련 현안)	인천 10개 자치구군 균형발전지표 핵심지표 변이계수 평균	0.92 (2021년 발표시점)	0.75
12. 세대 간 화합 및 인구고령화 대응 기반 조성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2.20개소 (2022년)	5.0개소

주: 1) 관할 지역 인구 규모의 변이계수는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관할 지역 10개 군구의 인구 규모 변이계수를 의미함.  
2) 인천 10개 자치구군 균형발전지표 핵심지표 변이계수 평균은 핵심지표인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재정자립도의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을 산술평균한 값임.  
자료: 각 핵심성과지표의 자료원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제2절 자원 규모 및 조달방안

### 1. 서론

- 현재 본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내 각 추진전략별 중점 추진과제의 경우 대체적으로 그간 추진되어 온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는 측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심도 있게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연도별 추진 사업의 우선순위 및 배분이 이루어질 필요
-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은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추진 기간 내 지속적으로 일정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다분
- 추가적으로, 관련 중앙정부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자원 마련에 주목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TFT 구성도 고려할 필요
- 2024-2028년 향후 5년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관련 사업 재원별 규모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규모와 방안에 대하여 모색할 필요

### 2. 인구정책 직, 간접적 관련 사업 중기 사업투자 재원별 규모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정책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실, 국의 관련 사업의 2024-2027년 재원별 규모를 정리함.
- 먼저, 관련 실, 국은 총 14개 실, 국이며, 구체적으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안전본부, 교통국,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도시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경제자유구역청임.
- 이들 각 실, 국별 관련 사업 개수는 다음과 같음.

〈표 7-3〉 각 실, 국별 인구정책 관련 사업 수

(단위: 개)

실, 국	사업 수
기획조정실	49
청년정책담당관	12
시민안전본부	15
교통국	66
경제산업본부	38
미래산업국	50
해양항공국	55
도시계획국	35
도시균형국	83
글로벌도시국	29
문화체육관광국	36
보건복지국	45
여성가족국	50
경제자유구역청	40
합계	603

자료: 인천광역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각 실, 국별 관련 사업의 4개년(2024-2027년) 재원 규모는 다음과 같음.
- 해당 재원 규모는 지방중기재정계획 상 예산 규모를 의미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해당 기간 내 사업 종료 등 계속 사업 여부에 따른 예산 미반영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7-4〉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연도별(2024-2027년) 재원 규모

(단위: 조 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소계
재원 규모	11.68	10.93	6.91	6.23	41.43

자료: 인천광역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각 실, 국별 관련 사업의 4개년(2024-2027년) 예산을 재원 조달(국비, 지방비, 민자)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지방비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도별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국비 비중은 4개년 간 약 20-35%, 지방비 비중은 약 53-72%, 민자 비중은 약 5-1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7-5〉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연도(2024-2027년) 및 자원 조달별 비율

(단위: %)

구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2024	19.55	64.37	16.08	100.00
2025	22.84	71.66	5.50	100.00
2026	35.60	53.47	10.92	100.00
2027	33.99	57.37	8.64	100.00
합계	27.00	62.75	10.25	100.00

자료: 인천광역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내부자료 중 계속사업으로 명기된 사업을 별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원 조달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판단되지만, 2025년 이후 상대적으로 민간투자 자원 조달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7-6〉 인구정책 관련 계속 사업의 연도(2024-2027년) 및 자원 조달별 비율

(단위: %)

구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2024	33.21	50.35	16.45	100.00
2025	38.32	57.16	4.52	100.00
2026	39.34	57.19	3.47	100.00
2027	35.16	61.21	3.63	100.00
합계	36.46	56.26	7.29	100.00

자료: 인천광역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 3. 지속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자원조달 개선 방안 모색

- 최성은(2011)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자원조달 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부분 중 하나는 현재의 지방재정중기계획에 제시된 사항 중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임.
-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같은 의존재원의 감소 및 지방세, 세외수입의 감소에 따른 예산 규모의 재구조화를 지속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민간투자 제고를 위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음. 민간투자는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민간 부문의 수익성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해 중장기적인 민간투자 확보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공공 부문 일자리 이외에도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함께 창출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통해 민간 부문의 수익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의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추가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제도 운영을 도모하여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최성은(2011)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성과주의 예산 강화, 사후적 재정사업평가와 예산과정과의 연계를 통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 예산사용의 성격에 있어서도 경상경비 및 인건비 등의 낭비를 절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세원 확충을 통한 지방세입 증대에 따른 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 재정수요 관련 추가 재원 조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최원구 외(2020)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단적으로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관련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공항 관련 도로교통 개선, 공항 인근 지역 주민 지원 및 환경개선에 대한 재정 수요와 관련하여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와 같은 개별소비세의 지방세화, 컨테이너에 대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세입 확충을 통한 재원 조달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의 경우 정책사업의 우선순위와 매칭비율의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우선순위 사업에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정책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단적으로 지방비 매칭 비율이 크게 높고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점검, 검토하는 동시에 부서 간 논의 및 조정 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4. 자원 조달 관련 해외 사례 고찰과 시사점

##### 가. 유럽연합(EU)<sup>17)</sup>

- 아동 빈곤 및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기금 활용을 하는 것은 유럽 연합(EU)의 특수한 성격에 기인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EU 기금을 통한 아동 보호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는 바, 유럽 사회 기금 플러스(ESF+)에서 아동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해 있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일부 지원을 추진함.
  - 단적으로, 2021~2027년 기간 동안 유럽 내 불가리아, 키프로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루마니아, 스페인 및 스웨덴이 이러한 기금을 지원받음.

##### 나. 프랑스<sup>18)</sup>

- 프랑스의 영유아, 초등교육 관련 자원 조달 방안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영사관, 상공회의소, 병원 등)이 함께 교육 재정의 90% 이상을 조달하는데, 이 중 중앙정부가 56.2%, 지방 정부가 38.6%, 공공 및 민간 기업이 8.4% 조달하고 있음(2019년 기준).
- 여기에서 민간 투자의 형태로도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민간 자원 조달의 주된 방안은 견습세(apprenticeship tax)임. 견습세는 대체 인력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원을 한 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에 납부 의무가 부과되는 조세의 형태임(기업은 반대급부로 바우처 형태의 견습생 훈련 비용 등을 수혜 받음).
- 무엇보다도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중앙정부의 가족 혜택 기금(CAF: Caisses

17) <https://picum.org/blog/eu-council-adopts-child-guarantee-undocumented-children>의 일부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함.

18)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france/early-childhood-and-school-education-funding>; <https://www.caf.fr>의 일부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함.

d'allocations familiales)임. 이러한 기금 형태는 지속적인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조달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서의 의미가 다분하며, 오랜 기간 지속 운영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 프랑스 사회보험의 주요 재원은 의무적인 사회적 기여금이며, 이러한 기여금 부담률은 공공행정 측면에서 정하거나 승인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김은경, 2012) 고용주-피용자 부담금의 형태를 띠고 있음(정기혜, 김용하, 이지현, 2012).

#### 다. 독일<sup>19)</sup>

- 독일의 경우 보육시설에 대한 정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보육 확대" 특별 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함.
- 이는 새로운 보육 시설을 건설하고 기존 시설을 개조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총 90,000개의 보육시설 확대 및 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정책 대상은 보육 시설 및 보육 서비스 제공자(주, 지자체 및 기타 제공자)로, 보육 시설을 확장하기 위한 조치(즉, 학교 입학 연령까지의 어린이를 위한 추가 장소를 만들고/또는 갖추기 위한 조치)를 시행함. 이러한 기금 활용에 대한 실행 책임은 연방 주에 있으며, 이에 따라 각각 자금의 신청, 승인 및 사용을 세부적으로 규제하는 구체적인 (자금 조달) 지침을 작성함.
- 이러한 독일 정부의 기금 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라는 단편적 목표 이외에도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보육 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 보육의 양적/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19)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germany/early-childhood-and-school-education-funding>; [https://commission.europa.eu/projects/investment-programme-childcare-financing-202021-special-fund-child-day-care-expansion-childcare\\_en](https://commission.europa.eu/projects/investment-programme-childcare-financing-202021-special-fund-child-day-care-expansion-childcare_en)의 일부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함.

## 5. 예산 총괄표

○ 본 연구에서 제시한 12개 추진전략별 중점 추진과제의 연도별(2024-2028년) 사업량 및 사업비(소요 예산 규모)를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음.

〈표 7-7〉 12개 추진전략 및 연도별(2024-2028년) 사업량 및 사업비(소요 예산) 규모

(단위: 량(명, 개소 등), 백만 원)

구분	추진전략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량	1.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는 노동시장 구축	110	22	22	22	22	22
	2. 안정된 주거 인프라 확충 및 개선	8,000	1,600	1,600	1,600	1,600	1,600
	3. 가족친화적 일-생활 균형 체계 구축	350	70	70	70	70	70
	4. 편안하고 안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	100,050	20,010	20,010	20,010	20,010	20,010
	5.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 지원	-	-	-	-	-	-
	6. 청년의 희망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1,030,500	204,500	205,000	206,500	207,000	207,500
	7. 모두가 평등한 교육 환경으로의 개선	25,450	5,090	5,090	5,090	5,090	5,090
	8.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	365,123	66,123	69,500	73,000	76,500	80,000
	9.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기반 구축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 외국인 상생 기반 구축	18,505	3,501	3,601	3,701	3,801	3,901
	11. 인구구조 대응 기반 구축 (거버넌스 및 관련 현안)	525	105	105	105	105	105
	12. 세대 간 화합 및 인구고령화 대응 기반 조성	435	79	79	89	89	99
	합계	1,599,048	311,100	315,077	320,187	324,287	328,397
사업비	1.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는 노동시장 구축	29,000	5,200	5,500	5,800	6,100	6,400
	2. 안정된 주거 인프라 확충 및 개선	34,000	6,800	6,800	6,800	6,800	6,800
	3. 가족친화적 일-생활 균형 체계 구축	35,000	7,000	7,000	7,000	7,000	7,000
	4. 편안하고 안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	180,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5.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 지원	2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374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4~2028) 수립 연구용역

구분	추진전략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6. 청년의 희망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237,500	41,500	43,000	49,500	51,000	52,500
	7. 모두가 평등한 교육 환경으로의 개선	54,650	11,650	10,750	10,750	10,750	10,750
	8.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	1,333,388	233,752	239,597	346,068	252,628	261,343
	9.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기반 구축	2,500	500	500	500	500	500
	10. 외국인 상생 기반 구축	12,150	2,500	2,250	2,350	2,450	2,600
	11. 인구구조 대응 기반 구축 (거버넌스 및 관련 현안)	63,500	14,300	12,300	12,300	12,300	12,300
	12. 세대 간 화합 및 인구고령화 대응 기반 조성	45,900	8,380	8,380	9,380	9,380	10,380
	합계	2,052,588	372,582	377,077	491,448	399,908	411,573

주: 각 추진전략별 사업량 및 예산 규모는 “미정”을 제외한 규모임.



- 관계부처합동.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관계부처합동. (2022.2.10.). 제4기 인구정책TF 주요 분야 및 논의방향.
-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NABIS). 균형발전지표, 주관지표-지자체[데이터파일]. <https://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에서 2023.5.25. 인출.
-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NABIS). 균형발전지표, 핵심·객관지표-전국[데이터파일]. <https://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에서 2023.5.25. 인출.
- 권미애, 김재희, 김신경. (2019).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 인천: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 김세진, 이선희, 최경덕, 유재언, 이윤경. (2022).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린, 배지영, 안서연, 허선영, 김혜인. (2020). 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 고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김은경. (2012). 프랑스의 재정.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국정목표/비전과 약속. <http://www.balance.go.kr/base/contents/view?contentsNo=27&menuLevel=2&menuNo=52>에서 2023.7.20. 인출.
- 미야조에 켄시. (2021). 지역을 디자인하다 -지방소멸에 대처하는 지역마케팅 교과서-. (엄상용 역). 서울: 학연문화사.
- 보건복지부. 각연도(2009~2022년) 보육통계.
- 서봉만, 최태림, 조상운, 오수영, 이하리. (2018). 인천광역시 발전계획(2018~2022). 인천: 인천연구원.
- 안내영. (2020).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분야 정책방향. 인천: 인천연구원.
- 양지훈. (2022). 2022 인천시 예비노인세대 실태 및 욕구조사. 인천: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 여성가족부. (2021.4.27.).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 우해봉, 장인수, 임지혜. (2020). 인구변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관한 기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인재, 기윤환, 배은주, 안내영, 이미애, 이왕기,...박관아. (2020). 2020 인구구조 변화와 인천시 인구정책. 인천: 인천연구원.
-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 인천광역시. (2018).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위한(2018~2022년) 제1차 저출산대응 중장기 기본계획.

- 인천광역시. (2019). 제4기(2019~2022)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 인천광역시. (2022a). 행정구역[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04&tblId=DT\\_20402\\_A00000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04&tblId=DT_20402_A000004&conn_path=I3)에서 2023.7.5. 인출.
- 인천광역시. (2022b). -치매걱정 없는 뇌건강도시 구현을 위한-2022년도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시행계획.
- 인천광역시. (2023). -2023년도 인천광역시-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Ⅰ).
- 인천광역시. (2023). -2023년도 인천광역시-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Ⅱ).
- 인천광역시청. (2022). 시군 장래인구 추계, 2017년 기준 인천광역시 시군장래인구추계[데이터파일], [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datastat/page.do?mnu\\_uid=7883&dept\\_code=&dept\\_name=&BD\\_CODE=sigun\\_stat&bdName=&cmd=2&Start=0&B\\_NUM=70241901&B\\_STEP=70241900&B\\_LEVEL=0&key=0&word=&p1=0&p2=0&V\\_NUM=3&tbbscode1=sigun\\_stat](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datastat/page.do?mnu_uid=7883&dept_code=&dept_name=&BD_CODE=sigun_stat&bdName=&cmd=2&Start=0&B_NUM=70241901&B_STEP=70241900&B_LEVEL=0&key=0&word=&p1=0&p2=0&V_NUM=3&tbbscode1=sigun_stat)에서 2023.7.5. 인출.
- 인천광역시청. 시(市) 조직도. <https://www.incheon.go.kr/IC040221>에서 2023.6.8. 인출.
-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6611호 (2021).
- 인천연구원. (2018).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 장인수, 우해봉, 임지혜, 손호성, 박종훈. (2020). 지역 인구 변화에 따른 정책 과제와 대응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인수, 우해봉, 박종서, 정찬우. (2021). 2021년 인구변동 모니터링과 정책과제 -지역 인구 감소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인수, 정찬우. (2022).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2a).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http://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actionPlanDetail.do?articleId=18&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에서 2023.6.21. 인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2b).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총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3.3.28.).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 정기혜, 김용하, 이지현. (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프랑스-.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보혜 외. (2023). 베이비부머 생애전환지원 과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간예정).
- 지방시대위원회. (2023.9.12.).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4대 특구로 댕 올린다.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 지방시대위원회 보도자료.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4.27.a).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4.27.a). 균형발전 지역공약 -17개 시도 7대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 .
- 최성은. (2011).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재정지출과 재원조달. 보건복지포럼 2월 통권 제172호, 35-43,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원구, 김민정. (2020).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지방세연구원.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군구 합계출산율. 2018~2021.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3)에서 2023.6.8. 인출.
- 통계청. (2021).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문 표본조사 2%.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23.6.2. 인출.
- 통계청. (2022).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 현황[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22&vw\\_cd=MT\\_ZTITLE&list\\_id=A8&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22&vw_cd=MT_ZTITLE&list_id=A8&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3.10.4. 인출.
- 통계청. (2023. 2. 22.).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4&list\\_no=423833&act=view&mainXml=Y](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4&list_no=423833&act=view&mainXml=Y)에서 2023.6.8. 인출.
- 통계청. (2023a).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3.7.5. 인출.
- 통계청. (2023b). 출생아수(시도/시/군/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1A0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1A01&conn_path=I2)에서 2023.7.5. 인출.
- 통계청. (2023c). 시군구/사망원인(50항목)/성/ 사망자수, 사망률, 연령표준화 사망률(1998~)[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3&conn_path=I3)에서 2023.7.5. 인출.
- 통계청. (2023d). 시군구/성/연령(5세)별 이동자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에서 2023.7.5. 인출.
- 통계청. (2023e). 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ath=I2)에서 2023.7.5. 인출.
- 통계청. (2023f). 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에서 2023.7.5. 인출.

- 통계청. (2023g). 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에서 2023.7.5. 인출.
- 통계청. (2023h). 성 및 연령별 1인가구 - 시군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L1502&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L1502&conn_path=I2)에서 2023.7.5. 인출.
- 한국교통연구원. (2021). 교통접근성지표-2019년 교통접근성지표[데이터파일]. <https://www.ktdb.go.kr/www/selectTrnsportTreeView.do?key=32>에서 2023.5.25. 인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노인실태조사 원시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1).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통계 동향.
- 행정안전부. (2022). 인구감소지역 지정.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에서 2023.3.24. 인출.
- 행정안전부. (2023). 2023년 상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워크숍.
- 행정안전부. (2023.7.7.).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7월 10일 부터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http://www.balance.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1&boardNo=9197&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41>에서 2023.7.24. 인출.
- caf.fr. retrieved from <https://www.caf.fr> 2023.10.6.
- Čamprag, N. (2018). *The trap within anticipated regrowth: Two sides of strategic response to urban decline in Leipzig*. *Articulo-Journal of Urban Research*.
- Chen, Y., Silva, E. A., & Reis, J. P. (2021). Measuring policy debate in a regrowing city by sentiment analysis using online media data: A case study of Leipzig 2030. *Regional Science Policy & Practice*, 13(3), 675-692.
- Couch, C., & Fowles, S. (2019). Metropolitan planning and the phenomenon of reurbanisation: The example of Liverpool. *Planning Practice & Research*, 34(2), 184-205.
- Dax, T., & Fischer, M. (2018). An alternative policy approach to rural development in regions facing population decline. *European Planning Studies*, 26(2), 297-315.
- EU Council adopts Child Guarantee that benefits undocumented children. retrieved from <https://picum.org/blog/eu-council-adopts-child-guarantee-undocumented-children> 2023.10.6.
- Ferry, M., & Vironen, H. (2011). Dealing with demographic change. *Geopolitics, Hist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3(1), 25-58.
- France. 3. Funding in education 3.1 Early childhood and school education funding. retrieved from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



- france/early-childhood-and-school-education-funding 2023.10.6.
- Galjaard, R., Van Wissen, L., & Van Dam, K. (2012). European regional population decline and policy responses: Three case studies. *Built Environment*, 38(2), 293-302.
- Germany 3. Funding in education 3.1 Early childhood and school education funding. retrieved from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germany/early-childhood-and-school-education-funding> 2023.10.6.
- Haase, A. (2015). "European cities between shrinkage and regrowth: current trends and future challenges". *Die Stadt der Zukunft: Aktuelle Trends und zukünftige Herausforderungen*, 89.
- Haase, A., Athanasopoulou, A., & Rink, D. (2016). Urban shrinkage as an emerging concern for European policymaking.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23(1), 103-107.
- Haase, A., Wolff, M., & Rink, D. (2018). From shrinkage to regrowth: The nexus between urban dynamics, land use change and ecosystem service provision. In *Urban transformations* (pp. 197-219). Springer, Cham.
- Haase, A., Bontje, M., Couch, C., Marcinczak, S., Rink, D., Rumpel, P., & Wolff, M. (2021). Factors driving the regrowth of European cities and the role of local and contextual impacts: A contrasting analysis of regrowing and shrinking cities. *Cities*, 108, 102942.
- Investment programme 'Childcare-financing' 2020/21: special fund 'Child Day-care Expansion' Childcare financing. retrieved from [https://commission.europa.eu/projects/investment-programme-childcare-financing-202021-special-fund-child-day-care-expansion-childcare\\_en](https://commission.europa.eu/projects/investment-programme-childcare-financing-202021-special-fund-child-day-care-expansion-childcare_en) 2023.10.6.
- Kurek, S., Wójtowicz, M., Gałka, J., Kurek, S., Wójtowicz, M., & Gałka, J. (2020). Population growth in functional urban areas. Functional Urban Areas in *Poland: Demographic Trends and Migration Patterns*, 33-50.
- OECD. Regional Statistics. <https://stats.oecd.org/index.aspx?r=223218>
- Rink, Haase, Grossmann, Couch, & Cocks(2012). From long-term shrinkage to re-growth? The urban development trajectories of Liverpool and Leipzig. *Built environment*, 38(2), 162-178.
- Wirth, P., Elis, V., Müller, B., & Yamamoto, K. (2016). Peripheralisation of small towns in Germany and Japan-Dealing with economic decline and population loss. *Journal of rural studies*, 47, 62-75.





## [부록 1] 분야별 전문가 심층설문조사지

### 1. 인구/저출산 분야

####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인천광역시 수탁과제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2024~2028) 수립 연구(연구책임자: 장인수 부연구위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인구특성을 분석하고 기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관련 사업 및 정책을 평가하여 인구정책 관련 주요 분야별 의제를 발굴하고 핵심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인천광역시의 저출산/고령화/인구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시겠지만, 귀한 고견을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답례비(20만원)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협조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연구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수행 기관: 에스티아이

조사 문의 : 에스티아이 김산형 연구원 (02-785-9245)





2. 현재 인천광역시의 저출산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 중 각 정책 영역 간 상대적 우선순위(1~8순위)를 평가해 주십시오.

주요 영역	우선순위
1) 일자리 문제(여성 경력단절 대응, 인구감소 대응 목적 모두 포함): 일자리의 양, 질적 측면 개선 등	
2) 주거 문제: 신혼부부 주거 마련 관련 지원 개선 등	
3) 일-가정 양립 문제: 육아시간 확보, 맞벌이 유연근무, 부모 돌봄 환경 조성 등	
4) 자녀돌봄, 양육 지원 문제: 경제적 지원 강화, 육아지원 인프라 양, 질적 개선 등	
5) 청년들의 만혼 및 미혼 문제: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늦추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 확대(주거, 일자리, 경제적 지원) 등	
6) 임신출산 지원, 임신출산건강, 난임 문제: 난임지원 확대, 임신 건강관리 지원 확대 등	
7) 사교육 문제: 사교육비 완화를 위한 공교육 질 강화 등	
8) 이민자(외국인) 활용 문제: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등	











7. 인천광역시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외국인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2021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외국인 비율 4위-충남, 제주, 경기, 인천 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이들 중 세부 범주에서는 외국인 비율(4위)에 비하여 높은 범주도 있고(한국국적취득자 비율 1위, 외국인 인구 규모 전체 3위), 낮은 범주도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 비율, 유학생 비율 등).

현재 인천광역시의 주요 외국인(이민자 포함) 정책을 보다 확대(대상, 내용 지원 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 2) 강화시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여 주십시오.

7-1.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면, 어떤 정책을 특히 강화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외국인 자녀 지원
- 2) 한국국적 미취득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 3)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4) 유학생의 정착 지원
- 5) 기타(                      )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여 주십시오.

8.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지정하여 이들 지역에 향후 10년 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인천광역시도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동구가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22년부터 행정적 제도 지원과 재정적 지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 받았 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도에 대한 재정지원,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군·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3.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에 대하여 활용이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어 현금성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인천광역시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는 지역은 지역 인 구 감소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 여건 개선 등
- 2) 신혼부부, 청년 주거 시설 개보수 및 확충 등
- 3)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 및 개선 등
- 4)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 및 개선 등
- 5) 지역 특산물 생산 인프라 개보수 및 확충 등
- 6) 교육 인프라 확충 등
- 7)) 기타 ( )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여 주십시오.

9. 인천광역시는 다른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섬 지역이 적지 않고, 자치구와 군이 관할 지역 내 공존하고 있는 등 지리지형적 특성과 행정구역 특성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관할지역 간 양극화와 관련하여 지역 간 인구의 집중도를 뜻하는 인구집중지수는 인천광역시가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내 지역 간 인구편중 현상은 인천광역시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 인구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인구 문제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 2) 인구 문제가 아니며 대응할 필요성이 낮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여 주십시오.

9-1. (9번 문항 1) 응답자만 응답)인천광역시 내 지역 간 인구편중 현상에 대해서 인천광역시가 특히 우선순위로 대응하여야 할 정책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원도심 활성화
- 2) 섬 지역 중심의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 3) 지역별 인구 형태(인구 증가지역 인프라 등 증가 요인 파악에 따른)에 맞는 정주여건 개선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여 주십시오.

10. 인천광역시시는 최근 6년간(2016~2021년) 19~34세 청년층 순이동에서 2020년을 제외하고 약간의 순유입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천광역시로의 청년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 및 인천광역시 청년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인천광역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청년 대상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청년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 2) 청년 임대주택 지원금 상향 등 실질적 지원 확대
- 3)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 자금 지원
- 4) 시비로 운영되는 인천장학금 운영
- 5)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확대
- 6) 기타 ( )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여 주십시오.

--

11. 최근 생활인구를 활용한 지역 인구 위기 대응 및 지역 활력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관할 지역 중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작고, 인구 고령화가 심화된 지역(강화군, 옹진군, 동구 등)을 중심으로 생활인구 활용을 도모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할 때,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세부 사업을 선택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 1) 두 지역 살아보기: 도시 거주자가 정기적, 반복적인 지역 체류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과 교류하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갖는 것
- 2) 워케이션(workation):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근로자가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양을 동시에 즐기는 것
- 3) 로컬유학 생활 인프라 조성: 로컬 유학생 및 가족의 지역 정착에 가장 필요한 주거시설 및 공용공간을 포함한 생활 인프라를 지원
- 4)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은퇴자 5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거주지역 조성
- 5) 청년 복합공간 조성: 청년층 지역 정착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일자리와 주거시설을 동시에 지원하여 청년 층 생활인구 확대 추진

**\*위 5개 사업은 행안부 생활인구 관련 공모사업임**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여 주십시오.





## 2. 고령사회 분야

###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인천광역시 수탁과제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4~2028) 수립 연구(연구책임자: 장인수 부연구위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인구특성을 분석하고 기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관련 사업 및 정책을 평가하여 인구정책 관련 주요 분야별 의제를 발굴하고 핵심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인천광역시의 저출산/고령화/인구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시겠지만, 귀한 고견을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답례비(20만원)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협조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연구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수행 기관 : 에스티아이

조사 문의 : 에스티아이 김신형 연구원 (02-785-9245)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장기 계획(2019-2023)'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수행(혹은 수행 예정)하고 있는 주요 인구 고령화 정책입니다.

(참고 : (인천광역시 고령화율(전망치))

- 15.2%('22) → 24.1%('30) → 33.2%('40) → 39.3%('50)

주요 영역	중과제	세부 과제
1) 노후소득 보장	노후소득 설계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설계 교육 활성화 -시니어 직업훈련 교육 다양화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활동 기반 조성	-노인일자리 신규 발굴 및 수행기관 확충 -공익형 노인일자리 급여 수준 증진 -지역사회 일자리 사업을 위한 인력풀 구축 및 연계 강화 -취약계층의 안전한 소득활동 지원 보장 강화
	스마트 JOB 지원	-중장년과 청년세대가 함께 하는 세대 통합형 창업 지원 -어르신이 행복한 노인일자리 개발 체계 강화
	고령사회 서비스 제공 강화	-지역중심의 원스톱 통합정보 플랫폼 기반 구축 -고령사회 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 확산
2)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노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교육 강화	-다양한 연령 및 분야별 생애설계 교육 확산 -노년기 교육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
	고용기회 및 현장에서의 참여 제고	-지역기반 노인 적합 일자리 -사회참여 활성화
3)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고령자 문화, 복지 서비스 다각화	-인천효도림 복지카드 도입
	소외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균형적인 권역별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다변화 -액티브 경로당 활성화 추진 -지역사회 개방형 경로당 모형 조성
	치매예방 및 관리 강화	-생활밀착형 치매지원 기관 확대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
4) 통합돌봄의 강화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 인프라 확대	-노인요양시설의 확대 및 기능 보강 -노인맞춤돌봄 사회안전망 강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네트워크 활동 강화
	건강 및 공공 의료지원 기능강화	-장기요양노인을 위한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대
	고령자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지원	-노인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활동 확산
	지역사회 장사문화 조성 관리	-장사시설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불안당 건립 및 안치단 설치 추진
5) 생애 마무리	편안한 삶의 마지막을 위한 문화환경 조성	-품위있고 존엄한 죽음준비 교육 확산
	안전과 편리성이 보장되는 교통환경	-누구나 승하차가 쉬운 저상버스 도입 확대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추진

주요 영역	중과제	세부 과제
조성	개선	-노인교통안전교육 실시 -고령운전자 스티커 부착 확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인센티브 개발
	고령사회 정책 역량 강화 및 추진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추진체계 구축 -노인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기반 정비	-노인정책모니터링단 운영 및 의견수렴 촉진

자료 : 인천광역시, (2019). 인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

1. 인천 지역의 고령화 대응 측면에서 정책 영역별 중요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div> <div>전혀 중요하지 않다</div> <div>←</div> <div>→</div> <div>매우 중요하다</div> </div>									
1	2	3	4	5	6	7	8	9	10

주요 영역	중요도
1) 노후소득 보장	
2)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3)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4) 통합돌봄의 강화	
5) 생애 마무리	
6) 고령친화 사회환경 기반 조성	

1-1.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영역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2. 인천 지역의 고령화 대응 측면에서 영역간 상대적 우선순위(1~6순위)를 평가해 주십시오.

주요 영역	우선순위
1) 노후소득 보장	
2)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3)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4) 통합돌봄의 강화	
5) 생애 마무리	
6) 고령친화 사회환경 기반 조성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주요 영역	중과제	세부 과제	정합성
1) 노후소득 보장	노후소득 설계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설계 교육 활성화 -시니어 직업훈련 교육 다양화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활동 기반 조성	-노인일자리 신규 발굴 및 수행기관 확충 -공익형 노인일자리 급여 수준 증진 -지역사회 일자리 사업을 위한 인력풀 구축 및 연계 강화 -취약계층의 안전한 소득활동 지원 보장 강화	
	스마트 JOB 지원	-중장년과 청년세대가 함께 하는 세대 통합형 창업 지원 -어르신이 행복한 노인일자리 개발 체계 강화	
2)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고령사회 서비스 제공 강화	-지역중심의 원스톱 통합정보 플랫폼 기반 구축 -고령사회 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 확산	
	노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교육 강화	-다양한 연령 및 분야별 생애설계 교육 확산 -노년기 교육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	
3)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고용기회 및 현장에서의 참여 제고	-지역기반 노인 적합 일자리 -사회참여 활성화	
	고령자 문화, 복지 서비스 다각화	-인천효도림 복지카드 도입	
	소외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균형적인 권역별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다변화 -액티브 경로당 활성화 추진 -지역사회 개방형 경로당 모형 조성	
4) 통합돌봄의 강화	치매예방 및 관리 강화	-생활밀착형 치매지원 기관 확대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 인프라 확대	-노인요양시설의 확대 및 기능 보강 -노인맞춤돌봄 사회안전망 강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네트워크 활동 강화	
	건강 및 공공 의료지원 기능강화	-장기요양노인을 위한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대	

주요 영역	중과제	세부 과제	정합성
	고령자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지원	-노인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활동 확산	
5) 생애 마무리	지역사회 장사문화 조성 관리	-장사시설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봉안당 건립 및 안치단 설치 추진	
	편안한 삶의 마지막을 위한 문화환경 조성	-품위있고 존엄한 죽음준비 교육 확산	
6) 고령친화 사회환경 기반 조성	안전과 편리성이 보장되는 교통환경 개선	-누구나 승하차가 쉬운 저상버스 도입 확대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추진 -노인교통안전교육 실시 -고령운전자 스티커 부착 확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인센티브 개발	
	고령사회 정책 역량 강화 및 추진 기반 정비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추진체 계 구축 -노인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노인정책모니터링단 운영 및 의견수렴 촉진	

4-1. 정합성이 낮다고 판단하시는 영역-과제가 있으시다면, 그 이유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포괄성이 매우 낮다 ←————→ 포괄성이 매우 높다									
1	2	3	4	5	6	7	8	9	10

주요 영역	중과제	세부 과제	포괄성
1) 노후소득 보장	노후소득 설계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설계 교육 활성화 -시니어 직업훈련 교육 다양화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활동 기반 조성	-노인일자리 신규 발굴 및 수행기관 확충 -공익형 노인일자리 급여 수준 증진 -지역사회 일자리 사업을 위한 인력풀 구축 및 연계 강화 -취약계층의 안전한 소득활동 지원 보장 강화	
	스마트 JOB 지원	-중장년과 청년세대가 함께 하는 세대 통합형 창업 지원 -어르신이 행복한 노인일자리 개발 체계 강화	
2)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고령사회 서비스 제공 강화	-지역중심의 원스톱 통합정보 플랫폼 기반 구축 -고령사회 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 확산	
	노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교육 강화	-다양한 연령 및 분야별 생애설계 교육 확산 -노년기 교육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	
3)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고용기회 및 현장에서의 참여 제고	-지역기반 노인 적합 일자리 -사회참여 활성화	
	고령자 문화, 복지 서비스 다각화	-인천효드림 복지카드 도입	
	소외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균형적인 권역별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다변화 -액티브 경로당 활성화 추진 -지역사회 개방형 경로당 모형 조성	
4) 통합돌봄의 강화	치매예방 및 관리 강화	-생활밀착형 치매지원 기관 확대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 인프라	-노인요양시설의 확대 및 기능 보강 -노인맞춤돌봄 사회안전망 강화	



주요 영역	중과제	세부 과제	포괄성
	확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네트워크 활동 강화	
	건강 및 공공 의료지원 기능강화	-장기요양노인을 위한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대	
	고령자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지원	-노인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활동 확산	
5) 생애 마무리	지역사회 장사문화 조성 관리	-장사시설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봉안당 건립 및 안치단 설치 추진	
	편안한 삶의 마지막을 위한 문화환경 조성	-품위있고 존엄한 죽음준비 교육 확산	
6) 고령친화 사회환경 기반 조성	안전과 편리성이 보장되는 교통환경 개선	-누구나 승하차가 쉬운 저상버스 도입 확 대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추진 -노인교통안전교육 실시 -고령운전자 스티커 부착 확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인센티브 개발	
	고령사회 정책 역량 강화 및 추진 기반 정비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추진체계 구축 -노인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노인정책모니터링단 운영 및 의견수렴 촉 진	

5-1. 포괄성이 낮다고 판단하시는 영역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6. 인천지역의 고령화 대응 측면에서, 확대해야 할 정책 영역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8	9	10

주요 영역	평가
1) 노후소득 보장	
2)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3)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4) 통합돌봄의 강화	
5) 생애 마무리	
6) 고령친화 사회환경 기반 조성	

6-1. 추가적으로 확대해야 할 정책 영역이 있다면 응답해 주십시오.

6-2.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영역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12

7. 앞에 제시된 정책과제 이외에, 인천 고령화 대응 관점에서 향후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정책과제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1)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 2) 공립 노인요양시설 확대(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 3) 고령자 주택 공급 및 지원
- 4)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환경(물리적 환경) 구축
- 5) 생애말기 자기결정권 강화(연명의료, 성년후견 등)
- 6) 노인 인권보장 및 학대 예방

8. 인천광역시의 2020년 기준 총부양비는 3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34)에 비하여 두 번째로 낮지만, 2050년에는 92로 세종(72), 서울(83), 경기(86), 대전(90), 광주(91)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2050년 총부양비 전망치 92).

이러한 인천광역시의 급격한 총부양비 전망은 노년부양비의 증가 전망(2020년 18.2→ 2050년 75.3)에 크게 기인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일부 다른 광역시에 비하여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인천광역시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 분야의 우선순위(1~5순위)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사업 분야	순위
1) 노후소득보장 확대	
2) 중장년 고용 확대	
3) 노인 보건의료(장기요양보험 등) 확대	
4)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교통인프라 확충,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5) 고령친화산업 확충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여 주십시오.

--

9. 인천광역시는 8자치구 2군의 관할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농복합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2군은 지리적으로 섬 지역이며, 지리지형적으로도 다양한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인구 규모뿐 아니라 인구 고령화 수준에 따른 고령자 정책 수요의 지역 간 격차 심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군 지역인 강화군, 옹진군의 경우 섬 지역임과 동시에 인구 고령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고령자의 정책 수요가 높은 반면, 정책 공급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가 추진하여야 할 사업 분야에 대하여 우선순위(1~4순위)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사업 분야	순위
1) 의료복지/재가복지시설 확충	
2) 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확충	
3) 여가활동 인프라 확충	
4) 주거복지시설 확충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여 주십시오.

10. 인천광역시의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현안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해당 세부 정책 현안 과제에 대한 중요도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div> <div>전혀 중요하지 않다</div> <div>←</div> <div>→</div> <div>매우 중요하다</div> </div>									
1	2	3	4	5	6	7	8	9	10

정책 현안 과제	중요도
민간,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간병(보험)서비스	
노인복지법에서 협조하게 규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보다 폭넓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고령자주택 공급, 지원	
(대중교통, 교통사고, 병원 동행 등), 지역사회 환경, 빈집 처분	
세대통합 및 공존(상생)	
청장년, 중장년 대상 노후(생활)준비 추진과제 강화	
문화, 여가는 노인복지법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까지 연계하여 확대	
자산관리(상속, 증여),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예방	
디지털 소외와 격차 완화	
장애노인 또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인권보장, 학대피해, 보호에 대한 영역 및 추진과제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사후 장사시설에 더해 웰다잉, 고독사, 호스피스, 연명의료 등으로 확대	
사회서비스(원) 고도화, 고령친화산업, 복지기술 등 활용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여 주십시오.

11. 지금까지의 질문 이외에 인천광역시가 향후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 부탁드립니다.

## [부록 2] 인천광역시 자치구군 읍면동별 생활인구 규모

〈부표 1〉 인천광역시 자치구군 읍면동별 생활인구 특성 요약

(단위: 명, 명,  $km^2$ , 배, 명)

자치구군	읍면동	생활인구	인구수	인구밀도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	차이
중구	북성동	34,094	2,776	10.45	12.28	31,318
	용유동	32,543	3,679	0.94	8.85	28,864
	송월동	34,094	4,175	192.17	8.17	29,919
	운서동	248,830	30,980	5.87	8.03	217,850
	연안동	37,071	5,975	10.49	6.20	31,096
	신흥동	61,531	12,335	34.86	4.99	49,196
	동인천동	26,392	5,809	92.81	4.54	20,583
	신포동	22,133	5,017	31.59	4.41	17,116
	영종1동	144,428	43,534	76.87	3.32	100,894
	영종동	52,930	16,640	5.21	3.18	36,290
	도원동	10,123	3,811	162.76	2.66	6,312
	율목동	4,619	3,500	191.36	1.32	1,119
	송림4동	28,491	4,406	55.12	6.47	24,085
	송현3동	19,462	3,326	14.88	5.85	16,136
	송림1동	6,396	1,553	85.83	4.12	4,843
	송림2동	8,798	2,420	122.14	3.64	6,378
	만석동	22,221	6,820	60.17	3.26	15,401
	금창동	7,932	2,839	98.17	2.79	5,093
	송현1·2동	27,158	9,728	279.25	2.79	17,430
	화수2동	19,922	7,780	131.28	2.56	12,142
	송림3·5동	15,250	6,344	122.07	2.40	8,906
	화수1·화평동	10,472	6,287	219.24	1.67	4,185
	송림6동	9,495	6,298	112.81	1.51	3,197
미추홀구	송의1·3동	71,873	13,330	186.36	5.39	58,543
	도화2·3동	136,236	33,357	116.09	4.08	102,879
	주안1동	79,207	20,216	312.21	3.92	58,991
	주안5동	63,844	16,353	140.53	3.90	47,491
	주안6동	84,371	22,049	334.86	3.83	62,322

410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4~2028) 수립 연구용역

자치구군	읍면동	생활인구	인구수	인구밀도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	차이
	주안7동	44,176	12,240	252.50	3.61	31,936
	용현1·4동	60,118	16,884	134.15	3.56	43,234
	도화1동	74,152	22,861	227.76	3.24	51,291
	주안4동	43,353	13,648	139.20	3.18	29,705
	용현3동	22,848	7,267	168.39	3.14	15,581
	학익1동	95,292	30,558	59.80	3.12	64,734
	송의4동	46,539	16,261	205.28	2.86	30,278
	송의2동	42,558	15,313	288.12	2.78	27,245
	관교동	38,496	14,302	159.07	2.69	24,194
	학익2동	45,309	17,188	205.81	2.64	28,121
	주안8동	54,220	21,412	275.78	2.53	32,808
	용현5동	118,207	47,651	243.38	2.48	70,556
	문학동	34,394	14,108	82.38	2.44	20,286
	주안2동	39,439	16,558	164.20	2.38	22,881
	용현2동	33,415	17,958	270.02	1.86	15,457
	주안3동	14,325	9,380	204.28	1.53	4,945
연수구	송도1동	177,810	38,246	65.54	4.65	139,564
	송도2동	145,838	37,079	99.09	3.93	108,759
	연수1동	75,457	19,265	117.63	3.92	56,192
	연수3동	57,825	15,633	181.00	3.70	42,192
	연수2동	73,042	20,910	215.48	3.49	52,132
	송도3동	170,304	48,784	24.29	3.49	121,520
	청학동	80,579	24,725	103.54	3.26	55,854
	동춘2동	58,750	18,759	146.65	3.13	39,991
	동춘1동	75,236	24,852	65.05	3.03	50,384
	옥련1동	58,099	19,343	89.27	3.00	38,756
	동춘3동	46,781	18,250	258.02	2.56	28,531
	선학동	41,084	17,119	70.32	2.40	23,965
	옥련2동	45,260	20,018	100.45	2.26	25,242
	송도4동	64,063	64,369	48.89	1.00	-306
남동구	구월3동	172,322	30,183	164.29	5.71	142,139
	논현고잔동	221,707	41,712	38.01	5.32	179,995



자치구군	읍면동	생활인구	인구수	인구밀도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	차이
	남촌도림동	98,467	21,164	21.50	4.65	77,303
	만수5동	59,046	14,938	274.68	3.95	44,108
	논현2동	125,046	31,919	97.84	3.92	93,127
	논현1동	124,399	32,318	84.72	3.85	92,081
	간석2동	74,912	19,955	335.65	3.75	54,957
	구월4동	55,114	14,914	143.21	3.70	40,200
	구월1동	118,810	32,275	192.44	3.68	86,535
	간석3동	98,987	27,955	169.47	3.54	71,032
	간석4동	95,520	28,305	265.78	3.37	67,215
	만수3동	51,463	17,454	137.72	2.95	34,009
	서창2동	113,932	38,846	154.64	2.93	75,086
	간석1동	57,366	19,940	210.70	2.88	37,426
	장수서창동	53,686	19,670	17.21	2.73	34,016
	만수2동	65,896	24,413	286.61	2.70	41,483
	만수6동	58,790	24,078	139.92	2.44	34,712
	구월2동	84,491	35,139	431.68	2.40	49,352
	만수1동	38,720	17,259	228.19	2.24	21,461
	만수4동	41,470	20,668	213.49	2.01	20,802
부평구	십정1동	60,762	12,590	72.36	4.83	48,172
	청천2동	158,579	34,894	123.83	4.54	123,685
	청천1동	29,704	6,752	32.38	4.40	22,952
	갈산1동	73,023	16,988	154.40	4.30	56,035
	부평6동	57,823	13,811	195.72	4.19	44,012
	부평4동	139,305	35,643	338.50	3.91	103,662
	일신동	45,628	11,794	27.26	3.87	33,834
	부평5동	123,046	31,952	395.16	3.85	91,094
	십정2동	88,169	23,024	211.24	3.83	65,145
	부개2동	58,313	15,889	220.01	3.67	42,424
	부평1동	122,916	36,453	332.62	3.37	86,463
	산곡1동	34,472	11,038	48.06	3.12	23,434
	삼산2동	84,275	29,041	214.86	2.90	55,234
	부평3동	36,423	12,642	129.65	2.88	23,781

412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4~2028) 수립 연구용역

자치구군	읍면동	생활인구	인구수	인구밀도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	차이
	갈산2동	50,080	17,626	261.64	2.84	32,454
	산곡2동	83,834	29,706	365.36	2.82	54,128
	부평2동	35,865	14,292	61.06	2.51	21,573
	부개1동	39,580	16,133	173.87	2.45	23,447
	산곡4동	44,849	18,294	264.60	2.45	26,555
	삼산1동	78,961	33,004	167.71	2.39	45,957
	부개3동	67,791	29,844	343.13	2.27	37,947
	산곡3동	50,793	22,491	137.28	2.26	28,302
계양구	작전2동	71,772	18,305	189.23	3.92	53,467
	계산4동	82,327	22,351	262.87	3.68	59,976
	효성1동	85,897	24,538	117.90	3.50	61,359
	작전서운동	112,917	34,718	105.97	3.25	78,199
	계산1동	59,700	20,055	137.70	2.98	39,645
	계양2동	92,011	33,610	80.87	2.74	58,401
	계산2동	41,709	15,463	97.69	2.70	26,246
	효성2동	68,412	27,067	93.06	2.53	41,345
	작전1동	66,572	27,887	335.41	2.39	38,685
	계양1동	44,948	19,994	11.72	2.25	24,954
	계산3동	42,188	19,526	374.11	2.16	22,662
	계양3동	52,254	25,244	25.73	2.07	27,010
서구	가좌1동	62,161	12,484	28.75	4.98	49,677
	석남2동	60,562	12,427	45.66	4.87	48,135
	가정1동	128,574	27,778	114.09	4.63	100,796
	청라1동	142,079	31,124	126.09	4.56	110,955
	가좌4동	41,582	9,871	51.98	4.21	31,711
	오류왕길동	100,178	24,261	8.08	4.13	75,917
	가좌3동	60,170	15,933	82.15	3.78	44,237
	석남1동	78,062	21,931	191.32	3.56	56,131
	신현원창동	109,178	31,226	30.99	3.50	77,952
	연희동	139,121	40,487	42.86	3.44	98,634
	검단동	101,869	32,216	40.15	3.16	69,653
	검암경서동	140,693	44,589	29.74	3.16	96,104

자치구군	읍면동	생활인구	인구수	인구밀도	상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	차이
	청라2동	145,410	48,302	98.19	3.01	97,108
	마전동	66,593	22,690	187.14	2.93	43,903
	청라3동	82,843	30,273	22.94	2.74	52,570
	가좌2동	54,982	20,881	288.15	2.63	34,101
	가정2동	12,317	4,947	38.58	2.49	7,370
	가정3동	23,520	9,570	162.50	2.46	13,950
	석남3동	32,821	13,551	93.47	2.42	19,270
	당하동	63,476	27,301	116.78	2.33	36,175
	원당동	53,809	23,947	36.41	2.25	29,862
	불로대곡동	48,192	23,158	21.48	2.08	25,034
강화군	길상면	26,781	7,011	1.98	3.82	19,770
	화도면	16,910	4,471	1.05	3.78	12,439
	송해면	10,579	3,158	1.42	3.35	7,421
	강화읍	70,836	22,150	8.86	3.20	48,686
	선원면	22,886	7,703	3.60	2.97	15,183
	하점면	11,604	3,945	1.08	2.94	7,659
	불은면	14,035	4,786	1.51	2.93	9,249
	양도면	11,923	4,136	1.17	2.88	7,787
	양사면	5,233	1,850	0.68	2.83	3,383
	내가면	8,360	2,985	1.00	2.80	5,375
	교동면	7,693	2,759	0.59	2.79	4,934
	삼산면	5,551	2,153	0.47	2.58	3,398
	서도면	800	622	0.47	1.29	178
옹진군	영흥면	28,347	6,516	2.18	4.35	21,831
	대청면	2,502	1,399	0.88	1.79	1,103
	연평면	2,962	1,984	2.72	1.49	978
	북도면	2,713	2,082	1.08	1.30	631
	자월면	1,603	1,294	0.64	1.24	309
	백령면	5,783	4,801	0.93	1.20	982
	덕적면	1,836	1,819	0.44	1.01	1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